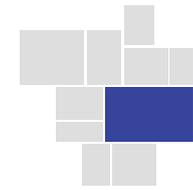


K o r e a n S o c i a l T r e n d s 2 0 0 9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한국의 사회동향 2009를 발간하며

국가 운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 온 경제발전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국민의 삶의 전반적인 수준을 가늠하고, 사회 각 부문별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한국의 사회동향』을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무미건조하고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통계를 최대한 쉽게 풀이하여, 통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경제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국사회 각 부문별 주요 현황 및 변화를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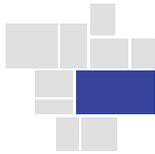
『한국의 사회동향 2009』를 통하여 우리사회 현황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증거에 기반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가 주요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해당 분야의 변화 양상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연구 및 교육 분야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반성적 성찰을 위해 통계청은 이 같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저희 통계청 통계개발원과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그리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협력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사회 각 분야별로 전체 동향과 세부 이슈에 대해 집필해 주신 집필자 여러분들과 편집위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통계청장 이 인 실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연구수행기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협력기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편집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대훈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집필자 강상진 (연세대학교)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강원택 (송실대학교)
김경근 (고려대학교)
김두섭 (한양대학교)
김명희 (을지대학교)
김호정 (국토연구원)
민수홍 (경기대학교)
박순진 (대구대학교)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이상림 (서울대학교)
이재열 (서울대학교)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장덕진 (서울대학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정기선 (IOM 이민정책연구원)
조병희 (서울대학교)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진호 (아주대학교)
한경혜 (서울대학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차

머리말 · 2

I. 인 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 6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 17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김두섭 · 24

II.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 32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 42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 48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 55

III. 교 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 64
교육의 경제적 성과	강상진 · 77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 · 83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김경근 · 91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채창균 · 99

IV. 노 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장지연 · 106
청년층 노동시장	방하남 · 117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방하남 · 123
노사관계의 변화	방하남 · 129

V.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 140
소득원천별 구성	강석훈 · 148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이현송 · 155
자산의 분포와 구성	강석훈 · 162

VI.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 172
여가생활과 만족도	서우석 • 179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이호영 • 186

VII.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 196
주거 빈곤 가구 실태	최진호 • 205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김호정 • 211

VIII. 보 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 218
자살의 급증과 원인	김명희 • 227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조병희 • 233

IX.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 240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박순진 • 249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민수홍 • 255
친환경 소비성향	윤순진 • 262

X.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 270
정치와 사회 참여	장덕진 • 281
가치와 이념 갈등	강원택 • 286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장지원 • 292

용어해설	• 302
------	-------

표 목차

- 008 <표 I-1> 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 1995, 2000, 2005
- 011 <표 I-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05-2010
- 013 <표 I-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50
- 014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1960-2005
- 019 <표 I-5>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추계: 2010, 2020, 2030
- 021 <표 I-6> 노인 인구와 의료비: 2001, 2004, 2007
- 026 <표 I-7> 연령집단별 남녀 사망률의 변화: 1988, 2008
- 027 <표 I-8> 남녀 사망률의 연령집단 및 지역간 차이: 2008
- 029 <표 I-9> 남녀, 연령집단 및 교육수준별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비의 변화: 1995, 2005
- 030 <표 I-10> 연령집단별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1998, 2008

- 033 <표 II-1>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85-2008
- 034 <표 II-2>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90-2005
- 037 <표 II-3>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률: 1990-2009
- 038 <표 II-4> 배우자의 성별 국제결혼건수: 1998-2008
- 039 <표 II-5> 조손가구의 소득수준별 손자녀 양육 이유: 2007
- 040 <표 II-6>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거가족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 2008
- 041 <표 II-7> 분거가족의 분거 이유: 2008
- 045 <표 II-8>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수와 지급액: 2003-2008
- 045 <표 II-9>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와 사용률: 2003-2008
- 046 <표 II-10> 성별 요리 및 가사와 아이돌보기 시간: 1999, 2004
- 050 <표 II-11> 혼인상태 및 성별 결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 2008
- 051 <표 II-12> 혼인상태, 성 및 연령별 결혼당위성에 대한 태도 변화: 1998, 2008
- 056 <표 II-13> 총 이혼건수와 이혼율: 1970-2008
- 057 <표 II-14>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70-2008
- 059 <표 II-15> 이혼사유: 1970-2008
- 060 <표 II-16> 성 및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 2008
- 061 <표 II-17>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수: 1998-2008

- 070 <표 III-1> 일반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2008
- 071 <표 III-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1985-2008
- 072 <표 III-3>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2006
- 074 <표 III-4>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8-2005
- 074 <표 III-5>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5

- 075 <표Ⅲ-6>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995-2007
- 081 <표Ⅲ-7>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육수준별 실업률: 1997-2006
- 103 <표Ⅲ-8> 주요 국가들의 대졸 하향취업자 비율: 2000
-
- 108 <표Ⅳ-1> 성 및 연령별 실업률: 1988-2008
- 109 <표Ⅳ-2> 성 및 연령별 고용률: 1988-2008
- 109 <표Ⅳ-3>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1988-2008
- 110 <표Ⅳ-4>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 2000-2008
- 113 <표Ⅳ-5> 정규·비정규직별 노조 가입률: 2007, 2008, 2009
- 113 <표Ⅳ-6> 파업건수와 근로손실 일수: 2006, 2007, 2008
- 114 <표Ⅳ-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일자리 특성별 중요성 평가 점수: 2005
- 115 <표Ⅳ-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자신의 일자리 특성 평가 점수: 2005
- 115 <표Ⅳ-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자신의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점수: 2005
- 118 <표Ⅳ-10> 청년층의 연령별 인구: 1970-2005
- 118 <표Ⅳ-11> 청년층의 졸업/중퇴, 재학, 휴학별 인구수 및 비율: 2009
- 119 <표Ⅳ-12> 청년층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및 실업률: 2009
- 119 <표Ⅳ-13>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2002-2009
- 120 <표Ⅳ-1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 2008
- 121 <표Ⅳ-15> 교육수준별 졸업/중퇴 청년층의 구직경로: 2009
- 121 <표Ⅳ-16>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 2009
- 122 <표Ⅳ-17> 청년층 근로자의 첫 직장 이직사유: 2009
- 127 <표Ⅳ-18>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2008
- 128 <표Ⅳ-1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수급률과 임금대체율: 2004
- 130 <표Ⅳ-20>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조조직률: 1990, 2005
- 131 <표Ⅳ-21>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8
- 131 <표Ⅳ-22>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8
- 132 <표Ⅳ-2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원 현황: 2004, 2005, 2006
- 133 <표Ⅳ-2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쟁의 행위에 따른 노동손실 일수: 1995-2007
-
- 149 <표Ⅴ-1>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비: 2003-2008
- 150 <표Ⅴ-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구성비: 1963-2008
- 151 <표Ⅴ-3>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구성비: 2008
- 151 <표Ⅴ-4> 1인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비: 2006, 2007, 2008
- 151 <표Ⅴ-5> 2인 이상 농가 소득구성비: 2003-2008
- 152 <표Ⅴ-6> 2인 이상 어가 소득구성비: 2003-2008
- 153 <표Ⅴ-7> 한국과 미국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비: 2002

목 차

- 159 <표V-8>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지출: 2009
163 <표V-9> 국부의 자산형태별 자산액과 구성비: 1997, 2007
163 <표V-10> 개인부문 금융자산: 2004-2008
164 <표V-11> 가구의 자산구성: 2006
165 <표V-12> 가구소득별 자산현황: 2006
166 <표V-13> 가구주 연령별 자산현황: 2006
167 <표V-14> 가구주 경제활동별 자산현황: 2006
168 <표V-15>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 2001, 2006
- 177 <표VI-1>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 목적의 이용률: 1999-2008
177 <표VI-2> 대중매체별 이용률과 독서율: 1990-2007
178 <표VI-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2003-2008
- 197 <표VII-1>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 1970-2008
198 <표VII-2> 연간 주택건설 실적: 1980-2006
199 <표VII-3> 광역시·도별 일반가구의 자가소유율: 1997, 2001, 2004
200 <표VII-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자가소유율: 2005
201 <표VII-5> 대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 1990-2008
202 <표VII-6> 자가용 등록대수와 1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8
203 <표VII-7>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1985-2008
204 <표VII-8> 전국과 광역시별 도로교통 혼잡비용: 1995-2006
206 <표VII-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와 비율: 1995, 2000, 2005
207 <표VII-10> 지역 및 가구특성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와 비율: 2005
208 <표VII-11> 도시와 농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2005
209 <표VII-12> 도시와 농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학력 분포: 2005
209 <표VII-13> 도시와 농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소득 분포: 2006
209 <표VII-14> 도시와 농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면적: 2005
210 <표VII-15> 도시와 농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시설: 2005
213 <표VII-16> 소형차 고속도로 이용량: 2003-2007
213 <표VII-17> 고속철도(KTX) 이용객수: 2004-2007
213 <표VII-18> 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 2003-2007
214 <표VII-19> 권역별 통근통학 통행량: 2001, 2006
- 220 <표VIII-1> 유병률: 1999-2008
221 <표VIII-2> 전염병 발생건수: 2004-2008
222 <표VIII-3> 사망원인별 사망률: 1995-2008

- 222 <표VIII-4> 성인의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08
- 223 <표VIII-5> 비만율과 운동실천율: 1998-2007
- 223 <표VIII-6>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1985, 1995, 2008
- 224 <표VIII-7> 의료시설수: 1985-2008
- 226 <표VIII-8> 국민의료비 지출의 재원 비중: 1986-2007
- 228 <표VIII-9> OECD 국가들의 최근 성별 자살률
- 229 <표VIII-10> 성 및 연령별 자살생각 비율: 1995, 1998, 2001, 2005
- 231 <표VIII-11> 성,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살생각 비율: 1995, 1998, 2001, 2005
- 231 <표VIII-12> 성,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살률: 1995, 2000, 2005
- 232 <표VIII-13> 연령별 자살생각 이유: 2008
- 235 <표VIII-14> 공공의료기관 현황: 2007
- 236 <표VIII-15> 병원수와 병상수: 2000-2007
- 236 <표VIII-1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중: 1990, 1995, 2000
- 237 <표VIII-17> 공공 및 민간 부문 일반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 2000
- 238 <표VIII-18> 공공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설치율: 2000-2007
- 238 <표VIII-19> 공공병원의 진료환자율: 2000-2007
-
- 242 <표IX-1>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액과 사망자 및 이재민 수: 1995-2007
- 247 <표IX-2> 대도시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SO₂)와 오존(O₃)): 1990-2008
- 247 <표IX-3> 4대강의 수질오염도: 1985-2008
- 248 <표IX-4> 정부예산과 GDP 대비 환경예산 비율: 1992-2008
- 248 <표IX-5> 환경보호지출액: 2002-2006
- 251 <표IX-6> 성, 연령, 지역별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 253 <표IX-7> 성, 연령, 지역별 미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 2008
- 253 <표IX-8> 성, 연령, 지역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인식: 2008
- 256 <표IX-9> 전체 청소년범과 청소년 형법범의 수와 범죄자율: 1998-2007
- 257 <표IX-10> 범죄유형별 청소년 형법범수와 범죄자율: 1998-2007
- 261 <표IX-11> 성별 청소년범의 수와 범죄자율 및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 1998-2007
- 263 <표IX-12> 자동차 등록대수: 2000-2008
- 265 <표IX-13> 대형 가전기기의 비중과 최종 에너지 소비량 및 전력 소비량: 1995-2006
-
- 272 <표X-1> 개업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수: 1997-2008
- 275 <표X-2>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일반신뢰: 2005
- 278 <표X-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08
- 278 <표X-4>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 2003, 2006
- 278 <표X-5> 주관적 계층별 본인과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목 차

- 279 <표X-6> UNDP 남녀평등지수와 젠더권능지수: 1999- 2008
- 288 <표X-7> 연령, 직업, 소득 및 학력별 이념 성향(진보-보수 평균점수): 2008
- 290 <표X-8> 이념 성향별 각종 정책에 대한 찬반 평균점수: 2008
- 293 <표X-9> 범죄 종류별 공무원 범죄자수: 2000-2008

그림 목차

- 007 [그림 I -1] 한국인구의 변천: 1910-2008
- 008 [그림 I -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050
- 009 [그림 I -3]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1-2008
- 010 [그림 I -4]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최근 출산력과 이상자녀수: 2006
- 016 [그림 I -5] 출신국가별 외국인 아내의 수: 1990-2008
- 018 [그림 I -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1960-2050
- 020 [그림 I -7] 노동인구(25-64세)의 노인인구 부양비: 2000-2050
- 020 [그림 I -8]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2001-2005
- 021 [그림 I -9]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계: 2008-2050
- 022 [그림 I -10] 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 2010-2020
- 022 [그림 I -11]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 2004, 2007
- 025 [그림 I -12] 남녀 기대수명의 변화: 1970-2008

- 034 [그림 II -1] 노인 신체 돌봄의 제공자: 1994, 2004, 2008
- 035 [그림 II -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2008
- 035 [그림 II -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8-2008
- 036 [그림 II -4]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1998-2008
- 036 [그림 II -5] 결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2008
- 037 [그림 II -6] 여성 가구주율: 1980-2009
- 038 [그림 II -7] 조손가구 수: 1995, 2000, 2005
- 043 [그림 II -8]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1980, 1990, 2000, 2008
- 044 [그림 II -9] 국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2000, 2006
- 046 [그림 II -10] EU 국가들의 성별 요리 및 가사노동 시간: 2007
- 046 [그림 II -11] EU 국가들의 성별 아이돌보기 및 학습지도 시간: 2007
- 047 [그림 II -1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2007
- 047 [그림 II -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1일 평균 여가시간 차이(남성-여성)
- 049 [그림 II -14]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2008
- 052 [그림 II -15] "잘못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

- 052 [그림 II-16]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
- 053 [그림 II-17]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
- 054 [그림 II-18]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
- 058 [그림 II-19] 이혼자의 결혼 동거기간: 1998-2008
- 059 [그림 II-20] 최근의 이혼사유: 2000-2008
- 059 [그림 II-21] 이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2008
-
- 066 [그림 III-1] 각급 학교의 취학률: 2000-2008
- 067 [그림 III-2] 각급 학교의 진학률: 1970-2008
- 069 [그림 III-3] 유아교육기관 취학률과 국·공·사립 유치원 수: 1970-2008
- 073 [그림 III-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8
- 078 [그림 III-5] 교육수준별 취업률: 1970-2008
- 079 [그림 III-6] 교육수준별 실업률: 1980-2008
- 080 [그림 III-7] 청년층 인구(15-29세)의 교육수준별 실업률: 2000-2008
- 081 [그림 III-8] 교육수준별 월급여액: 2000-2008
- 084 [그림 III-9]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 2005-2008
- 085 [그림 III-10]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2007, 2008
- 086 [그림 III-11]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2007, 2008
- 087 [그림 III-12]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2007, 2008
- 088 [그림 III-1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사교육 참여율: 2003
- 089 [그림 III-1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학업성취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1995, 2003
- 092 [그림 III-15] 부모학력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 093 [그림 III-16] 소득수준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 093 [그림 III-17] 지역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 094 [그림 III-18] 성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 094 [그림 III-19] 부모학력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 095 [그림 III-20] 소득수준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 096 [그림 III-21] 지역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 097 [그림 III-22] 성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 097 [그림 III-2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 2006
- 100 [그림 III-24] 대학전공 및 성별 취업률: 2006
- 100 [그림 III-25] 대학전공 및 성별 취업률: 2007
- 101 [그림 III-26] 2006년 미취업자 중 2007년에도 미취업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비율
- 102 [그림 III-27]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취업비율: 2006, 2007
- 103 [그림 III-28]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하향취업비율: 2006, 2007
- 104 [그림 III-29]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교육수준과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 취업자 비율: 2006, 2007

목 차

- 107 [그림Ⅳ-1]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 1988-2008
- 108 [그림Ⅳ-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 1988-2008
- 111 [그림Ⅳ-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분포: 1983-2008
- 112 [그림Ⅳ-4]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1989-2007
- 113 [그림Ⅳ-5] 근로손실 일수: 1991-2008
- 114 [그림Ⅳ-6] 사업체 규모별 노동쟁의 발생비중: 1995-2008
- 118 [그림Ⅳ-7] 대학(일반, 산업, 전문) 입학자와 졸업자수: 2000-2009
- 124 [그림Ⅳ-8]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2000-2008
- 125 [그림Ⅳ-9] 평균 실업기간과 장기실업자 비율: 1985-2008
- 125 [그림Ⅳ-10]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간 이동확률: 1985-2006
- 126 [그림Ⅳ-11] 임금근로자와 상용·임시직 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적용률: 1996-2008
- 127 [그림Ⅳ-12] 실업률 및 실업급여 수혜율: 2000-2008
- 128 [그림Ⅳ-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및 부조 소득대체율: 2004
- 130 [그림Ⅳ-14] 노조 조합원수와 조직률: 1985-2008
- 133 [그림Ⅳ-15]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 1987-2008
- 134 [그림Ⅳ-16]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좋고 나쁨의 응답률: 1989, 2004, 2007
- 134 [그림Ⅳ-17] 향후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타협공존, 갈등심화 및 불변 전망 응답률: 1989, 2007
- 134 [그림Ⅳ-18] 노동조합 단협 요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률: 1989, 2007
- 135 [그림Ⅳ-19]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양식의 온건성과 과격성에 대한 응답률: 1989, 2007
- 135 [그림Ⅳ-20] 노사협상 실패시 사용자와 노조 책임 응답률: 1989, 2007
- 135 [그림Ⅳ-21] 노동조합의 투쟁성 정도에 대한 응답률: 2005, 2007
- 136 [그림Ⅳ-22]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응답률: 1989, 2004, 2005, 2007
- 136 [그림Ⅳ-23] 노동조합의 사회불평등해소 효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응답률: 1989, 2004, 2007
- 136 [그림Ⅳ-24]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와 불필요 응답률: 2007

- 141 [그림Ⅴ-1] 소득분위별 소득 증가율: 1990-2008
- 142 [그림Ⅴ-2] 소득 불평등도: 1990-2008
- 142 [그림Ⅴ-3]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1990-2008
- 143 [그림Ⅴ-4]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 1990-2008
- 143 [그림Ⅴ-5] 중상위소득직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비: 2000-2008
- 143 [그림Ⅴ-6] 하위소득직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비: 2000-2008
- 144 [그림Ⅴ-7]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비중: 1990-2008
- 145 [그림Ⅴ-8]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982-2008
- 145 [그림Ⅴ-9] 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990-2008
- 145 [그림Ⅴ-10]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 1990-2008
- 146 [그림Ⅴ-11]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 1990-2008

- 146 [그림V-12] 소득분위별 가계 흑자 비율: 1990-2008
- 147 [그림V-13] 소득 만족도: 1999, 2003, 2007
- 147 [그림V-14] 교육수준별 소득 불만족도: 1999, 2003, 2007
- 149 [그림V-15] 평균 근로소득과 평균 사업소득의 증가율: 2004-2008
- 150 [그림V-16] 경제성장률과 평균 가구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계수: 1971-2008
- 156 [그림V-17]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 1990-2005
- 157 [그림V-18]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비: 1990-2008
- 158 [그림V-19] 가구주의 연령별 소비지출비: 1990-2005
- 159 [그림V-20] 맞벌이 가구의 소득비: 2005-2009
- 159 [그림V-21] 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990-2008
- 160 [그림V-22]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1982-2008
- 160 [그림V-23]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1990-2008
- 161 [그림V-24] 가구주의 연령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 2003-2008
- 166 [그림V-25] 가구소득별 부동산자산 비중: 2006
- 167 [그림V-26]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자산 비중: 2006
- 168 [그림V-27] 가구주 경제활동별 부동산자산 비중: 2006
-
- 173 [그림VI-1] 정부의 문화부문 예산: 1990-2006
- 174 [그림VI-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률: 2005
- 175 [그림VI-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1990-2007
- 176 [그림VI-4] 레저시설 이용률: 1996-2007
- 176 [그림VI-5] 국내 및 해외 여행률: 1990-2007
- 178 [그림VI-6]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도와 만족도: 1996- 2007
- 181 [그림VI-7] 일요일 여가시간: 1999, 2004
- 181 [그림VI-8]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 182 [그림VI-9]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 부부의 여가시간: 1999, 2004
- 182 [그림VI-10] 학교급별 학생의 여가시간: 1999, 2004
- 183 [그림VI-11] 휴무형태별 시간 활용: 2004
- 183 [그림VI-12]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여가활동 지출액: 1983-2007
- 183 [그림VI-13] 가장 중요한 여가활용 방법: 1990-2007
- 184 [그림VI-14] 여가활용에 대한 만족 여부: 1990-2007
- 184 [그림VI-15] 여가활용 불만 이유: 1990-2007
- 187 [그림VI-16] 가구 인터넷 보급률과 컴퓨터 보급률: 2000-2008
- 187 [그림VI-1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상위 10개국): 2000, 2004, 2008
- 187 [그림VI-1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자 홈페이지 구축률: 2007
- 188 [그림VI-19] 1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 1993-2008

목 차

- 189 [그림VI-20] 연령별 1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 2008
- 189 [그림VI-21] 신문 구독률: 1996-2008
- 190 [그림VI-22] 매체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 2008
- 190 [그림VI-23] 이용목적별 인터넷 이용률: 2008
- 191 [그림VI-24] 주로 이용하는 파일서비스 내용별 인터넷 이용률: 2008
- 192 [그림VI-25]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률: 2007, 2008
- 193 [그림VI-26] 온라인 사회연결망 종류별 오프라인 교제율: 2009

- 203 [그림VII-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승용차 보유율
- 212 [그림VII-2] 시·군별 인구 변화: 2000, 2005
- 213 [그림VII-3] 경부축의 교통수단 분담률: 2007
- 215 [그림VII-4] 장래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까지 평균 접근시간 변화

- 219 [그림VIII-1] 기대수명: 1970-2008
- 221 [그림VIII-2]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 1998, 2001, 2005
- 221 [그림VIII-3] 암발생률: 1999-2005
- 225 [그림VIII-4] 연평균 내원일수: 2000-2008
- 225 [그림VIII-5] 국민의료비: 1990-2007
- 226 [그림VIII-6]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중: 1991-2007
- 229 [그림VIII-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자살률: 1980-2007
- 230 [그림VIII-8] 성별 자살률: 1985-2006
- 230 [그림VIII-9] 성 및 연령별 자살률: 1985-2004
- 232 [그림VIII-10]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2008
- 237 [그림VIII-11] 공공의료 인력의 비중: 2000-2007

- 242 [그림IX-1] 화재 발생건수: 1950-2008
- 243 [그림IX-2]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 1955-2008
- 244 [그림IX-3] 산업재해율: 1965-2008
- 245 [그림IX-4] 형법범죄율: 1983-2008
- 245 [그림IX-5] 교도관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 1983-2007
- 246 [그림IX-6]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량: 1990-2006
- 250 [그림IX-7]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 251 [그림IX-8] 우리나라 사람과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 252 [그림IX-9] 사회안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008
- 258 [그림IX-10] 전체 형법범 중 주요 범죄별 청소년 범죄자 비율: 1998-2007
- 259 [그림IX-11] 청소년 형법범의 연령별 구성비: 1998-2007

260 [그림IX-12] 촉법소년의 수: 1998-2007

260 [그림IX-13] 소년원 수용인원의 여자비: 1998-2007

264 [그림IX-14] 승용차 배기량별 판매대수: 2002-2007

266 [그림IX-15] 환경오염방지 활동별 노력 정도: 2005, 2008

267 [그림IX-16] 환경보호비용 부담에 대한 찬반 비율: 2005, 2008

272 [그림X-1] 국민고충민원 접수건수: 1994-2008

273 [그림X-2] 민사사건 접수비율: 1997-2008

274 [그림X-3] 헌혈자 중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의 비중: 1995-2008

276 [그림X-4] 기관별 신뢰도: 1996, 2007

277 [그림X-5]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 1997-2008

279 [그림X-6] 인터넷 이용률: 1999-2009

280 [그림X-7] 연령별 인터넷 접근율: 2000-2009

282 [그림X-8]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1960-2008

282 [그림X-9] 주관적 계층별 총선 투표율: 2004

283 [그림X-10] 연령별 총선 투표율: 2004

283 [그림X-11]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한국·미국·일본 비교): 2005

284 [그림X-12] 사회단체 참여율: 2006, 2009

284 [그림X-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사회운동 참여 경험: 2005

287 [그림X-14] 주관적 이념 성향: 2002-2008

290 [그림X-15] 지역별 주관적 이념 성향(진보-보수 평균점수): 2008

294 [그림X-16] 중앙행정기관별 부패지수: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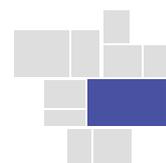
295 [그림X-17] 국민, 공무원, 기업인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평가 평균점수: 2007

296 [그림X-18]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및 대가를 요구받은 경험 비율: 2006

297 [그림X-19]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의 공무원 부패만연 인식 비율: 2006

298 [그림X-20]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의 행정기관 부패만연 인식 비율: 2004

299 [그림X-21]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의 정치인 부패만연 인식 비율: 2006



머리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경제생활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생활이 향상된 만큼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도 향상된 것은 아니다. 일반 국민의 '삶의 질'은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사회복지제도, 사회 안전과 통합 등 여러 사회 영역들에서 사람들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동향』은 이러한 '삶의 질'의 상황과 상황의 변화를 일반 국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2008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연차적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 시계열적 통계자료로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2) 국제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삶의 질'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3) 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남녀 간, 연령 집단 간, 계층 간, 지역 간 등 여러 사회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통계자료로 보여줌으로써 어느 집단에 어떤 '삶의 질'의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총괄적으로 서술해 주는 사회의 영역(부문)별 주요변화 논문과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 이슈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는 주제논문들로 구성하였다. 주제논문의 이슈들은 이 보고서의 틀을 짜고 편집을 책임진 공동연구자들이 부문별로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수록되는 논문들의 집필진은 해당 부문 또는 주제를 전공한 학자들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2008년에 발간된 창간호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문에 주요변화 논문 1편과 주제논문 2편을 수록하였는데, 이번 『한국의 사회동향 2009』에서는 복지문제는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문제는 사회안전 부문에 통합시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창간호와 이번 보고서는 부문별 주제논문의 편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간호에서는 주제논문을 부문별로 2편씩 획일적으로 수록하였으나, 이번 호에서는 제기되는 이슈들의 중요도와 시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논문을 최대 4편까지 수록하였다. 2008년 보고서에는 23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주요변화논문들을 포함하여 총 36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번 2009년 보고서에는 25명의 학자들에 의한 총 37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지표』와 『사회조사』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의 중앙부처들에서 산출되는 통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을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고,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의 자료도 이용되었다.

연구책임자 석 현 호

알려두기

1.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집필자들의 견해이며, 통계청 혹은 통계개발원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2. 이 보고서는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3.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통계개발원에서 시행한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4.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개발원의 소유입니다.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김두섭 6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 이상림 17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 김두섭 24

I. 인 구

Populat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앞으로 10년 이내에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회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부터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 성장과 구성의 변화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005-2010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4,875만 명으로 세계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만 명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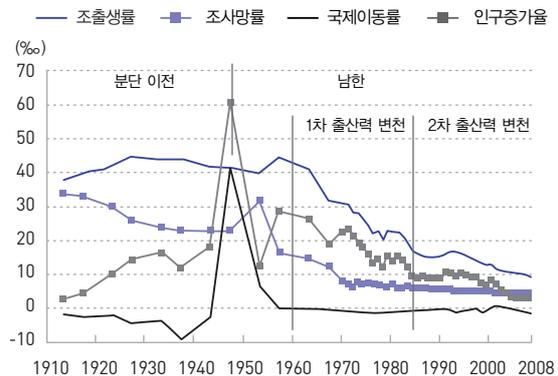
한국인구의 사망률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률 변천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8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인구의 출산률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작되었다. 한국전쟁 후의 '베이비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로 인하여 1960년대 초에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5년 8.9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도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이동률의 영향을 받는다. [그림 I-1]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하에서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그림 I-1] 한국인구의 변천: 1910-2008



출처: Kim and Kim, *Population of Korea*, 2004: 7;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인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과 아울러 인구의 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인구구조는 주로 성, 나이,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육,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해 살펴본다. <표 I-1>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인구의 규모가 여자인구보다 컸으나, 남아선호의 약화로

인한 출생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의 저하와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1〉 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 1995, 200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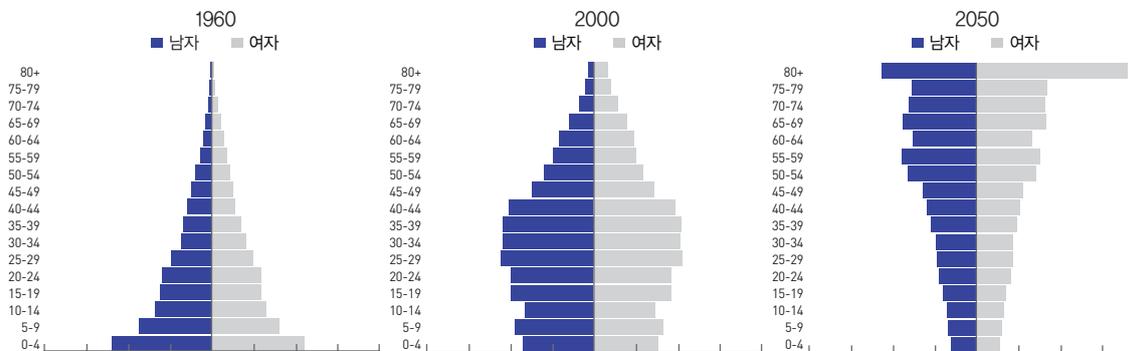
	1995	2000	2005
(%)			
성 ¹⁾			
남자	50.2	50.2	50.0
여자	49.8	49.8	50.0
연령 ¹⁾			
0-14세	23.0	21.0	19.1
15-64세	71.1	71.7	71.6
65세 이상	5.9	7.3	9.3
혼인상태 ²⁾			
미혼	30.8	30.1	30.2
유배우	60.7	60.6	59.3
사별	7.4	7.4	7.6
이혼	1.1	1.9	3.0
교육수준 ²⁾			
초등학교	14.4	12.5	11.0
중학교	15.0	12.7	11.0
고등학교	45.6	42.7	39.2
대학 이상	25.0	32.1	38.8

주: 1)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연령 구성은 빠르게 변화해 왔다. [그림 I-2]에서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냈으나, 2000년에 이르러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었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연령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인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3.0%에서 2000년 21.0%, 2005년 19.1%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5-64세 인구는 절대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화되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05년 71.6%로 약간 낮아졌을 뿐이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도 1995년의 5.9%에서 2005년 9.3%로 높아졌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2005년 현재 59.3%로 가장 높다. 미혼자의 비중이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은 연령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과 비교해보면, 결혼 지연

[그림 I-2]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 1960, 2000, 205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5년 1.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3.0%로 높아졌다. 이혼자의 증가 추세는 특히 40-6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표 I-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1995년 14.4%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5.0%에서 38.8%로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이 같은 향상 추세는 청장년인구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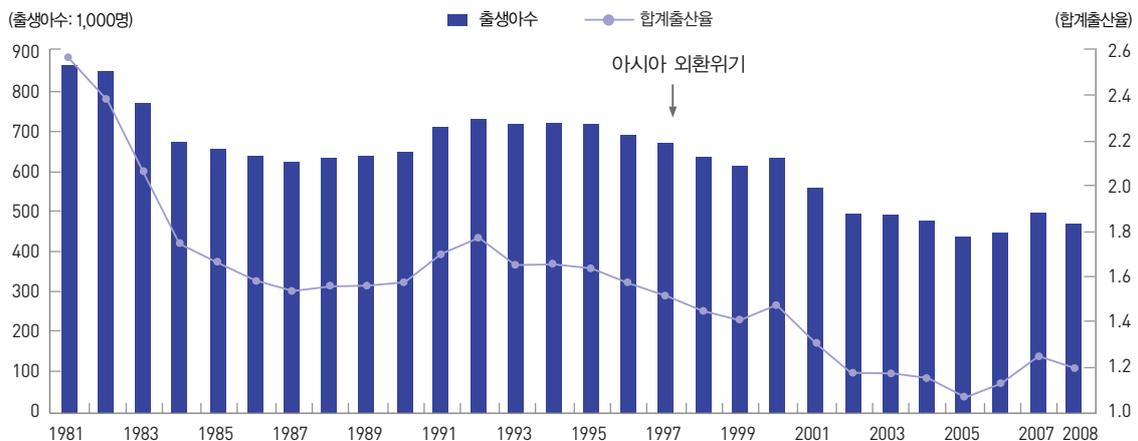
한국인구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진국

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소가족가치와 규범이 확고하게 뿌리내렸고,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 경제활동의 증가, 이혼의 증가로 출산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I-3]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000년, 2006년과 2007년에 출산 수준이 반짝 오름세를 보인 것은 '새천년 베이비붐'과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구호에 힘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에서 1998년 1.45로 낮아졌으며, 2005년 1.08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 2007년 1.25, 그리고 2008년에 1.19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그림 I-3]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1981-2008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Reference Bureau)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다.

통계청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는 465,892명으로 2007년의 493,189명보다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8월 이후에는 2007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출생아수가 2005년 435,031명으로 바닥을 친 후 2006년과 2007년에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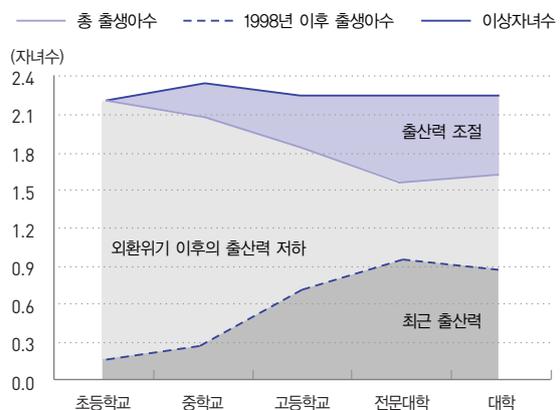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바 크다. 대량 실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 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4,911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이혼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초혼연령의 상승 역시 출산 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여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1997년에 25.7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0.2~0.3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28.3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째 아이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7년 26.9세에서 2008년 29.6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을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

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출산 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 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출산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 수준은 중상층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수의 변화 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자녀의 수는 부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 I-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4] 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최근 출산력과 이상자녀수: 2006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2006; Kim(2009).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출산비용과 자녀 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다.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률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구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

해 있다. [그림 I-1]에서 조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망률 저하 속도의 둔화는 부분적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만 명대를 유지하여 왔으며, 2008년에 246,113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망률은 2004-2008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에서 2008년에는 76.5세와 83.3세로 늘어났다. 불과 17년의 기간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3.0%와 9.7%가 높아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효과가 효율화되고 의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망률은 더 저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I-2>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인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도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이 현저하게 낮고,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높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스웨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표 I-2> 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2005-2010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1,000명당)		기대수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인구	8.5	48.4	46.1	65.4	69.8
선진국	10.1	6.7	5.9	73.6	80.5
개발도상국	8.1	53.0	50.7	63.9	67.4
아시아	7.4	40.8	42.3	67.1	70.8
한국 ¹⁾	5.0	3.5	3.3	76.5	83.3

주: 1) 2008년 통계청 자료.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또한 한국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사망률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망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2008년 현재 여자 사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연령별로는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사망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 상승에 비례하여 높아진다. 남녀 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벌어져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망률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조 효과를 배제하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률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률 변천은 사망원인 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률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는 반면, 사망률이 낮은 사회에서는 심장병,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다.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운수사고, 20-30대는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폐암, 간암, 위암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5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의 순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난 10년간의 사인 변화를 살펴보면,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보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지수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I-3>에서 보는 것처럼, 2005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9.1%와 1.4%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 각각 38.2%와 14.5%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보다 많아진다.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인구의 중위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I-3>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34.8세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무려 56.7세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비는 1960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05년 12.6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72.0 수준에 도달하여 생산활동연령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 지수는 1960-2005년과 2005-2050년의 기간에 각각 6.9배와 9.1배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표 1-3〉 고령화 추세와 전망: 1960-2050

	인구구성비율(%)		중위 연령	노년 부양비 ¹⁾	고령화 지수 ²⁾
	65세 이상 인구	80세 이상 인구			
1960	2.9	0.2	19.0	5.3	6.9
1980	3.8	0.5	21.8	6.1	11.2
2000	7.2	1.0	31.8	10.1	34.3
2005	9.1	1.4	34.8	12.6	47.3
2020	15.6	3.6	43.8	21.7	125.9
2040	32.5	9.5	53.4	56.7	314.8
2050	38.2	14.5	56.7	72.0	429.3

주: 1) 노년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100.

2) 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경상북도(의성군, 예천군, 청도군, 군위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역(의령군, 함천군, 남해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오산 등의 도시지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사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도시화와 수도권 팽창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한국 인구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인구의 지역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은 2005년 현재 81.5%에 달한다. 여기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89.8%가 되며, 그 구성비율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인구규모의 변화만을 초래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탈로 절대인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서울인구는 1960년 245만 명으로 전국인구의 9.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061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

인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24.5%에 도달하였다. 그 후 서울인구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 98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전 국토의 0.6%에 불과한 605km² 안에 km² 당 16,221명이나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인구도 폭발적으로 팽창하였다. 전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2005년 현재 전국인구의 48.2%에 해당하는 2,277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표 I-4〉는 1960년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를 연대별로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60-1970년 기간 서울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8.1%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구 증가의 50.7%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1960-1970년의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의 인구는 4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도시인구 증가의 69.9%에 해당된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

되었으나,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거주지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서울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 위성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항공업도시와 청주, 강릉, 진주, 천안 등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팽창은 주로 농촌-도시 및 지역 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지역별 인구규모도 크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어 1960년과 2005년의 인구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거의 4배로 증가한 반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표 I-4〉 서울, 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1960-2005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인구 (1,000명)	비율 (%)										
서울	2,445	9.8	5,433	17.6	8,364	22.3	10,613	24.5	9,895	21.5	9,820	20.8
서울대도시권 ¹⁾	2,938	11.8	6,327	20.5	10,744	28.7	16,508	38.0	19,441	42.1	20,960	44.3
수도권 ²⁾	5,194	20.8	8,730	28.3	13,298	35.5	18,586	42.8	21,354	46.3	22,767	48.2
권역별 5대도시 ³⁾	4,829	19.3	9,239	29.9	14,508	38.8	18,828	43.4	18,759	40.7	18,669	39.5
시(동)부	6,996	28.0	12,709	41.2	21,434	57.3	32,308	74.4	36,755	79.7	38,515	81.5
군(읍/면)부	17,976	72.0	18,172	58.8	16,002	42.7	11,101	25.6	9,380	20.3	8,764	18.5
전국	24,989	100.0	30,882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주: 1) 서울, 인천 및 경기도 내의 시(동)부 인구 포함.

2) 서울, 인천과 경기도 인구 포함.

3)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해당 도의 인구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I-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둔화되었고 1990-2005년의 기간에 79만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445만 명과 418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울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대신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 집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구과밀에 따른 제반 병리현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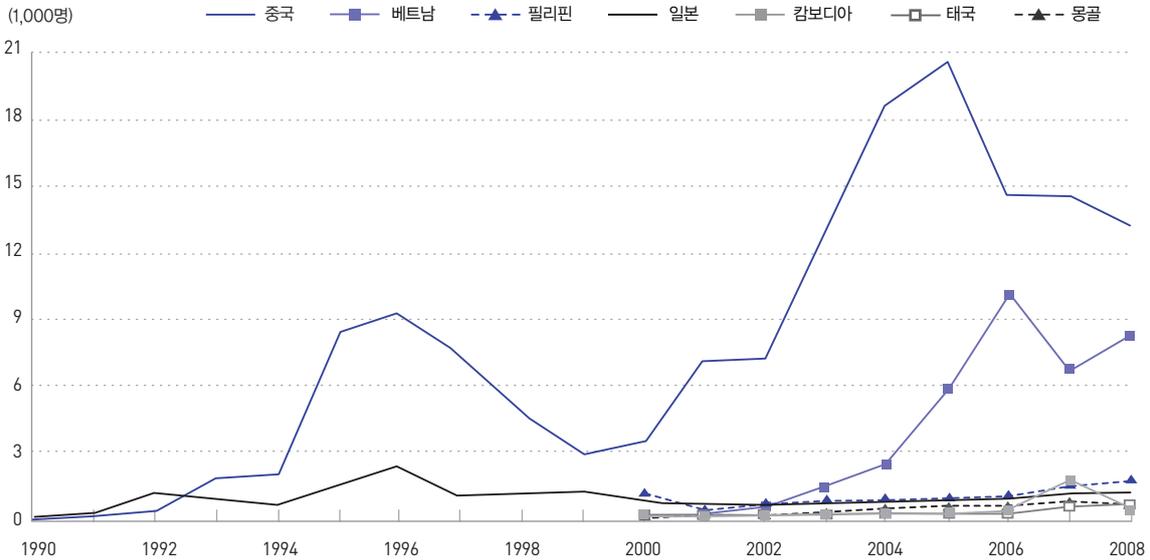
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남자 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등하게 많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화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결혼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신고 자료에 의하면 1990년에는 외국인과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42,356건을 기록하였고 2008년 36,204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서 2005년 13.5%, 2008년 11.0%로 높아졌다.

[그림 I-5]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1990-2008년의 기간 동안 149,402건이 신고되었으며,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08년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중국(13,203명) 다음으로 베트남(8,282명), 필리핀(1,857명), 일본(1,162명), 캄보디아(659명), 태국(633명), 몽골(52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인구의 성과 연령 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적령인구의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그림 1-5] 출신국가별 외국인 아내의 수: 1990-2008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을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증가를 초래한 다섯 가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6).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저출산, 고령화와 노

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으로 인구성장이 재개되거나 또는 인구감소를 상당 수준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인구동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젊은 이입인구의 경제활동과 출산을 통해 사회의 생존력을 높이는 정책적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참고문헌

- 김두섭. 2006.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25-56.
- Kim, Doo-Sub. 2009.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110-131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 UN. 1984.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40-61. New York: United Nations.

김두섭 (한양대학교)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요 약

- 한국사회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 노인인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와 더불어 실버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젊은 인구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고령화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는 지금의 고령화 정도가 아직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구조나 저출산 및 수명 증가의 추세를 비춰볼 때, 우리 사회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고령사회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국제비교와 국내의 지역 간 비교 수준에서 간략히 개관하고, 고령화가 노인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비의 증가 및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고령사회의 문제가 현재의 노인 문제와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사망력과 출산력의 감소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사망력 감소는 식민지 시기인 19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산력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

다.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 속에서도 지난 2000년까지는 젊은 연령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일어났으며, 고령화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률은 1983년부터 대체수준(합계출산율 2.1) 이하로 떨어졌고,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세는 가속화되어 200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감소는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인 연령층의 사망률 감소와 맞물려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출산력의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베이비붐 출생코호트(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출생)가 가까운 장래에 노인 집단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림 I-6]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출생 집단이 노인연령이 되는 2020년 중반부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이 끝나는 2040년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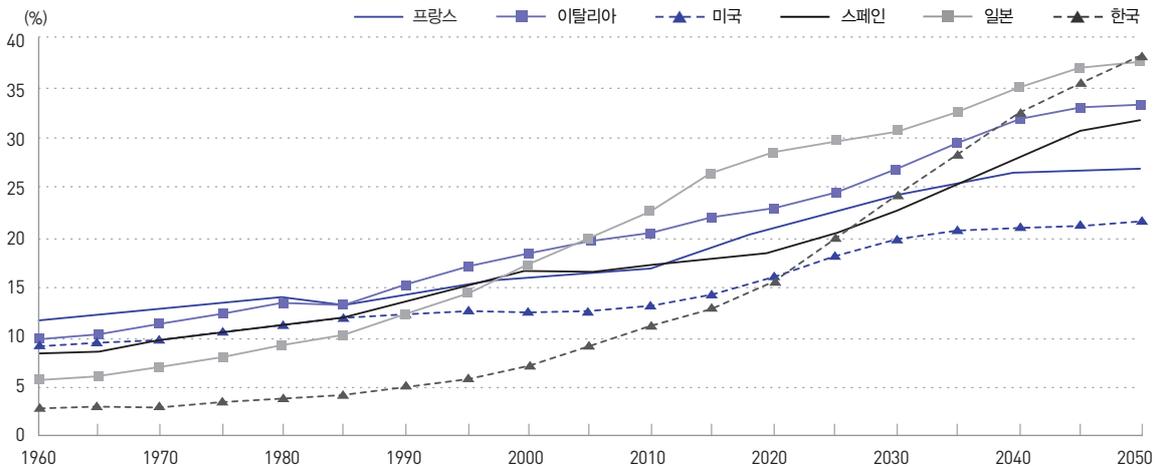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지역 간 고령화 속도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단체 수준에서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도별 고령화의 추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 I-5>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도 농촌의 비율이 높은 도단위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이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늦다는 점이다. 이는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재 젊은 연령의 인구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I-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1960-2050



출처: UN, Population Database(<http://esa.un.org/unpp/>);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표 I-5〉 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추계:
2010, 2020, 2030

					(%)	
		2010	2020	2030	증가율 ¹⁾ (2010-2030)	
전	국	15.0	21.7	37.7	151.3	
서울	특별시	12.3	20.5	33.5	172.4	
부산	광역시	15.1	26.9	48.6	221.9	
대구	광역시	13.5	22.0	40.9	203.0	
인천	광역시	11.5	18.1	36.6	218.3	
광주	광역시	12.2	18.9	33.5	174.6	
대전	광역시	11.5	18.1	32.6	183.5	
울산	광역시	9.2	17.8	40.1	335.9	
경	기	도	11.6	16.6	31.7	173.3
강	원	도	22.2	29.7	52.7	137.4
충	청	북	19.5	25.4	44.6	128.7
충	청	남	22.6	26.7	41.4	83.2
전	라	북	24.2	31.7	50.1	107.0
전	라	남	31.2	37.9	57.5	84.3
경	상	북	23.4	30.4	49.5	111.5
경	상	남	17.3	23.3	40.8	135.8
제주	특별자치	도	17.9	23.4	39.2	119.0

주: 1) 2010년 대비 2030년 구성비율의 증가율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반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울산, 부산, 인천 및 대구의 노인인구 증가는 훨씬 더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지역이 경험하게 될 고령화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예고해 준다. 물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지역 단위 예측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령화와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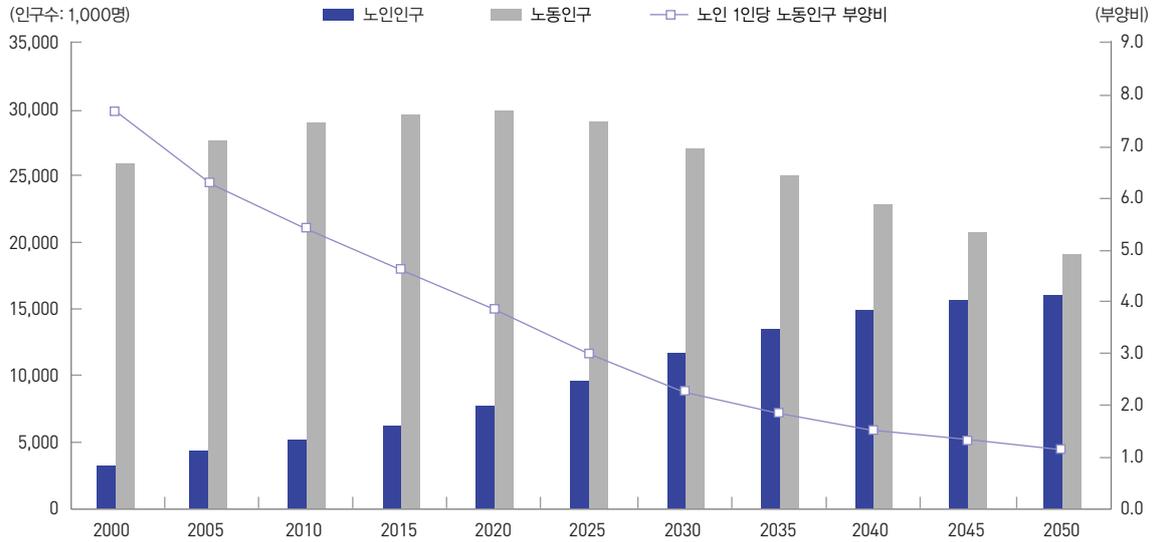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고 노

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족 수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젊은 연령층의 노동인구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가구 단위에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 복지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젊은 노동인구의 조세 부담의 증가를 유발한다. 그리고 비생산활동 인구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구조의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려 산업생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I-7]은 2050년까지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노동인구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그리고 한 명의 노인 부양을 위해 몇 명의 노동인구가 필요한 지를 말해주는 노인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한 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약 5명 정도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경에는 거의 한 명의 노동인구가 한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인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 사회의 빠른 고령화가 경제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은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칠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노동력의 감소는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혼인, 출산, 양육 및 부부관계 등 우리 사회 가족구조에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그림 1-7] 노동인구(25-64세)의 노인인구 부양비¹⁾: 2000-2050



주: 1) 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노동인구(25-64세) 수.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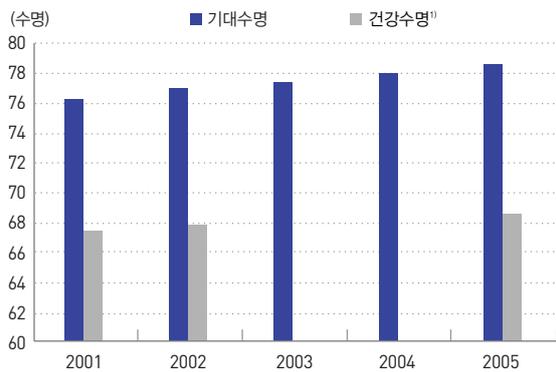
수입이 매우 일반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산업의 노동력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구구성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구조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노인 노동시장의 확대, 은퇴시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의 조정 등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

노인의 증가는 의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의료비용의 증가율은 노인인구의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림 1-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

간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림 1-8]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2001-2005



주: 1) 2001년과 2002년은 WHO 자료이고, 2005년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이며, 2003년과 2004년에는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음.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WHO, 『The World Health Report』, 2002,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2005.

〈표 I-6〉 노인인구와 의료비: 2001, 2004, 2007

	노인 인구 (1,000명)	노인 급여비 (억 원)
2001(a)	3,216	23,565
2004	3,748	38,411
2007(b)	4,387	69,537
증가비(b/a)	1.4	3.0

출처: 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운용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표 I-6〉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하였지만, 전체 노인 의료비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의료시설을 찾는 일수(日數)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되는 의료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의료비용의 증가는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질환 노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노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가격의 의료 서비스를 찾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역시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노인 의료비는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격히 진행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 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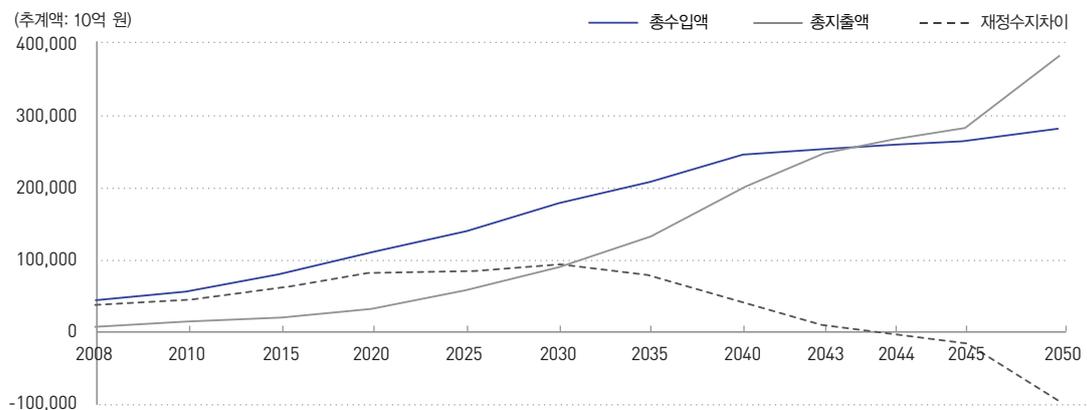
의 증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 증가는 물론이고, 건강보험 수급비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증폭시킨다.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비 지출에 대한 한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김종면·김우철, 2007). 이러한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건강보험 체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들은 대부분 소득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어서부터 노후를 준비한 노인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한 후 연금수급권을 갖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별로 문제되지 않고 있다.

[그림 I-9] 국민연금 재정수지 추계¹⁾: 2008-2050

주: 1) 2008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에서 점증하여 2030년 이후 1.28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임.

출처: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 2008.

그러나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기여금을 납부한 완전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림 I-9]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8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정무권, 2008). 그러므로 국민연금 체계의 대대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연금 수급자나 은퇴시기에 가까운 기존의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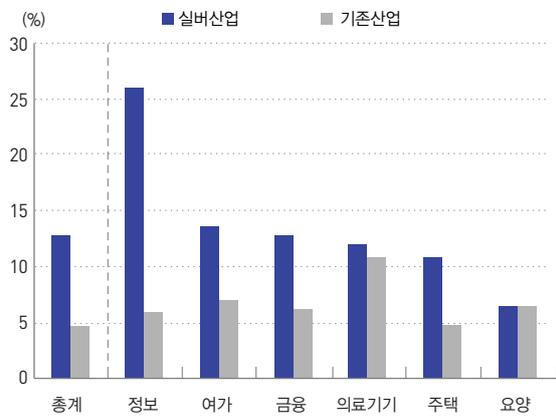
실버산업의 발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많은 사회적 논의들을 ‘노인문제’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래의 노인인구는 지금의 노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과 소득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권리인식 증대, 정보통신 이용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의 개선 등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긍정적 기회를 마련해줄 수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적인 변화는 실버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산업은 고령자의 요양 서비스 분야, 고령자용 용구·용품 및 의료기기 분야, 노인건강지원 산업,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산업, 금융·자산관리 관련 산업, 노인을 위한 정보산업 그리고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앞으로

10년 동안 실버산업의 성장률(12.9%)은 기존 산업의 성장률(4.7%)을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10). 실버산업의 급성장은 새로운 소비수요 발생과 투자 증가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10] 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 2010-2020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2006년 7월 28일.

[그림 I-11]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 2004, 200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다. 한 예로 [그림 I-11]은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의 증가를 보여준다. 비록 노인인구의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년 42.5%, 2007년 47.3%)은 전체 인구(2004년 62.3%, 2007년 64.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 생활패턴의 변화는 노인 관련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노인들의 노동, 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의 활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고, 젊은 세대와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복지, 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강하고 주체적인 노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모든 세대의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중면·김우철. 2007.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 정무권. 2008.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이상림 (서울대학교)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 간 차이

요 약

-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왔으며, 현재의 기대수명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 여자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자보다 낮으며, 노인 인구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지역에서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최근에는 노인인구와 고학력 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 인구연령구조,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도 관찰된다.

사망률의 수준은 한 사회 내에서도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망률 변화의 방향과 속도 역시 모든 집단에서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회집단 간에 나타나는 편차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동향과 당면 문제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역사적인 변화 추이를 개관한다. 남녀 사망률의 최근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고,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고령화 과정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주요 질병과 사망원인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한국인구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되면서 사망 수준이

매우 높았다.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료시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부터였다. 그 후 일본 식민통치에 의해 실시된 방역, 종두 접종 등의 보건 개혁으로 1920년경부터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에 35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이 일제 말기인 1940~1944년에는 23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권태환·김두섭,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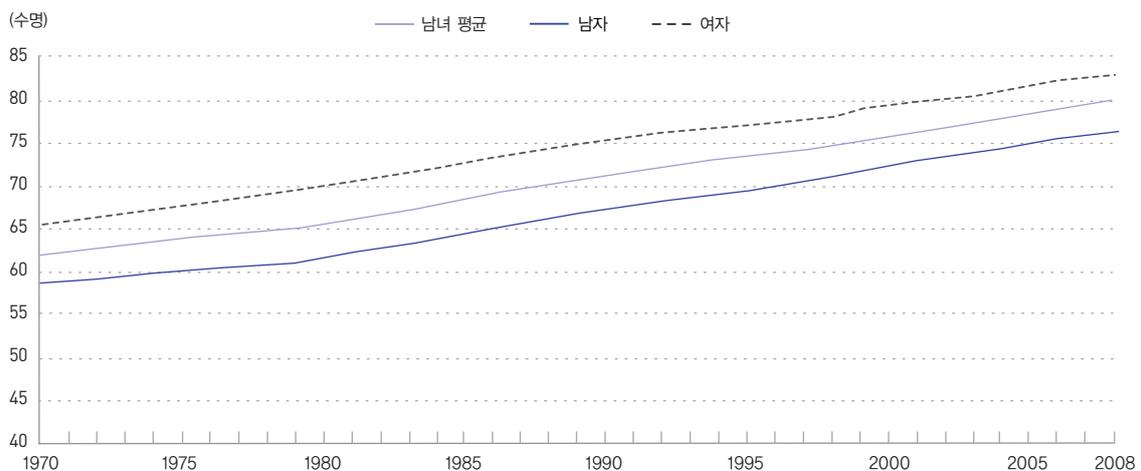
한국전쟁 이후 항생물질로 대표되는 의약품의 광범한 보급으로 제2의 사망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1955~1960년의 짧은 기간에 조사망률이 5 정도 감소하였고, 출생 시 기대수명도 이 기간에 6~8세가량 증가하였다(권태환·김두섭, 2002). 조사망률은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선진국의 수준만큼 낮아졌다. 현재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역시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높다.

[그림 I-12]를 보면,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에 이르러, 그리고 남자는 1996년에 70세를 넘어섰다. 지난 2008년에는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각각 76.5세와 83.3세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0.1세이었다. 이 그림에서 기대수명의 성별 차이는 1970년 6.9세로 집계되었으나, 1985년의 8.4세를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어 2008년에는 6.8세로 낮아졌다.

사망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사망자는 246,113명이며, 조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각각 5.0과 3.4로 추정된다. 앞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 및 보건제도의 확충과 개선은 사망수준을 더욱 낮추고 기대수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망자수와 조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12] 남녀 기대수명의 변화: 1970~2008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연령별 남녀 사망률의 변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망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률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후 사망률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지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과도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사망률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며,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사망률이 급증한다.

한국인구의 사망률 저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일관되게 관찰된다.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추세를 분석해 보면,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영아사망률 및 유아사망률의 감소가 전체인구의 사망률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한 이후에는 고령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점차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I-7〉은 지난 20년간 남녀 사망률의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연령이 높은 집

단일수록 사망률의 감소폭이 커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1988-2008년의 기간에 10대 연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0.7과 0.4가 낮아졌고, 20대에서는 각각 1.2와 0.5가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0대 연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38.8과 23.8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사망률의 감소폭이 70대 연령집단의 두 배 정도이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는 전체인구의 사망률을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I-7〉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인 및 고령인구 남자 사망률의 감소폭이 같은 연령집단의 여자 사망률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고령인구에서 사망률 감소의 성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85년 이후 기대수명의 성별 편차가 줄어들어 추세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표 I-7〉 연령집단별 남녀 사망률의 변화: 1988, 2008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1988	2008	차이	1988	2008	차이
0-9세	1.2	0.5	0.7	1.0	0.4	0.6
10-19세	1.0	0.3	0.7	0.6	0.2	0.4
20-29세	1.9	0.7	1.2	0.9	0.4	0.5
30-39세	3.3	1.1	2.2	1.3	0.6	0.7
40-49세	7.6	3.0	4.6	2.9	1.2	1.7
50-59세	14.9	6.6	8.2	6.1	2.3	3.8
60-69세	34.0	15.6	18.4	15.1	6.0	9.1
70-79세	80.5	41.8	38.8	44.8	21.0	23.8
80세 이상	199.8	125.0	74.8	139.4	90.0	49.5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되어 고령인구에서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령인구 남녀 구성의 변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망률 수준의 지역별 특징

사망률은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순창군, 예천군, 보성군, 영광군 등은 고령인구가 많아 장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지역들은 맑은 공기와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의 섭취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 간의 사망수준 차이는 인구의 연령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사망률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전국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별로 산출한 남녀의 표준화사망률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시도 중에서 전국의 남자 사망률 5.48보다 낮은 표준화사망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경기도, 대전의 세 곳이었다. 여자 표준화사망률의 경우에는 제주도와 서울의 두 곳이 전국의 여자 사망률 4.49보다 낮았다. 이는 사망률이 낮은 서울의 인구규모가 현저하게 크고,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표준화사망률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자 표준화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은 서울, 4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대도시와 주변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전라남도과 충청남도에서 예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자 표준화사망률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에서 낮게 산출되었다. 단지 부산과 울산의 경우에는 연령구조를 표준화시킨 이후에도 남녀 모두 사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8〉 남녀 사망률의 연령집단 및 지역 간 차이: 2008

	남자 사망률(1,000명당) ^{a)}			여자 사망률(1,000명당) ^{a)}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전 체	5.0	11.0	0.5	7.9	10.2	0.8
40-44세	2.1	3.5	0.6	0.9	1.4	0.6
45-49세	3.5	5.7	0.6	1.4	1.6	0.9
50-54세	5.1	7.4	0.7	1.8	2.6	0.7
55-59세	7.9	10.2	0.8	2.7	3.3	0.8
60-64세	11.1	13.6	0.8	4.2	4.8	0.9
65-69세	19.2	22.6	0.8	7.6	7.9	1.0
70-74세	32.2	36.1	0.9	14.7	14.6	1.0
75-79세	53.4	57.8	0.9	29.5	27.3	1.1
80-84세	92.9	99.9	0.9	56.9	56.7	1.0
85-89세	150.3	157.7	1.0	104.0	100.3	1.0

주: 1) 사망률=(사망자수÷주민등록인구)×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2008.

남녀의 표준화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모든 지역에서 여자의 사망수준이 남자보다 낮다. 표준화사망률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 간 사망수준의 격차가 작은 지역은 대전, 경기도, 서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도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사망률이 농촌지역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된다. 우선 거주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등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도시지역의 유리한 보건환경과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획일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표 I-8>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연령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농 간의 상대적인 사망률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에서는 농촌지역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현상도 발견되며, 이러한 역전현상은 여자에게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표에서 전체 여성의 사망률은 농촌이 10.2로 도시의 7.9보다 높다. 그러나 70-74세 집단에서는 농촌의 사망률이 더 낮아지기 시작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그 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사망률 격차의 이 같은 역전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태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도시 환경이 사망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고령집단에게는 그렇지 않거나 혹은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다.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한 사회 내에서 집단 간 사망수준의 차이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이고, 교육수준, 직업 등 해당 사회에서의 계층적 위치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 영양 상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환경에의 노출 정도, 스트레스, 흡연이나 운동과 같은 생활양식의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망수준의 편차가 사회 내 유·무형 자원들의 불평등한 배분을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의 편차와 그 변화 양상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수준은 소득, 재산, 직업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변수로 그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일정 연령 이후에는 변동성이 약하다는 장점 때문에 사망률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 <표 I-9>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률의 최근 변화 양상이 남녀 및 주요 연령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망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1995-2005년의 기간에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편차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사소한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남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연령집단에 관계없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비록 인구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1995년 45-49세 초등학교 학력자의 남자 사망률은 대학 학력자보다 5.5배나 높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 격차가 9배로 확대되었다. 같은 연령집단 여자의 경우에도

〈표 1-9〉 남녀, 연령집단 및 교육수준별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비의 변화: 1995, 2005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비 ¹⁾									
		남 자					여 자				
		초등 졸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초등 졸 미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45-49세	1995	6.6	5.5	2.9	1.7	1.0	3.4	2.4	1.5	1.2	1.0
	2005	7.5	9.0	4.3	2.0	1.0	6.7	4.5	2.0	1.5	1.0
50-54세	1995	4.0	3.4	2.1	1.4	1.0	2.5	2.3	1.6	1.2	1.0
	2005	5.1	5.7	2.7	1.8	1.0	3.7	2.5	1.3	1.2	1.0
55-59세	1995	2.0	2.4	1.7	1.3	1.0	1.6	1.7	1.4	1.1	1.0
	2005	3.2	3.1	1.8	1.5	1.0	2.6	1.9	1.3	1.3	1.0
60세 이상	1995	1.4	1.2	1.7	0.9	1.0	2.6	1.7	1.1	1.0	1.0
	2005	2.6	2.0	1.4	1.1	1.0	4.6	2.4	1.3	1.3	1.0

주: 1)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비=해당 학력집단의 사망률÷대학 이상 학력자 사망률.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초등학교와 대학 학력자 간의 상대적인 사망률 격차가 1995년의 2.4배에서 2005년 4.5배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심화가 해당 기간 저학력 집단에서의 사망률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사망률이 고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모든 학력집단이 사망률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는 추세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하고, 그 전환은 의료발전,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일반

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퇴행성 질병으로 사망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사망원인은 암, 호흡기 질환, 자살이었으며,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자살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0,000명당 자살자의 수가 1997년의 13.1명에서 2008년에는 26.0명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인구연령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기인

〈표 I-10〉 연령집단별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 1998, 2008

		사망원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5-29세	1998	운수사고	자살	암	익사	뇌혈관 질환
	2008	자살	운수사고	암	추락사	뇌혈관 질환
45-49세	1998	암	간 질환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자살
	2008	암	자살	간 질환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65-69세	1998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2008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당뇨병	자살
80세 이상	1998	뇌혈관 질환	암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허혈성 심장 질환
	2008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하는바 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사고사가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성 질환의 비중이 커진다.

〈표 I-10〉에서 25-29세 집단의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1998년에는 1위 운수사고, 2위 자살, 그리고 3위가 암이었으나, 2008년에는 자살과 운수사고의 순

위가 서로 바뀌었다. 자살의 증가와 운수사고의 감소는 45-49세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65-69세 집단에서는 지난 10년 간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집단에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사망과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하기도 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참고문헌

- 권태환 · 김두섭. 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두섭 (한양대학교)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한경혜 32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 홍승아 42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 정기선 48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 한경혜 55

II. 가족과 가구

Family & Household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대 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 노인의 자녀동거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 지난 10여 년 동안에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초혼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혼 여성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
- 조손가구와 분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가족은 그 형태와 구조 및 가치의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과 행위의 기반이며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형태와 규범이 다양화되고, 해체와 재구성의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한국가족의 변화와 연속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학술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에서의 전반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노인 부양의 약화를 가족관계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혼인연령의 지연 및 국제결혼의 증가, 조손가구와 분거가족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구성의 변화

한국가족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변화 양상은 가구구성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평균 가구원수가 1985년 4.1명에서 2008년 2.9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세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1세대 가구가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세대 가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2005년에는 6,701,759가구로, 2000년의 6,891,558가구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녀' 가구는 21.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상과도 관련된다. 1인 가구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층에서는 독거 노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새로운 독신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과거 30여 년 간 68%대를 유지해오던 핵가족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구, 모+자녀가구)비율이 2007년에는 1인 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65.2%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현대 한국가족은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다.

노인가구 형태의 변화와 노인부양의 약화

최근 한국 가구구성의 변화에는 수명연장과 함께 증가한 노인인구의 거주유형 관련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05년에는 5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가족 내의 세대관계가 크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에는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농촌 노인가족을 중심

〈표 II-1〉 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85-2008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⁴⁾
1세대 가구 ¹⁾	9.6	10.7	12.7	14.2	16.2	16.7
2세대 가구 ²⁾	67.0	66.3	63.3	60.8	55.4	55.1
3세대 이상 가구 ³⁾	14.9	12.5	10.0	8.4	6.9	6.8
비혈연 가구	1.7	1.5	1.4	1.1	1.4	1.3
1인 가구	6.9	9.0	12.7	15.5	19.9	2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세대 가구는 부부, 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2) 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 부부+부모, 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3) 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4)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표 II-2〉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199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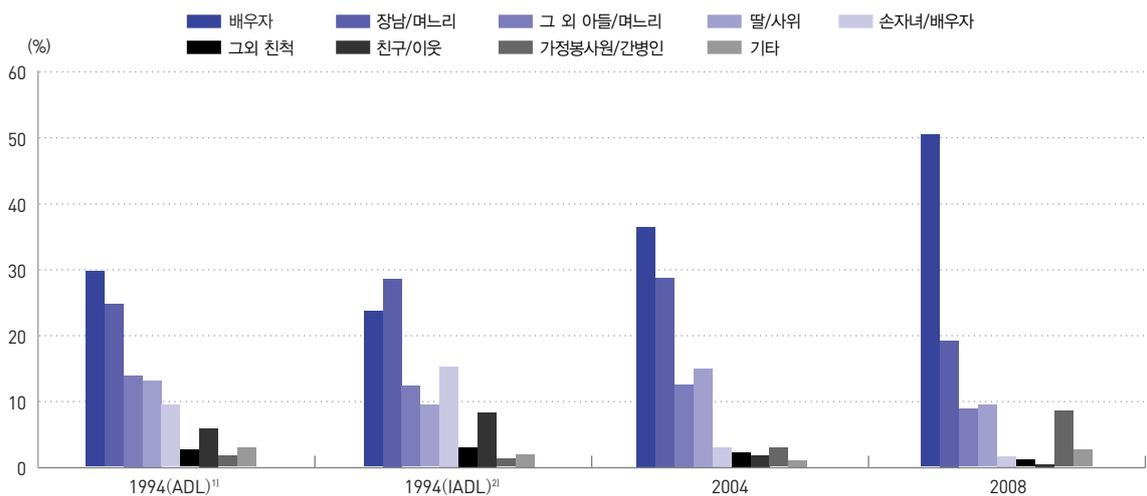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노인단독	10.6	16.0	20.1	23.2
노인부부	12.7	17.7	21.7	24.9
자녀동거 ¹⁾	75.3	65.1	57.1	50.8
기타 ²⁾	1.4	1.2	1.1	1.1
전체	100.0	100.0	100.0	100.0

주: 1)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를 합한 비율임.
 2) 노인부부와 2세대 이상을 제외한 기타가구와 비혈연가구, 미상을 합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반면, 최근에는 거주유형에 대한 규범 및 태도가 변화되어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핵가족화로 젊은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 단독 가구나 노인부부 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그림 II-1〉 노인 신체 돌봄의 제공자: 1994, 2004,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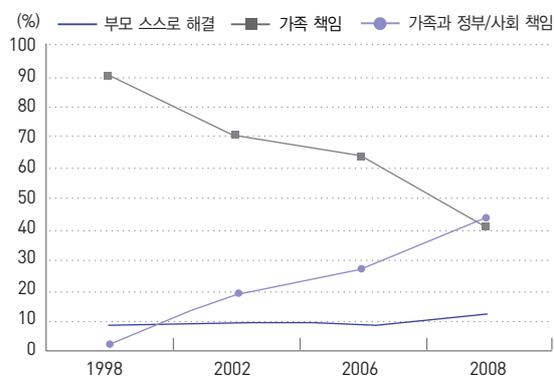


주: 1)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2)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일상용품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전철 타기, 가벼운 집안일 하기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994, 2004;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도 노인생활실태조사』, 2009.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가 특히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노인의 경우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과 며느리가 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배우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와 연관된 현상이며, 이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들 역시 노인이라는 점에서 부양부담이나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노인 돌봄의 주된 제공자로서의 자녀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는 여성의 취업 증가로 자녀세대가 노인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그와 함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인식변화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가족이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식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약화되었다. 1998년과 2008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그림 II-2]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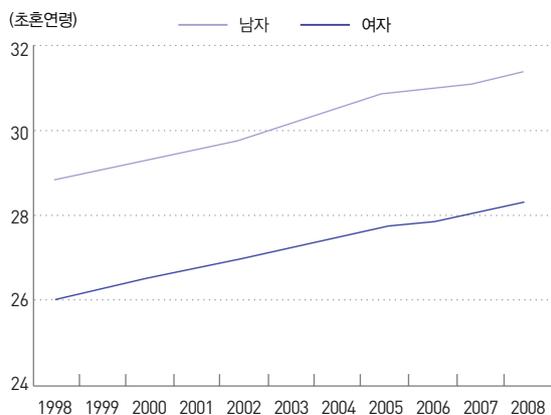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면 가족책임이라는 태도가 감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사회가 같이 돌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 부양이 더 이상 개인적, 사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노인 및 노인가족 정책을 접근해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혼인율 감소와 만혼화

2008년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정도 늦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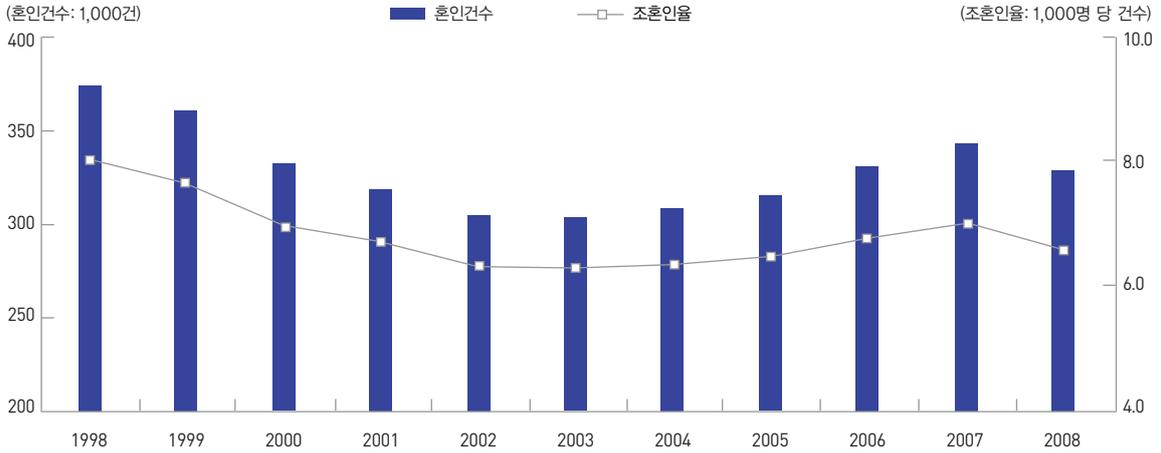
[그림 II-3] 성별 평균 초혼연령: 1998-2008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렇게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미혼 시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자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조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가장 낮은 6.3명으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그림 II-4]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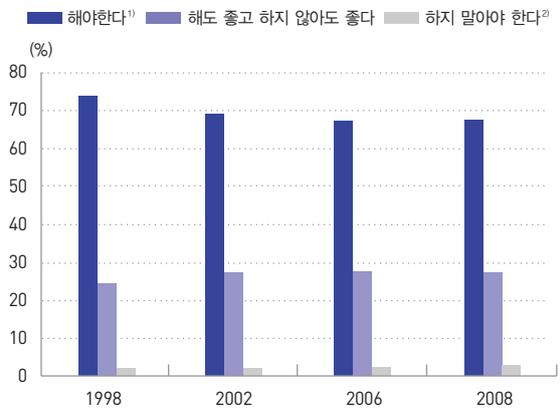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년도.

2007년에는 7명이 되었지만, 2008년에 다시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처럼 조혼연령이 늦어지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만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개인주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독립성 확보, 결혼의 의미 변화 등이다(김두섭 외, 2008).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결혼'으로의 변화는 [그림 II-5]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가치는 점차 약화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은 늘어나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애혼의 증가, 배우자 결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정도 약화 등도 결혼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II-5] 결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2008



주: 1)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를 합한 것임.

2) "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하지 말아야 한다"를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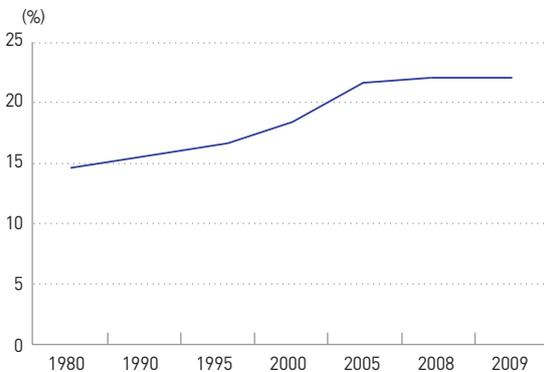
여성 가구주 비율의 증가

여성 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현재 199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II-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율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성 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 여성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1990년 이후 높아진 이혼율의 영향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림 II-6] 여성 가구주율: 1980-2009



출처: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09.

이는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비율을 살펴본 <표 II-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미혼 여성과 이혼 여성의 가구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II-3> 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률: 1990-2009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합계
1990	20.4	17.7	56.3	5.6	100.0
2000	21.4	16.6	50.5	11.6	100.0
2005	22.9	18.5	44.3	14.2	100.0
2008 ¹⁾	23.6	18.2	41.7	16.5	100.0
2009 ¹⁾	23.6	18.2	41.0	17.2	100.0

주: 1) 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07.

국제결혼의 증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결혼 형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만 9천 명을 넘으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8만 명을 넘는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이 총 혼인건수의 11.0%를 차지하였다.

경제가 어려웠고 ‘아메리칸 드림’이 확산되었던 1960-1970년대에는 한국 여성과 외국인, 특히 미국 남성과의 결혼이 많았으나, 올림픽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서 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1992년 초반부터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중국 조선족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가 일본, 필리핀 여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혼인을 주선 하면서 비한인 아시아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결혼 중 개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늘어났다. 이때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0년에는 4,71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42,356건으로 13.6%를 차지할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중에서 농촌 총각과 외국 여성과의 결혼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절대

〈표 II-4〉 배우자의 성별 국제결혼건수: 1998-2008

	여성(외국인 아내)		남성(외국인 남편)		합계	
	결혼건수	%	결혼건수	%	결혼건수	%
1998	8,054	66.1	4,134	33.9	12,188	100.0
2000	6,945	59.8	4,660	40.2	11,605	100.0
2003	18,751	75.7	6,025	24.3	24,776	100.0
2005	30,719	72.5	11,637	27.5	42,356	100.0
2007	28,580	76.1	8,980	23.9	37,560	100.0
2008	28,163	77.8	8,041	22.2	36,204	100.0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아, 2005년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결혼건수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이농 현상과 여성들의 농촌생활 기피로 한국의 농촌지역은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농촌 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장려함으로써,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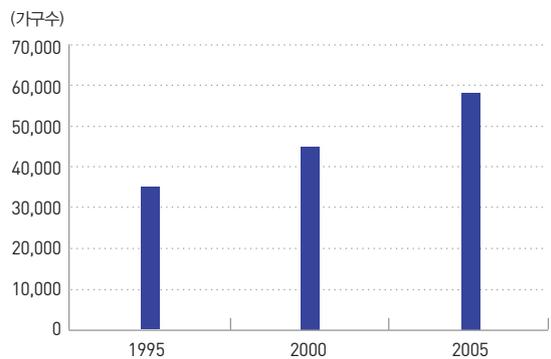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다민족화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손(祖孫)가구의 증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손가구는 35,194 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58,101가구로 증가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0.5%도 되지 않으나 10년 동안 65.1%나 증가하였다.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및 급격한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가족유형의

〔그림 II-7〕 조손가구¹⁾수: 1995, 2000, 2005



주: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년도.

구조적 변화는 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일단 사회문제적 측면을 지니고 있으나, 조손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주의적 정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 해체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의 이혼 및 재혼'이 전체의 4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및 실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이혼율과 재혼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혹은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 부담이 그들의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한부모 가족이나 재혼 가족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 및 실종'으로 인해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는 경우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월평균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우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및 재혼'에 따른 손자녀 양육의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손가족의 생활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노인가족의 소득수준이 자녀 가족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조손가구에서는 양육 손자녀의

〈표 II-5〉 조손가구의 소득수준별 손자녀 양육 이유: 2007

(응답사례수, () 안은 %)

	부모이혼, 재혼	부모 사망	부모 가출, 실종	부모실직, 파산	기타	합계
전 체	270 (45.0)	121 (20.2)	110 (18.3)	44 (7.3)	55 (9.2)	600 (100.0)
30만원 미만	9 (31.0)	6 (20.7)	11 (37.9)	1 (3.4)	2 (6.9)	29 (100.0)
30-50만원 미만	62 (41.6)	37 (24.8)	34 (22.8)	10 (6.7)	6 (4.0)	149 (100.0)
50-70만원 미만	89 (47.8)	39 (21.0)	41 (22.0)	8 (4.3)	9 (4.8)	186 (100.0)
70-100만원 미만	65 (50.8)	21 (16.4)	18 (14.1)	15 (11.7)	9 (7.0)	128 (100.0)
100-150만원 미만	34 (44.2)	13 (16.9)	5 (6.5)	6 (7.8)	19 (24.7)	77 (100.0)
150만원 이상	11 (35.5)	5 (16.1)	1 (3.2)	4 (12.9)	10 (32.3)	31 (100.0)

출처: 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2007.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 등 자녀 방임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된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재혼을 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 양육을 포기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부모와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전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새롭게 구성한 재혼가족 내에서 양육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 가계부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계층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으로 인해 조손가족이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파산이나 개인의 사회부적응이 가족해체를 야기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2007).

분거가족(가구주)의 증가

2008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는 전체 가족의 16.5%이고, 이 중 해당 가구원이 국외에 있는 경우가 11.4%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 가구주의 경우,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국외에 있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주로 직장, 학업 때문이다. 국외에 따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학업이 가장 많고, 배우자가 따로 사는 이유는 직장이 가장 많다.

한국사회에서 대규모 분거가족은 1960년대 초기에 이농가구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중동지역으로의 노동력 해외수출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분거가족 형태가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는 자녀교육을 위한 주말부부, 월말부부가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녀의 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기러기가족’은 1990년대부터 보다 본격적으로 출현하여 확연한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II-6〉 월평균 가구소득수준별 분거가족의 거주지와 가족 관계: 2008

(%)

	분거가족 가구주 ¹⁾	거주지 ²⁾		가구주와의 관계 ²⁾	
		국내거주	국외거주	배우자	미혼자녀
전체	16.5	90.5	11.4	22.8	85.4
100만원 미만	15.4	95.8	4.7	14.5	90.3
100-200만원 미만	18.1	94.8	6.3	20.9	86.5
200-300만원 미만	14.3	90.3	11.5	28.3	80.3
300-400만원 미만	15.1	89.0	14.3	25.4	83.6
400-600만원 미만	18.7	86.4	16.9	26.7	82.2
600만원 이상	22.8	70.1	36.0	26.3	90.7

주: 1) 배우자나 미혼자녀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가구주.

2) 한 가구주당 배우자 및 여러 명의 자녀가 동시에 타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지 및 가족관계의 각 합이 100%를 넘음.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표 II-7〉 분거가족의 분거 이유¹⁾: 2008

(%)

	직 장	학 업	가족간 불화	기 타
전체	55.9	36.3	5.3	15.9
국내	58.6	32.9	5.8	16.5
국외	36.1	71.2	0.7	12.9
배우자	70.7	1.5	9.5	18.3
미혼자녀	48.4	42.2	4.1	13.9

주: 1) 복수응답을 포함시킴.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이 시기에 ‘기러기가족’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데에는 IMF 경제위기 이후 자녀의 보다 안정적인 직업과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발전으로 가구당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유학을 선택하는 가족이 증가하였고,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의 일환으로 조기유학이 증가한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두섭 · 김정석 · 송유진 · 최양숙. 2008.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한경혜 · 이현송 · 김수영. 200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생애주기 예측,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경혜 (서울대학교)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요 약

- 2005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어섰고 이에 따라 맞벌이 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그러나 맞벌이 가족의 여성 근로자들은 긴 노동시간, 보육 시설 접근의 한계, 가사분담 불균형 등으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를 넘어섰고, 전체 가구 중 맞벌이 가구가 약 1/3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수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맞벌이 가족의 확대는 새로운 사회적 지원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위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이란 여성 근로자들이 취업과 임신·출산·양육의 가족책임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하려면 보육서비스,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가족 내에서는 가사 및 양육과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이 남녀 간에 보다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가족시간의 확보를 위하여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균형과 조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일-가족 양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일-가족 양립의 방식을 국제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변화의 추이와 향후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형태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임신·출산기에 경제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는 소위 ‘M자 곡선’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림 II-8]의 198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여성 경제활동 변화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M자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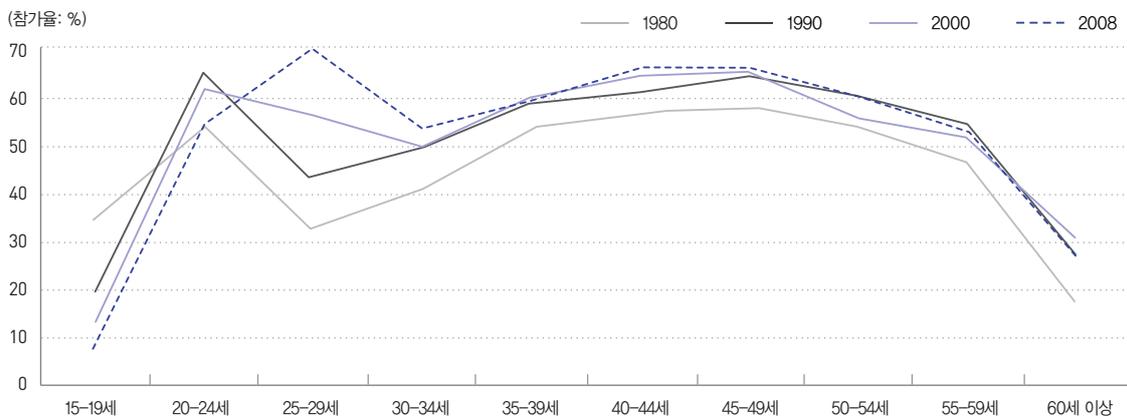
첫째, M의 함몰부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단절현상이 상당 정도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함몰지점의 연령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1980년에는 20대 초반에서 왕성한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여 주나 20대 후반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40대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의 경우에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나 2008년의 경우에는 20대 초반과 후반까지 왕성한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30대 초반에 떨어졌다가 이후 40대에 다시 높은 경제활동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출산 및 양육의 과정과 상관없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출산 현상과도 연관되어 여성들의 출산연기, 소자녀 출산, 출산포기 등의 현실이 이면에 담겨있기도 하다.

셋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자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취업중단을 초래하는 현실적 제약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성 경제활동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출산·육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 고용형태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한 한 연구결과(김영옥 외, 2007)에 의하면 직장과 가정의 양립 어려움은 여성취업의 불연속성이나 짧은 취업경력을 가져오게 되며, 이는 다시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 내 주변적 위치에 머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즉 여성의 취업단절, 경력불안의 주요 원인이 인적자본보다는 여성의 가족역할에 기인한다고 분석되는 것이다. 또한 2005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으로 육아부담(45.9%)이 첫째로 꼽히고 있다.

[그림 II-8]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¹⁾: 1980, 1990, 2000, 2008



주: 1) 1980년과 1990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이며, 2000년과 2008년은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이같이 결혼·임신·출산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단절시키고, 취업의 지속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생애과정에 대한 욕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될 것이다.

맞벌이 가족 증가에 따른 아동 양육 방식의 변화와 정책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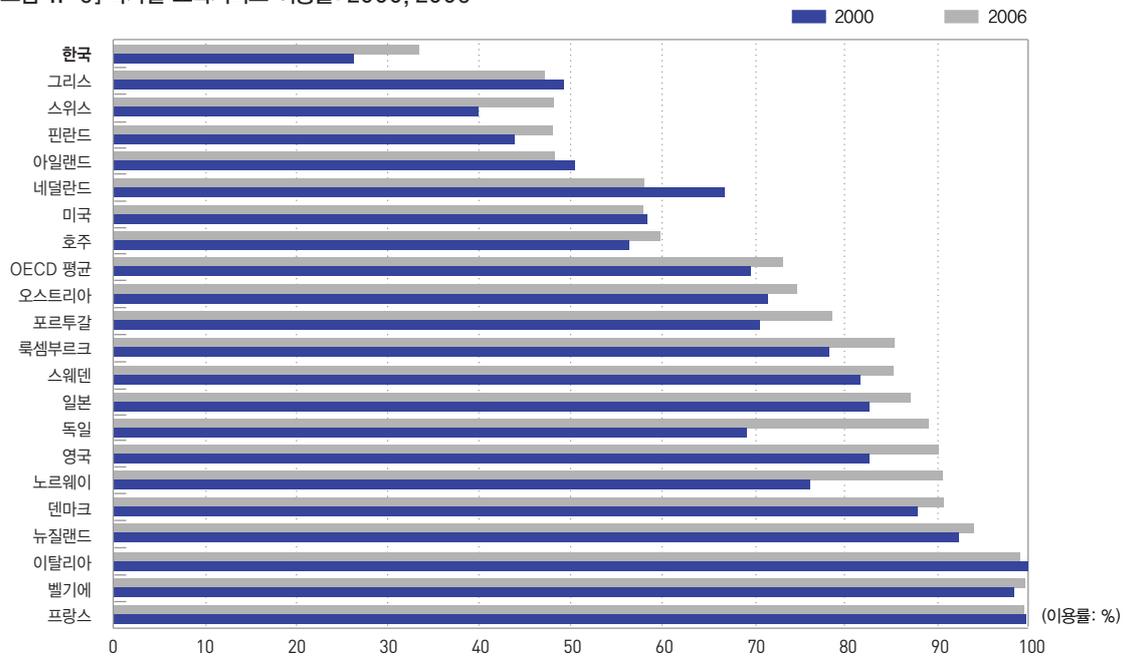
가정 내 아동의 주양육자는 대부분의 경우 아동의 모이다. 따라서 취업여성이 출산을 할 경우 일과 자녀 양육의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되어 취업을 계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여성부의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의 38.4%가 아동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가정과 직장의

부담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으며, 취업 중단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녀 양육을 꼽고 있다(여성부, 2005). 이러한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로서 보육서비스제도와 휴가정책이 있다.

보육서비스는 일하는 부모(working parents)에게 가장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림 II-9]를 보면, 2000년과 2006년 사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하였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 100%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있고 아일랜드, 핀란드, 스위스, 그리스 등 50% 이하로 지원하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33.9%로 매우 낮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서 보육서비스가 일-가족 양립에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취업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3개월간의 산전후휴가제도가 있으며,

[그림 II-9] 국가별 보육서비스 이용률: 2000, 2006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OECD Social Indicators(<ht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2009.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출산 후 1년간의 육아휴직이 남녀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 제도들의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산전후휴가의 경우 2003년 32,133명에서 2005년 41,104명, 2008년 68,52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육아휴직의 경우는 산전후휴가보다 사용률이 훨씬 낮게 나타난다. 2003년 6,816명, 2005년 10,700명, 2008년 29,145명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 사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사람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연구(장혜경 외, 2007)에 의하면, 육아휴직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는 휴직 후 복직보장에 대한 염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와 직장 내 조직문화가 지적되었다. 1년간의 업무공백에 대한 기업의 부담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별 구성을 보면 제도를 시행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용자가 여성이며, 남성의 사용률은 2%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제도는 대부분 여성들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성들의 참여가 부진한 이유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가부장적 성격, 장시간 근로의 조직문화, 적은 육아휴직급여(월 50만원 정액급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표 II-9〉 성별 육아휴직 사용자수와 사용률: 2003-2008

	여 성		남 성		전 체	
	사용자수	사용률(%)	사용자수	사용률(%)	사용자수	사용률(%)
2003	6,712	98.5	104	1.5	6,816	100.0
2004	9,123	98.1	181	1.9	9,304	100.0
2005	10,500	98.1	200	1.9	10,700	100.0
2006	13,440	98.3	230	1.7	13,670	100.0
2007	20,875	98.5	310	1.5	21,185	100.0
2008	28,790	98.8	355	1.2	29,145	100.0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표 II-8〉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자수와 지급액: 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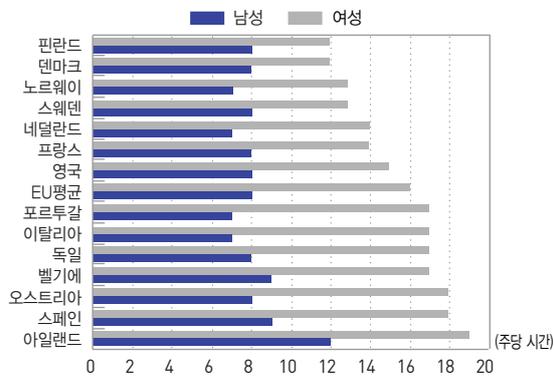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사용자 중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
	사용자수	지급액(100만원)	사용자수	지급액(100만원)	
2003	32,133	33,522	6,816	10,576	21.2
2004	38,541	41,610	9,303	20,803	24.1
2005	41,104	46,041	10,700	28,242	26.0
2006	48,972	90,886	13,670	34,521	27.9
2007	58,368	132,412	21,185	60,989	36.3
2008	68,526	166,631	29,145	98,431	42.5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 년도.

가족내 가사 및 양육 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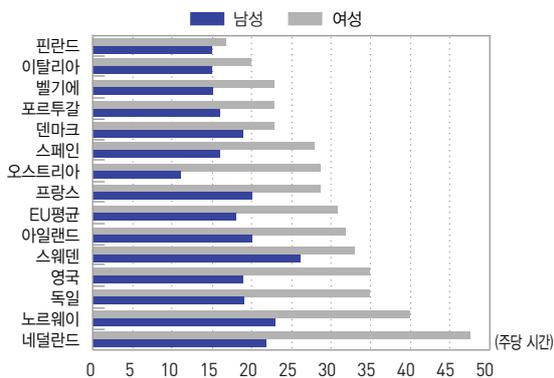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위해서는 가족 내에서도 부부간 가사 및 양육에 있어서의 적절한 책임과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림 II-10]과 [그림 II-11]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II-10] EU 국가들의 성별 요리 및 가사노동 시간: 2007



출처: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Seco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Overview*(<http://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htmlfiles/ef0902.htm>), 2009.

[그림 II-11] EU 국가들의 성별 아이돌보기 및 학습지도 시간: 2007



출처: European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Second European Quality of Life Survey: Overview*(<http://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htmlfiles/ef0902.htm>), 2009.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청에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2004년 현재 요리 및 가사에 사용한 주당 평균시간은 남성의 경우 2시간 55분, 여성의 경우 20시간 4분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돌보기의 경우에는 남성 1시간 17분, 여성 5시간 36분으로 나타나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10).

외국의 경우에도 가사노동과 아이돌보기 시간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격차가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다.

<표 II-10> 성별 요리 및 가사와 아이돌보기 시간: 1999, 2004¹⁾

		남성	여성	전체
요리 및 가사	1999	2시간 41분	22시간 3분	12시간 36분
	2004	2시간 55분	20시간 4분	11시간 40분
아이돌보기	1999	1시간 3분	5시간 43분	3시간 30분
	2004	1시간 17분	5시간 36분	3시간 30분

주: 1) 만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 년도.

노동시간과 가족시간의 조화

자녀가 있는 30-44세 남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EU의 조사(Europ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2005)에 의하면, 장시간 노동은 일-생활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을 할수록 일-생활 갈등의 수준이 높아지고, 국가차원에서는 장시간 노동문화를 가진 사회일수록 심한 갈등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12]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보고하고 있어서 노동시간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여가시간은 일-가족 양립의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개인생활은 일과 가족생활, 그리고 여가생활로 구성된다고 볼 때 적절한 여가시간은 일과 가족생활 양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II-13]을 보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의 여가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특히 성별격차를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의 여가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1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 2007



출처: OECD, *OECD Factbook 2009: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http://puck.sourceoecd.org/vl=4719490/cl=28/nw=1/rpsv/factbook2009/index.htm>), 2009.

[그림 II-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남녀 간 1일 평균 여가시간 차이(남성-여성)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09-OECD Social Indicators* (<ht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2009.

참고문헌

- 김영옥 · 최숙희 · 전기택 · 이선행. 2007. 『출산 ·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노동부.
- 여성부. 2005. 『2004년도 전국 보육 · 교육 실태조사』.
- 장혜경 · 김혜영 · 김영란 · 최숙희. 2007. 『일 · 가족양립정책의 활성화 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요 약

-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과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나, 지난 10년간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태도는 남녀 모두 약화되었다.
-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이 남성에게 비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현저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는 점차 약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당위성이 상당히 강하다.

최근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미혼으로 지내는 사람들의 수도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혼율 증가와 함께 재혼도 우리나라 가족형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태도 변화가 지난 10년간(1998-2008년)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기초로 성별, 혼인상태별, 그리고 연령대별로 비교분석해볼 것이다. 또한 『ISSP 가족모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가족형성의 또 다른 형태인 동거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고, 동거와 결혼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며, 동거와 결혼과의 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를 세계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결혼에 대한 태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결혼 경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먼저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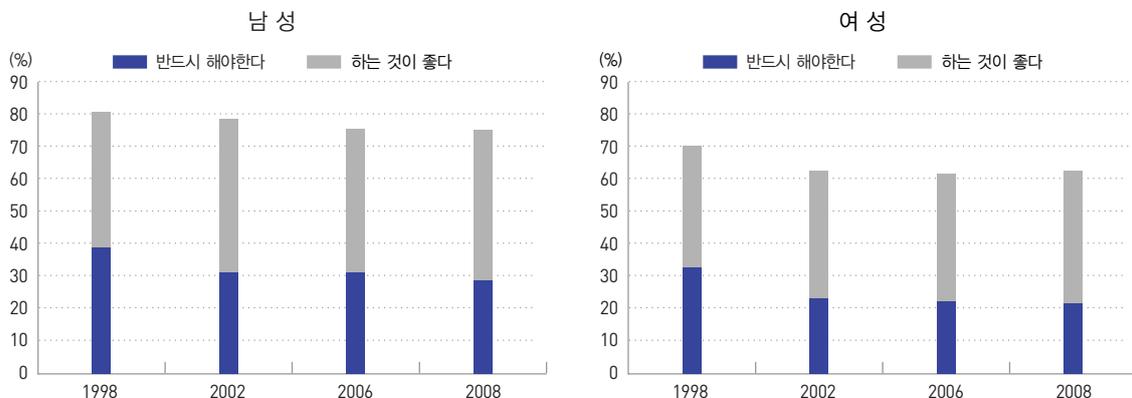
2008년 우리나라 초혼연령은 남성이 31.4세, 여성이 28.3세로 10년 전(1998년)에 비해 남성 2.6세, 여성 3.1세가 높아졌다. 이러한 만혼의 경향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데, 30대 초반 남성의 미혼율은 1990년에 14%이던 것이 2005년에는 41%로 높아졌고, 20대 후반 여성의 미혼율도 1990년 22%에서 2005년 59%로 높아졌다. 30대 후반 미혼 남성의 비율도 1990년에 4%이던 것이 2005년에는 18%로 높아지고, 30대 초반 미혼 여성 비율은 1990년 5%에서 2005년 19%로 높아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만혼의 경향이 평생 미혼으로 연결되는 비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다. 2005년에 50대 후반이면서 미혼으로 남아있는 비율이 남성 1.3%, 여성 1.1%로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99%는 결국 결혼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그림 II-14]에서 알 수 있듯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 즉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1998년 남성 81%, 여성

7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던 것이 2008년에는 남성 76%, 여성 63%로 낮아졌다. 남성이 여성보다 결혼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 10년간 결혼을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아지는 정도가 남성(약 5%p)에 비해 여성(약 7%p)이 약간 더 커서 남녀차이가 좀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하락하는 정도이다. 1998년에 남성 38.2%, 여성 32.5%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것이 2008년에는 남성 28.2%, 여성 20.9%로 낮아지면서 지난 10년간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생각이 남녀 각각 10%p, 11.6%p씩 낮아졌다. 여성 5명 중 1명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한 태도가 결혼한 사람이나 이혼한 사람, 그리고 미혼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차이가 지난 10년간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자(표 II-11).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별한 사람들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유배우자, 미혼자, 이혼자 순이다. 사별한 사

[그림 II-14]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람들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70-80%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이혼한 사람들은 30-60%만이 그런 생각을 한다. 이혼자들의 경우 결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1998년 남성 이혼자 중 68.4%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여성 이혼자는 44.9% 정도로 낮다. 2008년에는 이혼자들이 결혼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견지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남성 이혼자 55.9%, 여성 이혼자 38.7%이다. 특히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혼자들의 비율이 1998년 남성 25.4%에서 2008년 15.1%로 떨어졌고, 여성 이혼자의 경우 16.3%에서 8.8%로 낮아졌다. 여성 이혼자들의 경우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1998년에는 미혼자들(12.2%)보다 높았으나 2008년에는 더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태도에서 성별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집단이 미혼자와 이혼자들인데, 두 집단 모두 1998년에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24%p 정도 낮으며 2008년에는 17-18%p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현재 미혼이거나 이혼한 여성들의 경우, 미혼 또는 이혼인 남성에 비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현저히 적게 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현재 여성 미혼자들 가운데 9.9%만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남성 미혼자는 19.5%가 그런 생각을 한다. 이혼자들의 경우에도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 8.8%인 반면 남성은 15.1%이다. 전체 혼인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표 II-11〉 혼인상태 및 성별 결혼과 재혼에 대한 태도 변화: 1998, 2008

			결 혼			재 혼		
			반드시 해야한다(a)	하는 것이 좋다(b)	(a)+(b)	반드시 해야한다(a)	하는 것이 좋다(b)	(a)+(b)
1998	미 혼	여성	12.2	39.2	51.4	0.9	12.5	13.4
		남성	26.6	48.4	75.0	2.4	19.7	22.1
	유배우	여성	31.2	39.9	71.1	2.1	15.6	17.7
		남성	41.3	41.1	82.4	3.1	21.0	24.1
	사 별	여성	62.0	24.8	86.8	4.2	16.9	21.1
		남성	60.0	25.7	85.7	6.4	29.2	35.6
이 혼	여성	16.3	28.6	44.9	0.5	9.9	10.4	
	남성	25.4	43.0	68.4	5.4	24.9	30.3	
2008	미 혼	여성	9.9	37.8	47.7	1.1	13.9	15.0
		남성	19.5	46.3	65.8	1.4	21.2	22.6
	유배우	여성	20.0	45.2	65.2	1.3	18.7	20.0
		남성	31.2	48.5	79.7	1.9	27.4	29.3
	사 별	여성	42.7	35.9	78.6	2.6	22.2	24.8
		남성	40.9	40.2	81.1	3.8	27.9	31.7
이 혼	여성	8.8	29.9	38.7	0.7	9.7	10.4	
	남성	15.1	40.8	55.9	3.2	24.6	27.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16.0%에서 2008년 23.8%로 지난 10년간 7.8%p 증가하였으며 초혼건수는 감소함에도 재혼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혼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나 사별한 사람들 중 재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30% 정도인데 미혼자나 이혼자들의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태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 미혼자나 이혼자의 경우 재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비율이 10-15%인 반면, 남성은 20-30%로 더 높다. 그리고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반드시 재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98년 사별했거나 이혼한 남성들을 제외하고는 5% 이하이다. 1998년에 비해 2008년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더욱 낮아져서 3% 이하이다. 단, 사별을 했거나 이혼한 남성들 중에는 각각 3.8%, 3.2%가 그런 생각을 하며, 이는 1998년 6.4%, 5.4%에서 낮아진 것이다.

〈표 II-12〉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연령대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준다. 20대 미혼

여성들 가운데 결혼의 당위성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1998년에는 12-13%이던 것이 2008년에는 10%로 약간 낮아졌으며, 30대 후반 여성들의 경우 그 비율이 6.2%로 더 낮다. 지난 10년간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변화를 크게 보인 집단을 보면, 미혼자의 경우 30대 남성 미혼자들이며, 기혼자들의 경우에는 40대 이상의 여성 유배우자들이다. 30대 초반 남성 미혼자들 가운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사람이 1998년에는 26.0%이던 것이 2008년에는 14.0%로 낮아졌고, 40대 이상 유배우 여성들의 경우 1998년 29-55%에서 2008년에는 12-34%로 낮아졌다.

결혼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한국인의 결혼에 대한 태도를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해보기 위해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동일하게 묻은 조사결과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자료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 대안으로 2002년 33개 국가가 참여한 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가족모듈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2003년 조사에 포함된

〈표 II-12〉 혼인상태, 성 및 연령별 결혼당위성에 대한 태도¹⁾ 변화: 1998, 2008

			(%)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 이상
1998	미 혼	여성	13.0	12.0	6.7	10.7	-	-	-
		남성	28.3	26.8	26.0	23.2	-	-	-
	유배우	여성	-	13.5	15.0	20.9	28.9	38.7	55.0
		남성	-	26.9	27.3	28.7	33.6	42.8	58.6
2008	미 혼	여성	10.9	10.2	8.6	6.2	-	-	-
		남성	22.8	22.7	14.0	13.9	-	-	-
	유배우	여성	-	10.0	10.1	9.3	12.3	16.6	34.2
		남성	-	20.0	22.8	19.5	22.6	24.5	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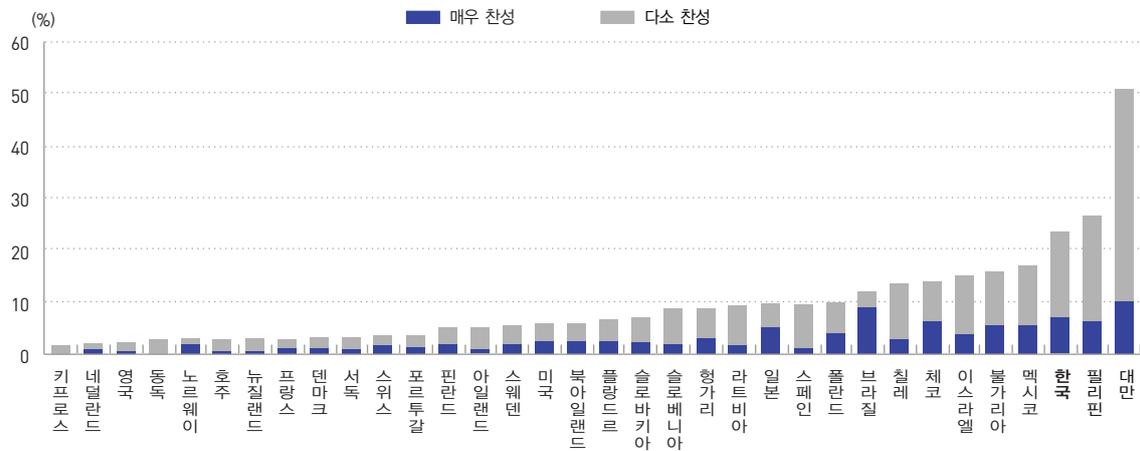
주: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결혼 관련 두 개의 태도문항을 활용하고자 한다. 하나는 “잘못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문항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문항이다.

즉, 결혼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설혹 잘못된 결혼이더라도 결혼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으로 결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는 질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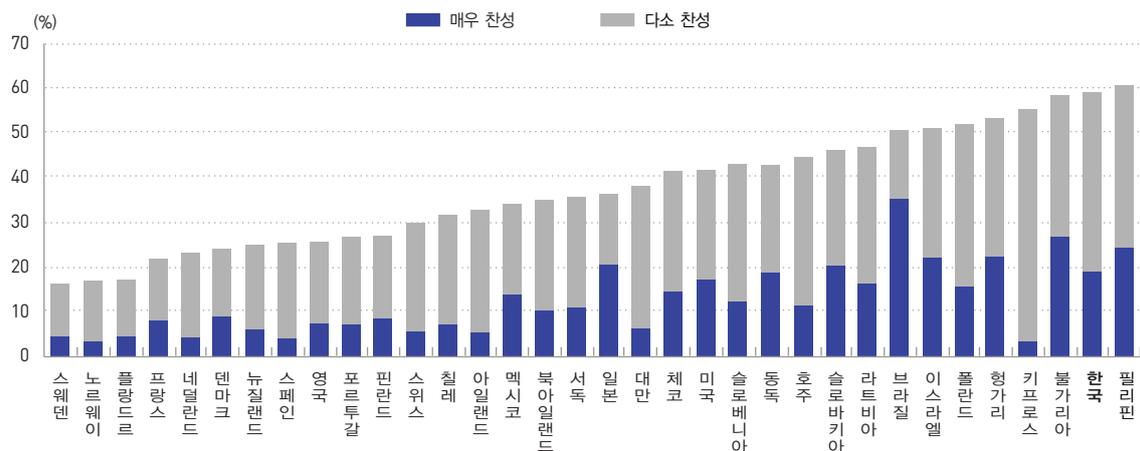
[그림 II-15] “잘못된 결혼이라도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¹⁾



주: 1) 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그림 II-16]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¹⁾



주: 1) 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그림 II-15]와 [그림 II-16]이 보여주듯이 한국은 같은 조사에 참여한 34개 국가 중 결혼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국가로 볼 수 있다. “잘못된 결혼이라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비율이 한국은 24%로 대만, 필리핀 다음으로 높다. 같은 동양권이라도 일본은 12위로 찬성비율이 10% 이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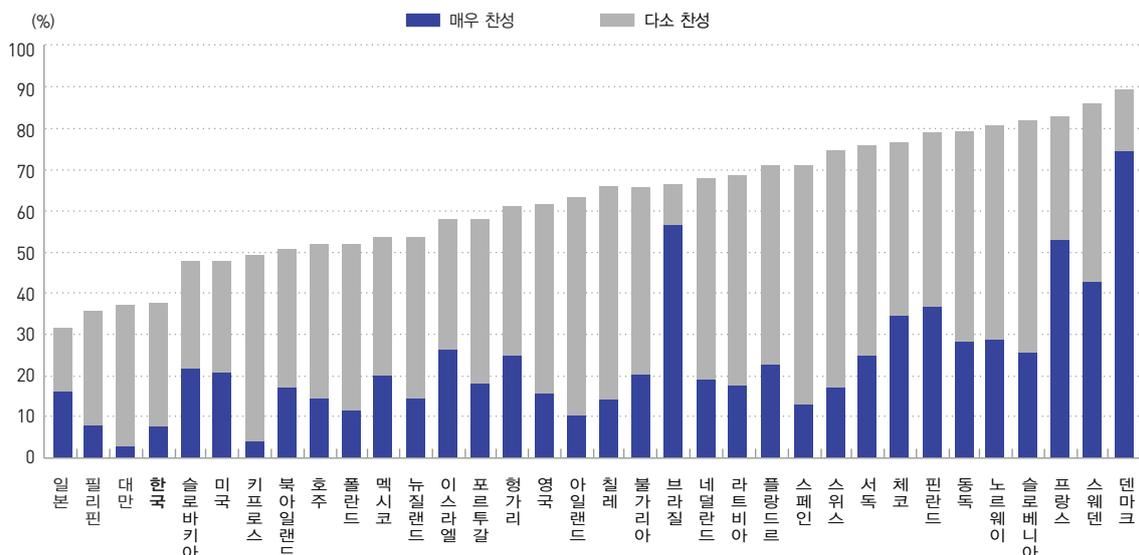
다른 한편,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이 59%로 60%인 필리핀 다음으로 높다. 앞서 “잘못된 결혼이라도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는 태도를 강하게 보였던 대만은 “결혼하는 것이 안하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본(17위)처럼 34개국 중 중간 정도이다. 따라서 한국은 필리핀과 함께 결혼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국가라고 볼 수 있겠다.

동거에 대한 태도의 국제비교

가족을 형성하는 전통적인 방법은 결혼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가족도 상당수 있다. 따라서 가족형성의 한 방법으로 동거를 결혼과 어느 정도 연관지어 생각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결혼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다. 먼저 결혼을 전제한 동거에 대한 찬성 정도를 보면(그림 II-17), 북유럽국가들은 80% 이상으로 높고 아시아 국가들은 낮은 편이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도 일본(31.5%)이 가장 낮고, 필리핀(35.9%), 대만(37.4%) 다음으로 우리나라(37.8%)가 낮다.

[그림 II-18]은 결혼과 상관없이 동거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에 있어서 국가 간 차이를 보여준다.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는 것에 대해 높은 찬성률을 보였던 북유럽 국가들은 결혼과 무관한 동거에도 8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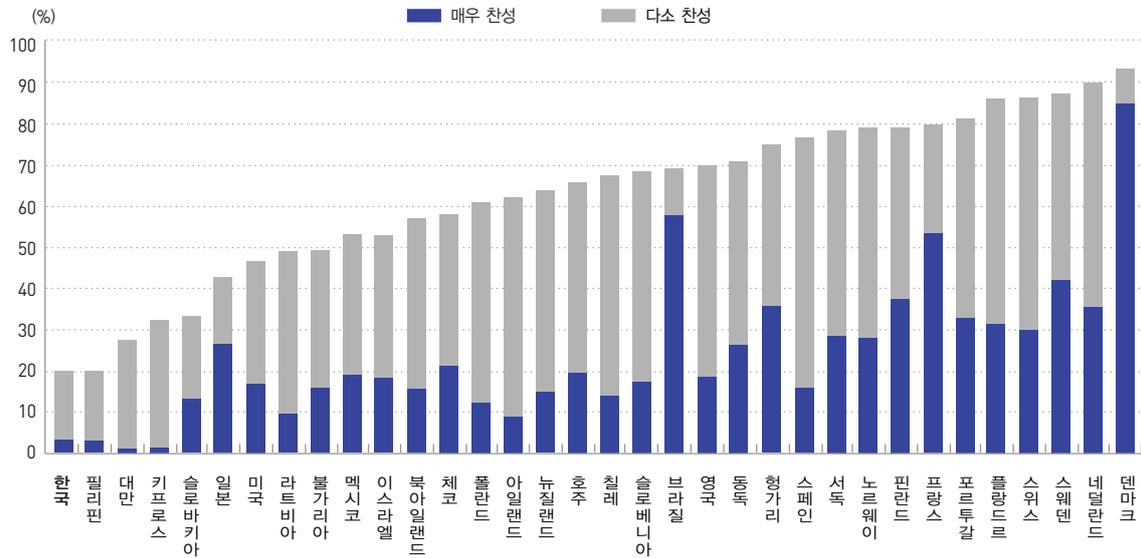
[그림 II-17] “결혼할 의사가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¹⁾



주: 1) 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그림 II-18]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는 질문에 대한 찬성률: 2002¹⁾



주: 1) 한국은 2003년 자료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2: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 Data File, 2003;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3.

의 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 93%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시아권 국가들은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보다 더 낮은 찬성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과 필리핀이 가장 낮아서 20%이고, 대만이 28%로 그 다음이다. 일본은 결혼할 의사가 없이 동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42.5%로 아시아권 국가 중 가장 높다.

따라서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동거가 가족형성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동거보다는 결혼을 통한 가족형성 방식이 훨씬 더 보편적이다. 앞서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태도가 지난 10년간 상당히 약화되고 있음을 살펴보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결혼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상당히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요 약

- 한국사회의 이혼율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다지 높지 않았으나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가속화하여 불과 20여 년 남짓한 기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까지 급증하였다.
-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후 5년 이내의 부부,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초기에 한정되지 않고 가족생활주기 모든 단계에 걸쳐 나타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 성격불일치, 생활양식 부조화 등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인에 의한 이혼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혼사유가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 과거에는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이혼을 망설이고 이혼 후에도 자녀 양육권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 후 자녀를 유기하는 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혼의 대표적 억제 요인으로서의 자녀의 중요성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에서는 이혼율 변화의 추세와 그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혼율 증가의 원인과 사회적 결과에 대하여 논의해보기로 한다. 이혼율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혼현상 자체가 복합적, 중층적 사회현상으로서 워낙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특성에서부터 부부간의 관계적 특성, 가족단위의 특성 등 직접적, 근접요인이 이혼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거시적으로는 가족규범, 가족가치 등 문화적 요인과 함께 경제상황, 이혼관련법 등 구조적 배경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혼율 증가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되는 질문에 대한 탐색을 하였다. 첫 번째는 집합적 수준에서 “우리 사회에서 왜 이혼율이 증가하는가?” 하는 질문이며, 두 번째는 개인적 수준에서 “어떤 사람/부부가 왜 이혼을 하는가?” 하는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

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화, 근대화에 따른 가족가치 및 규범의 변화와 개인주의화, 이혼과 관련한 법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에 따른 경제적 지위향상 등 거시적 요인들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이, 왜 이혼하는가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탐색작업으로는 이혼한 사람들이 스스로 무엇을 결혼의 종결, 즉 이혼결정의 사유로 제시하는가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혼의 사회적 결과 또한 단기적, 직접적 영향 뿐 아니라 장기적, 간접적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구체화되기 때문에 다각적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혼율의 변화 추이

1970년대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은 0.4~0.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에 0.6으로 198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에 1.1에 이른다. 1980년대 이후 이혼율의 이러한 꾸준한 상승은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 가족규범의 약화, 여성의 취업증가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혼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혼율은 1996년과 1997년에 각각 전년

대비 인구 1,000명당 0.2건, 0.3건 증가하였으며 1998년에는 전년 대비 0.5건까지 증가하였다. 대량 실업 등 사회 전반의 경제적 상황악화가 가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면서 가족갈등과 해체되는 가족이 증가한 것으로 지적된다. 증가속도 자체가 가속화하여, 1980년대 초는 약 2배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8-9년 사이에 3배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03년까지 조이혼율은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여, 1990년 인구 1,000명당 1.1건에서 1998년 2.5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건에 달하게 된다.

조이혼율에 비하여 조금 더 정확한 지표라 할 수 있는 유배우 이혼율(유배우자 1,000명당 이혼건수)의 변화를 살펴보아도 1980년대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면서 그 상승폭이 매우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유배우 이혼율은 1980년 1,000명당 1.6건에서 1998년 3.2건으로 15년 사이에 두 배가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7.2건으로 급증하였다. 2003년 한 해에 총 166,617건, 하루 평균 450쌍이 이혼한 것으로, 불과 10여 년 전인 1990년의 45,694건에 비하여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던 이혼율은 2004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2004년의 전년 대비 이혼건수는 이혼통계를 공식적으로 작성하기

〈표 II-13〉 총 이혼건수와 이혼율: 1970-2008

	1970	1980	1990	1998	2000	2003	2004	2005	2007	2008
이혼건수(1,000건)	11.6	23.7	45.7	116.3	119.5	166.6	138.9	128.0	124.1	116.5
조이혼율 ¹⁾	0.4	0.6	1.1	2.5	2.5	3.4	2.9	2.6	2.5	2.4
유배우 이혼율 ²⁾	1.1	1.6	2.4	3.2	5.3	7.2	6.0	5.5	5.2 ³⁾	4.8 ³⁾

주: 1)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2) 유배우자 1,000명당 이혼건수.
 3) 잠정치임.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고, 이혼 건수 및 조이혼율 모두 2004년 이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표 II-13>에서 보듯이 2008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6,500건으로 2007년의 124,072건에 비해 7,537건 감소하였다. 2008년 조이혼율은 2.4로 전년도보다 0.1 감소하였으며, 유배우 이혼율 역시 전년도보다 0.4건 감소한 4.8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혼숙려제 도입으로 인한 신고 공백 기간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진단도 가능하나, 최근 몇 년 동안 이혼율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온 점을 생각해 볼 때,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제도 도입 등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의 이혼율 감소 추세가 일시적 현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고 앞으로 변화 추이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별 이혼율

<표 II-14>의 성 및 연령별 이혼율을 보면 1980년

대까지 남자는 30대 초반에, 여자는 20대 후반에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주다가, 1990년부터 남자는 30대 후반, 여자는 30대 초반에 가장 높은 이혼율을 보여 남녀 모두 30대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20대 이하에서 이혼율의 증가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결혼연령 증가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성의 경우 40대 이혼율이 급상승하여 2008년에는 40대 초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역시 2008년에 40대 초반 이혼율이 30대 후반 이혼율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게 나타나 예전과는 달라진 양상을 보여준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과거에는 이혼이 젊은 연령층에 집중되었다면, 점차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이혼이 다른 어떤 연령층의 이혼 증가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최근 한국사회의 이혼 증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동거기간별 이혼구성비 추이를 살펴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혼이 결혼 후 5년

<표 II-14> 성 및 연령별 이혼율: 197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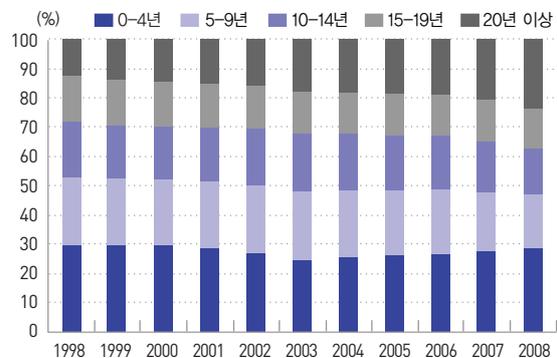
	남 자						여 자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15-24세	0.1	0.2	0.2	0.5	0.4	0.3	0.8	1.0	1.1	1.8	1.5	1.5
25-29세	2.1	2.8	3.5	5.0	3.9	2.7	3.4	4.7	6.2	9.6	8.3	6.1
30-34세	3.1	4.9	6.2	10.0	9.3	7.0	2.6	4.7	6.5	12.2	12.5	9.9
35-39세	2.3	4.5	6.2	12.2	12.0	9.3	1.6	3.1	5.0	12.6	12.7	10.5
40-44세	1.9	2.9	4.9	12.1	12.2	10.3	0.9	1.8	3.0	10.4	11.1	10.1
45-49세	1.4	1.9	3.3	10.0	10.2	9.7	0.5	0.9	1.8	6.6	8.0	8.3
50-54세	0.8	1.4	1.7	6.9	7.7	8.0	0.3	0.5	0.8	3.7	4.9	5.6
55세 이상	0.4	0.7	0.9	2.4	3.2	3.8	0.1	0.2	0.3	0.8	1.2	1.6
일반 이혼율	1.3	1.9	2.9	6.4	6.6	5.8	1.2	1.9	2.9	5.0	6.5	5.7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내의 부부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결혼 후 20년 이상 된 부부들 사이의 이혼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이혼한 부부 중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1990년에는 3.9%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 14.8%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증가세가 지속되어 2008년에는 전체 이혼 중 23.1%를 차지하게 되었다(그림 II-19). 젊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중년세대의 이혼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후 부부간 결속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에서 독립하지 않은 자녀의 존재는 대표적인 이혼 억제 요인이다.

중년기 이후의 이혼증가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맞물려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반면, 5-9년 및 10-14년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2003년 이후 그 건수 및 구성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감소세를 보이던 5년 미만 동거부부의 구성비는 2003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28.4%에 달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로 외국인과의 이혼 증가분이 반영된 결과이다. 5년 미만 동거부부의 이혼 중 한국인 부부의 구성비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림 II-19] 이혼자의 결혼 동거기간: 1998-2008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이혼사유

부부불화, 배우자 외도, 학대, 부부간 성격차이, 친족과의 불화, 경제문제 등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혼 사유 목록의 주된 내용을 이룬다. 물론 그 상대적 중요성은 문화권별로 차이가 나며,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를 반영하여 이혼신고서의 이혼사유를 묻는 항목이 2000년대부터 바뀌어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직접적 비교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제한점을 염두에 두고 이혼사유 구성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사회에서 이혼증가의 원인과 성격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먼저 경제문제가 이혼사유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성의 변화에 주목할 수 있다. 1980년에는 경제문제로 이혼하는 비율이 전체 중 3.6%에 불과하였고 1990년에는 2.0%까지 감소하였는데, 2000년에는 10.7%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에는 이혼의 구체적 사유로 경제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6.6%로 1997년의 4.4%에 비해 1년 사이에 2.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비율은 2003년까지는 증가 추세였으나, 2004년 이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변화는 가장 주된 이혼사유인 ‘부부간 성격차이’ 비중의 지속적 증가이다(그림 II-20). 성격차이는 2000년 이혼사유의 40.2%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47.8%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가족 간 불화’는 2000년 21.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부정과 학대와 같은 결혼관계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으나, 점차 성격차

〈표 II-15〉 이혼사유: 1970-200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8	1999	2000	2005	2008
부부간 불화 ¹⁾	72.9	72.6	79.7	84.8	84.9	83.1	80.6	80.1	74.6	70.8	68.6
경제문제	5.0	5.2	3.6	3.0	2.0	3.0	6.6	7.1	10.7	14.9	14.2
건강문제	5.7	5.2	3.3	1.6	1.5	0.9	1.0	0.9	0.9	0.6	0.6
기타 ²⁾	16.4	16.9	13.4	10.6	11.6	13.0	11.8	11.9	13.7	13.7	16.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1970년부터 1989년까지 '부부간 불화'와 '가족간 불화'로 나뉘었다가, 1990년부터 '부부간 불화'에 '가족간 불화'가 포함됨. 2000년 이후에는 '부부간 불화' 항목이 배우자 부정, 정신·육체적 학대, 성격차이로 세분화됨.

2) 미상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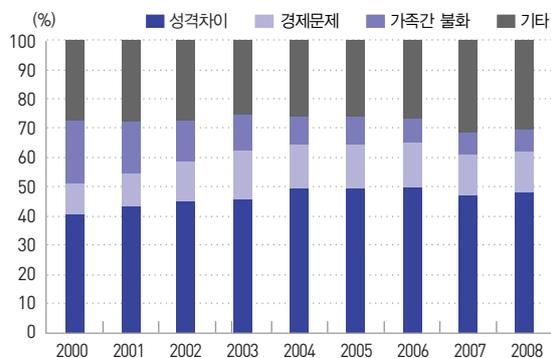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덜 근본적인 요인에 의한 이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관계에서 중시되는 요소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부부간 의사소통 문제나 이해부족과 같은 정서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대안으로 여겨지는 등 결혼생활의 질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현상은 '고통스럽고 불행한 결혼'으로부터의 이혼과 더불어 '행복하지 못한 결혼생활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이혼이 함께 증가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혼에 대한 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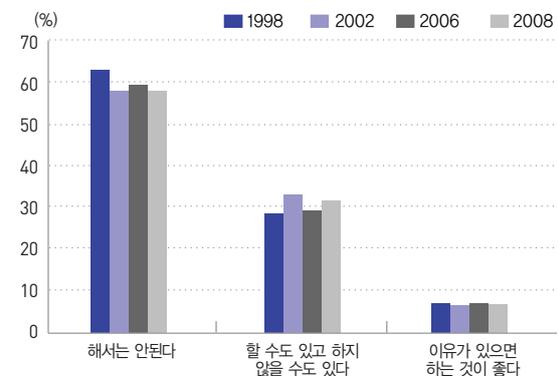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각 또한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증가가 반영되어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이혼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태도가 허용적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인지의 인과관계를 해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인과성의 방향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의 증가로 나타나는 행위의 변화가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아주

〈그림 II-20〉 최근의 이혼사유: 2000-2008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그림 II-21〉 이혼에 대한 태도: 1998, 2002, 2006, 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표 II-16〉 성 및 연령별 이혼에 대한 태도: 2008

					(%)
		해서는 안된다 ¹⁾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합계
성 별	남자	63.8	27.8	5.7	100.0
	여자	53.7	35.8	8.3	100.0
연령별	15-19세	40.0	42.4	10.6	100.0
	20-29세	43.3	43.5	10.0	100.0
	30-39세	50.6	40.4	7.1	100.0
	40-49세	58.9	32.5	7.1	100.0
	50-59세	68.9	23.3	6.2	100.0
	60세 이상	81.9	12.9	3.4	100.0

주: 1) "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된다"와 "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된다"를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8.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한다. 이혼에 대한 주변의 시각 또한 이혼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이혼자와 그 가족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상당 부분이 이혼 자체의 문제 뿐 아니라 '이혼에 대한 틀 지워진 시각', 즉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 부정적 태도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이제 가문 대 가문의 결합이라는 전통적인 의미를 갖는 제도가 아니라 애정을 중심으로 한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는 결혼이 되었고, 그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료는 일관되지 않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2002년 이후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15세 이상 인구 58.6%가 이혼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태도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이혼에 대해 더 보수적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이혼은 "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불행한 결혼에 대한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과 자녀문제

이혼과 함께 가장 큰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타격을 받는 사람은 아마 이혼가정의 자녀들일 것이다. 이혼율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가정의 자녀수 또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혼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8년에는 14만 명에 가까운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으며, 그 숫자는 200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에는 19만 명에 육박하였다. 2008년에 이혼한 부부 중 54.0%인 62,962쌍이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혼율이 피크를 이루었던 2003년 이래 그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의 숫자를 합하여 보면 대략 5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미성년 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이 반드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이혼가족 아이들을 문제시하는 시각 자체가 사회적 편견을 형성하여, 이들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혼의 부정적 영향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형편이나 가족관계의 악화이지, 양부모가족인가 이혼으로 인한 편부/편모 가족, 혹은 재혼가족인가 여부와 같은 가족구조가 아니라는 점에도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가정 자녀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학업성취도 등 사회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이나 문제행동을 보일 위험

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자녀의 존재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인 장애요인인 것으로 지목되어 왔다. 혈연중심 가족주의 가치가 아직 강하게 남아있고 자녀를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 자녀는 이혼을 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혼 후 자녀들의 비양육과 부 또는 모와의 접촉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는 양쪽 부모에게서 모두 버림받는 어린이들도 있다. 최근의 급속한 조손가족의 증가현상은 그 가장 극명한 결과라고 하겠다.

〈표 II-17〉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수¹⁾: 1998-2008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구성비율(%)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녀 있음	72.0	71.4	70.6	70.4	69.8	68.5	65.6	63.4	60.8	58.7	54.0
	1명	31.8	32.0	31.8	31.3	30.1	28.7	28.1	27.3	26.8	26.0	24.5
	2명	35.5	35.0	34.3	34.7	35.0	35.0	32.8	31.4	29.6	28.3	25.5
	3명이상	4.7	4.3	4.4	4.5	4.7	4.8	4.7	4.7	4.4	4.4	4.0
	자녀 없음	28.0	28.6	28.0	27.8	28.8	29.5	33.4	35.5	38.7	41.0	45.4
20세 미만 자녀수(1,000명)		136.5	135.8	136.3	154.0	166.3	189.3	150.3	134.0	124.0	119.3	102.7

주: 1) 미상 포함.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참고문헌

- 한경혜 · 성미애 · 진미정. 2006.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한경혜 (서울대학교)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강상진 64
교육의 경제적 성과 • 강상진 77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 김경근 83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 김경근 91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간의 전공 불일치 • 채창균 99

III. 교 육

Education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각급 학교의 취학률과 진학률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초·중·고의 취학률은 모두 완전취학 수준이고 대학입학정원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수를 초과하고 있다.
- 예·체능고를 제외한 특목고 학교수는 1985년 이후로 4개 교에서 2008년 55개교로 증가하였으며, 학생수는 30,094명으로 1985년에 비하여 약 57배 증가하였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국가 순위는 여전히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하위권이다.
- 중등학생들의 주요 교과목 학업성취도는 지난 1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평가에서 세계 1-5위에 위치하여 최상위권에 있다.

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그 성과가 삶의 질에 관련되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역량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의 발전은 어느 국가에서나 인적자원의 개발에 의존한다. 따라서 국가 간의 경쟁은 학교교육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교육성취도의 국제비교평가로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이하 IEA)가 주관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OECD 국가들이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가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 사회동향의 한 부문으로서 학교교육의 변화과정을 체제적 관점에서 서술하여, 우리나라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넓히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 글에서 교육부문의 지표들은 1) 교육기회, 2) 교육자원, 3) 교육효과(또는 성과)로 분류하였다. 교육의 기회 영역에서는 국민보통교육인 초·중등교육과 이후의 대학교육의

기회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서술하며, 교육자원의 영역에서는 학교교육의 환경적 조건으로 기능하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정지원의 변화내용을 서술한다. 끝으로 교육효과 영역에서는 한국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다른 경쟁국가들과 비교하여 제시하고, 교육의 성과가 개인의 경제적 삶의 질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술한다.

교육의 기회

교육기회 영역의 지표들은 일반 국민에게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표현한다. 국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가능성이 아닌 결과로서 제시하는 지표들은 다양하다. 첫째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학력수준별 인구분포이다. 둘째, 국민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과 최고수준의 대학교육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로 파악할 수 있다. 셋째, 학교교육 이후에도 사회생활과정에서 평생교육의 기회를 어느 정도 향유하는지를 반영하는 평생교육의 현황정보로 파악할 수 있다. 끝으로, 학교에 재학하는 동안에 어떠한 교육을 받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주제는 학교 취학률에 제한되는 개념이 아니고 국민이 받는 교육의 질, 학교교육 이후의 삶속에서의 교육기회를 모두 망라한다. 여기서는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기회의 기초자료가 되는 취학률과 진학률, 국민의 학교선택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학교설립 유형의 다양성, 그리고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차별적 특성을 보이는 유아교육 기회의 장기적인 변화 추이를 서술한다.

취학률과 진학률

취학률은 국민이 학교교육을 받을 기회가 어느 정도인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모든 학교 수준에서 교육기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반면에 진학률은 상급학교 교육에 대한 기회로서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교육기회 지표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지표는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림 III-1]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급 학교 취학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2005년부터 국민보통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취학률은 모두 90%가 넘어 완전취학률에 가까우나, 유아교육과 대학교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은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매우 낮은 취학률을 보인다.

이 같은 취학률의 동향은 우리나라 교육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정부의 교육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학교교육의 기회가 열린 것은 해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배워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국민의 교육열은 초등학교 취학률로 나타났다. 해방직후 초등학교의 취학률은 50%에 근접하고 있었으며,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정부는 『의무교육 완성 6개년 계획』을 1954년에서 1959년까지 시행하였고, 1958년에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의 제정으로 1959년에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되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취학률은 1957년에 이미 91%에 도달하여 완전취학률에 가까웠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을 통하여 기초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이 축적됨에 따라, 1960년대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이 가능하였다는 진실을 알려준다.

각급 학교의 취학률은 순차적으로 증가하여, 중학교 취학률은 1990년 이후, 고등학교 취학률은 2000

년 이후에 90% 이상의 취학률에 도달하였으며, 대학 교육기관의 취학률도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그림 III-1]과 같은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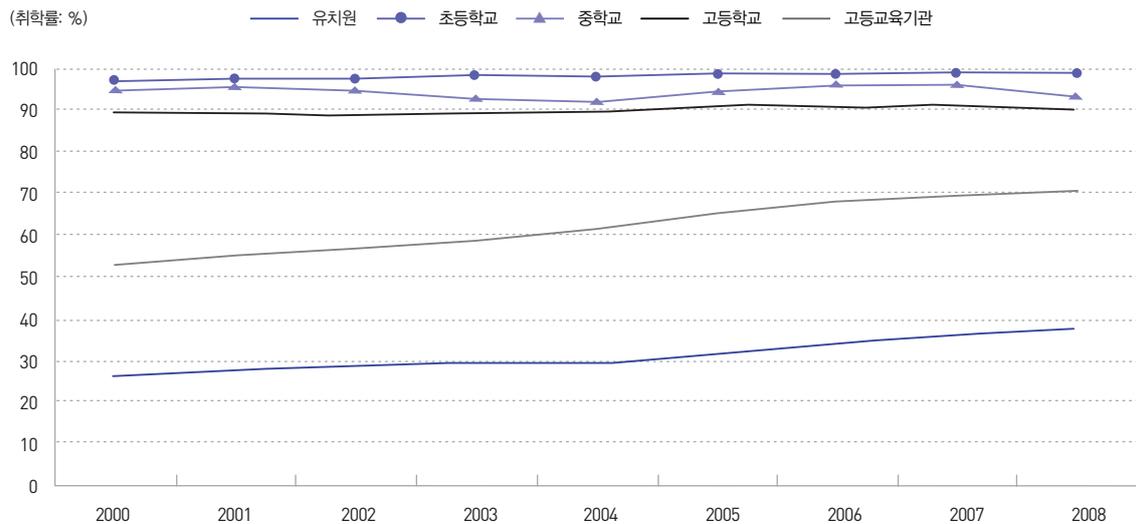
취학률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체감하는 교육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교육기회 지표는 진학률 지표이다. 특히 진학률은 상급학교 교육에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다음의 [그림 III-2]는 1970년부터 2008년까지의 각급 학교로의 진학률 추이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특징적인 것은 진학률의 추이가 초등학교→중학교, 중학교→고등학교, 고등학교→대학교육기관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현재 국민보통교육에 해당하는 고등학교까지의 진학률은 완전진학률에 도달하였다. 이는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준다. 첫째는 국민 모두가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나라의 교육체제가 그 같은

진학열기를 수용할 역량을 빠르게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학률은 또한 취학률과 더불어 해방이후 국민들이 경험한 학교교육문제의 배경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초등학교 취학률이 일찍이 완전취학률에 도달하였음에도 1970년에 중학교 취학률은 36.6%에 불과하였으며, 1970년 중학교 진학률은 66.1%였다. 1960년대는 중학교 입시가 과열된 시기였으며, 이 당시에 드러난 교육문제들은 오늘날의 교육문제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우리 사회의 병리적인 교육문제들의 구조적 특성이 드러난 시기였다. 즉, 교육문제는 학교의 서열화, 상급학교 입시의 과열, 재수생, 사교육 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UN에 등록된 120개 국가 중에서 119위에 머무는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그럼에도 1960년대는 초등학생이 중학교 입시를 위하여 재수를 하고, 학원과 과외에 몰입하여 국민의

[그림 III-1] 각급 학교의 취학률: 2000-20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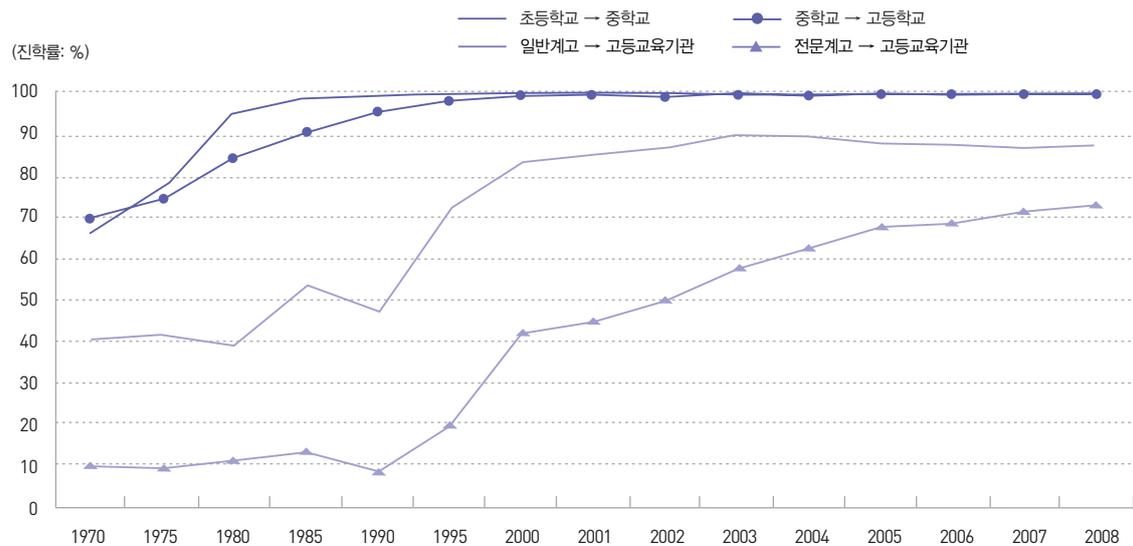
교육비 부담이 과열된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정부는 1969년에 이르러 역사적인 중학교 무시험 전형을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여 중학교 서열화를 없애고, 동시에 중학교 입학정원을 늘려 전국의 어린이들을 중학교 입시지옥에서 구제하였다. [그림 Ⅲ-2]는 중학교 무시험 전형이 시작된 1969년 이후로 중학교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잘 드러낸다.

중학교 인구의 파고는 3년 뒤 고등학교의 입시경쟁으로 이어졌다. 학교의 서열화, 입시경쟁, 재수생, 사교육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정부는 마침내 1974년 2월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학생이 거주지에서 무시험 전형으로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여, 고교의 서열화를 파격적으로 제거하여 중학생들을 고교 입시경쟁에서 구제하였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3년 12월에 입안하여 1974년 2월에 법령으로 시행된 초고속 정책이었으니, 이 시기의 고교 입시 문제가 어느 정도로 급박한 사회문제였는지를 유추

할 수 있다. [그림 Ⅲ-2]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1974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모든 중학교 졸업자들의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현상은 대학교육기관의 진학률에서도 나타난다.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한 고등학교 인구는 곧 대학입시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해방이후 196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학생선발과 운영은 파행적으로 진행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의 입학정원은 총인구의 약 5% 수준으로 제한되었다. 그 결과 대학을 졸업한 소수의 인구가 사회적 지위를 독점하는 사회체제를 갖게 되었다. 늘어난 고등학교 졸업생수와 제한된 대학입학정원은 과도한 대학입시경쟁을 초래하였고, 사교육, 재수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1년에

[그림 Ⅲ-2] 각급 학교의 진학률: 1970-20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대학졸업정원제 정책을 시행하여, 모든 대학의 입학 정원은 2배로 늘리고, 졸업은 원래의 정원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 정책은 실효성이 없이 대학의 정원만 두 배로 늘리는 결과로 귀착되었고 1980년과 1985년 사이에 대학재학생수는 약 2배로 늘어났으며, 진학률도 53.8%에 도달하였다. 즉,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절반은 대학 진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학입학정원이 두 배로 증가하였음에도 대학입시 문제는 여전하였다. 1995년에 정부가 대학설립의 인허가권을 포기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자 대학교육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대학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대학 진학률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3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이 전국의 고교 3학년 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다. 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입시경쟁은 여전히 과열된 상태이며, 동시에 대학 간의 양극화 현상은 뚜렷해지고 있다. 우수 대학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하는 반면에, 많은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여 폐교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학 간 통폐합과 특성화 전략을 채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기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교육열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해방이후의 진학률 추이에서 드러나고 있다. 해방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육문제의 해법은 대학의 입학정원을 늘려서 상급학교 경쟁을 완화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1981년의 대학입학정원제, 1995년의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도입은 모두 대학입학정원을 확대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에서 상급학교에의 완전진학률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의 중학교 입시에서 노정된 학교의 서열화, 재수생,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교육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하다. 지금은 ‘좋은 대학가기’의 경쟁이 치열하며,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일찍이 경쟁에 참여하는 사교육 현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까지 파급되고 있다. 즉, 국민의 교육열은 단순히 자녀를 상급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었으며, 사회적 보상이 기대되는 교육을 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교 졸업이후에 사회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좋은 대학에의 진학으로만 고착된 교육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교육과제라고 할 수 있다.

유아교육의 기회

2008년 현재 유아의 취학률은 37.5%로서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유아교육의 효과는 개인의 평생을 통하여 지속되는 것으로서 어느 학교급보다도 그 교육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에의 취학률이 낮은 것은 첫째, 유아교육의 의미와 효과에 대한 이해부족, 둘째 정부 유아교육정책의 결여, 셋째, 국민의 경제적 생활여건과 다른 보육시설의 영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의 취학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높아질 전망이다. 다음의 [그림 Ⅲ-3]은 1970년 이후 유아교육기관 취학률의 변화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유치원 취학률이 1980년까지는 매우 미미하였으나, 1985년에 이르러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1995년부터 주춤하다가 다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같은 현상은 1982년 3월에 정부가 수립한 『유아 교육진흥 종합계획』과 1982년 12월에 제정·공포된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의 문제를 국가의 정책과제로 고려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에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제기된 학령기 이전의 자녀보육의 문제에 대처하고, 유아교육의 소외 지역이었던 농어촌 지역에도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하여 공립병설유치원을 집중적으로 설립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에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이 주춤한 이유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이 교육청의 인가를 받는 유치원뿐만 아니라, 시도청의 인가로 설립되는 어린이집, 놀이방과 같은 보육기관과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증가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 보육법』과 이 시기에 진행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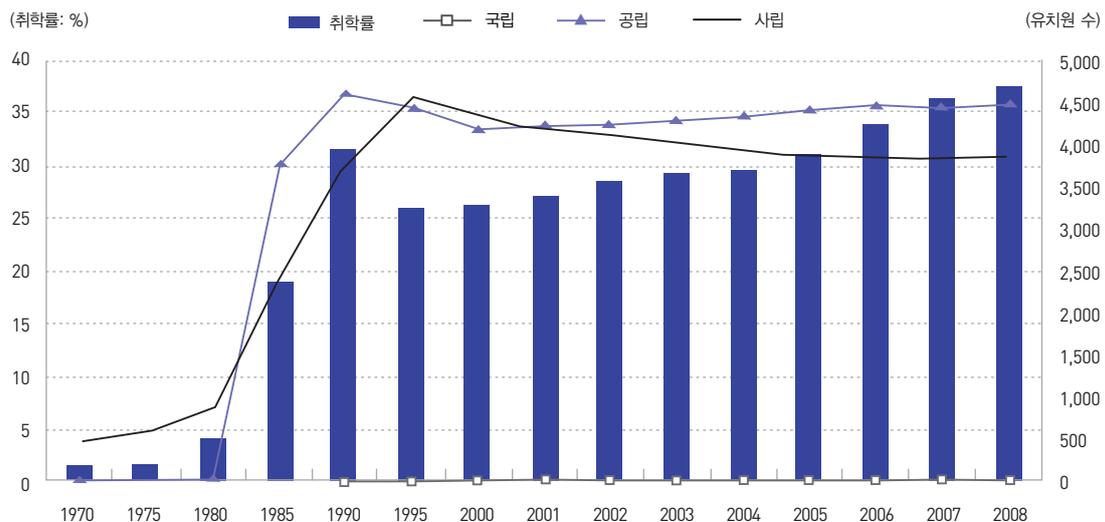
1997)』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그림 Ⅲ-3]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육시설의 수는 1990년에 1,919개소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19,276개소로 10년 동안에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따라서 1995년 이후의 유아교육기관의 취학을 정치는 이후에 시행된 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나타난 결과이므로, 현재 학령기 이전의 교육을 받는 유아들의 수와 실제 비율은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원과 달리 보육시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는 보육시설이 반일제 혹은 종일제로 운영되어, 부모의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설립의 다양성

[그림 Ⅲ-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2008년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진학률은 완전

[그림 Ⅲ-3] 유아교육기관 취학률과 국·공·사립 유치원 수: 1970-20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수준이므로,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교육기회는 큰 의미가 없고, 대학으로의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가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교 평준화 정책은 다양한 형태의 중등학교 설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74년에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의 서열화를 파괴하여 중학교 학생들을 고교 입시지옥에서 해소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고교 간 서열화의 파괴는 고교의 다양성을 무시하게 되어 교육에의 기회가 획일화되는 현상도 동시에 초래하였다. 고교 유형의 다양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획일화된 고교체제는 탁월한 인재들의 학습환경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 종교계열의 고교에서 종교교육이 제한을 받는 것은 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조치인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국민의 기본권인 학교 선택권에 위배되고 수월성 교육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더불어 장기간에 걸쳐서 비난을 받았음에도 강한 내성을 갖고 1974년 이후 30여 년간 지속되었으며 여전히 유지되는 정책이다. 그 이유는 이 정책에 대한 논쟁이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가치의 논쟁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원하며,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반대한다. 고교 선택의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가 대학입학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교 교육체제는 수월성 교육과 영재 교육의 논리에 의하여 1974년에 예체능 분야의 영재육성을 위하여 예술고와 체육고가 설립되었다. 1985년에

학생선발권을 갖는 과학고가 설립되었고, 1992년부터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1998년에는 국제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우수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2005년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되었고, 최근에는 자율형 사립고가 다수 설립될 예정이어서 고교는 다시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현재 특수목적고의 전체 현황을 세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일반계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2008

	학교		학생	
	학교수	구성비율(%)	학생수	구성비율(%)
과학고등학교 ¹⁾	21	21.9	3,898	7.6
외국어고등학교	30	31.3	25,580	50.1
예술고등학교	26	27.1	17,009	33.3
체육고등학교	15	15.6	3,519	6.9
국제고등학교	4	4.1	1,044	2.0
합계	96	100.0	51,050	100.0

주: 1) 한국과학영재학교가 포함됨.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2008.

특수목적고는 고교 교육의 특성화를 추구한 것이므로, 학생 선발방법, 교육과정 운영, 납입금의 책정에서 일반고와 달리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이 중에서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한 경로로 인식되어, 중학생들의 사교육을 유발하는 문제와, 대학입시에서 고교 내신의 반영으로 좋은 대학으로의 입학기회가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교에서 자퇴하는 현상도 발생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학교 선택권과 고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노력들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지난 30여

년간 추구한 고교 입시경쟁과 사교육의 해소 노력들과 지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중등교육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의 <표 III-2>는 1980년대 이후의 특목고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의 변화 추이를 비교한 것이다.

<표 III-2>에 의하면, 대학입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특수목적고의 설립은 최근에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08년 현재 특수목적고의 수는 54개교이며, 여기에 6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추가하면 60개교에 이르게 된다. 특목고 학생수는 1985년에 불과 531명의 과학고 학생들로서 전체 고교생의 0.04%에 불과한 극소수였으나, 현재 특목고 학생수는 30,094명으로 전체 고교생의 2.2%에 이른다. 최근에 이르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목적고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어서, 이미 1974년 이전의 비평준화 시대에 존재하였던 소위 일류고교의 숫자보다 더 많은 특목고 학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특목고의 학교설립 증가와 학생수의 증가는 중학생들의 고교입시경쟁으로 연계되며, 실제로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비율보다 중학생의 사교육 참여비율이 더 높고 초등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경쟁에 일찍 참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대학입학에서 유리하다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원

학교교육의 자원은 인적자원, 시설자원, 그리고 재정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민에게 학교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책무는 단순한 교육기회의 제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학교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양호한 학교교육을 위한 조건을 갖추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학교교육이 어느 정도 양호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방법은 1) 교육을 담당하는 인적자원인 교원의 규모와 우수성, 2) 교육 공간 및 시설의 적절성, 그리고 3) 재정지원의 규모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공간 및 시설은 학교설립 규정에 의거하여 강한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서술을 생략하고,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의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조건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양호한 수준인지 검토한다.

인적자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표 III-2>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수와 학생수: 1985-2008

	1985		1990		1995		2000		2005		2008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학교수	학생수
과학고	4	531	6	744	15	3,620	16	3,094	17	2,914	20	3,470
외국어고	-	-	-	-	14	15,309	18	19,571	25	19,164	30	25,580
국제고	-	-	-	-	-	-	-	-	1	462	4	1,044
일반계고	947	1,256,058	1,071	1,459,154	1,009	1,211,139	1,125	1,282,661	1,254	1,200,023	1,283	1,319,677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8.

인적자원을 양적으로 나타내며,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지를 반영하는 학교역량 지표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으면 비록 학급규모가 작다고 하여도, 교육과정과 학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교원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학교의 교육역량은 낮다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70년대 이후 2004년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는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표 III-3>은 이 같은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인지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각급 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그 동안 빠른 속도로 개선되었으나, 모든 학교급에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 순위에서는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OECD 평균과 10명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의 취약한 학교급은 중학교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어린 학생들일수록 교사들의 교과지도와 생활지도가 더욱 요구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 반대되는 교원수급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중학교, 일반계 고교, 전문계 고교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4년 이후로 정체되어, 학교교육의 인적자원 측면에서 지난 수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교육 수준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지난 30여년간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학교육 수준에서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에 보고조차 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이다. 다음의 [그림 III-4]는 1970년 이후로 현재까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이 어느 정도로 취약한 여건에 처하여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2008년 현재 전문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63.8명이며, 대학은 35.8명이다. 이는 OECD 회원국의 평균(전문대학 16명, 일반대학 16명)의 200%를 넘는 수치이다. 이 같은 통계가 산출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대학교육정책이 대학입학정책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의 경우 1985년 당시에 47명으로 가장 열악하였는데, 이 시기는 1981년에 시행된 졸업정원제의 도입으로 대학의 교원은 정체된 상태에서 입학생의 수만 2배로 늘렸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생각하기에 앞서 정치·사회문제의 해결을 우선한 결과로 이해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2000년대에 들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그 개선의 폭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교육기관에서

<표 III-3>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 2006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학생수	순위
한국	19.6	23위/26개국	26.7	25위/27개국	18.2	28위/29개국
OECD 평균	15.1	-	16.2	-	13.2	-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교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인 것을 반영한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립대학은 상대적으로 사립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공립대학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의 여건이 훨씬 낫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대학의 입학정원은 이미 고교 졸업생수보다 많은 기형적인 구조가 되어 대학교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대학들은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교원에 의존하여 교육과정의 상당한 부분을 운영한다. 대학교육은 교원의 부족과 과다한 학생수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또한 대학생들의 인적구성도 모두가 대학교육을 이수할 만큼 양호한 학력수준을 갖추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확보를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대학교육기관 입학정원의 감소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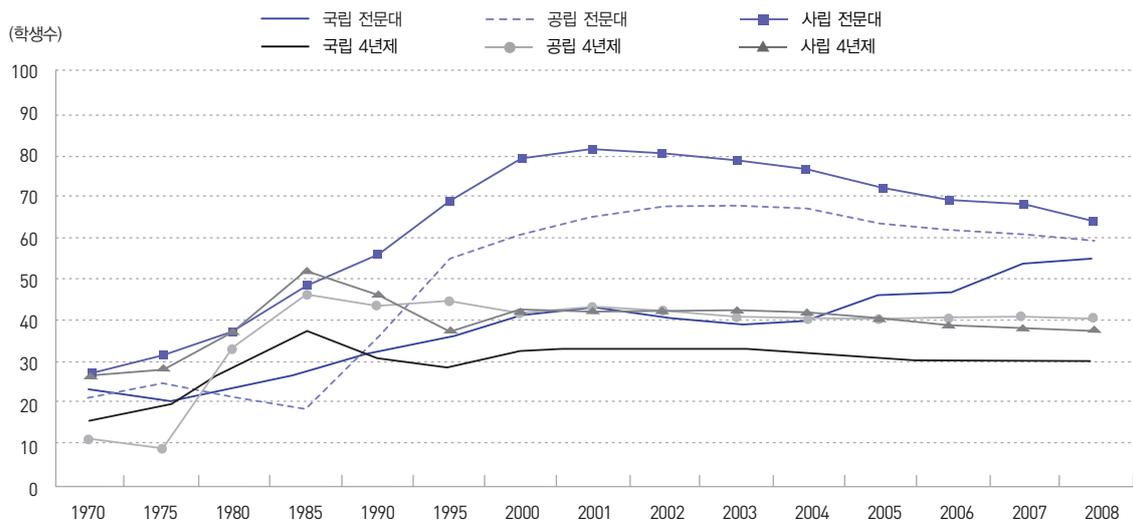
이 경우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재정지원

교육비 지출통계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교육책무를 직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전체 예산대비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규모, 학교급별 1인당 공교육비 등은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국제비교 지표들이다. 아울러 국민의 삶의 조건으로서 가구당 교육비 부담수준도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는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사용하는 교육비로서 교육의 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교육비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국·공립학교의 기성회비, 사립대학의 교비예산을 모두 포함한다. 즉, 교육비의 출처와 관계없이 한 학교가 학생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비용이라고 할 수

[그림 III-4]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교원 1인당 학생수: 1970~2008



출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있으며, 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여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은 1970년에 비하여 괄목하게 증가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970년의 12,000원에 비하여 2007년에는 4,101,000원으로 무려 342배 상승하였으며, 중학교는 178배, 고등학교는 185배, 대학교는 52배 상승하였다.

이 같은 공교육비의 증가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 증액을 판단하기 위하여 미국의 달러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의 추세를 요약하면 <표 Ⅲ-4>와 같다. 이 표로부터 우리는 1998년부터 2005년 사이에 모든 학교급에 걸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상당히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교급들에서 동일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며, 2001년 이후로는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를 동일한 달러 구매력지수로 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한 결과

를 <표 Ⅲ-5>에 제시하였다. 이 표는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규모는 국제수준에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규모는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에 미달하고 있으며, 국가 순위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유아교육은 공교육비 자료를 제공한 25개 국가 중에 24위이며, 초등교육은 28개국 중에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에 22위, 대학교육(고등교육)은 27개국 중에서 21위였다.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의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이 담당하지만 국가발전의 균형에서 교육분야는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교육효과

교육의 효과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개

<표 Ⅲ-4> 각급 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1998-2005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교육기관	-	-	-	5,035	5,053	5,733	5,994	6,212
초등교육	2,838	2,838	3,155	3,714	3,553	4,098	4,490	4,691
중등교육	3,544	3,419	4,069	5,159	5,882	6,410	6,761	6,645
고등교육	6,356	5,356	6,118	6,618	6,047	7,089	7,068	7,606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8 교육통계분석자료집』, 2008.

<표 Ⅲ-5>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5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환산액)

	유아교육 (3세 이상)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초·중·고등교육
한국	2,426 (24위/25개국)	4,691 (23위/28개국)	6,645 (22위/29개국)	7,606 (21위/27개국)	6,212 (20위)
OECD 평균	4,888	6,252	7,804	11,512	7,527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인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신체적 능력의 개발을 추구하므로, 학교교육의 성과는 이 같은 개인적 특성을 측정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 교육은 문화의 전승과 발달,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을 담당한다. 그러나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그리고 신체적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교육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의 역량 개발이 국가와 사회발전의 토대가 된다.

교육의 효과에서 모든 개인과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은 인지적 영역의 학업성취도이다. 학업성취도는 상대적으로 측정방법이 발달하여 있으며 표준화된 척도로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성취수준을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업성취도에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단순히 상급학교의 진학을 위한 것으로만 이해되어 학생들 사이의 상대적 서열화 작업을 위한 도구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으나, 절대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는 불과 몇 년 전의 일이다. 학업성취도는 미래의 성취수준을 예언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한 국가의 평균 학업성취도 수준은 그 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예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 III-6>은 중등학교 교과에서 핵심적인 읽기, 수학, 과학 영역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국제비교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의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이 표에서 원편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기구(IEA)가 주관하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평가결과이다. TIMSS는 4년 주기로 참여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여 비교하는데, 최종분석에 참여한 국가의 수는 주기마다 일정치 않다. 예를 들어, 1999년에는 36개국, 2003년에는 46개국이었다. 또한 TIMSS는 각 국가의 교육과정에 기초

<표 III-6> 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1995-2007

(점수, () 안은 한국 순위)

	TIMSS ¹⁾						PISA ²⁾								
	수학			과학			읽기			수학			과학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한국 점수	한국 순위	국제 평균
1995	581	(3)	519	546	(4)	518	-	-	-	-	-	-	-	-	-
1999	587	(2)	521	549	(5)	521	-	-	-	-	-	-	-	-	-
2000	-	-	-	-	-	-	525	(6)	492	547	(2)	492	552	(1)	491
2003	589	(2)	485	558	(3)	491	534	(2)	492	542	(3)	496	538	(4)	497
2006	-	-	-	-	-	-	556	(1)	478	547	(1-4) ³⁾	485	522	(7-13) ³⁾	488
2007	597	(2)	-	553	(4)	-	-	-	-	-	-	-	-	-	-

주: 1)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의 약자임.

2)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의 약자임.

3) 하위영역별 순위로 수학은 모든 하위영역별 평가에서 1-4위 수준임을 뜻함.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하여 공통문항과 각 국가의 고유문항으로 구성된 평가도구를 사용한다. 국제비교 연구에 보고된 성취도는 공통문항들의 평가결과이다.

〈표 Ⅲ-6〉의 오른쪽에 있는 평가결과들은 OECD 회원국들의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주로 고교 1학년생)으로 시행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연구의 결과이다. PISA 연구는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보다는 실제 생활에 응용하는 지식 또는 소양을 측정한 결과를 비교한다. PISA 연구에 참여하는 국가는 30개 OECD 회원국과 이 연구에 참여를 희망한 비회원국으로 구성된다.

〈표 Ⅲ-6〉이 제시한 평가결과는 우리나라 중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국제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2006년도 PISA의 과학영역 평가결과를 제외하면, 지난 10여 년 동안 모든 평가에서 학생들의 성취도 순위는 세계 1위에서 5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절대적 관점에서 점수도 국제평군을 월등히 상회하고 있다. 비단 학업성취도의 평균 뿐만 아니라, 최상위권에 속한 학생수의 비율도 양호한 것으로 PISA의 다른 통계는 보여준다.

이 같은 결과는 교육의 인적자원으로서 교원의 수급, 재정지원으로서 공교육비의 지출규모 등 정부의 교육지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함에도 학업성취도 결과는 매우 높은 모순적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모순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지원이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상진 (연세대학교)

교육의 경제적 성과

요 약

- 최근 20년간 취업률은 전문계열 고교와 전문대학 졸업자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자들보다 높았다. 4년제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았던 1970년대에는 가장 높았으나, 1980년대 이후로 대학입학정원의 증가와 더불어 가장 낮은 추세를 보인다.
-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실업률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취업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금은 언제나 대학 졸업자가 다른 모든 학교급의 졸업자보다 높았으며, 전문대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및 중학교 이하의 졸업자들 간의 임금 차이는 미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에게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습득하게 해주는 데 있다. 학교교육의 성과로서 경제적 생활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학교교육의 중·장기적 성과로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로는 학력 수준에 따른 취업률, 실업률, 그리고 임금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세 가지 지표가 학교교육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를 검토한다.

취업률

취업률은 모든 교육기관이 교육성과로서 관심을 갖는 영역이다.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취업률은 각국의 학교효과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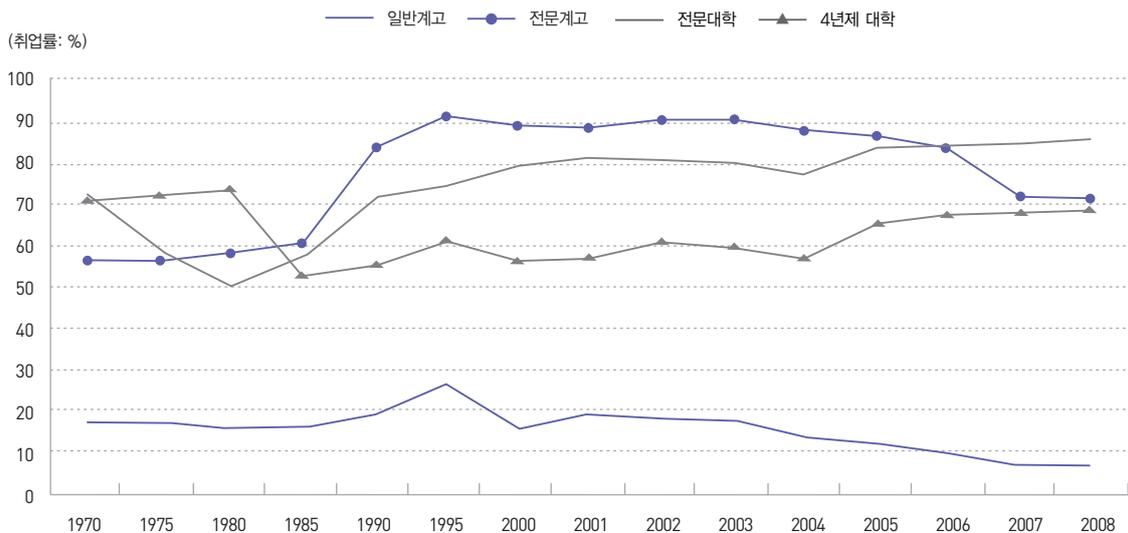
[그림 Ⅲ-5]에 제시된 취업률은 전체 졸업자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아니고, 진학 및 입대를 하지 않은 졸업자들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이다. 즉, 취업이 가능한 졸업자 중에서의 취업률이다.

교육수준별로 취업률을 보면, 대학졸업자들의 취업률은 1980년까지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그 이후로 2004년까지는 50-60% 정도로 낮아졌다가 최근에 다소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졸업자의 취업률이 1970년대에 높았던 이유는 당시의 대학 진학률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대학졸업자들은 고급인력으로서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시기에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하면서 노동시장이 확대된 시기이기도 하다. 1981년에 졸업정원제가 시행되면서 대학생수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률은 50%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취업률 하락은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최근 취업률의 상승은 대학의 특성화 경향과 대학 간의 경쟁요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통계조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취업률이 60% 이하였으나, 그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80%대에 도달하였다. 이는 전문대학의 교육이 현장 실무 교육을 강조하고, 중견 기술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문대학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인문계 일반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 간에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낮은 편이었으나, 그 이후엔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 시기에 전문계 고교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대학진학을 희망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며, 1990년대 이후로 취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그림 III-5] 교육수준별 취업률¹⁾: 1970-2008



주: 1) 취업률 = (취업자수 ÷ (졸업자수 - 진학자수 - 입대자수)) × 100.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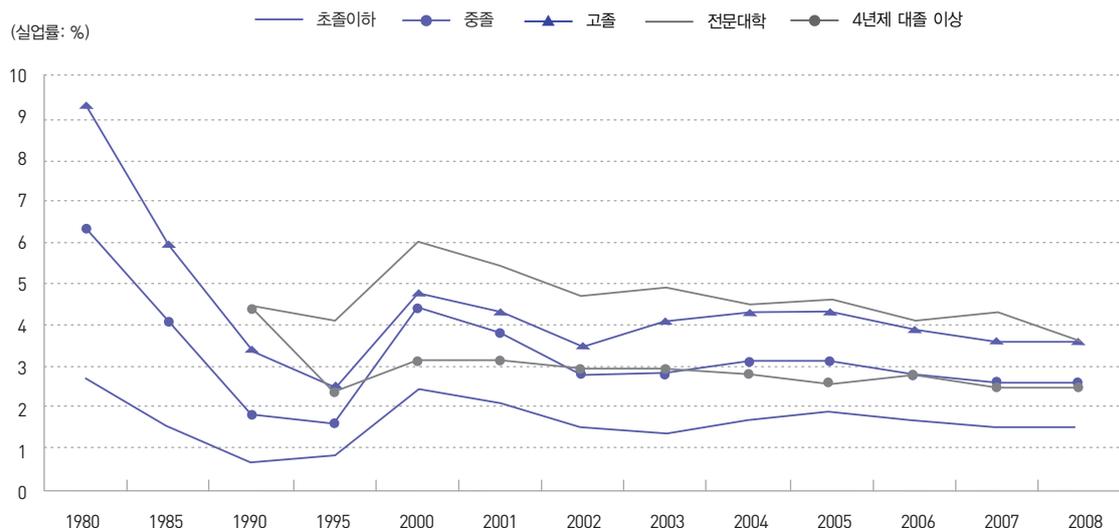
1990-1995년 기간에 ‘고등학교 직업기술 교육체제 개편사업’의 영향인 것으로 이해된다.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고교 졸업 후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은 것으로 이해된다.

각 학교급 졸업자의 취업률은 학생수의 규모, 교육과정의 특성과 이에 상응하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전문대학의 경우는 산업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반면에 일반 대학의 경우는 1981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의 증가와 1995년 이후 대학설립준칙주의에 의한 대학설립 증가에 따라 2003년부터 대학입학정원이 고교 3학년 재학생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실제 대학 진학률도 80%를 넘기 때문에, 과다한 대학 졸업생수가 취업률을 낮춘 것으로 이해된다.

실업률

실업률은 취업률과는 반대 방향에서 학교교육의 중장기적 효과를 반영하는 지표이다. 취업률이 졸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에 실업률은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취업률보다는 더 장기적인 학교교육 성과지표로 이해된다. 실업률은 1) 4주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 항상 취업이 가능하며, 3)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인구수로 산출한다. 첫째 기준은 경제활동인구 중 취업과 실업을 구분하는 기준이며, 둘째와 셋째 기준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는데 사용된다. [그림 III-6]은 1980년대에는 실업률이 모든 학력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1990년에서 1995년 기간에는 가장 낮아졌으나 그 이후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높아졌다가, 2000년대에 들어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그림 III-6] 교육수준별 실업률¹⁾: 1980-2008



주: 1) 2000년 이전은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이며, 2000년 이후로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제시하고 있다. 실업률의 경향은 모든 학력수준에서 유사하게 변화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수준별로는 대체로 고교학력자와 전문대 졸업자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집단보다 높은 편이다. 전문대 출신의 경우 취업률과 실업률이 모두 높다는 것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을 의미하며, 4년제 대졸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력자의 실업률이 낮은 것은 바람직하나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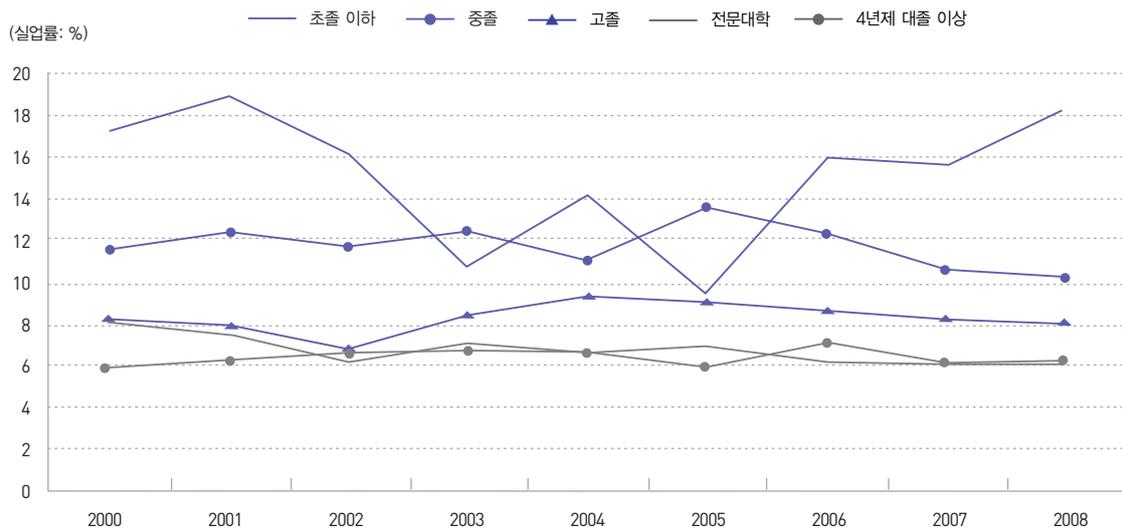
교육과 고용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것은 청년층(15-29세) 인구의 실업률이다. [그림 Ⅲ-7]은 청년층 인구의 교육수준별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은 청년층 인구의 실업률은 학력이 높을수록 낮다는 것이다.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는 대체로 10% 이상의 실업률 추이를 보이고 있

으며, 고등학교 졸업의 학력자는 8% 수준을, 대학교 졸업의 학력자는 6% 수준을 보인다.

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취업률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청년층 인구의 실업률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교교육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학력이 높은 사람이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으며 보다 좋은 직업으로의 취업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력 수준에 따른 실업률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는 각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느 정도 경제적 삶의 질과 연관되는지를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은 국가이며, 교육을 통하여 경제적 지위상승을 기대하는 수준도 높다. 이 같은 교육문화의 성과가 다른 국가와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갖는지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Ⅲ-7] 청년층 인구(15-29세)의 교육수준별 실업률¹⁾: 2000-2008



주: 1) 4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III-7〉 한국과 OECD 회원국의 평균 교육수준별 실업률: 1997-200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한국	중졸 이하	1.4	6.0	5.4	3.7	3.1	2.2	2.2	2.6	2.9	2.6
	고졸	2.4	6.8	6.4	4.1	3.6	3.0	3.3	3.5	3.8	3.5
	대졸	2.3	4.9	4.7	3.6	3.5	3.2	3.1	2.9	2.9	2.9
OECD 평균	중졸 이하	10.1	9.3	9.2	8.9	8.6	9.3	9.6	10.1	10.3	9.6
	고졸	6.7	6.5	6.0	5.6	5.4	5.7	5.9	6.2	5.8	5.4
	대졸	4.1	4.0	3.8	3.5	3.3	3.7	4.0	4.1	3.9	3.5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표 III-7〉은 25-64세 인구에 대한 학력별 실업자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대학교육의 학력자들만 IMF 경제위기 기간인 1998년부터 2000년까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그 이외의 연도는 모두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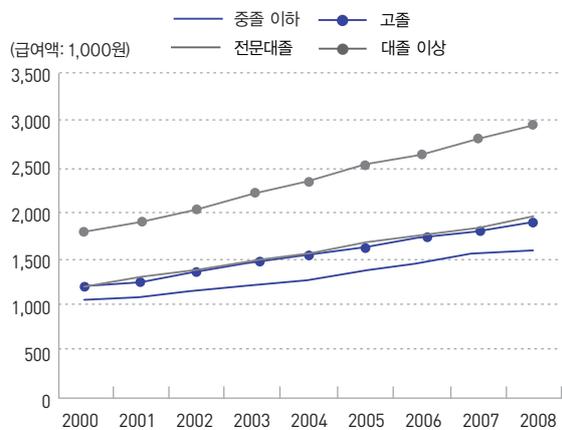
〈표 III-7〉의 또 다른 특징은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경우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것이다. 2006년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중학교 졸업 이하의 실업률(2.6%)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이 같은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활동이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학력과 무관하게 역동적인 것을 반영한다. 즉, 학교교육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는 청년층 실업률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률이 낮으나, 전체 성인(25-64세)을 대상으로 산출한 실업률 통계는 학력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학력이 낮은 성인인구의 실업률이 더 낮은 경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기서 실업률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임금

학교교육을 받는 가장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사회적 보상이다. 임금수준은 사회적 보상의 규모를 반영하는 핵심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I-8]은 학력에 따른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임금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수준은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일반인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전문대 이하 학력소지자와 대학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간의 임금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남녀 모두

[그림 III-8] 교육수준별 월급여액: 2000-2008



출처: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이 높으며 또한 남녀 모든 집단에서 대졸자의 임금수준이 다른 학력 소지자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림 Ⅲ-8]에 서와 같이 임금수준의 학력별 차이는 일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임금수준의 차이를 월급여액으로 비교하는 것은 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약하다. 위의 그림에서 대학졸업자의 경우 2000년에 평균 179만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평균 295만 원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통계량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각 년도의 월급여액 전체 평균을

100으로 보고 교육수준별로 상대적 임금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2000년도 월급여액 전체 평균인 131만 원을 100으로 보았을 때, 중졸 이하는 79.3, 고졸은 90.3, 전문대졸은 93.3, 대졸 이상은 136.2였다. 2008년에도 중졸 이하부터 대졸 이상까지의 임금지수는 각각 71.5, 83.9, 87.7, 130.6으로 나타나 대학 이상 학력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은 아니나, 전문 대학 이하의 학력자는 모두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수준은 대학교육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은 대학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상진 (연세대학교)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요 약

-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활발하다. 또한 가계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 한국 학생들은 주요 국가 학생들 가운데 사교육 참여가 가장 활발하다. 한국 학생들의 50% 이상이 거의 매일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지만, 한국에서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은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고질적인 교육문제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사교육비 조사』(통계청, 2009)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한국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009)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은 0.8% 증가하는 데 그치고 가계소비지출은 3.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3.9%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비 가운데 공교육비는 증감폭이 크지 않고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교육비 지출 증가는 사실상 사교육비 증가에서 기인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촌 전체를 엄습한 금융위기 때문에 국내 경제 상황도 무척 어려운 가운데 발생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지출규모를 줄이더라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좀처럼 줄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우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서민층은 당장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중산층은 노후대비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어 저출산 문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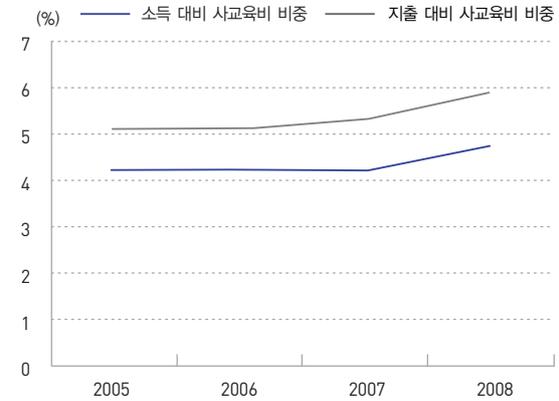
심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은 저축률을 낮추어 국가 전반의 안정적 투자재원 조달을 저해하게 된다(이철선·이주량, 2007).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 경쟁이 가열되면 소득계층별 사교육 참여 격차가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사교육이 교육양극화의 주된 연결고리로 작용할 개연성도 커진다.

여기에서는 통계자료를 토대로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 추이를 개괄하고,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소득수준별·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실태도 파악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교육 참여에 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사교육이 지닌 특징을 정리해 보겠다.

날로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은 일차적으로 가계 소득 및 지출 가운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통해 가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9]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가계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 추이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사교육비는 학원 및 보습교육비 가운데 성인학습에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학생들의 학원교육비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의 가계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의 경우 2005년 4.2%에서 2008년 4.7%로 0.5%p 증가했으며,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2005년 5.1%에서 2008년 5.9%로 4년 동안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9] 소득 및 지출 대비 사교육비 비중: 2005-2008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그런데 이 자료에서 사교육비는 학생들의 학원교육비로만 측정되었기 때문에, 학원교육비보다 단위 비용이 높은 개인과외비, 그룹과외비는 제외되었으며, 학습지 비용도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사교육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실태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림 Ⅲ-10]에는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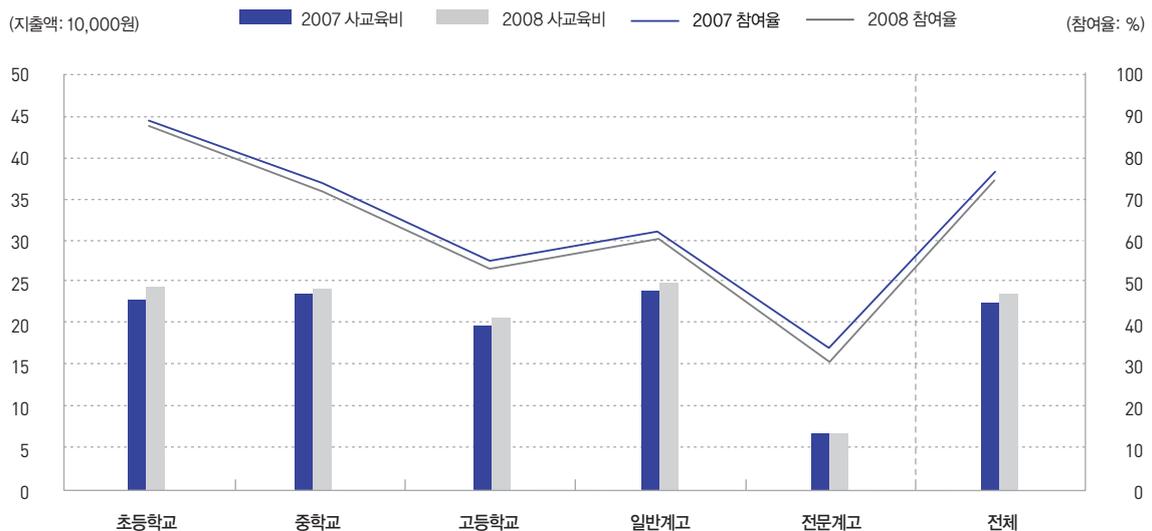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 초·중·고 학생 가운데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2007년 77.0%에서 2008년 75.1%로 약간 감소한 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

육비는 2007년 222,000원에서 233,000원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사교육 참여율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이 증가한 것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출한 비용이 이전보다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07년 288,000원에서 2008년 310,000원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9).

학교급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사교육 참여율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낮아진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87.9%로 거의 90%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반면, 중학생은 72.5%, 그리고 고등학생은 53.4%로 학교급이 높아지면서 참여율이 두드러지게 떨어진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계발이나 방과 후 보육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교육을 활용하고, 사교육 단가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사교육 목적이 대부분 상급학교 진학 준비로 한정되며, 사교육 단가도 상승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초등학생에 비해 사교육 참여율이 낮게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현재 전체의 87.9%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초등학생의 평균 지출액이 242,000원인데 비해, 전체 학생의 60.5%만이 사교육을 받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평균 지출액이 249,000원으로 더 큰 것은 고등학생들 가운데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의 경우, 초등학생은 276,000원인데 비해 일반계 고등학생은 411,000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림 Ⅲ-10]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2007, 2008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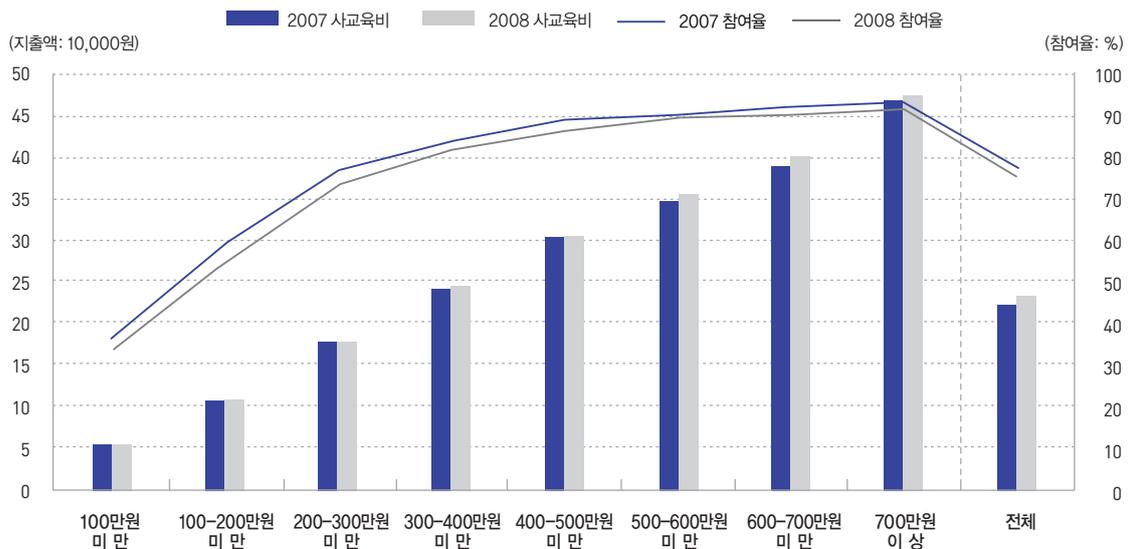
다음으로 일반계고와 전문계고 간에 사교육 참여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60.5%이고 참여 학생과 비참여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49,000원인데 비해, 전문계고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은 30.3%에 불과하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69,000원으로 일반계고 학생들의 1/4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전문계고 학생들보다 훨씬 더 치열한 대입경쟁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교육 참여에 더 적극적이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지출하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 실태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 문제를 우려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교육이 계층 간 교육격차 확대에

핵심적인 매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년간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본 결과가 [그림 III-11]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소득수준과 정비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고, 지출규모도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월평균소득 200만 원 수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극명하게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30%대에 그치고 월소득 100-2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도 50%대에 머문 반면, 200-3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70%대로 크게 상승하고 월소득 400만 원 이상 집단에서는 90%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상위 계층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그림 III-11] 소득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2007, 2008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9.

사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간극은 사교육비 지출규모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집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54,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1/4수준에 불과하고, 100-200만 원 집단 역시 108,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08년에 월소득 700만 원 이상 고소득집단은 월소득 100만 원 미만 집단에 비해 약 8.8배 많은 월평균 474,000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였는 바, 사교육비 지출에서의 계층 간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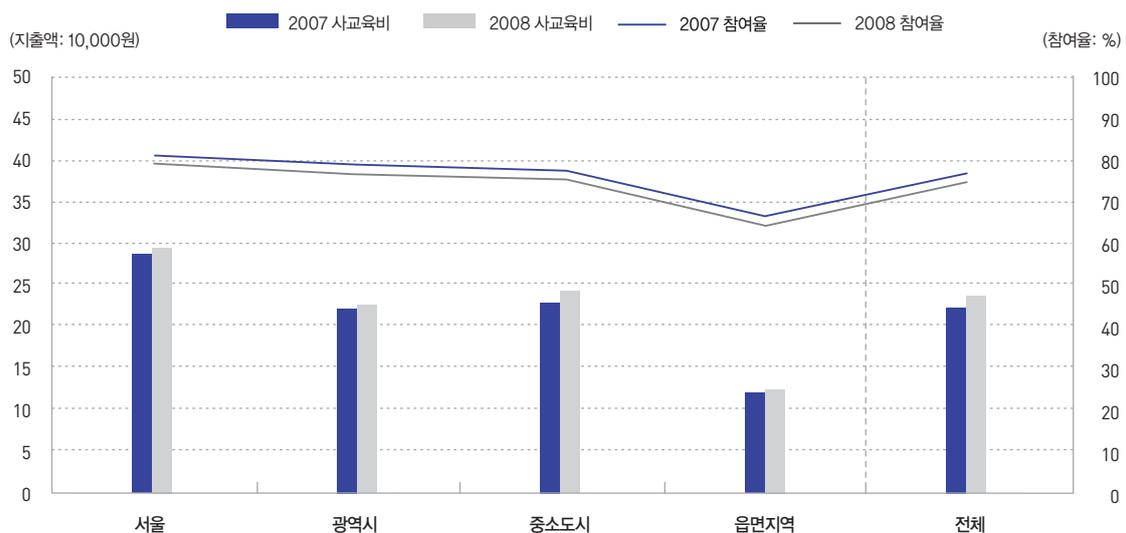
또한 2007년 대비 2008년 사교육비 지출액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월소득 5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0-1.9% 수준을 보인 반면, 월소득 500-600만 원 집단은 3.5%, 600-700만 원 집단은 3.6%를 나타냈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학부모의 지불능력에 의존하는 사교육을 중심으로 계층 간 교육격차가 확대되리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지역별 사교육 참여 실태

[그림 III-12]에는 지역별 사교육 참여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도시규모가 클수록 사교육 참여율도 높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사교육 참여율은 서울지역이 79.1%로 가장 높고, 광역시 76.6%, 중소도시 75.8%, 읍면지역 64.0% 순으로 파악되었다. 도시 지역에서는 75-80%의 참여율을 나타낸 데 비해, 읍면지역은 64%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읍면지역과 여타 지역 간에 사교육 참여 기회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사교육 수요를 견인하는 고학력·고소득 학부모들이

[그림 III-12] 지역별 사교육 참여율 및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 2007, 2008



출처: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2009.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교육 기관 역시 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사교육비 지출액의 경우에는 지역 규모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2008년 현재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서울지역에서 29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24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광역시 228,000원, 읍면지역 125,000원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시보다 중소도시에서 사교육비 지출규모가 더 크게 나타난 것은 고학력·고소득 학부모들이 주로 거주하고 교육열이 높은 경기도 신도시의 영향이 작용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아울러 여타 도시지역에 비해 광역시 지역에서 공교육이 좀 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점도 이 같은 현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읍면지역의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여타 지역의 절반 수준에 그쳐, 도농 간에 사교육비 지출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교육 참여 실태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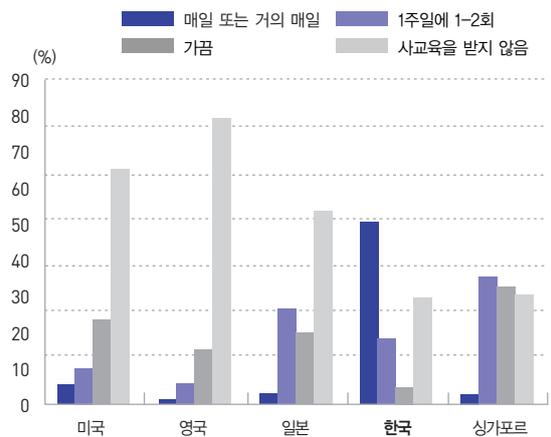
지금까지 살펴본 자료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대다수 학생들이 참여할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지만, 계층 간·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교육 수요가 주로 대도시 지역주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사교육 참여 현상이 갖는 특징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타 국가들의 실상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에 여기에서는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년 및 2003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TIMSS 자료에서는 사교육(private tutoring 혹은 shadow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규교육 외에 받는 추가교육(extra lesson or tutor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교육 외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교육 등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교육 수요 및 그 특성을 살펴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Ⅲ-13]에는 주요 국가별로 정규수업 이외의 사교육 참여율 및 참여 빈도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나듯이, 미국, 영국 등 서구권 국가보다는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동양권 국가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컨대, 미국은 사교육을 받는 학생 비율이 35.4%, 영국은 20.9%인 데 비해, 일본은

[그림 Ⅲ-13]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사교육 참여율: 2003



출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2003.

46.5%, 싱가포르와 한국은 각각 70.1% 및 71.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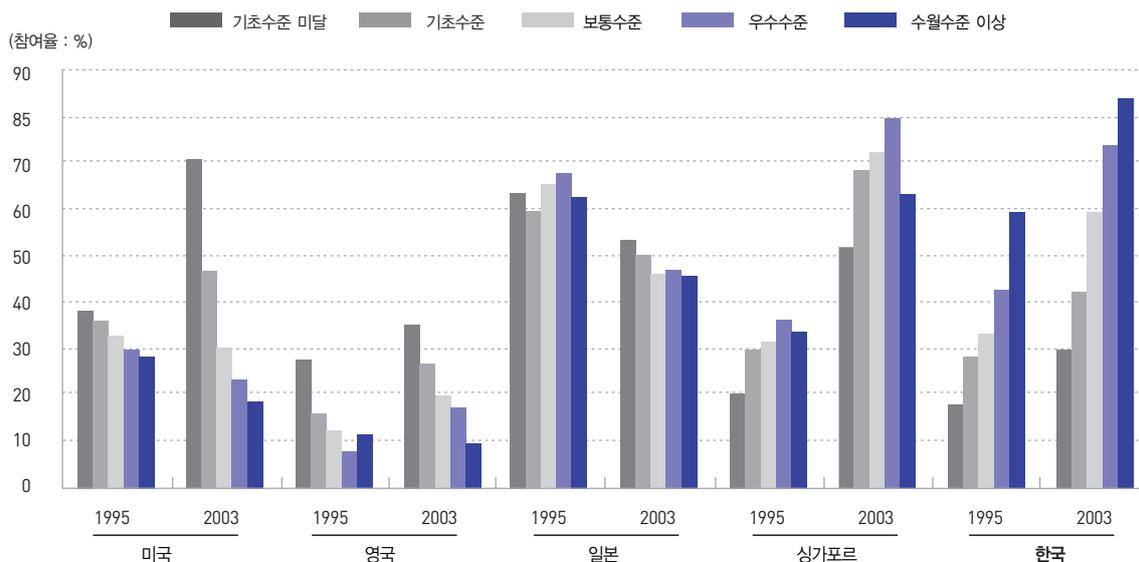
그런데 사교육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한국 학생들이 여타 국가 학생들에 비해 사교육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교육을 매일 또는 거의 매일 받는다는 학생의 경우, 미국 4.4%, 영국 0.8%, 일본 2.0%에 그쳤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교육 참여율을 나타낸 싱가포르도 2.4%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한국은 전체 학생의 50.3%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두드러진 대조를 보인다.

한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 특성은 학업성취에 따른 사교육 참여율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14]에는 TIMSS에서 제시하는 학업성취 수준별(625점(수월수준) 이상, 550-624점(우수수준), 475-549점(보통수준), 400-474점(기초수준)) 사교

육 참여율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과 영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주로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2003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사교육 참여율이 기초수준 미달 집단에서 69.9%로 가장 높고,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수월수준 이상 집단에서는 17.9%에 불과했다. 영국 역시 사교육 참여율은 기초수준 미달 학생이 34.8%로 가장 높고, 수월수준 이상 학생은 9.6%에 그쳤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사교육은 주로 뒤처지는 학생들의 보충학습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본의 경우 1995년 자료에서는 일관성 있는 양상을 보이지 않지만, 2003년 자료에서는 대체로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사교육 수요도 높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보통수준 및 우수수준에서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수월수준 이상에서는 참여율이 다소

[그림 Ⅲ-1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학업성취수준별 사교육 참여율: 1995, 2003



출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1995, 2003.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995년 및 2003년 자료 모두에서 일관되게 학업성취와 사교육 참여율이 정비례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1995년 자료에서는 기초수준 미달 집단의 참여율은 17.8%인데 비해 최상위권인 수월수준 이상은 59.0%로, 최상위권에서 최하위권보다 3배 이상 높은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3년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어, 기초수준 미달 집단은 29.2%의 참여율을 보인 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83.7%가 사교육을 받아 양자 사이에 54.5%p의 격차

를 보여주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려는 보습교육보다는 학업성취 수준이 뛰어난 학생들의 수월성 담보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국사회에서 사교육은 교육경쟁에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이 지닌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차별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한국에서 사교육을 통해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 이철선·이주량. 2007. “사교육,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한국경제주평』 246: 1-15.
- 통계청. 2009. 『사교육비 조사』.

김경근 (고려대학교)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요 약

- 한국사회에서 양적 측면의 교육기회 불평등은 크게 완화되었으나 질적 측면의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정배경이 좋을수록, 도시지역에 거주할수록 위세가 높은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의 성별 차이는 거의 해소되었지만, 4년제 대학 진학에서는 여전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대학 진학에서의 남성 우위 현상은 주요 구미 국가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교육팽창을 경험하였다. 한국에서 진행된 급속한 교육팽창의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일제 강점기에 억눌려 내연하고 있던 뜨거운 교육열이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폭발적인 교육수요로 이어지면서 괄목할 만한 교육팽창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김경근·변수용, 2006). 여기에 더해 교육이 계층 간 간극을 메우고 사회이동을 가능케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교육수요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2008년 현재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률이 각각 99.9%, 99.7%를 보이고 있고, 고등교육인 대학 진학률 역시 83.8%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적어도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가시적인 교육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많은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교육기회의 확대가 반드시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실제 진학하는 학교의 계열이나 유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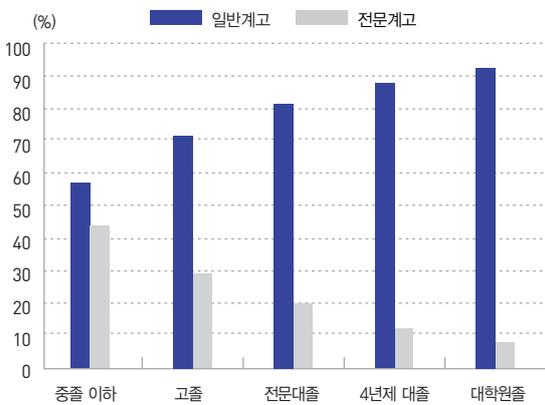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진학하는 상급학교의 단계 및 유형이 사회이동과 관련하여 무척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현상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평등 구현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사회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 진학 단계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수준을 계층별·지역별·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학 진학률의 성별 차이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교육기회 불평등의 상대적 수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계층 차이

상급학교 진학에서 발생하는 집단 간 차이는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계열 선택을 통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15]에는 부모의 학력별 고교 진학 유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드러나듯이, 일반계 고교 진학 비율과 부모의 학력은 뚜렷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림 Ⅲ-15] 부모학력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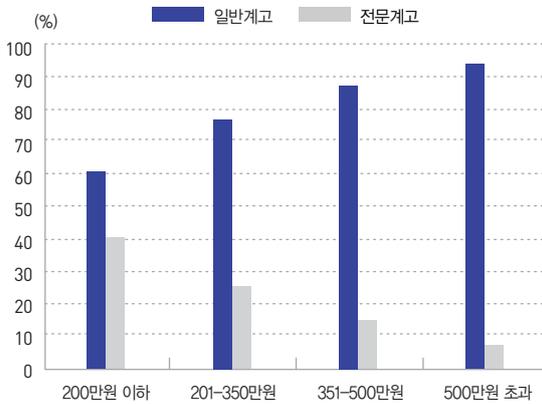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5.

구체적으로, 전체 학생의 73.2%는 일반계고, 26.8%는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가운데,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에서는 56.6%만이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반면, 부모 학력이 대학원졸인 경우에는 92.5%의 학생이 일반계고를 선택하고 있다. 그리하여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과 대학원졸인 집단 간에는 일반계고 진학률에서 약 36%p에 이르는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동일한 결론을 부모 학력별 전문계고 진학 양상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즉 전문계고의 경우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집단의 진학률은 43.4%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으며, 4년제 대졸 및 대학원졸 부모를 둔 집단의 진학률은 각각 12.0%와 7.5%로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학력이 낮을수록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고교 진학 단계부터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 계층화가 진행되는 것을 잘 방증해준다.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 나타나는 교육 계층화 현상은 소득수준별 차이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16]에는 소득수준별 고교 진학 유형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소득수준은 고등학교 진학 계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60%,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이 40%로 나타났다. 반면, 월소득 201-350만 원 집단에서는 전체 학생의 75.8%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은 24.2%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올라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월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절대 다수

[그림 III-16] 소득수준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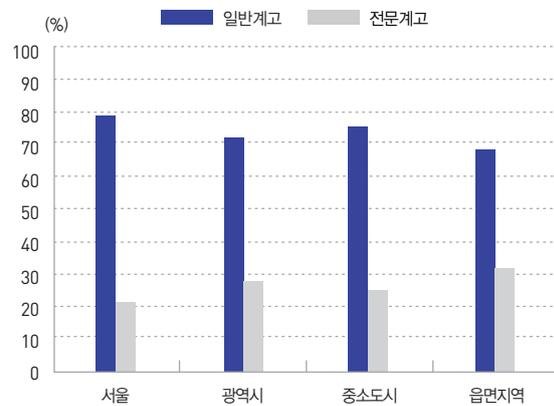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5.

인 93.3%의 학생이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전문계고 진학자는 6.7%에 불과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문계고 진학률이 증가하는 현상은 일차적으로 소득수준과 학업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높은 상관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학교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도 이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계고 진학률을 설명해줄 수 있다.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지역 차이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데 지역 또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별 고등학교 진학 유형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III-17]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지역별 차이는 계층별 차이만큼 극명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일반계고 진학률에서 상당한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일반계고 진학률은 서울의 78.7%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70%를 상회하였다. 그

[그림 III-17] 지역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5.

렇지만 농촌에 해당하는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일반계고 진학률이 67.9%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처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일반계고 진학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농촌 학생들이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포부를 낮게 설정하고 있을 개연성을 상정해볼 수 있다.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포부가 낮은 데는 도시지역 학생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여 있는 학업성취도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농촌지역 주민의 학력 및 소득수준이 도시지역보다 낮은 것도 읍면지역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계고 진학률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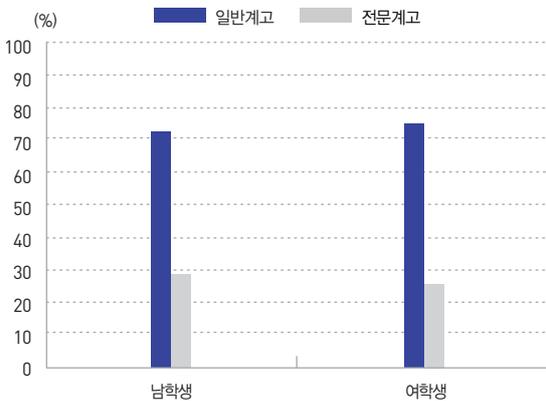
고등학교 진학에서의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 차이 또한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에 중등교육의 보편화가 실현되어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진학 여부에

관한 한, 남녀 간에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계열 선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해보고자, 남녀 학생별 고교 진학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Ⅲ-18]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Ⅲ-18]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고교 진학 단계에서 성별에 따른 계열 선택의 차이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71.7%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28.3%가 전문계고로 진학하는 반면, 여학생은 74.7%가 일반계고로 진학하고 25.3%가 전문계고로 진학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차이는 없는 편이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오히려 일반계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적어도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여성의 불리함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Ⅲ-18] 성별 인문계와 전문계 고교 진학비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5.

대학 진학에서의 계층 차이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기회의 불평등은 대학 진학 단계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 학력 및 소득수준 등과 같은 계층 요인에 따라 대학 진학 양상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교 졸업 후 4년이 되는 시점까지 추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고교 졸업 직후의 진학 실태가 아니라, 재수 또는 편입 등을 통해 이루어진 진학 및 이동의 결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개괄적인 진학 양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57.0%이고 2-3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29.8%,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13.2%로 파악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 진학 양상의 이면에는 계층별 차이가 엄존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부모 학력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등교육 수혜율이 높고, 특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부모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비율이 22.0%로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2-3년제 대학 진학자가 40.3%,

[그림 Ⅲ-19] 부모학력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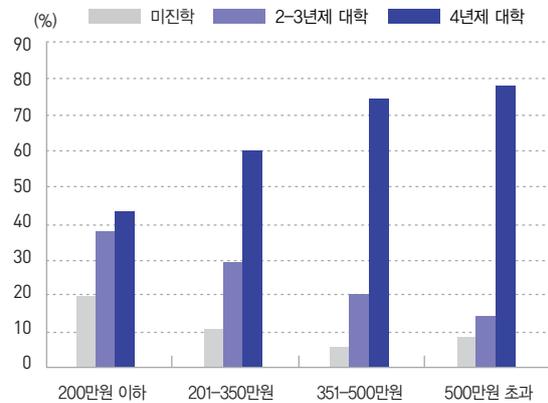
4년제 대학 진학자가 37.7%로,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보다 2-3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은 점도 특징적이다. 실제로 이들을 제외한 여타 집단에서는 모두 2-3년제 대학보다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저학력 부모를 둔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의 획득 및 활용에서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 학력에 따른 대학 진학 양상은 부모의 고등교육 이수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좀 더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고졸 학력의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미진학 비율이 10.7%이고, 2-3년제 대학 진학은 31.3%, 4년제 대학 진학은 58.0%였다. 그렇지만 2-3년제 대졸 학력을 보유한 부모를 가진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비율은 5.4%로 크게 감소하는 반면, 76.8%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대학원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미진학자 비율이 5.8%에 불과한 반면, 87.5%의 학생들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 학력이 대학원졸업인 집단은 중졸 이하인 집단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배 이상 높고, 미진학자 비율은 1/4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부모 학력과 자녀의 대학 진학 양상 사이에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양상은 소득수준별 비교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미진학자 비율은 높고,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낮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대학 미진학자 비율이 19.8%로 나타나, 5명 가운데 1명꼴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그림 III-20] 소득수준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8.

월소득 200만 원 이하 집단의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자가 37.1%, 4년제 대학 진학자가 43.1%로, 4년제 대학 진학자가 2-3년제 대학 진학자에 비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여타 집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월소득 201-350만원 집단에서는 10.6%의 학생들이 미진학자로 남았고, 29.1%는 2-3년제 대학, 그리고 60.3%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함으로써 4년제 대학 진학자가 2-3년제 대학 진학자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욱 뚜렷해져, 월소득 351-500만 원 집단의 경우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은 단 5.2%에 불과했고, 2-3년제 대학 진학자도 20.3%에 그친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는 74.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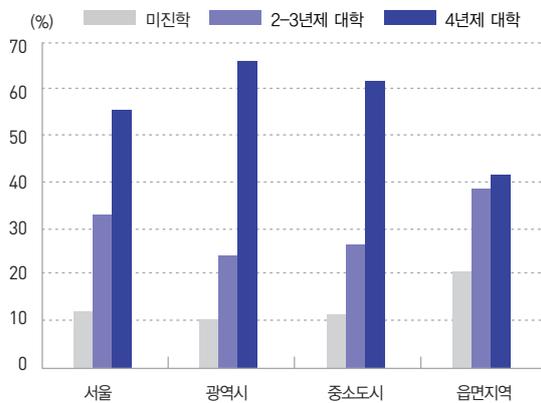
마지막으로, 월소득이 5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층의 경우 2-3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이 13.8%로 모든 집단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77.8%로 가장 높았다. 그런데 이 집단에서는 미진학자 비율이 월소득 351-500만 원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결과는 고소득층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중에는 위세가 낮은 2-3년제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미진학자로 남은 상태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아 초래된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 진학에서의 지역 차이

앞서 고등학교 진학 양상에서 도농 간에 가시적인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상은 대학 진학 단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서울, 광역시, 중소도시 등 도시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III-21] 지역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8.

먼저 미진학자 비율이 도시지역에서는 10-12% 수준에 그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0.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에 비해 고등교육 접근기회가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3년제 대학 진학자의 경우에는 읍면지역과 서울이 각각 38.4% 및 32.8%로 30%를 상회한 반면,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각각 23.9% 및 26.7%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진학자 비율은 광역시에서 66.1%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 62.0%, 서울 55.2%, 읍면지역 4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울 학생들이 광역시나 중소도시 학생들에 비해 4년제 대학 진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일부 서울 학생들은 지방의 4년제 대학 진학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2-3년제 대학 진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4년제 대학이 가장 지배적인 대학 진학 유형으로 나타난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2-3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엇비슷한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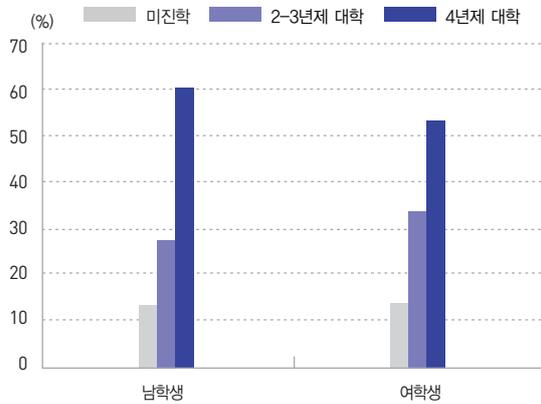
대학 진학에서의 성별 차이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가정의 경제형편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던 교육투자 양상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면서, 남녀 간 교육성취도 급속히 수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진학 여부를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진학한 학교의 위세까지 고려하게 되면, 여전히 남녀 간에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점검해보고자 성별에 따른 대학 진학 유형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학 진학 여부의 경우, 미진학 비율이 남학생 13.0%, 여학생 13.5%로 나타나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남녀 간에 고등교육 접근기회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학한 대학의 유형을 고려하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2-3년제 대학 진학자가 27.0%, 4년제 대학 진학자가 60.0%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2-3년제 대학 진

[그림 III-22] 성별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진학비율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 원자료, 2004-2008.

학자 33.3%, 4년제 대학 진학자 53.1%로 두 집단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2-3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더 높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더 낮은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에 비해 여학생들의 고등교육기회가 크게 확대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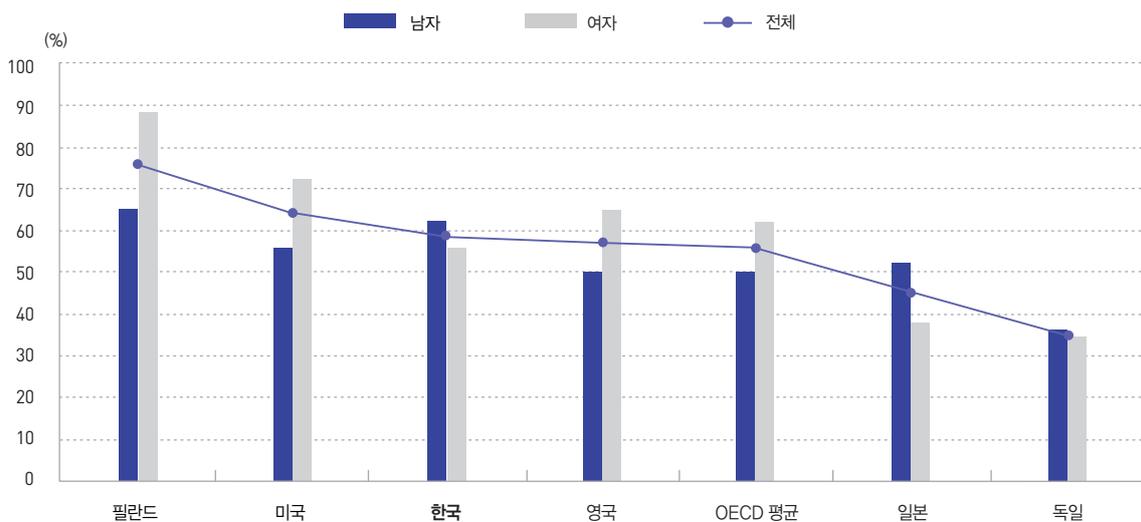
은 사실이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진학하는 학교의 유형과 위세에서는 여전히 남학생들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고등교육진학률에 있어서 성차에 관한 국제비교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에서 목도되는 고등교육기회의 남녀 간 차이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고등교육 진학률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III-23]에 제시되어 있다.

OECD에서는 고등교육기관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등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과, 학문적 성격이 강하고 상급 교육과정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 일반대학원 및 대학원의 석사과정, 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 가운데 후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진학률

[그림 III-2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고등교육 진학률: 2006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8: OECD Indicators*(<http://www.oecd.org/edu/eag2008>), 2008.

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이 갖는 차별성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등을 고려할 때, 후자의 유형이 고등교육의 특성을 보다 잘 대변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고등교육 진학률에서의 성차를 살펴보면, 아시아권 국가들과 구미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상이한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우 학문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전체적으로 59%를 보이는 가운데, 남학생 62%, 여학생 56%로 약 6%p 가량의 진학률 격차가 있었다. 이러한 남성 우위 성차는 일본에서도 관찰되었다. 단, 일본의 경우에는 남학생의 진학률은 52%인데 비해 여학생은 38%로 두 집단 간에 14%p라는 상당히 큰 격차가 목도되었다.

그러나 미국, 영국, 핀란드 등과 같은 구미 국가들에서는 이 같은 남성 우위 현상이 역전되어, 여학생이 오히려 남학생보다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서는 남학생의 진학률은 56%를 나타낸 반면, 여학생은 72%로 약 16%p 더 높은 진학률을 보여준다. 영국 역시 남학생 50%, 여학생 65%로

유사한 수준의 성별 차이를 드러냈다. 학문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이 76%로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핀란드의 경우에는 이 같은 차이가 더욱 두드러져, 남학생의 진학률은 65% 수준에 그친 반면, 여학생은 88%로 남학생보다 23%p 더 높은 진학률을 보였다. OECD 전체 평균 역시 남학생 50%, 여학생 62%로 여학생이 더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술한 결과는 구미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학문 중심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에서 여학생들이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 단계에서는 진학률 및 진학 유형에서 남녀 간 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반면, 대학 진학 단계에서는 이 같은 격차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련의 교육선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 단계라 할 수 있는 대학 진학에서 여전히 여성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사회문화적 유산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참고문헌

- 김경근·변수용. 2006. "한국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김경근 (고려대학교)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요 약

- 대학 전공별 배출인력의 분포가 노동시장의 구조와 잘 부합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전공별로 취업률과 하향취업률 및 전공취업률이 크게 상이하며, 특정 전공의 취업성적이 매우 부진하다는 통계로 확인된다.
- 대학 전공별로는 의약계열의 취업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취업 성과가 가장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장 구조와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3.8%(2008년)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대학 진학률만큼 대학이 우리 사회, 특히 우리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대학교육의 경제사회 요구 부합도’에서 우리나라는 55개국 중 51위로 최하 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회의적 시각을 지지해주고 있다.

이는 그간의 대학교육이 공급자 위주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밀어내기식 대학교육으로 인해 대학교육 및 졸업자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만족도는 낮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요구 간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해 청년층 실업 문제의 근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시장 구조와 대학교육 간의 이러한 불일치 문제를, 대학 전공별 취업률, 하향취업자 비율, 전공취업자 비율 등 몇 가지 취업 관련 지표를 통해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학 전공은 인문, 사회, 교육, 공학, 자연, 의약, 예체능 등 7개 계열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전공별 취업률의 차이

같은 대학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요구가 높은 전공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전공자에 비해 취업률이 높을 것이므로, 대학 전공별 취업률의 차이는 대학에서의 배출인력과 노동시장 구조의 부합 정도를 보여줄 수 있다. 여기에서의 취업률은 보통 진학자나 입대자를 제외한 졸업생 중 취업자의 비율로 정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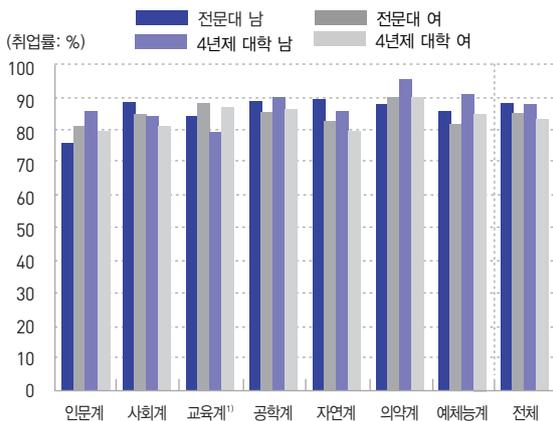
2004년 8월과 2005년 2월 대졸자의 2006년 10-12월 시점에서의 취업률을 보면, [그림 III-24]와 같다. 남자 4년제 대졸자의 경우,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94.6%로 가장 높고, 공학계열이나 예체능계열도 90%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취업률이 가장 낮은 전공은 교육계열로, 79.2%에 불과하다. 의약계열과 비교 시 10%p 정도 취업률이 떨어진다. 여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상황은 대체로 유사하다.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고,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의 취업률도 높은 편이다. 다만 남자 졸업생과 달리 교육

계열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남자는 자연계열, 공학계열, 사회계열,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여자의 경우에는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높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학유형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의약계열이나 공학계열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구조와 부합하는 측면이 강한 반면, 노동시장의 요구에 비해 인문사회계열 졸업생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졸업 후 시간이 지나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III-25]는 앞서 언급한 2004년 8월 및 2005년 2월 대학 졸업생의 2007년 9-12월 시점에서의 대학 전공별 취업 상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그림 III-24]보다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의 취업 상태이다.

남자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여전히 의약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 4년제 대학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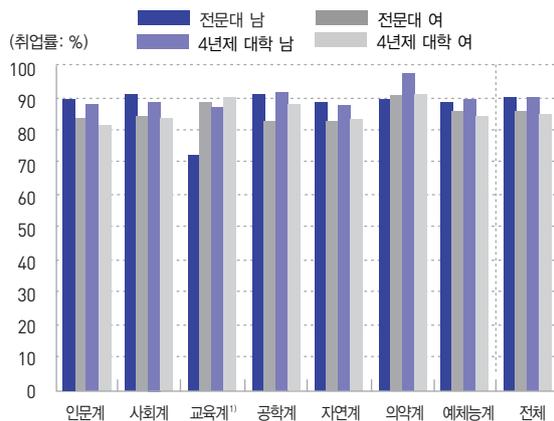
[그림 III-24] 대학전공 및 성별 취업률: 2006



주: 1) 전문대 남자의 경우, 조사된 졸업생이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

[그림 III-25] 대학전공 및 성별 취업률: 2007



주: 1) 전문대 남자의 경우, 조사된 졸업생이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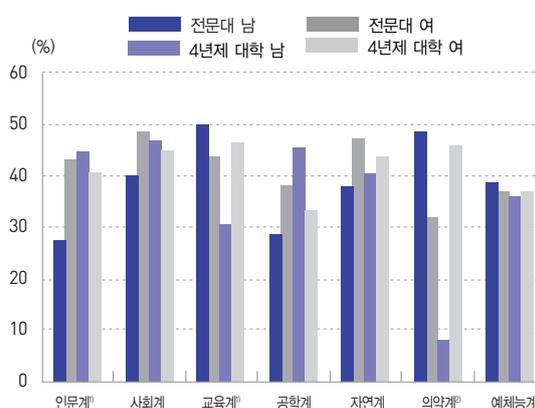
생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가장 높게 나오는 등 1년 전과 거의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여자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1년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남자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교육계열을 제외하면 전공계열별로 취업률의 차이를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업률이 낮았던 인문계열 졸업생들도 1년이 더 경과하면서 일자리를 대개 찾아가고 있는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여자 전문대학 졸업생을 제외하고 1년 전에 비해 취업률이 2%p 내외 상승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일부 전공계열(4년제 대학의 경우 예체능계열, 여자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대체로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이는 수급불일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되어 갈 것이라는 통상적인 기대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인문계열 졸업생이어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대학 때의 전공과는 다른 훈련 등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취업자의 비율이 10~15%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청년층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이직이 잦은 편이다. 이는 이직에 따른 비용이 중장년층에 비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칭이 잘된 일자리로 취업함으로써 향후 얻게 될 편익은 훨씬 크기 때문이다. 만약 미취업이 이직과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적지 않은 미취업률이 특정 그룹 청년층의 장기 미취업에 따른 결과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실제 통계를 보면 2006년 미취업

자 중 군입대나 진학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7년에도 미취업 상태에 있었던 대졸 청년층의 비중은 30~50%에 달한다. 이들 청년층의 경우 장기간 미취업 상태에 있을 위험성이 높은 계층이다. 이들의 경우 향후에도 미취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 초점을 맞춘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실업탈출 지원 대책이 요청된다.

[그림 III-26] 2006년 미취업자 중 2007년에도 미취업인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비율



주: 1) 전문대 남자의 경우, 2006년 미취업자가 30명 미만이라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2) 전문대 남자와 4년제 대학 남자의 경우, 2006년 미취업자가 30명 미만이라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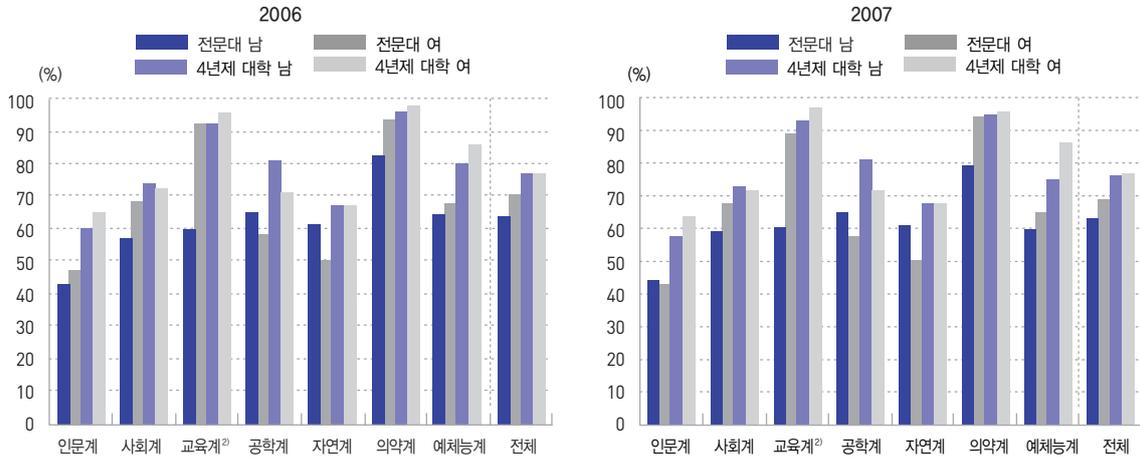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 2007.

전공취업

만약 노동시장의 요구에 비해 특정 전공자의 배출이 과잉일 경우 일부 전공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른 전공 분야로 취업하거나 또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낮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취업해야 하는 상황을 감수해야만 한다. 먼저 대학졸업생의 전공분야 취업 여부를 살펴보면 [그림 III-27]과 같다.

대학유형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의약계열의 경우 전공취업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특히 4년제 대학

[그림 Ⅲ-27]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전공취업비율¹⁾: 2006, 2007



주: 1)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대로 맞다"거나 "이주 잘 맞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전공취업자로, "전혀 맞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비전공취업자로 분류함.

2) 전문대 남자의 경우, 취업자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 2007.

의약계열 졸업생의 경우 취업자의 95% 이상이 동일 전공 분야에 취업한다. 교육계열도 의약계열과 유사하게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높다.

남자 졸업생의 경우 공학계열의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며, 4년제 대학 여자 졸업생의 경우에는 예체능계열의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 전문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는 예체능계열과 더불어 사회계열의 전공분야 취업비율이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다음으로 높은 편이다.

대학유형이나 전공을 불문하고 대체로 인문계열 졸업생의 전공취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남자 전문대학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자연계열 졸업생의 전공 취업 비율도 매우 낮은 편이었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노동시장 구조에 비해 과잉 공급되고 있을 가능성이 다른 전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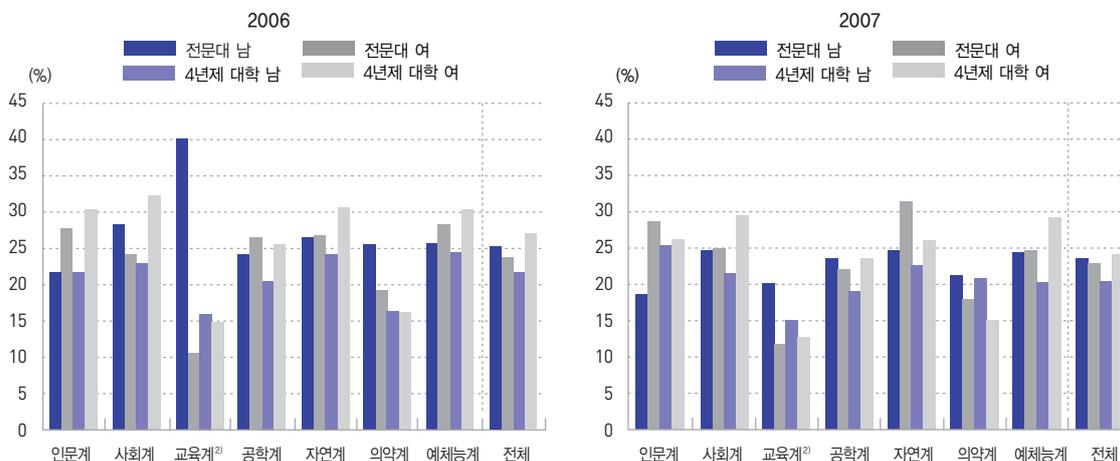
한편, 전공취업 비율은 4년제 대학 졸업생에 비해

전문대학 졸업생이 10%p 내외 낮게 나타나,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전공취업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된다. 4년제 졸업생의 전공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전공교육에 투자한 시간이 많고, 따라서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취업하는 것의 기회비용도 그만큼 클 것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학유형이나 성별을 불문하고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취업자 중 전공취업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취업률 자체는 소폭이나마 높아지고 있지만, 구인, 구직 간의 매칭의 질적 측면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하향취업

전공별 하향취업 비율은 [그림 Ⅲ-28]에 제시되어 있다. 하향취업자의 비율은 교육계열과 의약계열의

[그림 III-28]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하향취업비율¹⁾: 2006, 2007

주: 1)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경우에 하향취업자로 분류함.

2) 전문대 남자의 경우, 취업자가 30명 미만이어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 2007.

경우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문대학 남자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열과의 하향취업 비율의 격차가 매우 큰 편이다.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에는 교육계열이나 의약계열 다음으로 공학계열의 하향취업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졸업 이후의 시간 경과에 따른 하향취업 비율의 변화 추이를 보면, 대학유형이나 남녀를 막론하고 2006년에 비해서는 2007년에 그 비율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러나 그 개선 정도는 매우 제한적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졸업생의 대략 20~27% 정도가 자신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하향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주요국 및 일본과의 비교 결과가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는데, EU 내 주요 국가의 평균 비율이 7%에 불과한데 비해서 우리나라 대졸자의 하향취업비율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경우 하향취업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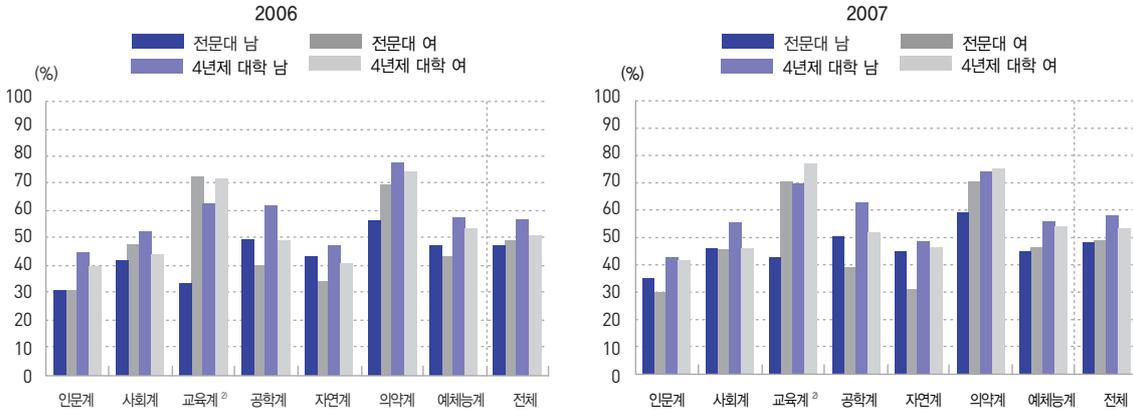
0%이며, 핀란드의 경우에도 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우리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주요 선진국 중 하향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는 영국(18%), 프랑스(15%), 일본(14%) 정도이다. 노동시장의 인력수요구조에 비해 대졸 고학력자가 과잉 양성되는 문제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표 III-8〉 주요 국가들의 대졸 하향취업자 비율: 2000

국가	비율(%)
이탈리아	8
스페인	5
프랑스	15
오스트리아	11
덴마크	8
네덜란드	3
영국	18
핀란드	2
스웨덴	0
노르웨이	0
체코	4
EU 11개국 평균	7
일본	14

출처: CHEERS Network, *Careers after Higher Education—a European Research Study*, 2000.

[그림 III-29] 전문대와 대학 졸업자의 성별 교육수준과 전공에 부합하는 일자리 취업자 비율¹⁾: 2006, 2007



주: 1)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과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수준이 알맞다"거나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 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런대로 맞다"거나 "아주 잘 맞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비율임.

2) 전문대 남자의 경우, 취업자가 30명 미만이라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원자료, 2006, 2007.

대학교육 수준과 전공에 부합하는 취업자의 비율

이제 진학자와 입대자를 제외한 전체 졸업생 중에서 하향취업이 아닌, 다시 말해 대학 교육수준에 맞는 일자리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한 졸업생의 비율을 살펴보자.

먼저 4년제 대학의 경우 의약계열과 교육계열 전공자의 취업성적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난다. 졸업생 10명 중 7-8명이 대학교육 수준에도 맞고 자신의 전공에도 맞는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공학계열(10명 중 6명), 여자의 경우 예체능계열(10명 중 5명)의 취업성적이 양호한 편이다. 반면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졸업생의 경우(여자의 경우에는 사회계열도 포함) 10명 중 4명 정도만이 교육수준에 맞고 전공도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의약계열과 교육계열의 취업성적이 가장 좋다. 10명 중 6-7명 정도가 교육수준에도 맞고 자신의 전공에도 부합하는 일자리에 취업하

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남자의 경우 공학계열(10명 중 5명), 여자의 경우 사회계열이나 예체능계열(10명 중 5명)의 취업성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 수준에도 맞고 전공과도 일치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전공계열은 인문계열로 나타났으며(10명 중 3명), 여자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취업성도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10명 중 3명).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대학 졸업생에 비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경우 대학교육 수준 및 전공에 맞는 일자리에 취업해 있는 비율이 높게는 10%p 정도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그 격차는 남자 졸업생의 경우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 및 전공에 맞는 일자리로의 취업성도가 졸업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그 개선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취업성도가 졸업 후 적어도 단기간에는 시간이 경과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장지연 106

청년층 노동시장 · 방하남 117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 방하남 123

노사관계의 변화 · 방하남 129

IV. 노동

Labor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왔고,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직의 비중은 2002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왔다.
- 노동쟁의는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부문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실제 노동강도가 높고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많은 편이다.

노동부문의 주요 동향을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현황, 일자리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노동시장 현황은 다시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의 분포, 임금근로자의 특성 순으로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일자리는 얼마나 될까? 둘째, 취업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을까? 셋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어떠한가? 어떤 근로조건 하에서 일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일자리를 선호하며, 현재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경제활동

소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경제활동참가라고 한다. 2008년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

인구는 2,435만 명인데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61.5%에 해당한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66.0%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2007년 66.2%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97년에 65.5%를 기록한 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0년대 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다시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최근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자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실업률은 전체 경제활동참가자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실업자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고 있고, 일자리가 있으면 곧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실업률 자체는 높지 않은 편이다(그림 IV-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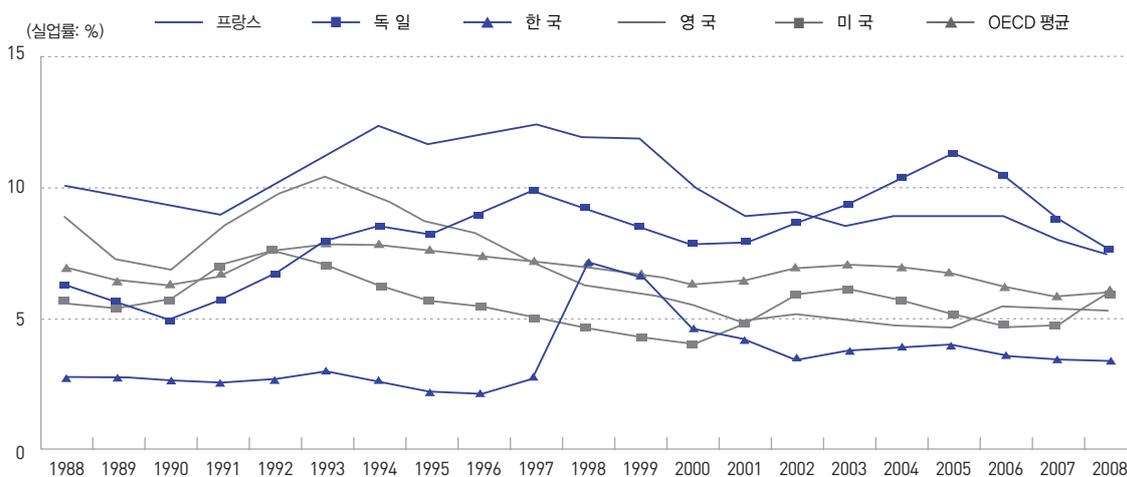
실업률은 그 정의상 노동시장의 고용수준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하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으면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나 청년층의 고용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해 주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2008년에 30세 미만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실업률이 감소한 것이 고용사정이 좋아진 것이라고 선뜻 해석하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이다(표 IV-1).

최근에는 생산활동이 가능한 연령대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인 고용률(employmentrate)이 노동시장 상황의 주요 지표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국가 간 비교에서도 이 지표가 흔히 사용된다. 이 지표를 지칭하는 용어로 '취업률'이 더 적합할 듯 보이지만, 취업률은 지금까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고, 다른 나라에서도 'employment rate'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체 인구 중에서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가리키는 용어로는 '고용률'이 사용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

[그림 IV-1]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률¹⁾: 1988-2008



주: 1) 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Stat: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wbos>), 2009.

〈표 IV-1〉 성 및 연령별 실업률¹⁾: 1988-2008²⁾

	성		연령			전체 (%)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1988	3.0	1.7	5.4	1.5	0.8	2.5
1990	2.9	1.8	5.5	1.4	0.8	2.5
1992	2.8	2.1	5.8	1.3	0.7	2.5
1994	2.8	2.0	5.7	1.5	0.7	2.5
1996	2.4	1.6	4.6	1.3	0.7	2.0
1998	7.8	5.7	12.2	5.6	4.2	7.0
2000	5.0	3.6	8.1	3.6	2.5	4.4
2002	3.7	2.8	7.0	2.5	1.6	3.3
2004	3.9	3.4	8.2	2.7	1.8	3.7
2006	3.8	2.9	7.9	2.7	1.9	3.4
2007	3.7	2.6	7.2	2.6	1.8	3.2
2008	3.6	2.6	7.2	2.6	1.7	3.2

주: 1) 15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함.

2) 2000년 이전 자료는 구직기간 1주 기준 자료이며, 2000년 이후로는 구직기간 4주 기준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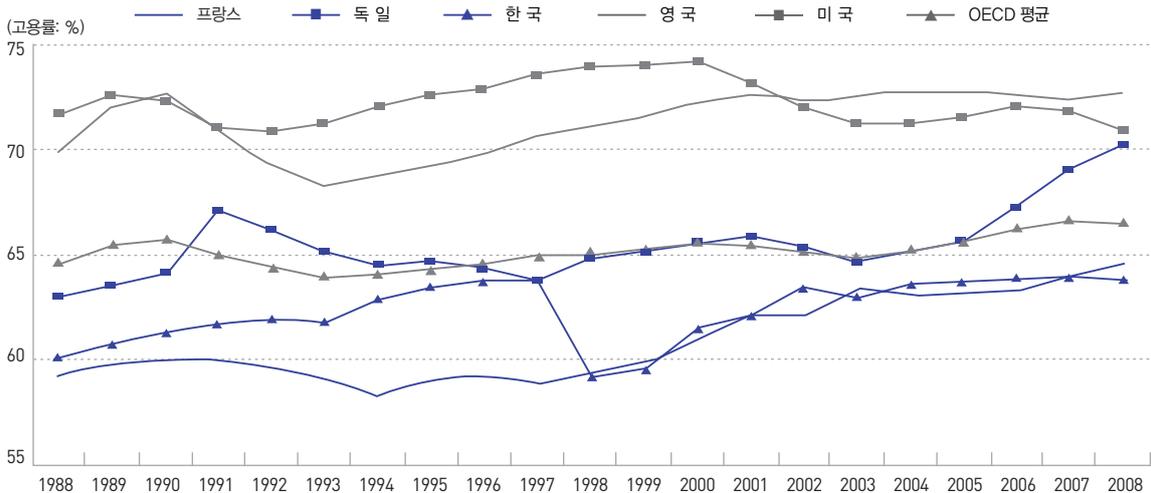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좋지 않은 편이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림

IV-2]에 제시한 5개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은 2007년에 59.8%였고 2008년에도 59.5%를 기록하여 여전히 60% 선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표 IV-2).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41.58%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의 42.64%에 비해서도 1%p 이상 하락한 것이다.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 인구가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의 문제는 학교에 오래 머물거나 취업준비 중인 청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라리 다른 선진국보다는 아직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유희화 현상은 선진국에서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취업해 있는 것도 아니면서 교육이

〈그림 IV-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¹⁾: 1988-2008



주: 1) 15-64세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OECD, Stat: Labour Force Statistics (<http://stats.oecd.org/wbos>), 2009.

〈표 IV-2〉 성 및 연령별 고용률¹⁾: 1988-2008

	성		연령			전체 (%)
	남성	여성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1988	70.7	44.2	42.7	75.2	
1990	71.8	46.2	43.6	75.8	54.3	58.6
1992	73.6	46.1	45.3	75.4	54.8	59.4
1994	74.2	46.9	45.6	76.0	54.6	60.1
1996	74.4	48.1	46.2	76.9	54.4	60.8
1998	69.2	44.4	40.6	72.5	50.5	56.4
2000	70.7	47.0	43.4	74.3	50.8	58.5
2002	72.2	48.4	45.1	75.1	51.8	60.0
2004	72.0	48.3	45.1	74.9	50.7	59.8
2006	71.3	48.8	43.4	75.4	51.6	59.7
2007	71.3	48.9	42.6	75.6	52.6	59.8
2008	70.9	48.7	41.6	75.6	52.6	59.5

주: 1) 15세 이상 연령을 기준으로 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나 훈련에 참가하지도 않고 있는 청년을 가리키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라는 용어가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취업자의 분포

취업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고 있을까? '종사상 지위'는 가장 기초적인 분류기준이다. 우선 크게는 고용되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근로자와 자기 사업을 하는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되는 비임금근로자는 1983년에 전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표 IV-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였고 1990년대

에는 정체수준에 있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비임금근로자의 감소는 주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가 뚜렷하다.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비임금근로자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3〉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의 비율: 1988-2008

	비임금근로자 비율 (%)	비임금 근로자의 종사상지위 구성 (%)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종사자
		1988	43.0	14.1
1990	39.5	16.4	54.7	29.0
1992	37.3	19.3	53.5	27.2
1994	37.1	19.9	53.1	27.1
1996	36.7	21.0	53.6	25.4
1998	38.3	18.2	55.3	26.5
2000	36.8	18.7	56.5	24.8
2002	36.0	20.2	57.3	22.5
2004	34.0	21.9	57.8	20.3
2006	32.8	21.5	59.3	19.3
2007	31.8	20.9	60.1	18.9
2008	31.3	20.7	60.3	19.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IV-3〉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7년 31.8%에 이어 2008년에도 다시 약간 감소하여 31.3%를 기록하였다.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7:3 정도라고 볼 수 있다. 50세 이상 중고령 취업자 중에서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데 비하여 청년층은 8%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남성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26%는 고용주, 69%는 자영업자, 5%는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여성의 경우는 아직도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전체 여성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42%는 무급가족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의 산업별 및 직업별 분포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는 산업구조의 변동을 반영하여 농림어업과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줄어드는 한편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0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농림어업의 비중이 줄어들었음은 물론이고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도 줄어들었다. 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중은 증가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종은 약간 감소하였고, 개인서비스업과 사업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최근 1년 사이에도 계속되었다. 이 짧은 기간 중에도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전기수도, 도소매음식숙박 영역의 종사자는 조금씩 감소

하는 가운데, 그밖에 서비스업종 종사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제조업의 감소와 서비스업의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이 증가하고 농업직이 감소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사람은 32.6%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동안 꾸준히 증가한 전문관리직 종사자는 22.4%이며 사무직은 14.9%이다.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는 23.5%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에 52%에서 2008년에는 69.8%로 증가하였다. 25년 전에는 취업자 10명 중 5명이 임금근로자였는데 지금은 10명 중 7명이 임금근로자라는 뜻이다

〈표 IV-4〉 산업 및 직업별 취업자의 분포: 2000-2008

	산업					직업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 전기수도	도소매 음식숙박	그외 서비스	전문 관리직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	농업직	생산직
2000	10.6	20.4	7.8	27.2	34.1	18.6	11.9	26.0	10.0	33.5
2001	10.0	19.9	7.6	27.2	35.3	19.0	12.4	26.2	9.4	33.0
2002	9.3	19.2	8.1	27.1	36.3	19.2	12.7	26.1	8.9	33.0
2003	8.8	19.1	8.5	26.4	37.1	20.1	14.3	25.2	8.3	32.2
2004	8.1	19.1	8.4	26.0	38.4	20.5	14.1	25.0	7.5	32.8
2005	7.9	18.6	8.2	25.4	39.8	20.9	14.3	24.6	7.5	32.7
2006	7.7	18.1	8.3	24.9	41.1	21.6	14.2	24.1	7.2	32.9
2007	7.4	17.7	8.3	24.4	42.3	22.2	14.1	23.8	6.9	33.0
2008	7.2	17.4	8.1	24.1	43.2	22.4	14.9	23.5	6.7	32.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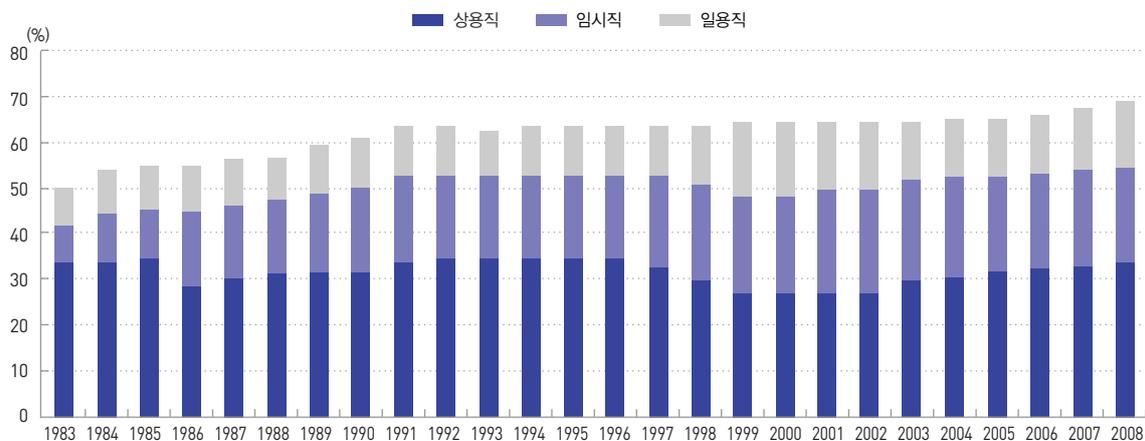
(그림 IV-3). 1983년에 52%의 임금근로자는 34%의 상용직과 9%의 임시직, 9%의 일용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임금근로자는 전체 취업자의 64%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18%까지 늘어난 임시직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전반에 비임금근로자가 줄어든 만큼 임시직 임금근로자가 늘어났다. 경제위기의 여파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된 1999년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과 같은 수준이면서 그 구성은 상용직이 크게 줄어든 대신 임시직과 일용직이 늘어나는 변화를 겪었다. 2003년부터 상용직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취업자 10명 중에서 3.5명이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상태에 이르렀다.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2008년에는 절반이 상용직이고 임시직 33%, 일용직 17%로 구성된다. 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남성 임금근로자는 60%가 상용직인데 비하여, 여성은 62%가 임시직이

나 일용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은 92%가 임금근로자인데 비하여 50세 이상 중·고령층은 절반 정도만이 임금근로자이다. 30-40대 장년층 임금근로자는 57%가 상용직이지만, 청년층과 중·고령층으로 가면 상용직의 비율은 훨씬 줄어든다. 장년층 남성 임금근로자가 주로 상용직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과 청년, 중고령층이 임금노동시장의 주변층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상용, 임시, 일용을 구분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비정규직을 정의하여 그 규모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이다. 임시·일용직의 정의로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안정 고용의 규모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에 주목하여 비정규직 일자리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2004년에 비정규직의 규모는 37%까지 증가하여 조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10%p 이상 증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근로기간을 미리 정하여 계약하는 기간제근로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그림 IV-3]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분포: 1983-200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여 비정규직 증가를 주도하였지만 시간제근로나 특수형태 고용을 포함하는 비전형근로의 비중도 일부 증가하였다.

2004년 이후 2007년까지 비정규직의 규모는 약간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수준에 있었으나, 2008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시적 근로자가 2007년에 비하여 2%p 가량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비중도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가능하다. 하나는 경제 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당초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던 한시적 근로자의 일자리가 먼저 사라지게 되었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본다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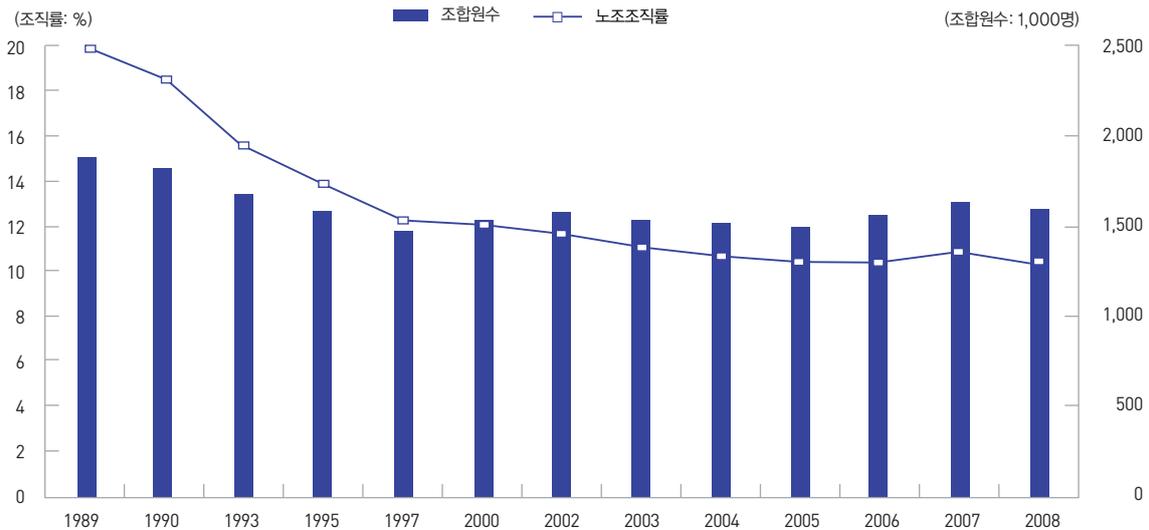
석이다. 이 두 가지 해석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실제로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관계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전체 노동조합 수는 4,886개로 2007년의 5,009개에 비해 4.2% 감소하였고, 조합원 수는 166만 5천 명으로 2007년 168만 7천 명에 비해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0.5%로 2007년 10.8%에 비해 0.3%p 감소하였다(그림 IV-4).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9년 3월 현재 노조 가입률은 12.7%이며 이 중 정규직 가입률은 17.4%, 비정규직 가입률은 3.4%이다. 정규직 조직률은 증가 추세이나 비정규직 조직률은 감소 추세인 특징

[그림 IV-4]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 1989-2008



출처: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이 있다(표 IV-5). 조직몰이 소폭 증가한 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결성, 기업을 넘어선 업종, 직종, 지역 노조의 효과로 보이지만 정규직 중심의 조직화는 여전히 지배적인 추세이다.

〈표 IV-5〉 정규·비정규직별 노조 가입률: 2007, 2008, 2009

	(%)		
	2007 (3월)	2008 (3월)	2009 (3월)
전체	11.3	12.1	12.7
정규직	15.2	16.4	17.4
비정규직	4.7	4.2	3.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각 년도.

다음으로 파업건수와 근로손실 일수를 보면 2008년 현재 노동쟁의 발생건수는 108건이고 근로손실 일수는 809,402일이다. 2006년과 비교하면 근로손실 일수가 상당히 줄었으며(표 IV-6), 1991년 이후 2008년 현재까지 장기 추세에서도 노동쟁의의 감소가 뚜렷하다(그림 IV-5).

이것은 정규직, 대기업 사업장에서의 파업과 산별 파업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2005년과 2006년 지속된 비정규 혹은 영세사업장에서의 장기적인 노동쟁의(예: 이랜드, 코스콤 등)가 2007년 이후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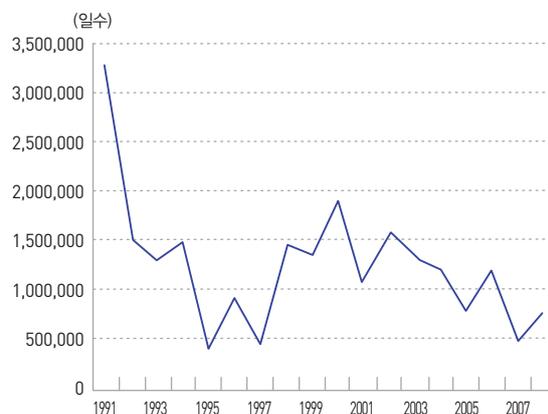
〈표 IV-6〉 파업건수와 근로손실 일수: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파업건수 ¹⁾	138	115	108
근로손실 일수 (1,000일)	1,201	536	809

주: 1) 2006년부터 다수 사업장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하나의 분류로 파악함.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9.

[그림 IV-5] 근로손실 일수: 1991-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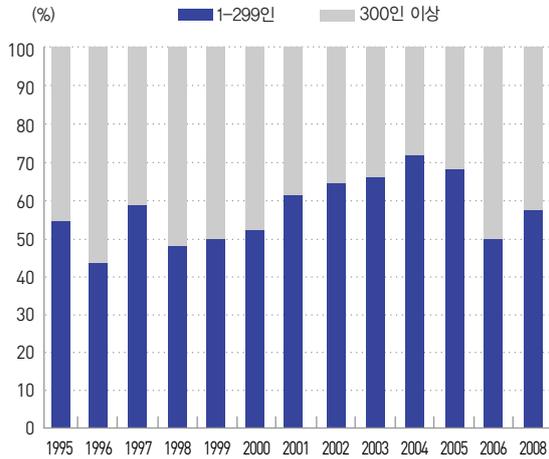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08.1.

해결되거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경제적 변화 역시 노동쟁의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 노동쟁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최근 들어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가 떨어진 것 역시 노동쟁의의 감소에 영향을 준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을 노사관계의 안정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첫째, 구조조정 등 정규직 노동쟁의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이 여전히 숨어 있으며, 둘째, 비정규직 및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고용불안정과 차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이후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동쟁의 발생비중이 늘어난 것은 잠재적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지표라 하겠다(그림 IV-6). 셋째, 산별교섭이 여전히 불안정하고, 넷째, 비정규입법개정과 복수노조허용 및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등의 법제도적 변화에 따라 노사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정규직 중심의

[그림 IV-6] 사업체 규모별 노동쟁의 발생비중 : 1995- 2008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2009.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불안정하며, 구조조정과 산별교섭 그리고 법제도적 변화의 영향으로 노동쟁의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신뢰가 하락하고 정치적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당분간 ‘잠재적 갈등’의 형태로 내연할 것이다.

일자리 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에 대하여 어떤 측면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자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일자리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는 없으나 개인의 만족도나 태도를 살펴보는 것 자체도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인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는 ISSP 2005년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비교 대상 국가의 일자리의 질에 관한 주관적 지표를 제시한다. 비록 동일한 질문들로 조사하였고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설계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주관적 판단은 일자리의 질 자체 뿐 아니라 개별 국가의 사회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른 기대수준의 차이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에 따른 단순한 해석을 피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두 번째로는 일의 재미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표 IV-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일자리 특성별 중요성 평가 점수¹⁾: 2005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안정성	4.6	4.5	4.4	4.5	4.7	4.1
소득	4.4	4.0	3.9	4.0	4.0	3.9
승진가능성	4.4	4.2	3.9	3.9	3.8	2.8
재미	4.5	4.5	4.5	4.7	4.4	4.0
독립성	4.0	4.1	3.9	3.7	4.3	3.1
남을 돕는 일	4.1	4.3	3.9	3.7	3.9	3.7
사회적 기여도	4.2	4.4	3.8	3.8	3.9	3.9
근무시간 유연성	3.8	3.5	3.6	3.7	3.5	3.4

주: 1) 일자리 특성 각각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경우를 최고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5: Work Orientation III Data File v1.0, 2007.

〈표 IV-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자신의 일자리 특성 평가 점수¹⁾: 2005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안정적이다	3.2	3.8	3.7	3.4	3.7	3.7
소득이 높다	2.6	2.7	2.6	2.4	2.6	2.6
승진가능성이 높다	2.7	2.9	2.8	2.2	2.7	2.0
재미가 있다	3.3	4.1	3.8	3.9	4.1	3.6
독립적이다	3.5	4.0	3.9	3.7	4.2	2.8
남을 돕는 일이다	3.6	4.2	3.9	3.7	3.6	3.4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다	3.4	4.1	3.7	3.8	3.8	3.7
내 기술을 향상시킬 기회를 준다	3.2	4.1	3.7	3.6	3.9	3.6

주: 1) 자신의 일자리 특성 각각에 대해 강하게 동의하는 경우를 최고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5: Work Orientation III Data File v1.0*, 2007.

로 나타났다(표 IV-7).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 두 가지가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와 독일에서는 안정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과 승진가능성 역시 중요하게 보는 일자리 특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가 가진 일자리의 특성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대체로 ‘보통’에 해당하는 3점을 전후로 하는 평균점수를 보이고 있다(표 IV-8). “소득이 높다”나 “승진가능성이 높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고, ‘남을 돕는 일’이라거나 ‘독립적인 일’이라는 설명에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정도가 강했다.

소득이나 승진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도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자신의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고 보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9〉는 일자리의 질을 부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살펴본 것이다. 4점 척도를 사용한 것을 감안하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자리에서 지쳐서 퇴근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거나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는 사람의 비율은 그보다는 낮지

〈표 IV-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국민의 자신의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 점수¹⁾: 2005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지쳐서 퇴근한다	3.4	3.4	3.4	3.4	3.3	3.1
육체노동 강도가 높다	3.1	2.5	2.4	2.4	2.4	2.4
스트레스를 느낀다	3.4	3.3	3.2	3.5	3.2	3.1
위험한 근로조건에서 일한다	2.4	2.1	1.8	1.9	1.9	2.0

주: 1) 자신의 일자리 특성 각각에 대해 ‘매우 자주 일어남’을 최고점으로 하는 4점 척도의 평균 점수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5: Work Orientation III Data File v1.0*, 2007.

만,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가 현저하게 더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지표

는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
내고 있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층 노동시장

요 약

- 청년층 노동시장은 지속적인 고학력화와 누적된 공급초과로 인하여 학교졸업 이후 첫 입직까지 평균 약 1년이 소요되며 고용의 안정성과 질도 낮은 편이다.
-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동기간에 유희화율도 높는데 2009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10%가 취업 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 취업자의 반 이상이 취업한 직장의 근로조건 혹은 장래성의 문제로 이직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청년층 노동시장은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학령기에 있는 관계로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진출입이 겹치는 기간에 이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먼저 노동공급의 차원에서 청년층 인구추이와 고학력화 추이를 살펴본 후 최근의 경제활동참여율, 고용·실업률을 연령대별로 알아본다. 아울러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청년층은 어떻게 구직활동을 하고, 첫 입직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첫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근속을 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지, 이직을 했을 경우 이직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청년층 인구 추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은 15세에서 29세 사이 연령층의 인구를 지칭한다. 따라서 청년층은 중등교육이나 고등교육에 재학 중인 학령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졸업자와 중퇴자라고 볼 수 있다.

청년층은 15세부터의 인구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산가능인구 중 가장 젊은 연령층이다. 1980

〈표 IV-10〉 청년층의 연령별 인구: 1970-200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000명)							
15-19세	3,269	4,334	4,520	4,408	4,442	3,897	3,842	3,136
20-24세	2,569	3,074	4,093	4,274	4,342	4,392	3,854	3,743
25-29세	2,335	2,535	3,073	4,098	4,327	4,301	4,353	3,844
합계	8,174	9,944	11,686	12,780	13,111	12,589	12,050	10,723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낮아진 출산율의 영향으로 15-19세, 20-24세 인구는 1995년부터, 25-29세 인구는 2000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다(표 IV-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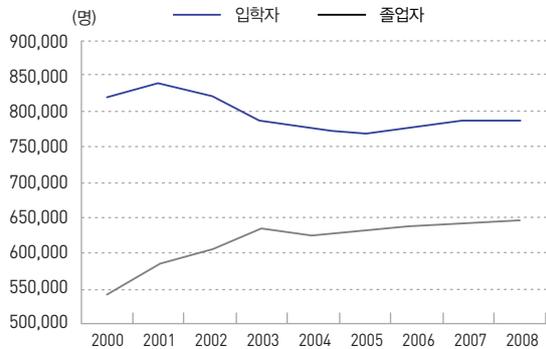
2009년 현재 청년층 인구는 979만 명으로 그 중 49.2%인 482만 명이 졸업 혹은 중퇴를 한 상태이고, 50.7%인 496만 명은 아직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표 IV-11).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청년층 노동력은 고학력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진학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 중 약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은 지난 1990년까지 33% 수준이었으나 2000년에는 68%로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5년 후인 2005년에는 82%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IV-7]에서는 2000년 이후 대학 입학자수 및

졸업자수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대학입학자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청년인구의 감소로 2000년 약 82만 명에서 2008년 79만 명 정도로 줄었지만, 졸업자수는 약 54만 명에서 65만 명으로 늘었다. 일반대학 졸업자수의 증가가 이 증가를 주도했다.

〈그림 IV-7〉 대학(일반, 산업, 전문) 입학자와 졸업자수: 2000-2009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표 IV-11〉 청년층의 졸업/중퇴, 재학, 휴학별 인구수 및 비율: 2009

	전체 인구	졸업/중퇴	재학	휴학	기타
	(1,000명, () 안은 %)				
15-19세	3,276 (100.0)	200 (6.1)	3,025 (92.3)	50 (1.5)	2 (0.1)
20-24세	2,654 (100.0)	1,223 (46.1)	1,026 (38.7)	402 (15.2)	3 (0.1)
25-29세	3,859 (100.0)	3,397 (88.0)	330 (8.5)	130 (3.4)	2 (0.0)
합계	9,789 (100.0)	4,819 (49.2)	4,381 (44.8)	582 (5.9)	7 (0.1)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9.

청년층의 경제활동: 고용 및 실업

청년층의 경제활동참여는 아직 학령기가 진행 중인 24세 이전과 대부분이 학령기를 지난 25세 이후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됨에 따라 고용률은 20-24세의 경우 45.6% 수준이고, 25-29세의 경우는 69.0%로 전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과 비슷한 수준이다(표 IV-12). 재학/휴학 중인 청년층 가운데 고용률은 14.0%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실업률은 청년층 전체로는 7.6%인데 그 중 20-24세 연령층의 실업률이 9.2%로 가장 높다.

청년층의 실업률을 졸업/중퇴자와 재학/휴학자로 나누어 2000년 이후의 추이를 보면 <표 IV-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졸업/중퇴자들의 경우 2007년까지 75%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2008년 들어 7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고 재학/휴학자들의 경우 15%대에서 14%대로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업률은 졸업/중퇴자들의 경우 7%대를 기록하고 있고, 재학/휴학자들의 경우는 6% 내외로 산출된다.

<표 IV-12> 청년층의 연령별 경제활동인구와 고용률 및 실업률: 2009

	전체인구 (1,000명)	경제활동 인구 (1,000명)	취업자 (1,000명)	고용률 (%)	실업률 (%)
15-19세	3,276	184	170	5.2	7.7
20-24세	2,654	1,334	1,211	45.6	9.2
25-29세	3,859	2,858	2,662	69.0	6.9
합계	9,789	4,376	4,042	41.3	7.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9.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 기준)의 고용률(41.3%)과 실업률(7.6%)을 국제비교적 관점에서 보면 고용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실업률은 중간정도의 수준이다(표 IV-14).

인구구성상 학교재학자가 많은 청년층의 경제활동은 학업과 단시간 혹은 단기간 취업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층 인구 중 학교 재학/휴학 기간 동안에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는 38.7%(379만 명)로 나타났으며 취업을 할 경우 대부분 단기간 취업으로 6개월 미만인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생애 첫 정식 일자리로 입직을 하

<표 IV-13>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2002-2009

	청년층 인구(1,000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졸업/중퇴자	재학/휴학자	졸업/중퇴자	재학/휴학자	졸업/중퇴자	재학/휴학자
2002	5,864	4,791	75.0	14.9	6.1	4.9
2003	5,690	4,711	75.5	13.7	7.6	5.1
2004	5,627	4,531	75.8	15.7	7.8	7.6
2005	5,392	4,529	76.2	16.2	7.6	4.6
2006	5,161	4,672	75.7	15.3	7.4	5.7
2007	5,035	4,821	75.7	15.1	7.2	5.8
2008	4,975	4,837	69.8	14.1	7.1	5.7
2009	4,819	4,963	69.5	14.0	7.8	6.5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9.

게 되는 청년층은 일정 기간의 직장탐색 및 구직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며 그 중 상당수는 취업시험 준비 등으로 노동통계상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게 된다.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의 문제는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을 이탈하여 비경제활동인구로 머무는 유희화문제도 심각하다. 비취학 청년층의 미취업률이 높은 것은 실업보다는 무직인데도 실업상태로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는 기간이 길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현재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약 10%가 취업시험 준비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32.2%), 일반 기업체(18.9%) 준비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년층의 구직과 입직

고학력 청년 노동력의 공급은 급증한 반면에 수요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의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노동수요가 전반적으로 축소된 가운데 대학졸업자들의 주 구직대상이 되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점차 경력자 위주의 노동력 수요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1990년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누적되어 온 공급의 과잉과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요의 축소는 생애 첫 직장으로서의 진입을 앞둔 청년층의 노동시장에 심각한 병목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은 선진국에 비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평균연령은 평균 24세 정도이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약 2년 정도 늦은 것으로 고학력화의 진전에 따라 재학기간이 길어진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생애 첫 입직자들은 학교를 마친 후 일자리를 획득하기까지 평균 11-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취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첫 일자리의 이행확률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의 취업확

〈표 IV-1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¹⁾: 2008

(%)

	고용률			실업률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한 국	41.3	40.4	42.2	7.6	8.9	6.4
미 국	51.2	52.3	50.2	12.8	14.4	11.2
일 본	41.4	41.0	41.8	7.2	7.9	6.6
캐나다	59.6	58.9	60.3	11.6	13.1	10.0
호 주	64.3	65.2	63.4	8.9	9.1	8.6
멕시코	48.6	57.9	39.8	6.5	6.2	6.8

주: 1) 한국은 15-29세 기준이고, 그 외 국가들은 15-24세 기준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8; OECD, *OECD, Stat: Labour Force Statistics*(<http://stats.oecd.org>), 2009.

률도 낮고, 임금수준도 낮은 추세를 보여 '적정한 일자리'로의 첫 입직의 어려움이 청년층 노동력의 잠재 실업률과 유희화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기에 경험하게 되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고용의 질은 이후의 근로생애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다 나은 첫 입직을 위한 투자와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다.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고용형태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53.5%는 3개월 이내에 취업하나 전체적으로는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1개월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실태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의 광고'(27.8%), '공개시험'(21.0%)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별로 차이가났다. 고졸 이하는 '가족·친지 소개(추천)(30.8%)' 등 비공식 경로에 의한 취업이 많았고, 대졸 이상은 '공개시험(28.4%)' 등 공식 경로에 의한 취업이 많았다(표 IV-15).

그렇다면 청년층은 첫 취업 후 어느 정도 첫 직장에 머무는가? 임금근로자들의 경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27개월이고 반수 이상(56.6%)이 2년 이내에 첫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일자리로의 취업 이전에 비정규적이고 단속적인 고용형태를 거치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IV-16).

졸업/중퇴 후 취업 유형험자의 첫 일자리 고용형태는 60.7%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이며, 약 36%는 '유기 고용계약이거나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임시직 일자리'에 취

〈표 IV-15〉 교육수준별 졸업/중퇴 청년층의 구직경로: 2009 (%)

	고졸 이하	대졸 이상	전체
가족·친지 소개(추천)	30.8	15.8	20.7
그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15.6	10.6	12.3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6.1	9.0	8.1
신문·잡지·인터넷 등	30.5	26.5	27.8
공개시험	5.9	28.4	21.0
특별채용	3.0	3.9	3.6
그 외 ¹⁾	8.0	5.8	6.6

주: 1)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박람회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9.

〈표 IV-16〉 청년층 임금근로자의 첫 직장 근속기간: 2009

	근로자수(1,000명)	비중(%)
3개월 미만	210	15.8
3-6개월 미만	131	9.8
6개월-1년 미만	145	10.9
1-2년 미만	267	20.1
2-3년 미만	180	13.5
3년 이상	397	29.8
합계	1,329	100.0
평균 근속기간	27개월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9.

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제와 전일제 근무 중 84.5%가 전일제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청년층은 첫 취업 이후 어떤 사유로 이직을 하게 되는가? 졸업/중퇴 후 첫 일자리 이직경험자의 이직사유를 살펴보면, 〈표 IV-1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3.1%)',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표 IV-17〉 청년층 근로자의 첫 직장 이직사유: 2009

	남자	여자	전체 (%)
근로여건 불만족	43.1	43.1	43.1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	15.0	19.3	17.6
전망이 없어서	11.1	8.7	9.7
전공, 지식, 기술, 적성 등이 맞지 않음	5.6	7.2	6.6
직장, 휴업, 폐업, 파산 등	3.8	3.5	3.6
그 외 ¹⁾	21.3	18.2	19.5

주: 1) 회사내 인간관계, 임시적인 일, 일거리 없음, 계약만료 등이 포함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청년·고령층)』, 2009.

등)(17.6%) , ‘전망이 없어서(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첫 취업자의 반 이상이 취업한 직장의 근로여

건 혹은 장래성의 문제(근로여건 불만족, 전망이 없어서)로 이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요 약

- 우리나라 실업자들은 2008년 현재 60% 이상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의 구직자들이며 6개월 이상 장기 구직자의 비율은 약 10%이다.
- '1년전 취업유경험 실업자'로 장기실업자를 측정할 경우(통계청 기준), 장기실업의 비중은 20%에 근접하고 있으며 특히 20대 남성, 4년제 대졸 출신 고학력자들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실업자 중 약 40%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만 장기실업자에 대한 보호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업자는 조사가 실시된 시점 이전 4주 동안에 1) 직장이 없고(without work), 2)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3)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seeking work) 개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실업은 장기와 단기실업으로 구분하는데 장기실업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는 경우이나 어떤 국가에서는 12개월 이상을 장기실업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장기실업의 추이와 특성을 개관해보고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인 실업급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기실업의 추이 및 특징

실업상태가 유지되는 기간은 실업자의 구직기간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측정되는 우리나라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6개월이다. 이러한 구직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으로서 장기실업자 비율

의 국제비교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남성의 경우 12% 내외이며, 여성의 경우에는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국제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비율은 뉴질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등과 함께 아주 낮은 그룹에 속한다. OECD 국가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평균 비율은 42.3%로 우리나라에 비해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OECD, 2009).

[그림 IV-8]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 2000-2008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우리나라 실업자의 구직기간은 대부분 3개월 이내로 남성의 경우 72%, 여성의 경우 78%가 3개월 이내의 구직기간을 갖는다. 남성의 경우 연령과 장기실업의 비중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장기실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학력과 장기실업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발견되는 데 남녀 공히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장기구직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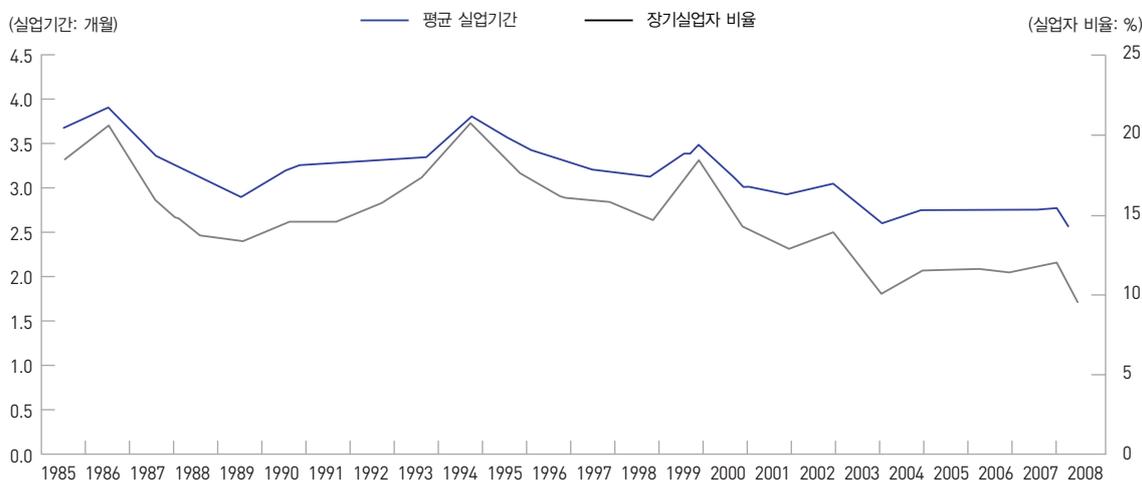
구직기간이 곧 실업 이후 재취업을 하는 기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직기간 이후 실업자는 재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다. 재취업을 할 경우 구직기간이 곧 실업기간이지만, 실망이나 구직포기 등으로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간의 이동을 반복하게 될 경우 실질적인 실업기간은 더 길어지게 된다.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장기실업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1년 이전 취업유경험 실업자’(직장을 그만 둔 지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로 장기실업자를 측정하고 있으며 2006년 기준 그러한 기준으로 파악된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8%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2004년 16%대, 2005년 19%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 4년제 대졸 출신 고학력자들 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집중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장기실업자 비중의 추세를 살펴보면, [그림 IV-9]에서 보는 것처럼 1986년의 경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가 전체 실업자 중에서 20%를 넘었으며, 12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도 5% 이상이었다. 경기호황과 함께 1980년대 후반에 큰 폭으로 장기실업자 비중이 하락했으나, 1990년대 초 불황과 함께 다시 증가하였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대폭 증가했지만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크게 하락하였고, 2004년 이후 11% 내외에서 안정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8년에는 9.8%로 하락하였다.

그렇다면 그만큼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의 전환이 점점 더 빠르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일정기간 관측된 장기실업자의 비중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실업 → (재)취업’으로의 전환확률과 ‘실업 → 비경제활동’으로의 전환(구직단념자)확률이다. 양측 확률 중 어느 쪽이 더 증가하더라도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줄어들게

[그림 IV-9] 평균 실업기간과 장기실업자 비율¹⁾: 1985-2008

주: 1)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비율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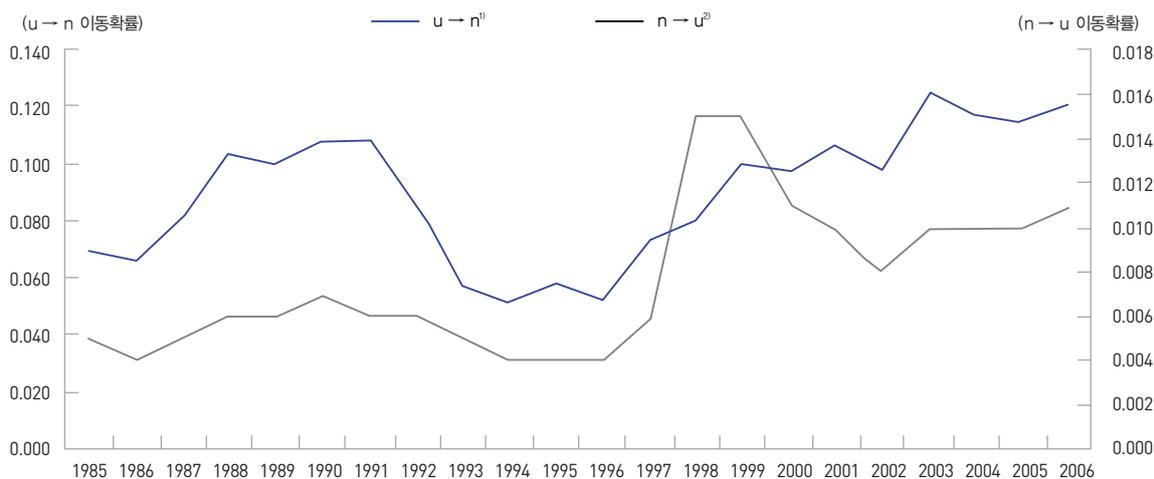
되지만, 후자의 확률이 더 증가하는 경우 구직단념에 의한 장기실업자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0]은 실업자가 한 달 후에 구직활동을 중

단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변화할 확률을 보여주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확률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6%대에 머물던 '실업 → 비

[그림 IV-10]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 간 이동확률: 1985-2006



주: 1) $u \rightarrow n$ 은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이동확률을 의미함.

2) $n \rightarrow u$ 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실업상태로의 이동확률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년도.

경제활동' 전환확률이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대 초에는 12%대로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간 장기실업자의 감소가 비경제활동상태로 빠져 나가는 구직단념자의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큰 것임을 말해준다.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보장

적용대상

우리나라는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으로 1995년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림 IV-11]은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최근까지의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를 보여준다. 제도도입 직후인 1996년에는 임금근로자의 약 33%가 적용되었지만 2008년 현재 그 비율은 58%로 상승하였다. 이는 그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적용을 확대해 온 데 힘입은 바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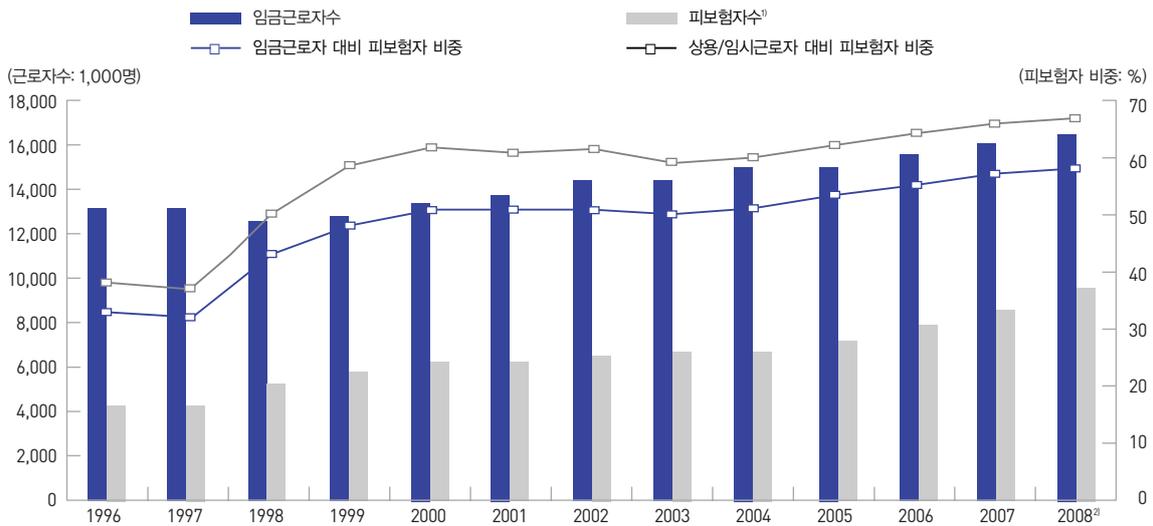
실업급여제도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안정과 재취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이다. 이 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 차등 지급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장지급이 가능하다.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급여기초일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급여의 상한은 1일 40,000원이다. 단 산정된 급여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구직급여일액으로 하고 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고려할 경우 <표 IV-18>에

[그림 IV-11] 임금근로자와 상용·임시직 근로자 대비 고용보험 적용률: 1996-2008



주: 1) 피보험자수는 상용직 근로자만 고려함.

2) 2008년은 잠정치임.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IV-18〉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2008

	30세 미만	30-50세 미만	50세 이상
1년 미만	90일	90일	90일
1-3년 미만	90일	120일	150일
3-5년 미만	120일	150일	180일
5-10년 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 이상	180일	210일	24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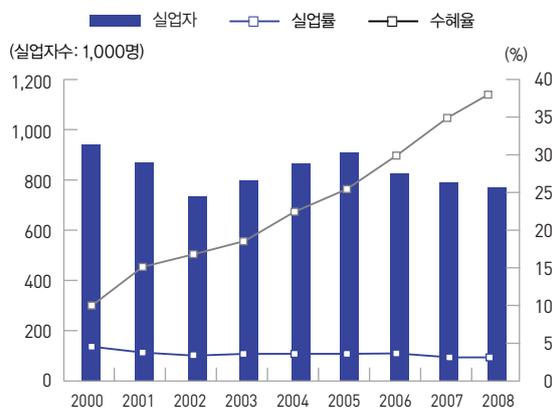
출처: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8.

제시된 바대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그리고 50세 이상이 3년 이상 피보험기간을 확보한 경우와 30-49세가 5년 이상 피보험가입기간을 확보한 경우 정의상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150일 이하의 중·단기 실업기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한계가 있다. 물론 구직급여를 소진한 경우 연장급여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미미하여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보호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급여 수혜율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적용 범위의 확대와 실질 혜택을 제고 정책 등에 힘입어 실업급여의 실질 수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그림 IV-12). 2000년에만 해도 10% 미만에 지나지 않던 수혜율이 2004년에는 2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07년에는 다시 약 35%로 증가하였다.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는 약 77만 명이며, 실업급여 수혜자수는 약 31만 명으로 집계되어 실업급여 수혜율은 39.6%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실업부조를 실행하는 다른 선진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비율이지만, 실업보험만을

[그림 IV-12] 실업률 및 실업급여 수혜율¹⁾: 2000-2008

주: 1) 수혜율=(실업급여 지급자수÷실업자수)×100.

출처: 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08.

실시하는 미국(2004년 36%)이나 일본(2001년 31.7%)과 비교하면 근접한 수준이다. 실업에 대한 사회적 보장의 수준과 정도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과 급여액(소득대체율)이 중요한 변수이다. 이중 실업급여액은 실직 전 임금의 50%로 설정되어 있으나 소득상한선이 있어서 상한선 이상의 소득자들은 50% 미만의 소득대체율을 보장받고 있다. 실업급여의 실질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한국은 36%로 선진국들의 중간 정도의 수준이지만 급여수급률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과 함께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하고 있다(표 IV-19).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이유는 첫째, 전체 취업자에서 피보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둘째, 수급자격 요건, 특히 이직사유가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이 매우 엄격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자나 징계해고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만, 외국에서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표 IV-19〉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수급률과 임금대체율: 2004 (%)

	실업급여 수급률	임금대체율 ¹⁾
호주	95	29
뉴질랜드	114	32
오스트리아	132	34
프랑스	82	53
독일	76	48
아일랜드	142	27
네덜란드	143	58
포르투갈	77	47
영국	85	18
덴마크	103	51
캐나다	60	45
미국	34	34
일본	38	39
한국 ²⁾	36	36

주: 1) 임금대체율은 전국 평균 주당 임금 대비 평균 주당 급여액의 비율임.

2) 한국은 추정치임.

출처: Vroman, W. and V. Brusentsev(2005), *Unemployment Compensation Throughout the World: A Comparative Analysis*,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p.65.

이를 감안할 때 평균적인 소정급여일수가 외국에 비해 짧아 통계상 수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2007년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평균 수급일수는 약 120일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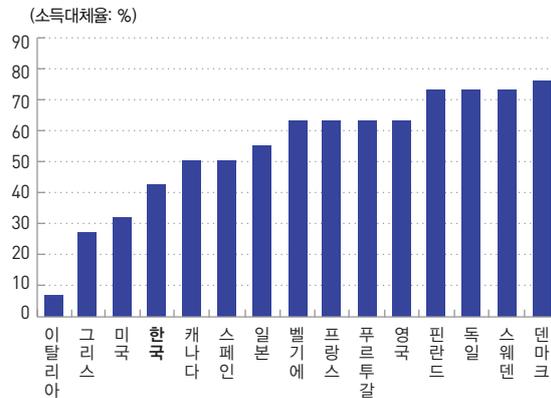
실업급여 기간 및 소득대체율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데 반해, 영국 등 복지선진국들의 경우는 실업부조제도가 있어서 보험료에 기반한 구직급여(Job Seekers' Allowance)가 소진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소득기준 실업부조를 통해 실업급여

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히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해당 실업자는 뉴딜(New Deal) 프로그램 하에 재취업과 자립을 위한 특별 고용서비스를 받게 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장의 정도는 실업보험의 포괄범위, 즉 실질 혜택을 뿐만 아니라 소득보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가구주의 실직 전 순가구소득 대비 실직 후 순가구소득의 비율)의 포함여부도 중요한 변수이다. 우리나라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그림 IV-13]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들의 경우는 70%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미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 시장주의 전통이 강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최소 5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실업급여 및 부조 소득대체율: 2004



주: 1) 소득대체율=(실직 후 순가구소득 ÷ 실직 전 순가구소득)×100.

출처: OECD, *Society at a Glance 2006 - OECD Social Indicators* (<http://www.oecd.org/els/social/indicators/SAG>), 2006.

참고문헌

- OECD. 2009. *OECD Factbook 2009 :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노사관계의 변화

요 약

- 노조조직률은 1987-1988년에는 거의 20%에 이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10%를 유지하고 있다.
- 최근에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 모두 줄어들어 전체 노사관계의 외형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국민여론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이기주의적 조합주의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사회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는 사회통합적 조합주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노사관계는 자본과 노동으로 대별되는 산업사회의 분업구조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통한 집단적인 발언 메커니즘을 대표한다. 노사관계의 동향과 변화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조직도와 단체교섭 적용률, 질적인 측면에서는 노사분규의 빈도와 강도를 통해 그 추이를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노사분규'와 같은 변수들은 국가별로 정의가 상이하어 직접적인 국제비교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단체교섭 적용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별도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 다만 OECD(2004년)에서는 한국의 단체교섭 적용률이 1980년 15%, 1990년 20%, 2000년 10%로 제시된 바 있는데 이는 노조조직률과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체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프랑스의 경우 2000년 노조 조직률이 10%이지만, 단체교섭 적용률은 90%에 이른다)과는 달리 노조조직률과 단체교섭률이 거의 동일한 비중과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산별노조, 지역별노조 등 새로운 형태의 노조가 증가하고 있는데 다 노사관계와 관련된 법과 제도적 환경의 변화가 예

상되고 있어, 향후 이 부문 역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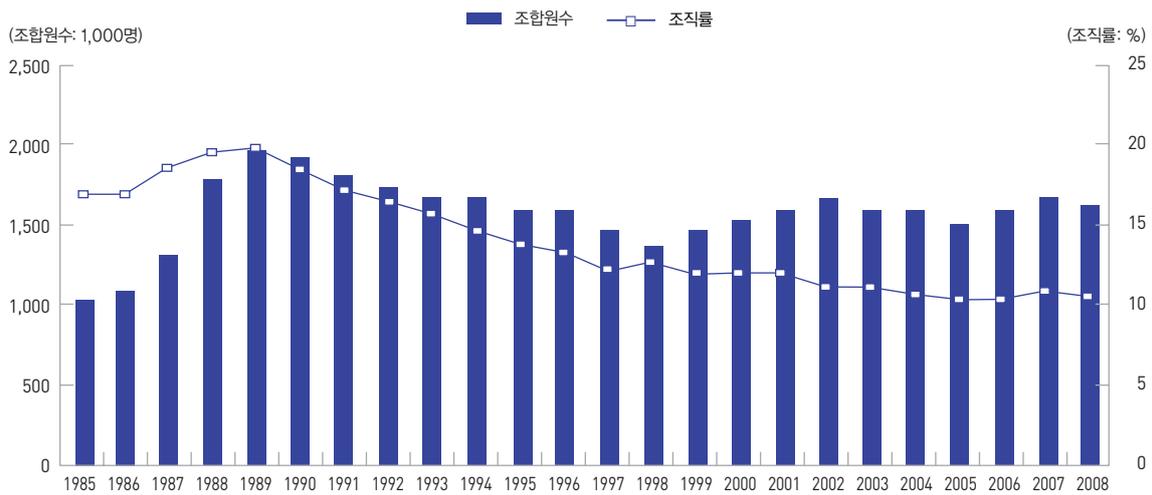
노조조직률

[그림 IV-14]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를 보여준다. 노조의 조직률은 1987-1988년 거의 20%에 이르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약

10%를 유지하고 있다.

노조조직률의 감소는 세계적인 추세로 1990년에서 2007년 사이 일본의 경우 25.2%에서 18.1%로 약 28%, 영국의 경우 38.0%에서 28.0%로 약 26%, 미국의 경우 16.1%에서 12.1%로 약 25% 정도 감소하였다(표 IV-20). 노조조직률에 있어서 감소폭이 가장 큰 나라는 호주로 동 기간 동안 53.7%가 감소하였다. 노동부(2009. 6)에 따르면 2008년 말 현재 노동조

[그림 IV-14] 노조 조합원수와 조직률: 1985-2008



출처: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표 IV-20>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조조직률: 1990, 2007

	한국	일본	호주	독일	미국	영국
1990(%)	18.4	25.2	41.0	37.5	16.1	38.0
2007(%)	10.8	18.1	19.0	22.3 ¹⁾	12.1	28.0
증감(%p) ²⁾	7.6	7.1	22.0	15.2	4.0	10.0
증감률(% ³⁾	41.3	28.2	53.7	40.5	24.8	26.3

주: 1) 2002년 자료임.

2) 1990년 노조조직률에서 2007년 노조조직률을 뺀 수치임.

3) 증감치를 1990년 노조조직률로 나눈 수치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2006;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표 IV-21〉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8

	전 체	50인 미만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조합수	4,886	2,435	826	1,052	229	167	177
구성비율(%)	100.0	49.8	16.9	21.5	4.7	3.4	3.6
조합원수	1,665,798	38,629	59,132	173,603	89,775	114,859	1,189,803
구성비율(%)	100.0	2.3	3.5	10.4	5.4	6.9	71.4

출처: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합 조직률은 10.5%(전체 조합원수 167만 명)로 공무원노조의 제도권 내 진입에 따라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노조조직률의 장기적인 저하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분권화된 조직구조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표 IV-21〉을 보면 2008년 말 현재 조합원수 100인 미만 노동조합이 66.7%(3,26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조합원수는 5.9%(97,761명)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조합원 1,000인 이상인 노동조합수는 3.6%(177개소)에 지나지 않으나 조합원수는 전체의 71.4%(119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과 고용구조 하에서 노동의 조직률도 이를 반영하여 중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조직률이 약 45.4%에 이르는 반면 30인 미만의 소형 사업장에서는 0.2%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조직률이 극명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우

리나라 노사관계는 중소기업 노조의 파편화와 약화, 대기업과 공기업 노조들의 독점주의 증대 등의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다.

노조조직률은 고용형태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 분석결과 비정규 근로자들은 노조가 아예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가입 대상이 되지 못하는 비율도 정규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은 낮은 노조조직률과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동조합을 통한 대화나 단체협상이 어려울 때 노동법에 의해 사업장별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노사협의회는 대안적 대화와 소통을 위한 채널로 존재하고 있다. 2006년 기준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장수는 약 40,000개소로 1998년의 약 26,000개소에 비해 약 53% 가량 증가하였다. 노동연 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WPS)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표 IV-22〉 기업규모별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8

기업규모	30인 미만	30-90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근로자수(명)	9,395,551	3,978,405	1,543,976	1,829,236
조합원수(명)	20,473	94,605	210,342	831,048
조직률(%)	0.2	3.1	13.6	45.4

출처: 노동부, 『노동조합 조직현황』, 2009.

〈표 IV-23〉 고용형태별 노동조합원 현황: 2004, 2005, 2006

	임금근로자	정규	비정규(순계) ¹⁾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소계	기간제	
2004	12.4	16.7	5.2	5.9	4.9	0.5
2005	11.8	15.9	4.6	5.8	6.0	0.2
2006	11.3	15.1	4.3	5.9	5.0	0.4

주: 1) 순계는 각 고용형태별 중복인원을 제외하고 산정한 수치이며, 비정규직 및 비전형근로자 내 유형별 중복으로 규모의 합계는 불일치함.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각 년도.

한 결과에 따르면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52.8%로 절반이 넘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체 규모별로는 노동의 조직률이 높은 대기업 보다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100인 이하 사업장은 약 35%, 500인 이상 사업장은 약 2%).

노사분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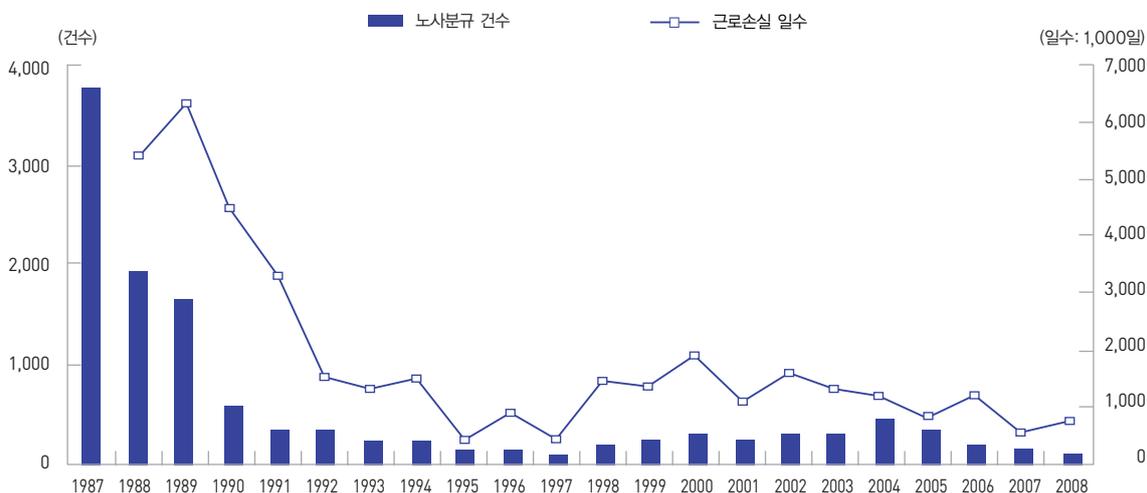
노조조직률이 노동의 조직화 정도를 나타낸다면 노사분규 건수나 그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 통계는 노사관계의 안정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들이다. 노동조직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동권과 노동의 조건에 관한 집단적인 목소리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라면 합리적 절차와 대화를 통해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노사분규 건수나 근로손실 일수 등은 결과적으로는 대화와 소통의 부재 혹은 미흡을 의미하여 노동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IV-15]는 1987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의 장기추이를 보여 준다. 장기추이를 보면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이 격

렬했던 1980년대 후반과 경제위기를 겪고 난 이후인 2000년대 초반에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대립을 상징하는 이러한 통계수준은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표 IV-24).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4년 이후 최근 몇 년간에는 노사분규 발생건수,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 일수 모두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전체 노사관계의 외형은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8년 들어 근로손실 일수가 다소 늘어났는데 이는 상급단체의 총파업 전술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와 같은 정치·사회적 이슈를 둘러싼 노정갈등에 사업장단위 노조가 동원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별중앙교섭 타결 이후 금속노조가 불참사업장에 대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것도 근로손실일수 증가 요인으로 일정하게 기여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륭전자, 코스콤, 이랜드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파견,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관계에서 빚어지는 노사갈등이 기존 노사관계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악성화·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은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정 요소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IV-15] 노사분규 건수와 근로손실 일수: 1987-2008



출처: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년도.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의식¹⁾

노사관계 전반에 관한 인식

우리나라 국민들은 1989년과 2007년 조사에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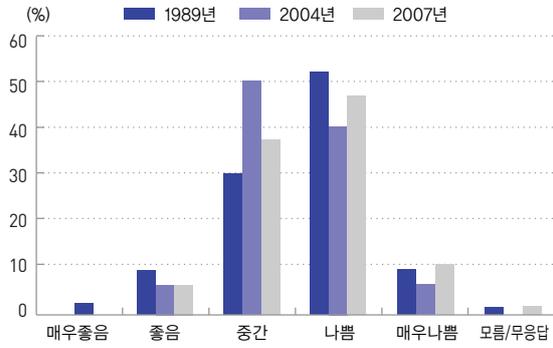
두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황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989년의 경우 “나쁘다”는 의견은 59.9%임에 비해 “좋다”는 의견은 8.4%였다. 2007년

〈표 IV-24〉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노동쟁의 행위에 따른 노동손실 일수: 1995-2007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1995	393	77	548	-	248	627	415	5,771
1996	893	43	929	363	98	61	1,303	4,889
1997	445	110	534	325	53	24	235	4,497
1998	1,452	102	526	309	16	2	282	5,116
1999	1,366	87	651	422	79	79	242	1,996
2000	1,894	35	469	581	11	0.3	499	20,419
2001	1,083	29	393	463	27	11	525	1,151
2002	1,580	12	259	248	310	0.8	1,323	660
2003	1,299	7	439	224	163	628	499	4,077
2004	1,199	4	380	193	51	15	905	1,017
2005	848	1	228	-	19	0.6	224	1,348
2006	1,201	2	133	-	429	2	755	2,688
2007	536	-	50	-	286	14	1,041	1,265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각 년도; ILO, LABORSTA Labour Statistics Database (<http://laborsta.ilo.org>), 2009.

[그림 IV-16]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좋고 나쁨의 응답률: 1989, 2004,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의 경우는 “나쁘다”는 의견은 57.3%임에 비해 “좋다”는 의견은 5.2%에 불과했다. 민주화운동 이후 거의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상황은 개선이나 발전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1989년 조사에서는 약 64%가 ‘타협공존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2007년 조사에서는 약 50%의 국민이 ‘별 변화가 없을 것’, 약 28%는 ‘타협공존할 것’이라고 응답해 과거 20년 전보다 노사관계 발전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현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배경에는 노조를 통한 근로자들의 요구의 정당성과 단체행동 양식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단체협상에서 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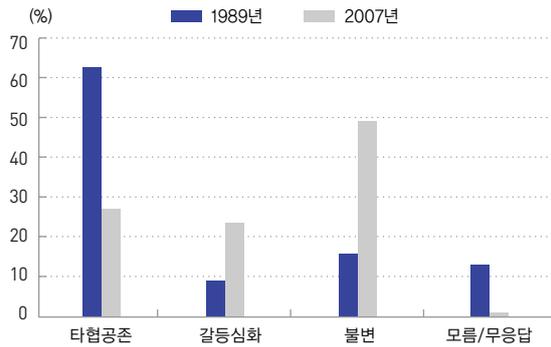
1) 본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7년에 실시한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2008, 김동배·오계택)에 기초하고 있다. 본 조사는 최명·홍두승(1989)의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연구』와 한국노동교육원(2004)의 『국민노동의식 설문조사』와 설문내용을 유사하게 하여 노사관계에 관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추적하고 있다.

들의 요구 내용이 “과도하다”(과도 + 매우 과도)는 의견이 1989년 32.4%에서 2007년 57.1%로 크게 증가했다.

근로자 행동방식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과격하다”(과격 + 매우 과격)고 평가했는데 이 평가는 1989년과 2007년에 큰 차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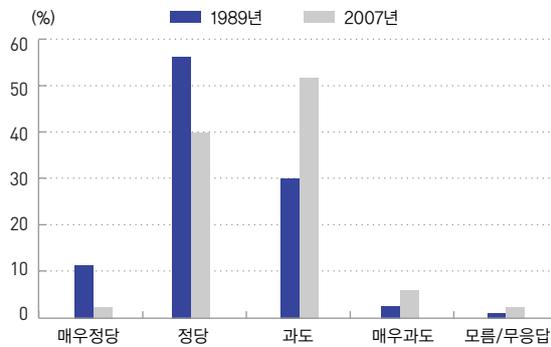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시설 분야의 집단행동은 “절대로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1989년에는 25.9%였지만 2007년에는 50.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근로자들을 정당하게

[그림 IV-17] 향후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타협공존, 갈등심화 및 불변 전망 응답률: 1989,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그림 IV-18] 노동조합 단협 요구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응답률: 1989,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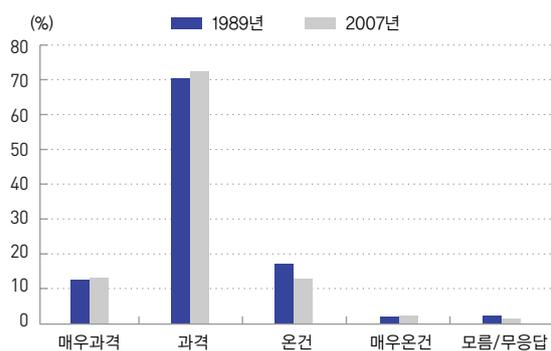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대우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1989년 조사에는 27.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007년에는 54.8%로 긍정응답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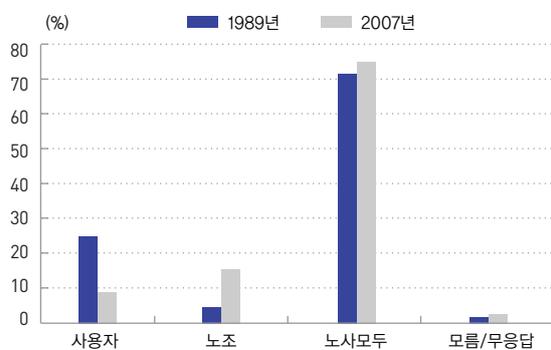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1989년과 2007년 조사 모두에서 “노사 모두에게 노사협상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쌍방과실론 의견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조합 책임이라는 응답이 1989년에는 3.3%에 불과했던 것이 2007년에는 13.4%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IV-20).

[그림 IV-19]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양식의 온건성과 과격성에 대한 응답률: 1989,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그림 IV-20] 노사협상 실패시 사용자와 노조 책임 응답률: 1989,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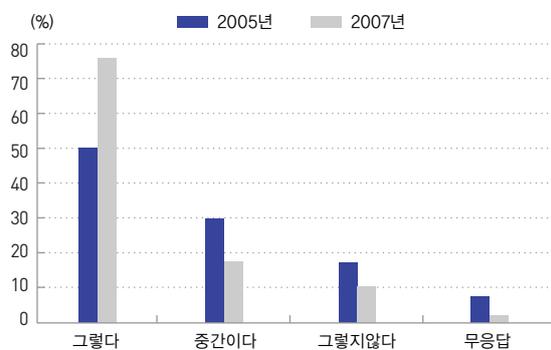
2007년 조사에서 국민의 63.7%가 정부는 기업 편을 든다고 응답한 반면, 노동조합 편을 든다는 의견은 12.7%로 나타났다.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줄어들었지만 이와 동시에 방관하고 있다는 의견이 1989년 35.7%에서 2007년 51.5%로 크게 증가하였다.

노동조합의 효과

우리나라 노조의 투쟁성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5년 『노동패널조사』에서 본 조사와 동일한 질문 및 응답 범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한계가 많지만 이 두 조사를 비교하면 2007년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너무 과격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일반 국민의 75.0%와 임금근로자의 70.1%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2005년 『노동패널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의 약 49%, 임금근로자의 약 47%가 “그렇다”고 응답해 최근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을 거치면서 발생하게

[그림 IV-21] 노동조합의 투쟁성 정도에 대한 응답률¹⁾: 2005,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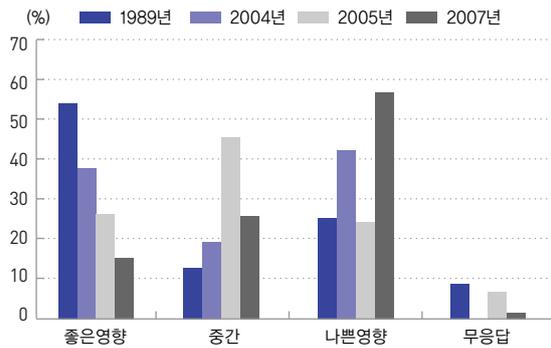
주: 1) “노동조합의 활동이 너무 과격하다”는 진술에 대한 응답임.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된 격렬한 노사분규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1989년에는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부정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은 1989년 53.3%에서 2004년 37.9%, 2005년 25.7%, 2007년 16.0%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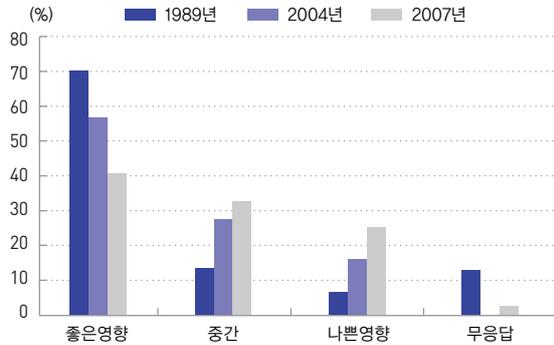
[그림 IV-22] 노동조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응답률: 1989, 2004, 2005,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노동조합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3개 조사 시점 모두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은 앞에서 살펴본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와 유사하다. 노동조합이 사회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임금근로자에 한정해서 살펴보면 1989년 76%, 2004년 56.8%, 2007년 44.9%로 찬성의견의 비중은 일반 국민보다 높지만 감소 추세는 동일하고, 이를 노동조합원에 한정하면 2004년 71.3%, 2007년 55.8%로 두 시기 비교의 한계는 있지만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IV-23] 노동조합의 사회불평등해소 효과에 대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응답률: 1989, 2004,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노동조합의 필요성

이처럼 국민들은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지만 그래도 노동조합은 필요하며²⁾ 앞으로 영향력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아울러 향후 노동조합운동은 경제성장 정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 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그림 IV-24]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필요와 불필요 응답률: 2007



출처: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 국민의식 조사보고서』, 2008.

2) 무노조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만일 노동조합이 생기고 조합 가입자격이 있다면 가입하겠는가?”에 대해 53.0%가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뢰하지도 불신하지도 않지만, 대다수(85.6%)가 노동조합은 “필요하다”(필요 + 꼭 필요)고 생각하고, 향후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의견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까지와 같은 이기주의적 조합주의가 아니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사회제도 개혁에 관심을 두는 사회통합적 조합주의 활동을 해야 한다는 기대도 아울러 표시하였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이현승 140

소득원천별 구성 · 강석훈 148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 이현승 155

자산의 분포와 구성 · 강석훈 162

V. 소득과 소비

Income & Consumption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낮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져 2008년의 가구소득은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었다.
-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소득 지위가 하락하였다. 중장년층 가구와 초등학교 졸업자의 가구소득은 현저하게 하락하였다.
- 근래로 올수록 여성 배우자가 경제활동으로부터 얻는 소득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은 근래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졸 이상의 소득 불만족은 다른 어느 계층보다 두드러지게 상승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는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성장이 가져온 풍요와 낙관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했다. 중산층의 보루로 여겨지던 전문·관리직 직장에서조차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일자리의 불안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죄고 있다. 평균 소득은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지만 삶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살펴본다. 특히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계층간에 삶의 양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집중한다. 평균적인 소득은 꾸준히 상승하였지만 하층과 상층의 소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소득의 차이는 소비의 차이를 낳는다. 소득계층에 따라 소비의 양태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1980년대 이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높아지면서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기

여분이 증가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가구의 소득 양태는 물론 소득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교육수준이 높은 중류층 여성이 다수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과거 저소득 가구 여성의 생계형 취업과는 다른 성격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구 단위로 생계가 꾸려짐으로 가구소득 및 소비를 분석 단위로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매월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는 전국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06년 이후에는 1인 가구까지 포함한 전 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이며, 1인 가구의 경제상황이 2인 이상 가구보다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자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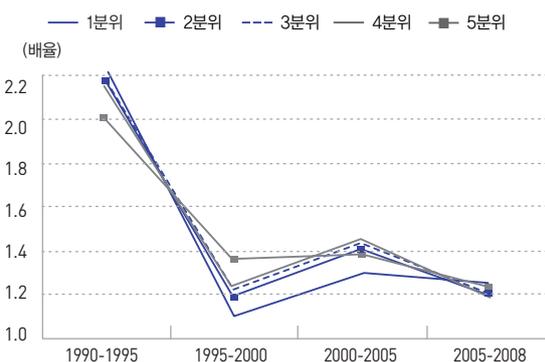
가구소득의 분포와 변화

전국적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 88만 원에서 2008년 399만 원으로 4.5배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였을 때도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1990년 3.7명이던 가구원수가 2005년에는 2.9명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한다면 가구원 1인당 실질소득의 증가는 더 클 것이다.

소득의 증가 속도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또한 모든 계층의 소득이 고르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전체 가구를 소득 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을 1분위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기간별로 각 소득 집단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았다. [그림 V-1]에서 소득 증

가 비율이 모두 1.0을 넘어서는 것은 전 기간에 걸쳐 소득이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외환위기가 닥치기 이전인 1990-1995년에는 5년 동안 명목 소득 기준으로 2.1배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외환위기가 터진 시기인 1995-2000년에는 1.2배로 소득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외환위기를 수습한 이후인 2000년대의 소득 증가율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높으나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다.

[그림 V-1] 소득분위별 소득 증가율¹⁾: 1990-2008



주: 1) 각 시기의 첫 해 대비 마지막 해의 소득 배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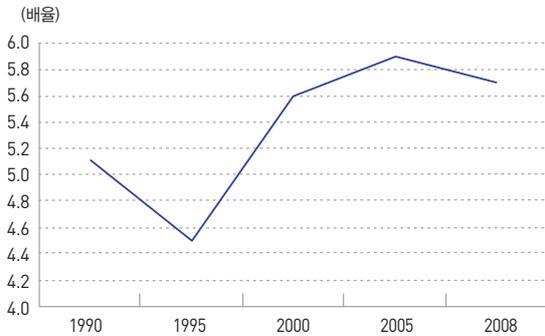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소득의 증가 속도는 계층별로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1990-1995년에는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2.2배로 가장 높았던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2.0배로 가장 낮았다. 반면 외환위기 기간인 1995-2000년에는 이러한 관계가 역전되어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1분위 집단의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부유한 사람의 소득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가장 늦게 증가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

상은 2000-2005년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보인다. 2005-2008년 기간에 계층들 사이의 소득 증가율 격차는 이전과 비교해 크지 않으며, 1분위 계층의 증가율이 다소나마 다른 집단보다 앞서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동안 계층별 소득 증가율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결과, 2008년의 소득 분포는 1990년보다 더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의 5분위 소득은 1분위 소득의 5.1배였으나 2008년에 이 비율은 5.7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V-2]에서 보듯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5년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가장 낮았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도는 이전과 비교하여 훨씬 높아졌다.

[그림 V-2] 소득 불평등도¹⁾: 1990-2008



주: 1) 각 년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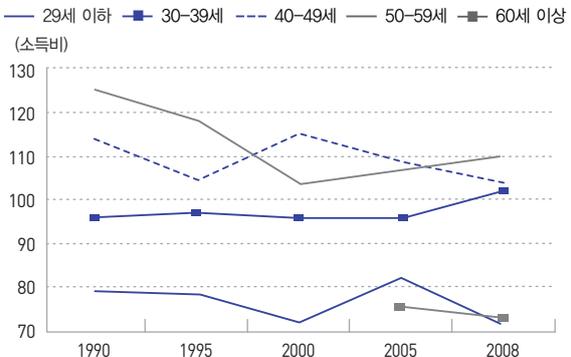
가구주의 특성에 따른 소득의 변화

지난 20년간 계층에 따라 소득의 증가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소득 활동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개

인의 소득획득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인 연령, 교육, 직업을 중심으로 지난 20년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그림 V-3]에서 1997년의 외환위기가 다른 어느 연령대보다 50대 가장의 소득에 가장 큰 타격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0대 가구주의 소득은 1995년 평균의 118%에서 2000년 103%로 불과 5년 사이에 15%p나 하락하였다. 1990년의 소득과 2008년의 소득을 비교할 때, 한창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를 제외하고는 20대, 40대, 50대 모두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덜 버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0년에는 연령집단들 간에 소득의 격차가 컸으나 2008년에는 30대와 50대 사이에 소득의 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림 V-3]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¹⁾: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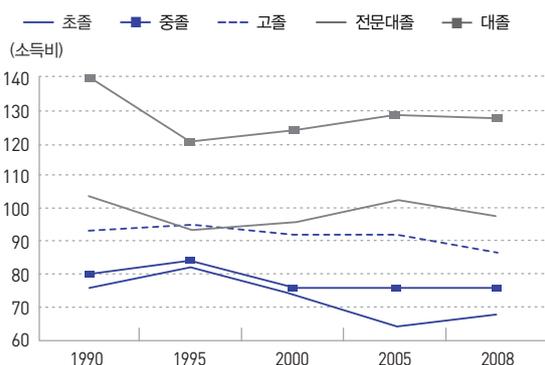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일반적으로 교육수준과 소득은 비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전체 소득과 비교하여 각 교육수준의 소득비율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지난 20년간 교육수준이 낮은 가구주의 소득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반면 교육

수준이 높은 가구는 소득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4).

[그림 V-4]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비¹⁾: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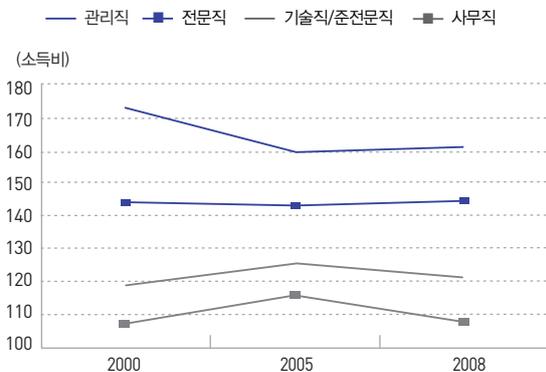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교육수준 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교육수준이 가장 낮은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995년에는 전체 평균소득의 81.6%를 차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에는 73.6%로 현저히 낮아졌다. 이후에도 이들의 소득은 계속 하락하여 2008년에는 전체 평균소득의 67.4%로 추락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대졸 가구의 경우 1995년에는 전체 평균소득의 120.1%를 차지하였는데 이 비율은 계속 높아져 2008년에는 127.1%로 상승하였다.

직업에 따른 소득분포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소득이 가장 많은 관리직의 경우 2000년과 대비하여 근래로 오면서 전체 소득에 대비한 상대적 위치가 하락하였다. 반면 관리직 다음으로 소득이 많은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소득 점유율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근래로 오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식경제로 이전하면서 이들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상을 반영한다(그림 V-5).

[그림 V-5] 중상위소득직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비¹⁾: 200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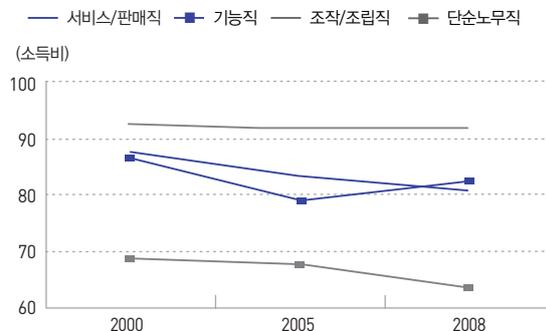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전체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직업의 경우 특히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직 가구의 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그림 V-6). 이렇게 일관된 하락은 이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 것임을 암시한다. 반면 전체 평균보다 소득은 낮지만 어느 정도 직업 기술을 요하며 노조의 보호를 받는 직종인 조작/조립직과 기능직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대 위치에 큰 변화가 없다.

[그림 V-6] 하위소득직 가구주의 직업별 소득비¹⁾: 2000-2008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직업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가구소득의 구성과 변화

가구소득은 소득의 원천에 따라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며, 재산이 있는 가구의 경우 재산소득이, 가난한 가구의 경우 정부로부터 복지급여 등의 이전소득이 있다.

2009년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원천의 비율을 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많은 68.5%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사업소득 21.5%, 이전소득 9.3%, 재산소득 0.6%의 순이다. 그러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각 소득원천의 점유율은 소득 계층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영세자영업자가 밀집한 1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율이 21.6%에 달하는 반면, 행정관리직과 전문직이 많은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은 14.1%에 불과하다.

소득 중간층에 해당하는 2-4분위 계층을 묶어서 1분위 및 5분위 계층과 대비해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그림 V-7).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부유한 5분위 계층

이 가장 낮으며 2-4분위의 중간층이 가장 높다. 중간 계층의 경우 지난 20년간 근로소득의 점유율에 거의 변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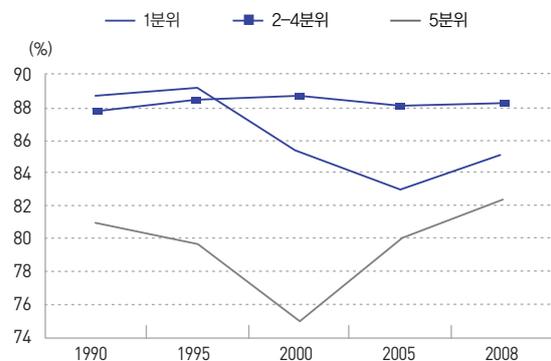
반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근로소득은 총소득의 89%에 달해 2-4분위 소득집단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외환 위기를 거치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급격히 낮아졌다. 이들의 경우 재산소득은 거의 없으므로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이전소득과 부업으로부터의 소득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기혼 여성의 전형적인 역할은 전업 주부였으며 가구의 소득활동은 전적으로 남성 가장 의 몫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여성의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맞벌이 가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가구소득에서 여성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아직 많은 가구의 여성 배우자가 전업주부이며 소득이 되는 활동에 종사한다고 하여도 부분적으로만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남성 가장에 크게 못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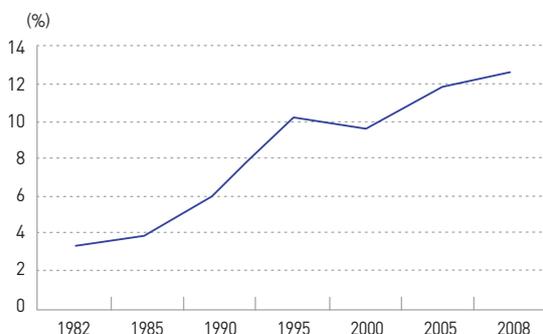
그러나 [그림 V-8]은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1997년의 외환위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2008년 이들의 가구소득 기여도는 12.7%에 불과하지만 그동안의 일관된 상승세로 볼 때 앞으로 비중은 계속 증대할 것이 분명하다.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여성 배우자 소득의 비율은 소득이 높은 가구에서 가장 높은 반면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가장 낮다. 소득계층 간 여성 배우자 소득의 차이는 지난 20년간 더 크게 벌어졌다. 1990년 소득

[그림 V-7]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비중¹⁾: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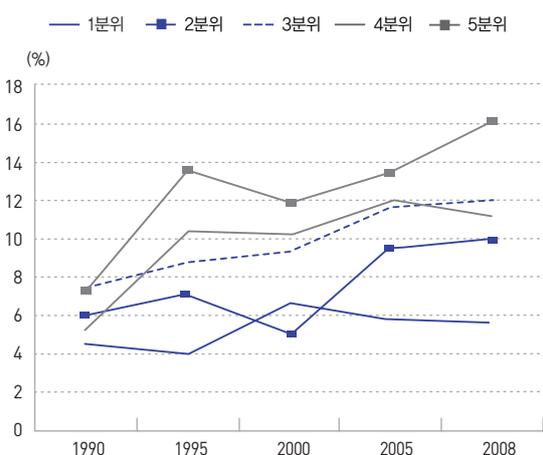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총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V-8]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¹⁾: 1982-2008

주: 1) 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이 높은 가구와 낮은 가구 사이의 격차는 3%p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0.4%p로 벌어졌다. 계층 간 소득의 변화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벌어진 원인으로 여성 배우자 소득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V-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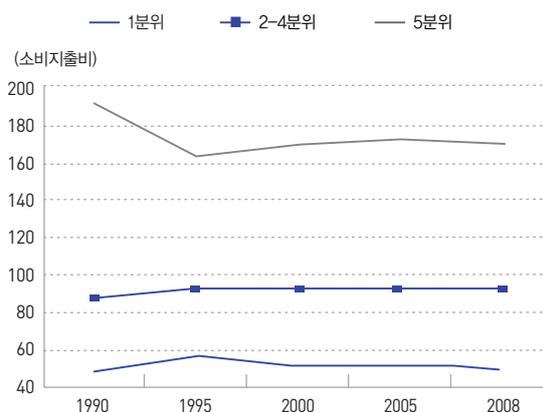
[그림 V-9] 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¹⁾: 1990-2008

주: 1) 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가구지출 및 가계수지의 변화

일반적으로 가구지출은 소득과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 간의 이러한 관계가 모든 계층에서 동일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은 전체 가구의 평균과 비교하여 1990년과 2008년 사이에 49.4%에서 49.8%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경우 소비지출의 비중은 1990년 190.8%에서 2008년 170.1%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5분위 계층이 1분위 계층보다 소득 증가율에서 훨씬 앞섰던 점을 감안하면 의외이다. 이는 저소득자의 경우 더딘 소득 증가때문에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이 어려웠던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빠른 소득 증가에 맞추어 소비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를 덜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2-4분위의 중간 계층의 경우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6%에서 2008년 9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8년 소비지출을 구성하는 항목을 크기순으로 보면 식료

[그림 V-10] 소득분위별 소비지출비¹⁾: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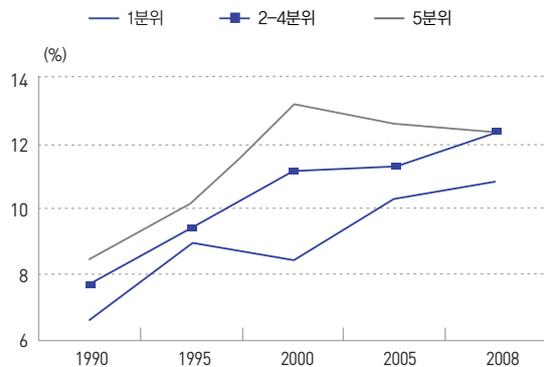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전체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분위 계층의 소비지출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품이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교통·통신 16.8%, 교육 14.7% 순이다. 식료품비는 소득이 적은 계층은 점유율이 높은 반면 소득이 많은 계층은 점유율이 낮다. 1990년에서 2008년의 기간 중 모든 계층에서 식료품비의 비중은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은 1990년 각각 33.8%와 25.0%에서 2008년 26.4%와 19.8%로 감소하였다. 반면 교통·통신비와 교육비는 같은 기간 동안 모든 계층에서 증가하였다.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의 교통·통신비 비중은 1990년 각각 4.5%와 10.4%에서 2008년 16.1%와 16.9%로 증가하였다.

한편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계층별 교육비 지출 행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림 V-11]에서 2-4분위 중간 계층은 경제위기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교육비 지출을 늘려왔으나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은 경제 위기 동안은 교육비의 비중을 줄이다가 2000년대에 들어 다시 교육비의 비중을 늘렸다. 아무리 가계가 어려워도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림 V-11] 소득분위별 교육비 비중¹⁾: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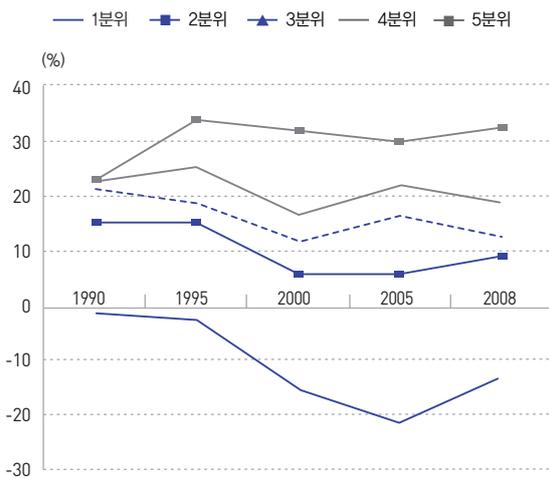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가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매우 가혹한 선택을 강요했음을 읽을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이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은 소득과 지출을 비교한 [그림 V-12]에서 뚜렷이 보인다. 그림에서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들은 전 기간 동안 모두 소득이 지출보다 많은 흑자 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1분위 계층은 1990년대 후반의 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1990년과 1995년에 1분위 소득계층은 어렵게나마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반면, 2000년대에 들어 이 계층은 자신의 소득대비 13-22%의 엄청난 규모의 적자 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빈곤율의 변화에도 반영되어 2000년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율은 11%였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 17%에 달하였다.

[그림 V-12] 소득분위별 가계 흑자 비율¹⁾: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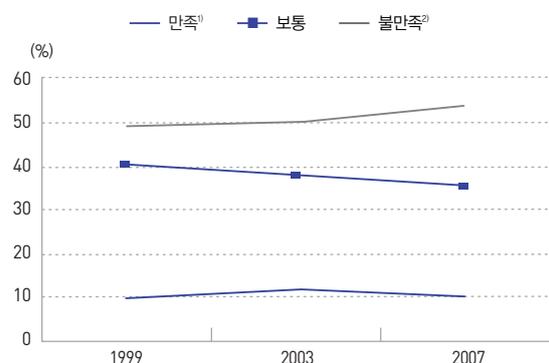


주: 1) 마이너스 값은 가구소득 대비 가계적자 비율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소득 불만족도의 증대

지난 10년간 전반적인 소득 수준은 꾸준히 향상되었으나 사람들이 자신의 소득에 대해 갖는 생각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자료의 제약으로 1990년 후반 경제위기를 전후한 소득인식의 변화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림 V-13]에서 1999-2007년의 기간을 비교하여도 분명한 태도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비율은 1999년이나 2007년이나 큰 차이 없이 10% 남짓에 머물렀으나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사람의 비율은 1999년 49.7%에서 2003년 50.3%, 2007년 53.8%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림 V-13] 소득 만족도: 1999, 2003, 2007



주: 1)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 응답률을 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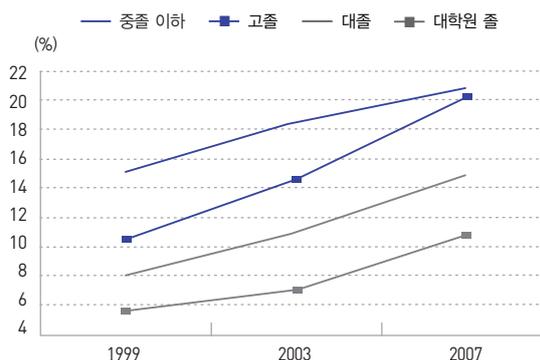
2) '매우 불만'과 '약간 불만' 응답률을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자신의 소득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소득의 절대 규모에 크게 좌우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다수가 자신의 소득에 만족하는 반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다. 교육수준과 소득 불만족도를 비교한 [그림 V-14]를 보면 학력이 낮을수

록 곡선이 상위에 위치하는 데,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신의 소득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그림 V-14] 교육수준별 소득 불만족도¹⁾: 1999, 2003, 2007



주: 1) '매우 불만'과 '약간 불만' 응답률을 합한 것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 그림에서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한다. 하나는 모든 교육수준에서 1999년보다 2003년이나 그리고 2007년이 훨씬 더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소득을 누리고 있음에도 이들 또한 이 기간 동안 중졸 이하의 사람들 못지않게 자신의 소득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 두 번째 특이한 사항은 중졸 이하, 대졸, 대학원 졸업자들의 소득 불만족이 증가한 정도는 대체로 비슷한 반면, 고졸자의 소득 불만족도는 다른 학력 집단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기간 동안 중졸 이하의 사람들이 고졸자들보다 소득 지위의 하락이 더 컸으나 자신의 소득에 불만족한 비율은 오히려 고졸자들에게서 더 크게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들이 불평등 확대에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다른 어느 계층보다 더 심하게 느꼈음을 암시한다.

이현송 (한국의외국어대학교)

소득원천별 구성

요 약

- 2003-2008년 사이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은 62-64%를 차지하고 사업소득이 20-23%를 차지하였는데, 근로소득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사업소득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감소해 왔다.
- 경제성장률과 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1990년대에는 0.89에 이르렀으나, 2000년대에는 0.49로 떨어져 양자의 상관관계가 약화되었다.
- 1인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 비중은 점차 하락하여 2008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고, 대신 이전소득의 비중이 급증하여 2008년에는 28%에 달하게 되었다.
- 한국 가구의 소득구성은 미국에 비해 사업소득의 비중이 크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작다.

가구의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구소득은 절대액 뿐만 아니라 구성도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임금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또한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가구소득 구성비가 지난 수년간 어떻게 변화하여 왔으며, 가구특성별로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2인 이상 비농어가구의 소득원천 구성

가구소득은 소득의 규칙성에 따라 정상소득과 비정상소득으로 구분된다. 정상소득이란 임금근로자의 월급과 같이 정기적이고 재현가능성이 있는 소득을 의미하며, 비정상소득이란 축의금이나 퇴직금 등과 같이 부정기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표 V-1>은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2003-2008년 기간 중 가구소득에서 경상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4-95% 수준에서 연도에 따라 별다른 변동 없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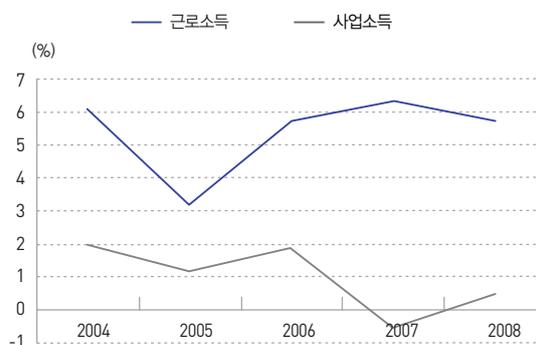
가구의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리고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부터 3년간 62%대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가 2007년에는 63.2%, 2008년에는 64.0%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업소득의 비중은 2003년 23.9%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8년에는 19.7%로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에 올수록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율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고, 또한 절대적인 자영업자수가 감소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림 V-15]에서 산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근로소득은 평균 5.4% 증가한 반면, 사업소득은 평균 1.0% 증가에 그쳤다.

주식이나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재산소득의 구성비는 2003년부터 6년간 2.2-2.4% 수준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전소득의 비중은 2003년 6.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8.2%를 기록하였다. 최근에 올수록 정부의 사회보장이나 복지 관련

[그림 V-15] 평균 근로소득과 평균 사업소득의 증가율: 2004-2008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소득 구성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큰 변화는 없다. <표 V-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963년부터 2008년까지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에서 경상소득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1991-2000년 기간만 평균 93.6%를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 시기에 발생하였던 외환위기와 이후 실시된 각종 구조조정에 따른 소득의 변동이 컸기 때문인

<표 V-1>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비: 2003-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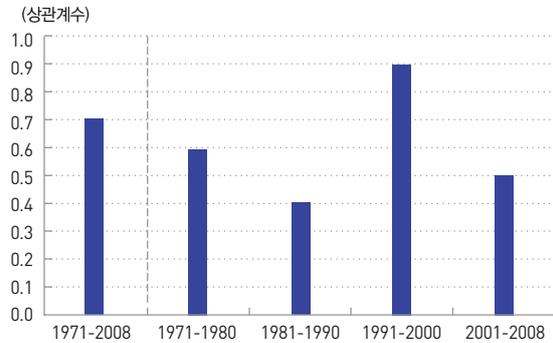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상소득	94.9	94.8	94.4	94.2	94.0	94.2
근로소득	62.6	62.6	62.1	62.5	63.2	64.0
사업소득	23.9	23.0	22.4	21.7	20.5	19.7
재산소득	2.3	2.2	2.2	2.2	2.4	2.2
이전소득	6.0	7.0	7.7	7.8	7.9	8.2
비경상소득	5.1	5.2	5.6	5.8	6.0	5.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것으로 파악된다. 동 시기에는 또한 소득 중에서 근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른 시기에 비해 가장 낮은 85.1%를 기록하였다.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은 1971-1980년에 0.9%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8년에는 3.4%까지 상승하였다. [그림 V-16]은 1971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별로 경제성장률과 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 기간의 양자 간 상관계수는 0.70으로 나타났는데, 기간별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에는 동 상관계수가 0.89에 달하여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2000년대에는 상관계수가 0.49로 떨어져 최근에 와서 경제성장률과 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관계가 대폭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V-3〉은 2008년 가구원수 2인 이상 전국 비농어가구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다. 경상소득의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40대일 때 가장 높은 96.3%를 기록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경상소득의 비중이 92.1%까지 하락하고 비경상소득의 비중은 7.9%에 달하고 있어서 노인가구주 가구의 소득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V-16] 경제성장률과 평균 가구근로소득 증가율의 상관계수: 1971-2008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년도.

근로소득의 비중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락한다.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일 때는 동 비중이 74.1%에 달하지만, 60세 이상의 경우에는 38.9%까지 하락한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의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4.3%이지만 그 이후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23-2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인 경우 은퇴 이후에 근로소득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노인층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전소득의 경우에는 50대 이하인 경우 대체로 5-6% 수준을 유지하지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표 V-2〉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구성비: 1963-2008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합계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소계		
1963-1970	87.2	1.3	3.1	3.7	95.3	4.7	100.0
1971-1980	90.5	0.9	2.8	2.1	96.3	3.7	100.0
1981-1990	88.5	2.3	2.9	2.8	96.5	3.5	100.0
1991-2000	85.1	3.4	2.3	2.8	93.6	6.4	100.0
2001-2008	86.4	3.4	1.4	3.5	94.7	5.3	10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표 V-3〉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구성비: 2008

	(%)				
	39세 이하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경상소득	94.9	96.3	93.8	92.1	94.9
근로소득	74.1	65.5	63.8	38.9	64.6
사업소득	14.3	25.0	24.0	22.9	21.4
재산소득	0.2	0.4	0.5	2.3	0.6
이전소득	6.3	5.4	5.5	27.9	8.3
비경상소득	5.1	3.7	6.2	7.9	5.1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27.9%로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60세 이후에 연금을 받거나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수혜대상 또는 가족친지간 이전소득이 증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인 비농어가구와 농어가구의 소득구성

〈표 V-4〉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1인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1인 비농어가구의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이 기간 중에 54.1%에서 49.9%로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대체로 14-1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소득

〈표 V-4〉 1인 비농어가구의 소득구성비: 2006, 2007, 2008

	(%)		
	2006	2007	2008
경상소득	93.9	92.6	93.7
근로소득	54.1	51.8	49.9
사업소득	14.2	15.4	15.1
재산소득	0.8	1.1	1.0
이전소득	24.8	24.3	27.7
비경상소득	6.1	7.4	6.3
합계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은 2008년에 전년 대비 3.4%p나 증가하였다.

2008년을 기준으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의 소

〈표 V-5〉 2인 이상 농가 소득구성비: 2003-2008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농업소득	39.3	41.6	38.7	37.4	32.6	31.6
농업외 소득	35.0	32.9	32.4	31.1	34.7	37.2
이전소득	7.6	10.4	13.4	15.1	15.5	17.3
비경상소득	18.1	15.2	15.5	16.4	17.2	13.8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각 년도.

〈표 V-6〉 2인 이상 어가 소득구성비: 2003-2008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어업소득	44.9	45.7	42.6	38.7	39.0	44.3
어업외 소득	36.0	35.0	33.5	34.5	35.8	32.5
이전소득	3.6	5.6	8.0	9.1	9.5	7.8
비경상소득	15.4	13.6	15.8	17.7	15.6	15.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각 년도.

득구성을 비교해 보자(〈표 V-1〉과 〈표 V-4〉 참조). 1인 가구의 경상소득 비중은 93.7% 수준으로 2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 비중(94.2%)보다 소폭 낮다. 1인 가구의 경우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비중이 낮으며, 재산소득의 비중도 낮다. 이에 반해 1인 가구에서의 이전소득 비중은 27.7%로서 2인 이상 가구의 8.2%보다 3배 이상 높다. 이는 1인 가구에는 노인 단독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V-5〉는 가구원수 2인 이상 농가의 가구소득구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41.6%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31.6%까지 하락하였다. 주목할 점은 이전소득 비중의 증가인데, 2003년 이전소득의 비중은 7.6%였으나, 2008년에는 17.3%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농가의 경우 가구구성원 중에서 고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비경상소득의 경우에는 13.8-18.1% 수준으로 2인 이상 비농어가구의 비중인 5-6%보다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인다. 이는 농가소득의 상대적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겠다.¹⁾

〈표 V-6〉은 가구원수 2인 이상 어가의 가구소득구

성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어가소득 중에서 어업소득의 비중은 연도별로 뚜렷한 추세 없이 38.7-45.7%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어가의 경우에는 농가에 비해 이전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으며, 농가의 경우에는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경향과는 달리 어가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8년에는 하락하였다. 어가도 농가와 같이 비농어가구에 비해 비경상소득의 비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소득의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비교

〈표 V-7〉은 한국과 미국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미국의 경우 가구소득 대비 각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근로소득 68.6%, 사업소득 10.2%, 재산소득 11.4%, 이전소득이 9.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미국보다 4.0%p가 낮고, 이전소득의 비중이 0.8%p가 낮

1) 실제로 2008년의 경우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할 때 농가 소득 중 이전소득의 비중은 17.3%이지만, 농업경영주가 60대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동 비중이 19.1%, 28.2%에 달한다.

〈표 V-7〉 한국과 미국의 소득계층별 소득구성비: 2002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한국	근로소득	41.0	54.7	61.2	68.6	69.8	64.6
	사업소득	22.8	27.6	26.7	21.7	17.0	21.4
	재산소득	1.1	0.7	0.5	0.4	0.7	0.6
	이전소득	29.3	13.6	8.8	6.4	4.7	8.3
	기타소득 ¹⁾	5.7	3.3	2.9	2.9	7.8	5.1
미국	근로소득	0.5	44.9	84.3	89.7	70.8	68.6
	사업소득	-2.3	1.9	4.2	3.8	16.5	10.2
	재산소득	39.1	15.0	3.8	3.0	11.4	11.4
	이전소득	58.3	35.6	7.2	3.2	1.0	9.1
	기타소득	4.4	2.5	0.5	0.2	0.2	0.7

주: 1) 한국의 기타소득은 비경상소득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2; Rodrigez et al., 2002.

다. 또한 재산소득의 비중은 무려 10.8%p가 낮다. 이에 반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한국의 비중이 미국보다 11.2%p가 높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대적으로 한국가구들이 미국가구에 비해 축적한 재산이 적으며, 또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소득분위별로 소득구성을 보면 특이한 점들이 많이 발견된다. 미국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0.5%에 불과한 반면, 이전소득의 비중은 5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우 소득 최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에서 근로소득의 비중은 41.0%로서 미국보다 월등히 높으며, 이전소득의 비중은 29.3%로서 미국보다 월등히 낮다. 한국의 빈곤층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근로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적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분위가 높을수록 높아지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3분위와 4분위에서 높고, 5분위에는 다시 낮아진다. 미국의 경

우에는 분위가 올라갈수록 사업소득의 비중이 커지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이전소득의 경우 미국에서는 1분위와 2분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1분위에서 상대적으로 높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전 분위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각 국의 가구소득 구성은 각 국의 경제 상태와 사회보장제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국은 한국과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평가받는다. 2007-2008년 영국 가구소득을 보면 전 가구의 평균소득에서 사회보험과 공적이전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33.8%로서 한국은 물론 미국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다. 5분위별로 볼 때 1분위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 중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74.1%에 이르고, 2분위의 경우에도 54.3%에 달한다. 최상위 소득계층인 5분위의 경우에도 동 비율이 26.2%에

달한다. 한국도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고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확장되는 경우에 이전소득의 비중이 증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Rodriguez, S., J., Diaz-Giménez, V., Quadrini and J. Rios-Rull. 2002. "Updated Facts on the U.S. Distributions of Earnings, Income, and Wealth."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Summer 2002, 26(3): 2-35.
- Barnard, A. 2009.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http://www.statistics.gov.uk/pdfdir/taxbhi0709.pdf>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생애 소득의 구조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요 약

-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40대 후반과 50대 가구주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시켰으며 생애 소득의 정점을 앞으로 당겼다.
- 기혼 여성의 소득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들의 소득이 가구 근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년 사이에 3배 이상 높아졌다.
-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소득보다 44%나 많은 반면 소비지출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전자는 후자보다 2배 이상의 가계 흑자를 기록하였다.
- 높은 교육을 받고 부유한 남편을 둔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도가 소득이 낮은 가구 여성의 소득 기여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는 소득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보편화되면서 직장 경력에 따라 임금을 올려주는 연공서열의 관행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향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생애 과정에서 소득을 어떻게 적절히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개인의 전 생애 소득이 높다고 해도 연령에 따른 소득활동의 부침이 심하다면 꾸준히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것보다 생애 전체의 삶의 질은 낮을 것이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가구의 소득활동은 남성 가장의 전유물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조만간 인구 감소가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여성의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국가 경제 전체의 관심으로 대두되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그에 따른 소득은 단순히 금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여성의 권리와 사회참여라는 또 다른 사회

가치와 연관되면서 다중적으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가 가구의 소득 활동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연령과 성에 따른 소득 구조가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경제위기는 직장에서 생산성과 임금 간의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였고, 연장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관행을 파괴함으로써 연령에 따른 소득 분배 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지난 수 십 년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성역할 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탐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에서 매달 전국의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 자료가 주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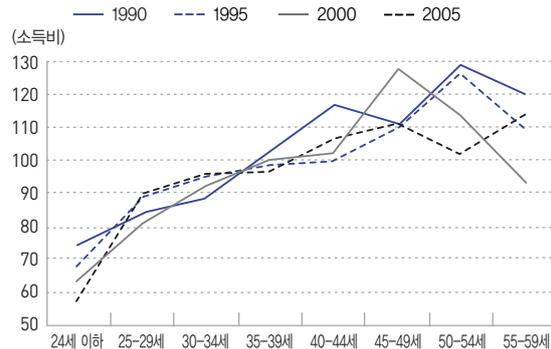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연장자 우대 전통은 직장에 서 연공서열의 관행으로 나타난다. 이 관행에 따라 근로자의 생애 전체의 임금 분포를 보면(그림 V-17), 젊은 시절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지만 근로 생활의 종점에 근접한 50대 중후반까지 꾸준히 임금이 상승한다. 그러나 1990년대 말 경제위기는 많은 중년층 근로자들을 직장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이후 세계화의 압력 속에서 벌어진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전통을 크게 약화시켰다. 이제 40대 후반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일한 곳보다 열악한 일자리로 이동하여 경제활동의 종반기를 지내는 것을 흔히 본다.

[그림 V-17]은 각 시기에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연령집

단의 소득비율이 1990년부터 2005년까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가구주가 24세 이하인 경우를 보면, 1990년부터 2005년에 이르기까지 이 비율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연령대의 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하지 않는 가구일 것이며 다른 연령집단보다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소득규모가 절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근로로 올수록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

[그림 V-17] 가구주의 연령별 소득비¹⁾: 1990-2005



주: 1) 각년도 전체 평균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또 하나의 뚜렷한 변화는 생애전체로 본 소득의 정점이 1990년대 초반에는 50-54세에 위치했는데, 이후 이 연령대의 소득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에는 45-49세로 생애소득의 정점이 한 단계 낮은 연령층으로 이동하였으며 2005년에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물고 온 구조조정의 열풍은 50대의 근로자에게 매우 큰 희생을 강요하였다. 과거

오래도록 다니던 직장에서 50대 중반까지 일하던 관행은 폐기되고, 대신 50대로 들어서면 지금보다 낮은 임금의 직장으로 일터를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취업 전선에서 퇴장하는 새로운 관행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애전체로 볼 때 50대 중년층의 소득 비중이 감소한 것은 1990년대 후반 이후에 전반적으로 관찰되지만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일관되게 전개된 것은 아니다. [그림 V-18]에서는 전체 가구를 소득의 규모에 따라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가장 소득이 낮은 집단을 1분위로 가장 소득이 높은 집단을 5분위로 하여 각 집단의 평균 연령을 각 년도 전체 가구의 평균 연령과 비교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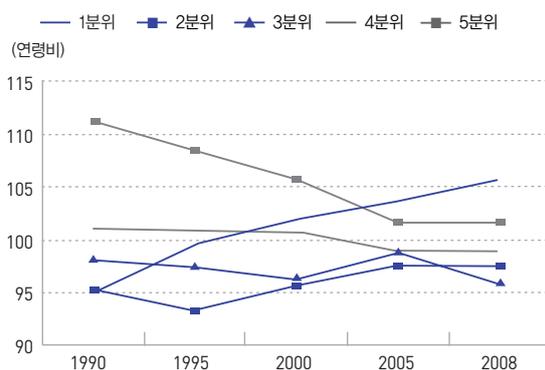
그림에서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은 근래로 올수록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비하여,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계층의 연령비는 근래로 올수록 가파르게 낮아지고 있다. 5분위 계층의 연령은 1990년 41세에서 2008년 44.7세로 상승했으나 다른 소득계층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젊어졌다.

1990년에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평균 연령이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1분위 소득과 2분위 소득가구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둘 다 35.1세였으며, 3분위 36.2세, 4분위 37.3세, 5분위 41세로 가구주의 연령과 소득은 대체로 비례하였다. 반면 2008년에는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46.5세로 가장 고령이며, 3분위 가구주가 42.3세로 가장 젊다. 1분위를 제외한 2-5분위 가운데서는 5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가장 높기는 하나 과거와 비교해보면 가장 부유한 가구의 가구주 연령은 현저히 젊어진 것이다.

반면 가장 생활이 어려운 1분위 가구주의 평균 연령

은 1990-2008년 사이에 11.4세나 증가하였다. 그간의 노동시장의 변화가 소득수준이 낮은 노령자 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18] 소득계층별 가구주 연령비: 199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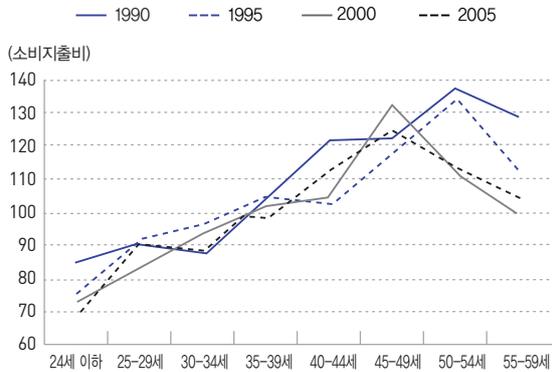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 전체 가구주 평균 연령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소득분위 가구주의 연령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2000년까지만 해도 5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은 1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보다 약간이나마 높았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관계는 역전되어, 2005년과 2008년을 보면 두 시기 모두 5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이 1분위 계층의 평균 연령보다 오히려 젊다. 연장자를 우대하는 우리 사회의 오랜 질서는 붕괴하였으며, 나이가 들수록 즉 직장 생활을 오래할수록 소득이 높아진다는 말은 이제 옛이야기가 되었다.

50대를 전후하여 생애 전체로 본 상대소득이 이전보다 줄어들면서 소비에서도 50대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과거 중류층 50대의 생활은 여럿의 자녀가 연이어 대학에 진학하면서 학비를 대느라 부모의 허리가 휘어졌다. [그림 V-19]는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각 시기의 전체 가구 소비지출 평균을 100으로 할 때 각 연령대의 지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V-19] 가구주의 연령별 소비지출비¹⁾: 1990-2005



주: 1) 각년도 평균 소비지출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연령집단의 소비지출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이 그림은 앞의 연령별 소득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과 매우 흡사한 유형을 보인다. 45-54세 사이를 보면 1990년의 곡선은 전반적으로 2000년과 2005년의 곡선보다 위에 위치해있다. 또한 1990년 및 1995년과 비교하여 볼 때 2000년과 2005년에 생애 지출의 최고점이 앞당겨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50대를 전후한 가구주의 지출이 이전 시기보다 감소한 이유는 무엇보다 줄어든 수입 규모에 맞추어 지출의 모든 항목을 강제적으로 하향 조정할 결과일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

우리 사회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래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에 이르렀으며, 이후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은 물론 남성조차 결혼 이후에도 여성이 직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을 당

연시하게 된 현 상황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웠던 변화이다.

젊은 부부의 맞벌이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따라서 소득 능력이 높은 기혼 여성이 다수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현상이다. 과거에는 생계의 압력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제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기혼 여성 취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이 높은 기혼 여성은 취업을 기피하였다. 또한 과거에 여성은 결혼 이후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가사에 몰두하다가 40대에 들어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유형을 보였으므로 미혼 시기의 높은 취업률과 함께 소위 'M자형'의 경제활동참여 유형을 보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이러한 'M자형'의 모습은 연령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취업하는 기혼 여성이 증가하면서 사라지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 유형은 남성의 유형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

2009년 맞벌이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맞벌이 가구에서 가구주는 대체로 남성이고 배우자는 여성이다. 맞벌이 가구의 가구주는 비맞벌이 가구주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반면, 통념과는 달리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가구원수가 많다. 이는 기혼 여성이 취업한 경우 전업주부보다 출산 자녀수가 적으나, 비맞벌이 가구에는 단독가구나 혹은 자녀들이 분가한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와 비교하여 가구소득의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표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현재 맞벌이 가구의 월소득은 434만 9천 원으로 비맞벌이 가구소득 302만 원보다 무려 44%나 많다. 맞벌이 가구의 지출이 비맞벌이 가구의 지출보다 많기는 하지만 소득이 많은 정도에는 못

미치므로 소득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에서 맞벌이 가구는 비맞벌이 가구보다 2.3배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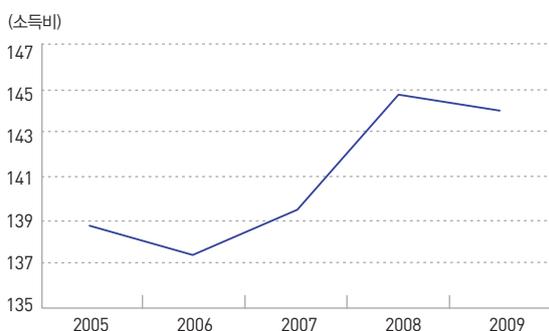
〈표 V-8〉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평균 소득과 지출: 2009

	맞벌이 가구	비맞벌이 가구
소득	4,349,000원	3,020,000원
지출	3,248,000원	2,543,000원
소득-지출	1,101,000원	477,000원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맞벌이 가구가 비맞벌이 가구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경향은 근래로 오면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그림 V-20]에서 자료가 가능했던 2005년과 2009년을 비교할 때 불과 4년의 사이에도 맞벌이 가구의 소득은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보다 5%p나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배우자의 가계소득 기여도가 1980년대 초반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앞으로 가계에서 배우자 소득의 중요성이 갈수록 더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그림 V-20] 맞벌이 가구의 소득비¹⁾: 2005-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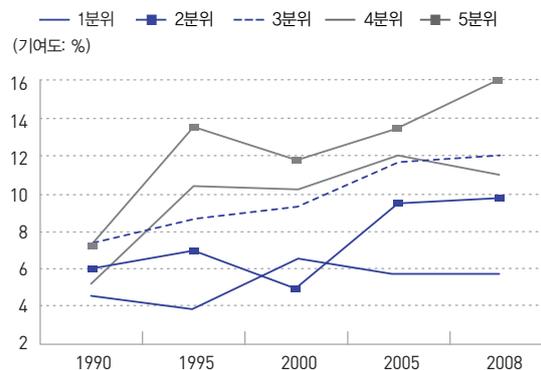
주: 1) 각 년도 비맞벌이 가구의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 맞벌이 가구의 소득비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지난 20년간 기혼 여성의 소득 기여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높아진 것은 아니다. [그림 V-21]에서 보면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계층의 경우 1990년과 2008년을 비교해 보았을 때 4.5%에서 5.7%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 계층의 경우 두 시기 사이에 7.2%에서 16.1%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두 가지 요인 때문으로 추측된다.

첫째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유형에서 가난한 집 여성과 부유한 집 여성 간에 두 시기 동안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가난한 집 여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경제활동참여율에서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였다. 가난한 집의 경우 생계를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돈을 벌 수 있는 여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돈을 버는 활동에 종사해 왔다. 반면 중류층 이상의 여성은 과거에는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기피하였으나 근래로 오면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참여의 기회를 찾고 있으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참여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림 V-21] 소득분위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¹⁾: 1990-2008



주: 1) 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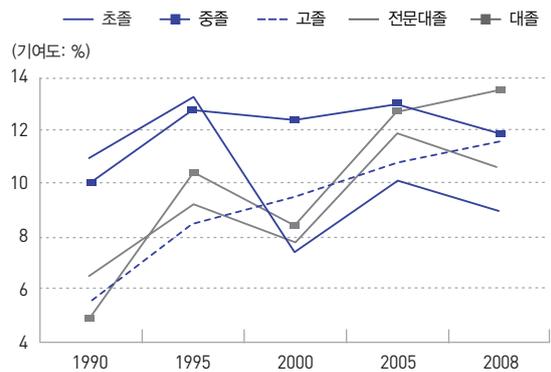
[그림 V-22]에서 보면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근래로 올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대학교 졸업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속도는 경이적이다. 결과 두 시기 사이에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 양상은 여성 배우자 소득의 기여도의 변화에 반영되었다.

소득이 높은 가구의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가구의 배우자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된 또 다른 요인은, 중상류층 기혼 여성이 벌어들인 소득은 1982년과 2008년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과거에는 중상류층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직업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여 가난한 집 여성이 벌어들인 소득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중상류층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높아지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소득은 가난한 집의 기혼 여성보다 월등히 많아졌다.

[그림 V-23]은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여도를 나타낸다. 남성 가구주의 교육

수준 대신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에 따른 근로소득 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직접적으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래로 올수록 배우자 사이의 교육수준이 더 유사해진다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남성 가구주의 교육수준은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이므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경향은 여성 배우자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하여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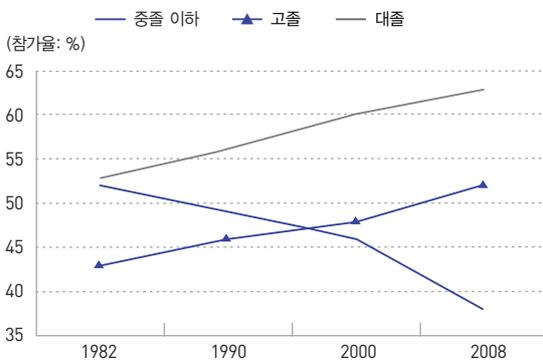
[그림 V-23]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¹⁾: 1990-2008



주: 1) 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그림 V-22] 여성의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참가율: 1982-2008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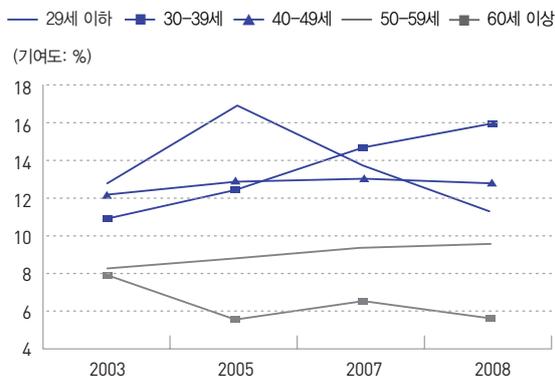
그림에서 보면 1990년과 1995년에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은 반면 2005년과 2008년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가 높다. 특히 2005년과 2008년의 그래프에서 가구주가 대졸의 학력일 때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다른 학력의 집단과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1990년의 경우 가구주가 대졸의 학력일 때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다른 학력의 집단보다 두드러지게 낮다. 반대로 가구주가 초등학교 졸업일 때 1990년에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는 높은 학력의 것보

다 두드러지게 높은 반면, 2005년이나 2008년에 초등학교 가구주 배우자의 소득기여도는 높은 학력의 것보다 두드러지게 낮다. 놀랍게도 두 시기 사이에 학력에 따른 배우자의 소득기여도의 방향이 역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 기여도의 격차 또한 확대되었다. 불과 20년도 못된 기간에 전혀 다른 유형의 배우자 소득 구조가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이 높은 기혼 여성의 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한 것은 비교적 근래의 현상이다. 따라서 연령에 따른 소득 기여율을 조사한다면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에서 배우자의 소득 기여율이 높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림 V-24]는 가구의 연령별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여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가용 자료의 제약으로 2003년 이후의 자료만을 수집할 수 있었으나, 지난 5년간에도 일관된 방향으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39세 연령에서 여성 배우자의 소득 기여율은 크게 높아진 반면, 40대 이후에는 근래로 올수록 높아지기는 했으나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2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뚜렷한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없다.

남성 가구주가 30-39세의 연령이면 대체로 여성 배우자는 20대 후반-30대 중반의 연령으로 어린 자녀의 뒷바라지에 몰두하는 시기이다. 2003년에 이

[그림 V-24] 가구의 연령별 여성 배우자의 가구소득 기여도¹⁾: 2003-2008



주: 1) 각 년도의 가구 근로소득에서 여성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연령대 배우자의 근로소득 기여율은 10.8%였는데 2008년에 15.9%로 불과 5년 사이에 5.1%p나 증가하였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한 해도 어김없이 매년 증가를 기록했다는 사실이다. 근래로 올수록 미취학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직업 활동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로부터 획득한 배우자의 소득이 가구 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는 이제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남성 가장은 밖에 나가 돈을 벌어진다는 성역할 분업을 전제로 한 기존 사회질서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잘 말해 준다.

이현승 (한국의국어대학교)

자산의 분포와 구성

요 약

- 가구의 자산보유액은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최대가 되며, 60대 이후에도 급격히 감소되지는 않는다.
- 가구의 자산은 75-80%가 부동산자산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화되고 있다.
- 1990년대 이후 가구자산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자산 불평등도는 소득 불평등도 보다 훨씬 크다.

가구의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소득이지만, 가구의 자산보유상태도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또한 가구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이 글에서는 가구의 자산보유형태의 특징과 자산보유액의 불평등도에 대하여 분석한다.

한국 가구의 자산 총액

〈표 V-9〉는 1997년과 2007년의 개인자산을 포함하는 국부의 구성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2007년 말 기준 비금융자산과 내구소비재로 구성되는 한국의 국가자산은 총 6,543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에서 개인은 전체 국가자산의 45.4%인 2,971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 개인은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일반가계 및 민간비법인기업과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개인자산은 비생산자산 70.0%, 생산자산 25.2% 그리고 내구소비재 4.8%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자산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에 비해 2007년에 1.2%p가 감소하였다. 개인자산에

〈표 V-9〉국부의 자산형태별 자산액과 구성비¹⁾: 1997, 2007

	1997		2007	
	금액(조 원)	%	금액(조 원)	%
국가자산	3,123	100.0	6,543	100.0
법인	1,108	35.5	2,343	35.8
일반정부 ²⁾	561	18.0	1,228	18.8
개인 ³⁾	1,454	46.6	2,971	45.4
생산자산	430	29.6	749	25.2
비생산자산	939	64.6	2,078	70.0
내구재	85	5.8	143	4.8

주: 1) 당해년말 가격임.

2)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단체로 구성됨.

3) 가계(민간 비법인기업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로 구성됨.

출처: 통계청, 『2007년말 기준 국가자산통계 추계결과』, 2008.

서 생산자산과 내구소비재의 비중이 줄고 비생산자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개인자산 중에서 비생산자산의 비중은 1997년 64.6%에서 2007년에는 70.0%로 5.4%p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전체 국가자산 중에서 생산자산과 내구소비재의 비중은 각각 2.8%,

0.2%가 증가한 반면 비생산자산의 비중은 2.9%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는 토지자산이 비생산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 10년 사이에 개인자산 중에서 토지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10〉개인부문 금융자산: 2004-2008

(조 원, ()안은 %)

	2004	2005	2006	2007	2008
금융자산(A) ¹⁾	1,234.2(100.0)	1,400.9(100.0)	1,521.8(100.0)	1,712.8(100.0)	1,677.4(100.0)
예금	609.4(49.4)	656.4(46.9)	700.8(46.1)	715.6(41.8)	771.4(46.0)
보험 및 연금	281.6(22.8)	306.8(21.9)	345.8(22.7)	391.8(22.9)	422.5(25.2)
수익증권	64.1(5.2)	81.4(5.8)	110.7(7.3)	168.4(9.8)	119.6(7.1)
주식	187.9(15.2)	268.6(19.2)	268.7(17.7)	346.1(20.2)	251.5(15.0)
기타 ²⁾	91.2(7.4)	87.6(6.3)	95.7(6.3)	90.9(5.3)	112.5(6.7)
금융부채(B) ¹⁾	542.4	601.4	670.1	743.0	802.0
순금융자산(A-B)	691.8	799.5	851.7	969.8	875.3

주: 1) 파생금융상품, 상거래신용, 기타 금융자산(부채) 등은 제외함.

2) 현금통화, 수익증권을 제외한 채권, 출자지분, 해외직접투자 등을 포함함.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 각 년도.

한국의 명목 GDP 대비 토지자산 배율은 3.7배(2007년)로서 프랑스의 3.0배(2007년), 미국의 2.8배(2007년), 일본의 2.4배(2006년)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동 비율의 상승폭도 매우 컸다. 2003년도는 동 비율이 2.7배였는데 2007년까지 4년 동안 무려 1배가 증가하였다. 동 기간 중 프랑스는 1.2배가 증가하였으나, 미국은 0.3배 증가, 일본은 0.2배가 감소하였다.

〈표 V-9〉는 국가자산 가운데 개인부분의 비금융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표 V-10〉은 개인부분의 금융자산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말 현재 개인부분의 금융자산 총액은 1,677조 원이며, 금융부채는 802조 원이고 이에 따라 순금융자산은 875조 원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개인 금융자산은 예금 46.0%, 보험 및 연금 25.2%, 수익증권 7.1%, 주식

15.0% 그리고 기타 6.7%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에는 주식 및 수익증권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4%였으나, 2007년에는 30.0%까지 증가하였고 2008년에는 22.1%로 급속히 감소하였다. 자본시장의 등락에 따라 개인들의 자산구성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표 V-9〉와 〈표 V-10〉은 작성하는 기관이 다르고, 추계하는 방법론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다만, 두 표에서 모두 개인부분의 개념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절대 금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의 총액은 각각 2,828조 원(내구재 제외), 970조 원으로 나타나 각각의 비중은 74.5%와 25.5%를 차지하고 있다. 〈표 V-11〉에 의하면 2006년 가구총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

〈표 V-11〉 가구의 자산구성: 2006

	금액(10,000원)	총자산대비 비중(%)	순자산대비 비중(%)
총자산	28,112.3	100.0	116.3
저축총액	5,744.8	20.4	23.8
저축액	4,569.8	16.3	18.9
전·월세보증금	1,175.0	4.2	4.9
부동산	21,604.1	76.8	89.4
주택	12,755.9	45.4	52.8
주택 이외	8,848.2	31.5	36.6
기타 자산	763.5	2.7	3.2
부채총액	3,947.9	14.0	16.3
부채액	2,881.0	10.2	11.9
임대보증금	1,066.9	3.8	4.4
순자산	24,164.4	86.0	100.0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은 76.8%이며, 가구 순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89.4%이다. <표 V-11>에 나타난 가구부문은 순수한 민간가구를 의미하지만, <표 V-9> 및 <표 V-10>에 나타난 개인부문은 민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상호 포괄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체로 한국 가구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89%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는 있다.

가구별 가구자산 구성

<표 V-11>은 2006년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에 나타난 가구의 자산항목별 금액과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 가구의 평균 총자산보유액은 2억 8,112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를 제외한 평균 순자산보유액은 2억 4,164만 원으로 나타났다. 총자산 중 저축총액은 총자산의 20.4%인 5,744만 원이었다. 이 중에서 금융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순수한 저축액은 평균 4,570만 원이었고, 주택서비스 이외에 금융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전·월세보증금이 평균 1,175만 원이었다. 총자산 중 부동산보유액은

총자산의 76.8%인 2억 1,604억 원이었다. 이 중에서 주택 관련 부동산보유액은 1억 2,756만 원이었으며, 주택 이외의 부동산 보유액은 8,848만 원이었다. 주택 이외의 부동산 보유액이 통상적인 예상수준보다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전체 표본의 1.9%가 평균 10억 원이 넘는 주택 이외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보유액이 약 20억 4,000만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저축총액 및 부동산을 제외한 기타 자산 보유액은 총자산의 2.7%인 764만 원이었다. 한편, 가구의 부채총액은 3,948만 원으로 총자산의 14.0%를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순수한 금융부채액은 2,881만 원으로서 부채총액의 73.0%를 차지하였고,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은 1,067만 원이었다.

총자산 대비 비중으로 볼 때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76.8%에 달하고 있어서 한국 가구의 부동산자산 선호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가구의 자산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도 대부분 높은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유경원(2008)은 부동산자산 보유 비중이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76-78%,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81-85%

<표 V-12> 가구소득별 자산현황: 2006

	(10,000원, () 안은 %)							전체 가구
	1천만원 미만	1-2천만원 미만	2-3천만원 미만	3-4천만원 미만	4-5천만원 미만	5-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총자산 ¹⁾	11,936 (42.5)	14,930 (53.1)	18,902 (67.2)	24,952 (88.8)	31,716 (112.8)	44,778 (159.3)	78,459 (279.1)	28,112 (100.0)
순자산 ¹⁾	10,656 (44.1)	13,158 (54.5)	16,266 (67.3)	21,115 (87.4)	26,571 (110.0)	37,882 (156.8)	68,373 (283.0)	24,164 (100.0)

주: 1) ()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의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소득집단의 자산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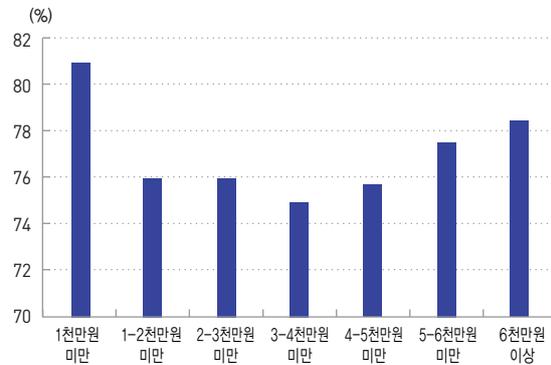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준은 일본 65%(2004년), 미국 64%(2003년), 캐나다 61%(2005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자산의 경우에는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보유액이 총자산 중 45.4%인 반면, 주택 이외의 부동산보유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31.5%에 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표 V-12〉는 2007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의 가구소득별 자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총자산과 순자산액은 각각 평균 1억 1,936만 원, 1억 656만 원이었으며,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7억 8,459만 원, 6억 8,373만 원이었다. 전체 평균 총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42.5%, 가구소득이 6,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79.1%를 차지하였다. 동 비중이 100%를 넘는 구간은 가구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였다.

〔그림 V-25〕는 2007년 통계청 『가계자산조사』의 가구소득별 부동산자산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비중이 81.1%로 가장 높으며,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75-79%의 비중을 보여주었다. 가구소득의 크기와 관계

[그림 V-25] 가구소득별 부동산자산 비중: 2006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없이 가구의 부동산자산 선호가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가구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부동산자산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부동산자산이 많다는 측면보다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자산이 적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표 V-13〉은 가구주 연령별 자산보유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주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총자산이 평균 5,418만 원이며, 30대는 1억 8,001만 원, 40대는 3억 260만 원, 50대는 3억 7,243만 원, 그리고 60대 이상은 3억 2,076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V-13〉 가구주 연령별 자산현황: 2006

	(10,000원, ()안은 %)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전체 가구
총자산 ^{a)}	5,418 (19.3)	18,001 (64.0)	30,260 (107.6)	37,243 (132.5)	32,076 (114.1)	28,112 (100.0)
순자산 ^{b)}	4,432 (18.3)	14,278 (59.1)	25,317 (104.8)	32,623 (135.0)	29,079 (120.3)	24,164 (100.0)

주: 1)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의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연령집단의 자산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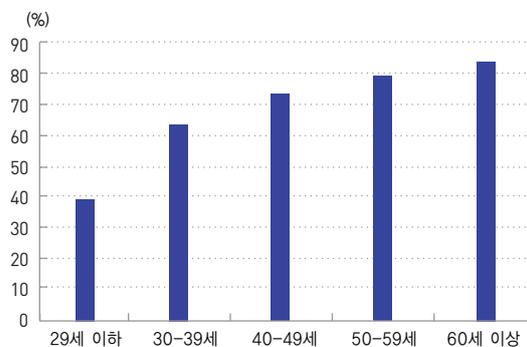
가구자산은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일 때 가파르게 증가하고, 40대에도 증가세가 지속되어 50대에 최고점에 이른다. 60대 이상부터는 가구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전체 가구총자산의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가구주의 연령이 20대인 경우에는 19.3%에 불과하지만, 30대에는 64.0%로 증가하고 50대에 최고점인 132.5%에 달하게 된다. 순자산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이 나타난다.

가구주 연령이 50대일 때 가구자산이 정점을 이루는 이유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통상적으로 가구주들이 주된 직업에서 은퇴하기 시작하고, 또한 이 시기가 자녀들의 학자금 및 결혼자금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V-26]은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 보유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비중은 가구주 연령이 20대일 때 이미 39.5%이며, 30대에는 64.4%로 급등한 후 이후 연령이 올라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대 이상인 경우에는 84.4%에 달한다. 가구주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에도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는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50대에 비해 60대인 경우 부동산 보유액은 평균 2,651만 원으로 8.9%가 감소하지만, 저축액은 1,991만 원으로 30.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표 V-14>는 가구주 경제활동별 자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전가구의 총자산보유액은 평균 2억 8,112만 원이고, 근로자가구는 2억 2,718만 원, 사업자가구

[그림 V-26] 가구주 연령별 부동산자산 비중: 2006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는 3억 9,310만 원, 기타 가구는 2억 5,362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 가구 대비 비중을 보면 근로자가구가 80.8%로 가장 낮았으며, 사업자가구가 13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²⁾.

[그림 V-27]은 가구주 경제활동별 부동산자산 보유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 비중은 근로자가구에서 72.2%로 나타났고, 사업자가구는 79.8%로 근로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부동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경우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지

<표 V-14> 가구주 경제활동별 자산현황: 2006

	(10,000원, ()안은 %)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	기타 가구	전체 가구
총자산 ¹⁾	22,718 (80.8)	39,310 (139.8)	25,362 (90.2)	28,112 (100.0)
순자산 ²⁾	19,117 (79.1)	34,226 (141.6)	22,241 (92.0)	24,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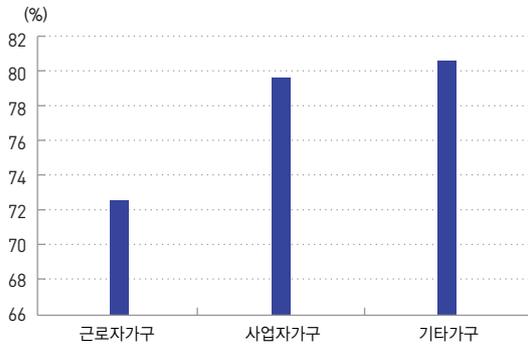
1) 그러나 가구주 연령별 자산분석 결과는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는 동일한 개인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기타 가구는 가구주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한다.

주: 1) ()안의 수치는 전체 가구의 자산을 100으로 했을 때 각 경제활동 집단의 자산 비율임.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그림 V-27] 가구주 경제활동별 부동산자산 비중: 2006



출처: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2007.

않은 무직가구였다. 무직가구의 부동산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부동산 비중이 높은 무직가구의 경우에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자산 불평등 현황

일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에 비해 자산의 불평등은 클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이란 결국 소득과 지출의 차이가 축적된 것이므로 어느 한 기간 동안의 소득 차이만을 고려하는 소득 불평등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소득

의 지니계수(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는 0.553인 반면, 자산의 지니계수는 0.80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odríguez et al, 2002). 특히 하위 40% 대비 상위 1%의 배율은 소득의 경우 73배이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1,335배에 달한다.

이정우·이성립(2001)은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1993년에는 0.571이었으나, 1997년에는 0.655까지 상승하여 순자산 불평등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8년의 소득 지니계수는 0.385였음을 감안할 때 소득보다 자산 불평등도가 월등히 큼을 알 수 있다.

남상섭(2009)은 통계청의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이용하여 자산 불평등도를 추정하였다. 동 연구에 의하면 총자산기준으로 지니계수는 2001년 0.5946에서 2006년 0.6256으로 상승하였고, 순자산기준 지니계수도 2001년 0.6293에서 2006년 0.6603으로 상승하여 자산 불평등도가 심화되었다. 이는 동 기간 중 경상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28에서 0.3493으로 하락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자산 세부내역별로 볼 때 부동산자산의 지니계수는 0.7 수준이었다.

본고에서 인용한 연구들이 사용하는 자료가 다르고

<표 V-15>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도(지니계수): 2001, 2006

	경상소득	총자산	순자산	부동산	주택	금융자산
2001	0.3528	0.5946	0.6293	0.7007	0.6677	0.6057
2006	0.3493	0.6256	0.6603	0.6927	0.6560	0.6102

출처: 남상섭, 2009.

또한 일반적으로 서베이를 통해 생산된 자산자료에 측정오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연구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이 연구들의 결과를 추세적으로 볼 때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서 한국 가구의 자산 불평등도는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남상섭. 2009. “한국가계자산의 분포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한국경제통상학회』 27(2): 59-86
- 유경원. 2008. “한국가계는 어떤 자산을 선호할까?” 『한국은행 경제교실 발표자료』.
- 이정우·이성림. 2001. “한국가계자산 불평등도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창간호. pp.39-51.
- Rodriguez, S., J., Diaz-Giménez, V., Quadri and J. Rios-Rull. 2002. “Updated Facts on the U.S. Distributions of Earnings, Income, and Wealth.”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Quarterly Review*. Summer 26(3): 2-35.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서우석 172

여가생활과 만족도 · 서우석 179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 이호영 186

VI. 문화와 여가 Culture & Leisure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19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급 측면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문화와 여가가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1990년대 이후 문화스포츠 관람자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여행의 경우 해외여행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국내여행자 비율은 감소하였다.
-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문화여가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인쇄신문 구독률은 하락하고 인터넷 신문을 보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왔다.
-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지역문화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지역문화행사에 참석하는 비율과 만족도가 2000년대 들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적으로 보면 문화예술 발전은 경제적 번영과 흐름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르네상스의 발전을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의 무역 발전과 떨어뜨려 생각할 수 없고 근대 예술에서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절대 주의 왕정과 근대 자본주의의 도약적 발전에서 비롯된 자원의 증대와 집중으로부터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관계들을 염두에 둘 때 지난 수십 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한 한국사회에서 문화계의 성장이 나타나고 개인들의 일상에서 문화적 풍요와 다양한 여가활동이 나타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화와 여가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아왔다. 문화와 여가에 대한 통계자료들이 최근에서야 수집되기 시작하였다. 자료의 정확성을 기늠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고, 집계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의 결여로 인해서 자료 해석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예술가 통계와 같이 기본적인 범주

의 확정에서도 공인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공연장과 관객수에 대한 통계 역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통계가 매우 한정된다.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사용 가능한 대부분의 시계열 자료들이 시설, 자원, 제도와 같이 가시적인 객관적 상황과 조건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개인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이나 취향과 태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드물다.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빈약한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통계청이 지난 1990년부터 『사회조사』에 문화와 여가 부문을 포함하여 주기적으로 조사를 수행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와 정부의 집계통계자료를 중심으로 1990년대 이래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국민들의 삶의 질에 초점을 맞추어 실증하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가용한 통계자료의 시간적 범위에 따른 것이다.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먼저 문화와 여가의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나타난 변화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적, 정책적 차원에서 문화와 여가 부문의 규모 및 중요성 증대를 고찰하고, 소비 측면에서는 문화향수 활동 및 관광활동의 변화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문화와 여가 부문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으로서 정보화와 지역화의 양상을 보여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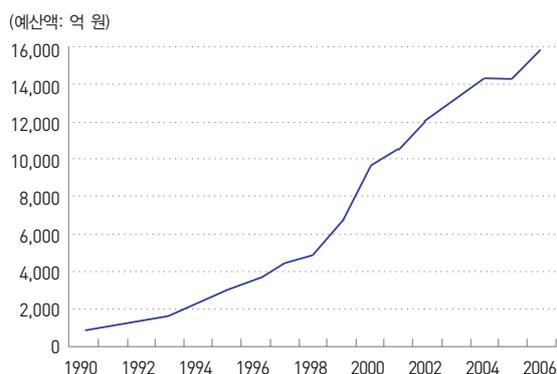
문화정책과 문화산업의 성장

1990년대 이후 문화와 여가 부문에 나타난 변화를

주도한 요인 중 하나가 정부정책이다. 정부 설립 이래 문화정책은 문교부와 공보처 등 여러 부처로 나뉘어 수행되어 오다가 1990년에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부서로서 문화부가 신설됨에 따라 문화정책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문화정책의 중요성 증가는 관련 예산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된다. 1990년 1,000억 원에 못 미쳤던 문화 부문 예산이 2006년에는 1조 5,000억 원을 넘어섰다. 전체 정부 예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문화부문 예산이 증가하였다.

[그림 VI-1] 정부의 문화부문 예산: 1990-2006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백서』, 각 년도.

비약적으로 증가한 문화 부문의 예산은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직·간접의 지원, 문화예술 시설 증설 및 운영을 통한 인프라 확충, 각급 수준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을 위해 활용되었다.

공연예술 시설을 보면 문예회관이 2002년 122개에서 2007년에는 160개까지 늘어났다. 등록공연장의 수도 2002년 303개에서 2007년에 589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공공공연장이 372개나 되어 217개인 민간공연장보다 수적으로 더 많았다.

민간공연장의 경우도 시설개선 지원, 행사개최 지원, 할인티켓 사업 등 각종 지원 제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아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공연횟수가 1991년의 4,652회에서 2008년에는 12,811회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연분야의 공급 증가는 결국 공연예술 분야의 정책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공연예술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자력으로 성장하기 힘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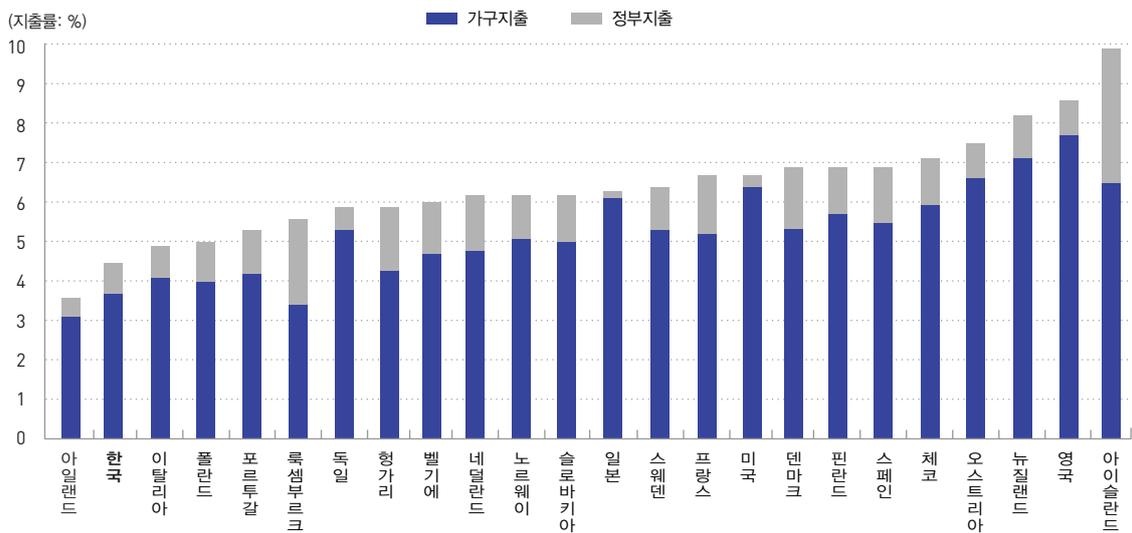
시장을 통한 공급의 확대는 직접적으로는 문화산업의 급성장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2000년에 20조 원대였던 문화산업 매출규모가 2007년에는 58조 원에 이르게 되었다.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

가하였다. 문화산업의 전체 매출규모가 2000년에 GDP 대비 3.6%였는데 2007년에는 GDP 대비 6.5%에 이르게 되었다. 규모면에서 짧은 시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문화산업은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문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영화산업의 경우를 볼 수 있다. 제작과 유통 부문의 변화를 모두 고려할 때 한국영화의 본격적인 산업화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 등지에서 수학한 젊은 전문인력의 공급, 대자본의 영상산업 진출, 민주화에 따른 작품 검열 폐지와 소재 선택의 자유 확대, 멀티플렉스의 확산을 통한 유통구조 혁신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영화산업의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질적 성장은 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졌다. 연도

[그림 VI-2]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률¹⁾: 2005



주: 1) GDP 대비 여가 및 문화활동 지출액의 비율임.

출처: OECD, *OECD Factbook 2008: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http://lysander.sourceoecd.org/vl=3796737/cl=29/nw=1/rpsv/fact2008>), 2008.

별 편차가 있으나 지난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은 미국 영화산업의 세계 시장 지배에 맞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국영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드라마, 영화 등의 영상산업과 음악산업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로 활발히 진출하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을 낳았다.

문화와 여가와 연관되는 산업은 문화산업 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집계에 따르면 다양한 옥내외 취미 활동 및 관광, 스포츠 등을 포괄하는 여가산업의 규모가 2006년 기준으로 71조 3,457억 원으로 추산된다. 여가산업에서 가장 큰 규모를 이루는 것은 여가공간산업으로서 36조 5,365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다음으로 여가용품산업이 21조 8,947억 원, 여가서비스산업이 12조 9,144억 원의 규모로 추산되었다.

또한 2006년의 여가산업 규모가 2005년에 비해 12.2%가 성장하였으니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할 수 있다. 2005년 대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부문은 여가용품산업으로 26.3%의 증가율을 보였다. 스포츠 및 아웃도어 여가용품업이 31.1%나 성장하였는데 이는 스포츠 및 옥외여가활동의 증가 및 세련화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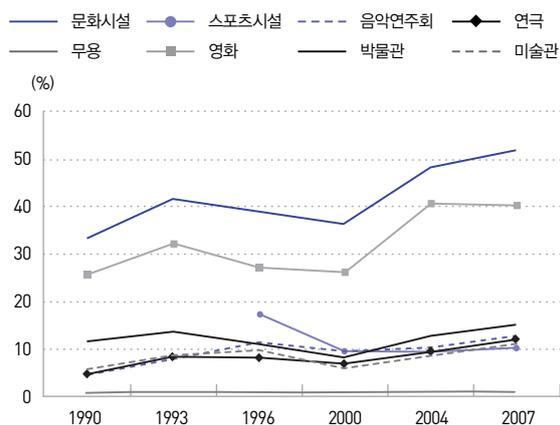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문화와 여가의 영역에서 정책과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여가 및 문화활동의 비중이 아직은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여가 및 문화활동에 대한 가구와 정부의 지출 비율이 5%를 넘지 못하였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도 한국의 문화여가 부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문화여가활동

문화여가활동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비율의 변화를 볼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1990년부터 3-4년 주기로 6회에 걸쳐 문화와 여가 부문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몇 번이나 문화예술과 스포츠를 관람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문화예술의 세부 항목으로는 음악회, 연극, 무용,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등 6개 장르가 포함되었다.

이 조사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한 문화예술관람자의 비율은 2007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1990년 조사에서 문화관람자 비율이 30%대 초반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문화관람자의 비율이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1996년과 2000년에는 그 비율이 감소했으며 세부 항목들에서도 고르게 관람비율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림 VI-3]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¹⁾: 1990-2007



주: 1) 지난 1년간 문화예술 공연이나 행사 또는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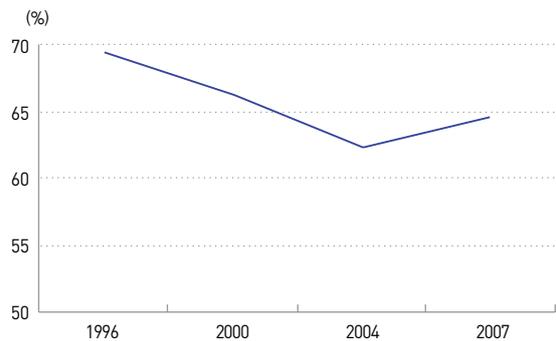
이는 당시의 경제위기가 문화예술 소비 행태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해석된다.

세부항목들 중에서 가장 관람빈도가 높았던 것은 영화였다. 1년 동안 영화를 관람한 국민의 비율이 2000년까지 30%대 전후였다가 2004년과 2007년 모두 40%대에 달하였다. 영화 관객층이 2000년대 들어서 더 두터워진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문화예술 부문 항목들에서도 관람비율의 증가가 나타났으나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어 영화를 제외한 문화예술 소비자층은 그리 두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여가활동 지표인 레저시설 이용은 1996년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었다.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산림욕장, 놀이공원 등의 레저시설 이용자의 비율은 1996년 70%에 가깝다가 2000년과 2004년에 60%선까지 감소하였고 2007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 증가를 통해 나타난 주요 변화들 가운데 하나가 관광여행의 증가이다. 여행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여가활동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그림 VI-4] 레저시설 이용률¹⁾: 1996-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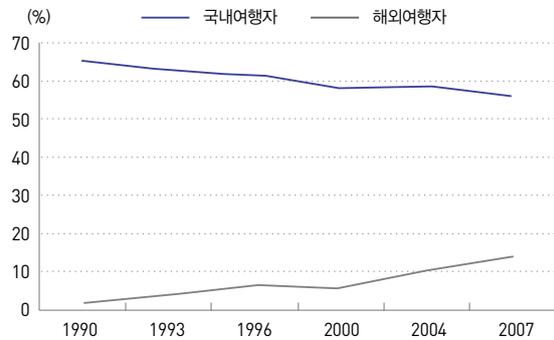


주: 1) 지난 1년간 관광명소, 온천장, 골프장, 스키장, 해수욕장, 산림욕장, 놀이공원 등의 레저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해외여행자 비율은 199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국내여행자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여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내 관광산업의 기반이 축소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림 VI-5] 국내 및 해외 여행률¹⁾: 1990-2007



주: 1) 지난 1년간 국내 관광여행과 해외여행을 각각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정보화의 영향

인터넷의 보급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화 및 여가 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화가 문화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 이용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화실태조사』에서 인터넷을 무슨 목적으로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복수응답선택 방식으로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자료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정보화 과정에서 문화여가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여가활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표 VI-1〉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여가 목적의 이용률: 1999-200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인터넷 이용률	22.4	44.7	56.6	59.4	65.5	70.2	72.8	74.8	76.3	77.1
문화여가 목적 이용률 ¹⁾	-	-	-	-	-	-	-	-	-	-
여가활동	-	-	-	-	-	-	78.7	83.4	86.1	92.9
게임/오락	14.5	21.4	-	-	-	-	-	-	-	-
게임	-	-	19.8	44.0	52.5	53.6	-	-	-	-
오락	-	-	4.3	7.5	19.5	20.8	-	-	-	-
동호회	-	-	2.2	11.1	7.0	6.7	19.9	17.4	36.5	49.1
기타	1.1	8.0	13.2	0.8	-	-	-	-	-	-

주: 1) 전체 인터넷 이용자 중 문화여가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각 년도.

2000년에는 전체의 10% 내외로 추정되었는데 2008년에 전체의 약 70%가 되었다. 이 변화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문화여가활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새로운 정보통신매체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기존 매체 이용의 변화를 보면 신문을 보는 인구의 비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구독종류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종이신문 구독 비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 인터넷신문을 보는 사람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TV시청의 경우 시청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시청시간은 2000년대 들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서인구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고 평균 독서권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독서 감소 현상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역문화 진흥

과거에는 문화여가 부문의 기반 시설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수도권에는 자연환경과 전통유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시설 정도였다. 중요한 문예행

〈표 VI-2〉 대중매체별 이용률과 독서율: 1990-2007

	1990	1993	1996	2000	2004	2007
신문구독률	66.6	70.5	72.2	65.1	63.8	68.2
인쇄신문 구독률	-	-	-	97.1	82.8	73.0
인터넷신문 구독률	-	-	-	20.7	40.4	59.8
TV시청률	93.9	94.8	95.6	96.5	96.4	95.9
독서인구 비율	61.3	64.1	62.6	59.4	62.2	58.9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표 VI-3〉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2003-2008

	전체 예산 (억 원)	문화예산 (억 원)	문화예산 비율(%)	분야별 문화예산(억 원)			
				문예진흥	문화산업	관광	문화재
2003	973,503	18,508	1.9	8,880	816	5,124	3,688
2004	971,778	22,782	2.3	11,518	838	6,213	4,213
2005	1,058,547	25,066	2.4	12,540	1,669	6,285	4,572
2006	1,177,253	24,568	2.1	13,397	1,756	5,902	3,513
2007	1,265,371	25,991	2.1	14,349	1,517	6,513	3,612
2008	1,493,892	34,541	2.3	17,192	2,456	9,580	5,31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문화정책백서』, 2009.

사들은 대부분 서울에서 진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집중화 경향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중요한 변화 동향이 관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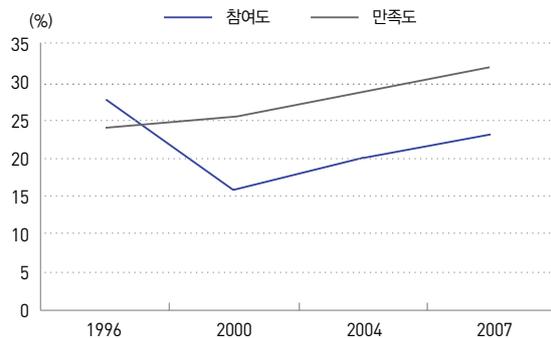
지방자치제의 도입 이후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지역문화 진흥의 동력이 되었다. 지자체의 문화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요시된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지자체 문화예산의 증가이다. 지자체에서 문화예산의 증가 속도는 전체 예산의 증가 속도를 능가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중앙정부보다 높다. 특히 문예진흥과 문화산업 분야의 예산이 이 기간 동안 급증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이 분야들의 예산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지역 문화에서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축제 형태의 행사인데,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80% 가량이 1990년대 이후 시작된 것이다.

지역문화 진흥의 성과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지표로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의 증가와 만족도의 개선 현황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이 2000년에 낮아졌다가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 비하여 2000년에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율의 감소가 나타난 것은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고 질문 방식의 변화도 다소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1996년의 조사에서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2000년 조사부터는 지난 1년의 기간을 일자까지 명시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경험에 대해 질문하였다. 2000년대에 수행된 세 번의 조사에서는 동일한 방식의 조사가 유지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참여율과 만족도가 모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6〕 지역문화예술행사 참여도와 만족도: 1996-200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여가생활과 만족도

요 약

- 여가를 중요시하는 의식의 확산과 함께 여가산업의 성장과 여가시간 및 여가비용 지출의 증가가 나타나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의 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여가활동 방법으로는 TV시청이나 수면, 휴식과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보다 적극적 여가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의 비율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서 증가하였다.
- 여가 관련 조건의 개선이나 적극적 여가활동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가 만족도는 2000년대 들어서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여가 불만의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여가는 생활의 잔여 범주에 불과했다. 직업, 가사, 공부 등의 중요한 일들을 하고 남는 시간으로서 여가는 말 그대로 여분(餘)의 한가함(暇)이었다. 근면이 미덕으로 강조되던 고도성장기의 상황에서 여가는 다른 중요한 일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포기될 수 있는 혹은 기꺼이 포기해야만 하는 삶의 부차적인 영역에 머물렀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여가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의식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젊은 세대 뿐 아니라 다른 세대에서도 여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드러난다. 2006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직업의식 조사』에 의하면 젊은 세대로 갈수록 여가를 중시하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여가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는 50대 이상의 연령집단에서도 여가가 일보다 더 중요하거나 일만큼 중요하다는 취업자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서는 점점 더 중요시되는 여가문제와 관련하여 여가산업의 발전 양상, 여가시간과 비용 및 여가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가산업의 성장

여가에 대한 의식 변화는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수요변화에 맞추어 여가와 관련된 산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스포츠산업의 경우 1990년대 초반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8 체육백서』에 따르면 2007년을 기준으로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23조 원을 넘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6% 수준을 차지하였다. 스포츠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일본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가활동 변화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골프이다. 골프장 수가 1995년의 96개소에서 2008년에는 311개로 224% 늘어났고 연간 골프장 이용객수는 같은 기간에 800만 명에서 2,398만 명으로 200% 증가하였다. 골프장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외국과 비교해 보면 이용객 대비 골프장 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가시설에 대한 사회적 공급을 확대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관광레저도시 개발이 그 대표적인 시도이다. 도시 전체를 관광과 여가활동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개발의 트렌드가 되었다. 또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리조트와 테마파크를 유치하여 지역개발을 꾀하고 있다. 공급의 과잉을 우려할 정도로 여가 관련 산업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가시설의 고급화, 다양화, 복합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리조트의 경우 우리나라 여가산업의 변화를 잘 보여준다. 1980년대의 도입기에는 리조트 회원권이 고가

의 분양가격으로 인해 부의 척도로서 인식되었다. 이후 공급이 확대되면서 대중화되었다가 2000년대 이후에는 수요의 확산과 함께 한 단계 높은 차원의 고급 시설들이 등장하면서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다.

여가활동 관련 용품, 공간, 서비스 산업들이 급성장하면서 여가는 이제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았다. 테마파크와 같이 수요의 확충에 대해 비관적인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앞으로도 여가 관련 산업이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기대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공급의 확대는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및 의식에 대한 실증적 고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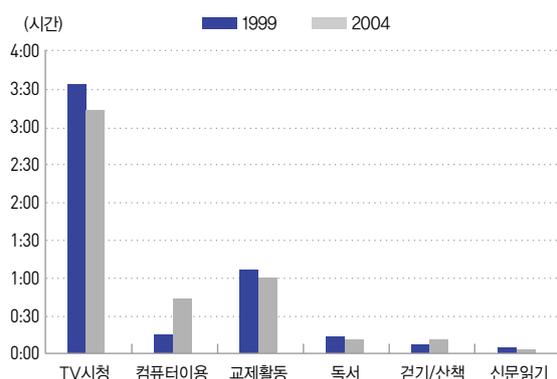
여가시간과 여가비용

여가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요인이 시간과 비용이다. 시간과 비용은 우리가 하고 싶은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들이다.

2004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결과 필수생활시간과 의무생활시간을 제외한 여가생활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13분으로 나타났다. 1999년과 비교하면 여가시간이 12분이나 증가하였다. [그림 VI-7]은 여가활동이 활발한 일요일의 여가생활시간을 항목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TV시청과 신문읽기, 교제활동 시간이 줄어든 반면 컴퓨터 이용과 걷기·산책 시간이 늘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미디어 이용에서 나타났다. 매스미디어의 이용이 줄고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 이용이 늘어났다. 걷기·산책은 다른 요일에도 1999년에 비해 시간이 늘었고 하루 10분 이상 걷기·산책하는 사람의 비율도 5% 이상 증가하였

다. 국민들은 늘어난 여가시간을 새로운 정보매체의 이용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용하였다.

[그림 VI-7] 일요일 여가시간: 1999, 200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5.

5년 전에 비해 여가시간이 길어졌으나 국제비교 연구의 결과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8]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가백서』에서 발표한 비교 자료의 결과이다.

[그림 VI-8]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¹⁾



주: 1) 한국의 2004년 자료는 『생활시간조사』, 2008년 자료는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이며, 다른 나라의 기준 년도는 뉴질랜드의 1999년 조사를 제외하고 모두 2000년대임.

출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8 여가백서』,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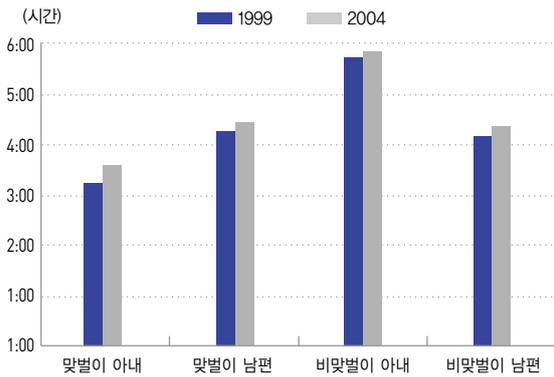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방법과 항목들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가시간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교국가와의 항목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항목 조정 결과, 한국의 여가시간은 비교대상 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긴 수준임을 고려하면 여가시간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아직 짧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OECD의 2008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1,777시간인데 비해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2,357시간에 달한다. 1999년에 비해 5년 동안 여가시간이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다.

여가시간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다. 다른 사회구성원들보다 여가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취약집단들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맞벌이 가구의 주부이다. 통계청이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맞벌이 가구와 비맞벌이 가구의

남편들 사이에는 여가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맞벌이 가구의 아내는 수입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함에 따라 여가시간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짧다. 2004년 조사 결과에서는 맞벌이 아내의 여가시간이 5년 전에 비해 22분이나 증가함에 따라 다른 집단들보다 여가시간의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다른 집단들에 비해서 여전히 맞벌이 아내의 여가시간이 적지만 다른 집단들과의 차이가 5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VI-9] 맞벌이 및 비맞벌이 가구 부부의 여가시간: 1999,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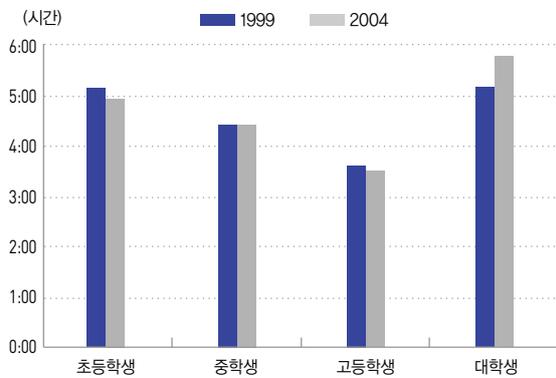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5.

학생 역시 한국사회에서 여가시간이 짧은 집단이다. 장시간의 학습 시간으로 인해 학생 집단은 성인들에 비해 하루 평균 30분 이상 짧은 여가시간을 가진다. 그러나 5년 전에 비해 학생집단의 여가 시간은 9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세 이상 성인들의 여가 시간이 13분 증가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가시간 부족이 학생 집단 전체적으로는 개선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을 학령별로 나누어 보면 학생 집단의 여가시간 증가는 대학생 집단의 여가시간 증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초등학

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 가장 크게 여가시간이 감소한 집단은 초등학생 집단이었다. 여가활동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 집단의 여가시간 감소는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림 VI-10] 학교급별 학생의 여가시간: 1999, 200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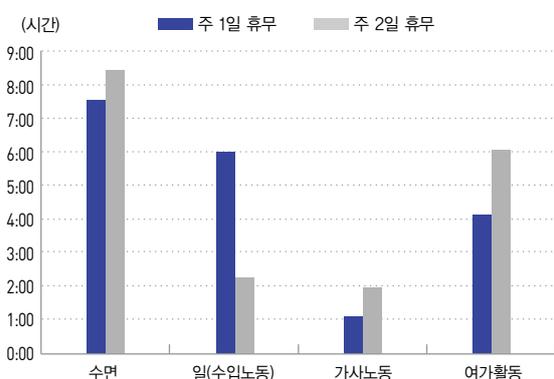
정부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 도입은 여가시간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생활시간조사』 결과, 주 5일 근무자는 주 1일 휴무자에 비해 토요일 평균 1시간 53분 이상 더 많은 여가활동 시간을 가졌다.

여가활동 내용을 보면 미디어 이용과 같은 소극적인 활동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반면, 교제 활동, 학습, 관람 및 문화행사참여,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취미 활동 등에서 모두 차이가 나타났다. 주 5일 근무자는 늘어난 여가시간을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 5일 근무의 확산이 삶의 질 개선에 실제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가활동의 또 다른 제약 요인인 비용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비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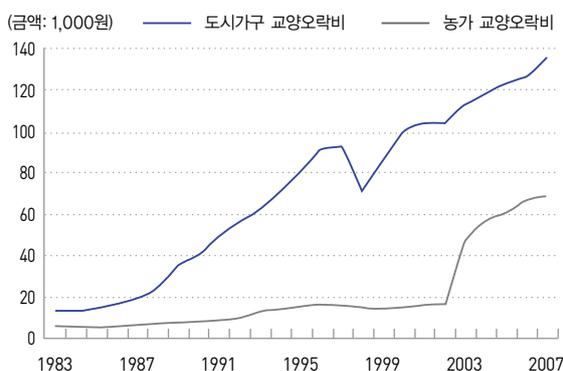
요하다. 통계청이 1983년부터 2007년까지의 『가계 동향조사』와 『농가경제통계』를 수합하여 제시한 가구의 여가활동 비용 지출을 보면 도시가구와 농가 모두가 기간 동안 여가활동비용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VI-11] 휴무형태별 시간 활용: 2004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2005.

[그림 VI-12]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여가활동 지출액: 1983-2007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여가활동과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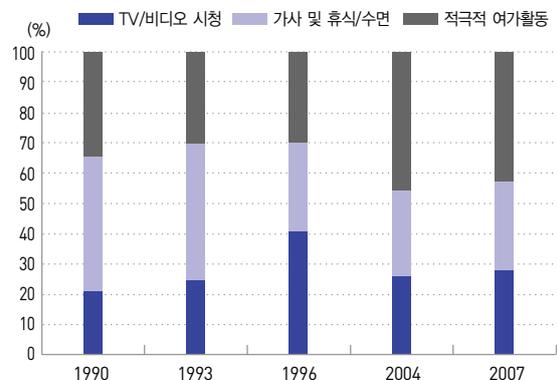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은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

제 삶의 질이 개선된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여가활동(TV시청, 휴식/수면)과 적극적 여가활동(창작적 취미, 스포츠, 여행)의 변화 추이를 비교하였다. 소극적 여가활동도 휴식과 여유를 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체적 건강이나 자아발전에 있어서 적극적 여가활동이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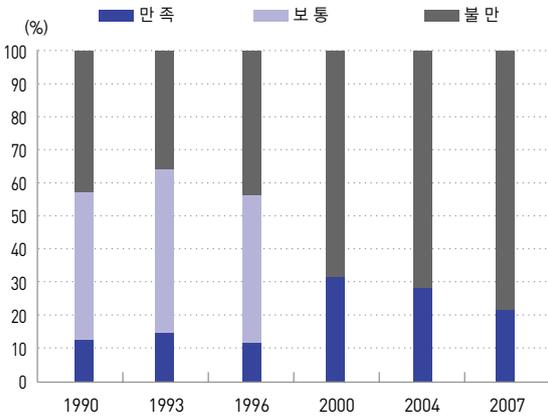
『사회조사』에서 여가활동 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단일응답으로 조사된 경우와 복수응답으로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1990년과 1993년에는 주된 여가활동 방법을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1996년에는 우선순위로 구분하여 두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여가활동 방법을 중요한 순서에 따라 세 가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 방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0년의 경우 세 가지를 선택하였으나 우선순위를 구분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 방법을 파악할 수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VI-13] 가장 중요한 여가활동 방법: 1990-200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VI-14]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여부¹⁾: 1990-2007



주: 1) 응답 범주는 1996년까지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 '매우 불만' 5가지로 구성되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 '만족'과 '불만족' 2가지로 구성됨.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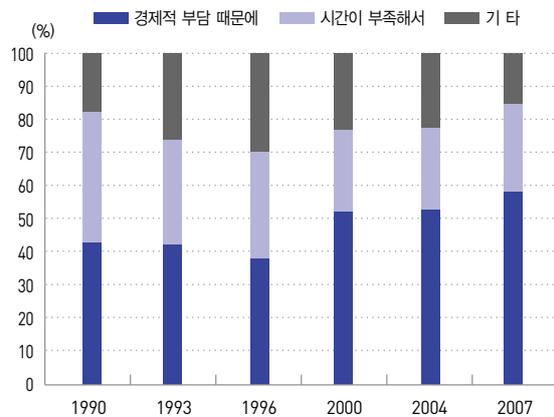
TV시청 및 비디오 시청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 수면 및 가사잡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 감소한 반면, 적극적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 여가활동의 내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여가활동의 기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여가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보았다. 『사회조사』에서는 1990년, 1993년, 1996년에 여가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고, 2000년, 2004년, 2007년에는 여가활동 만족 여부를 만족과 불만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조사방식의 차이로 인해 1990년대와 2000년대 자료는 직접 비교할 수 없어 비교가능한 기간별로 변화를 관찰하였다. 1990년대에는 만족보다 불만의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뚜렷한 변화 양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만족이 줄고 불만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가 불만족의 증가는 여가 제약 요인들의 개선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역설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 질문한 여가 불만족 이유를 경제적 이유, 시간 부족, 기타의 세 가지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여가활동 불만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기타 이유로는 교통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건강, 체력부족,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건강, 체력 부족이 가장 많았다. 시계열 비교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서 시간 부족의 응답 비율은 줄고 경제적 부담의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여가 제약 요인들이 적은 폭으로나마 개선되고 있으며 여가활동과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서 여가활동 기회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여가 만족도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불만의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실은 기대와 실제 사이

[그림 VI-15] 여가활동 불만 이유: 1990-200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년도.

의 괴리가 여가 불만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여행을 비롯하여 자기개발,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활동 등의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적극적 여가활동을 경제적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우석 (서울시립대학교)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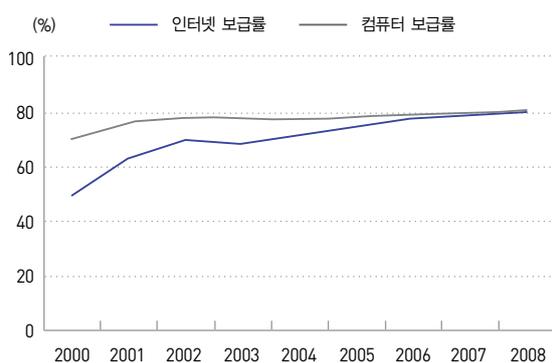
-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일상생활로 스며들면서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참여적 인터넷 사용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 매체로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인터넷을 통한 커뮤니티, 블로그 활동 등이 여가생활의 일환으로 자리 잡았다.
- 인터넷의 이용시간, 특히 젊은층의 이용시간이 매우 많아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세대 간 질적 차이를 낳고 있다.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정보사회에 편입된 나라들 중의 하나다. “네트워크 사회는 모든 정황에서 어떤 기본적인 공통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그 사회가 진화하는 문화적, 제도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를 띤다”는 카스텔의 주장처럼 한국 사회에 인터넷이 스며드는 과정 역시 고유의 역사와 문화, 제도적 특성들을 반영해왔다. 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뒤처져 후진국에 머물렀던 과거의 경험이 정부가 주도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나 인터넷 보급 등의 정책을 정당화하였고 이는 많은 후발국가에게 하나의 모델로 자리 잡기까지 했다. 아파트 중심의 인구 밀집형 도시 구조는 정보화의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공하였고 전통적인 교육열, 1987년 이후 시작된 민주화, 그리고 시민사회 및 풀뿌리 언론의 성숙 등은 국민들이 기꺼이 인터넷을 채택하는 데 있어 좋은 토양이 되어주었다. 수직적·권위적 커뮤니케이션을 대신할 수평적·민주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은 몇 가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네티즌을 만들어 준 매체가 되었다.

인터넷의 보급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서비스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터넷 공간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은 정치, 종교, 문화, 과학 등 오프라인의 거의 모든 측면을 수용해왔다. 2008년 현재 한국 가구의 인터넷 보급률과 컴퓨터 보급률은 모두 81%이다. 2000년만 하더라도 각각 39.8%와 71%로 두 보급률 간에 큰 차이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가 없어진 것이다.

[그림 VI-16] 가구 인터넷 보급률¹⁾과 컴퓨터 보급률²⁾: 2000-2008



주: 1)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접속은 제외함.

2) 2003년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2005년까지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 컴퓨터만 포함하다가 2006년부터 PDA, UMPC 등의 휴대형 컴퓨터까지 보급률에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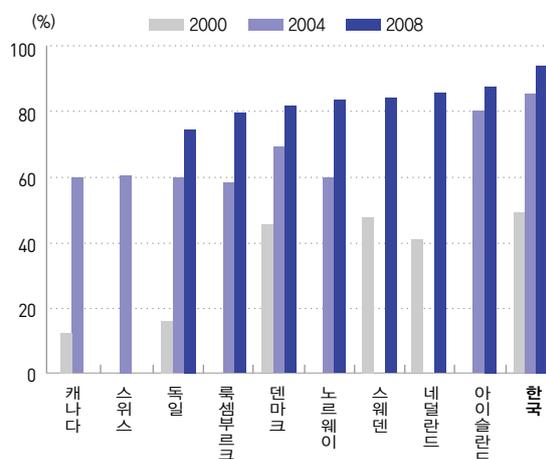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이 수치는 PC 기반의 인터넷만을 반영한 것인데 무선인터넷을 포함한 가구 인터넷 접속률은 한국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 네티즌의 36.8%가 어떤 형태로든 웹상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참여적 인터넷 사용면에서 OECD 평균을 2배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적으로 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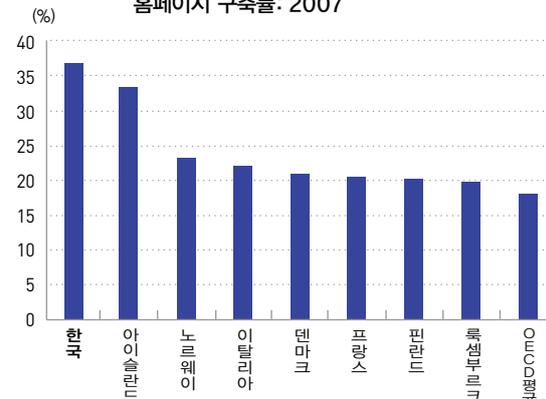
사이트들이 자사 서비스의 페이지뷰와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개인홈페이지(미니홈피, 블로그) 공간을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거시적으로는 근대화 과정이 개인화 과정과 함께 이루어지지 못했던 한국사회에서 인터넷 공간은 개성 표현과 자유로운 소통의 공간을 열어준 것이다.

[그림 VI-1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가구 인터넷 접속률(상위 10개국): 2000, 2004, 2008



출처: OECD, OECD Key ICT Indicators(<http://www.oecd.org/sti/ICTIndicators>), 2009.

[그림 VI-18]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인터넷 이용자 홈페이지 구축률: 2007



출처: OECD,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 : A Statistical Profile(<http://www.oecd.org/dataoecd/44/56/40827598.pdf>), 2008.

최근 널리 보급되고 있는 휴대용 PC와 휴대용 무선 인터넷 와이브로(Wibro) 등의 기본 장비는 누구나 현장에서 생중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해 준 환경은 풀뿌리 저널리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또 IPTV 등과 같은 미디어의 융합과 다양성은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의 변화, 즉 미디어 이용의 유동성(fluidity)을 가져왔다.

인터넷 이용 추세

한편 인터넷의 도입은 한국사회에서 구(舊) 매체의 영향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매체 조합을 통한 소비 양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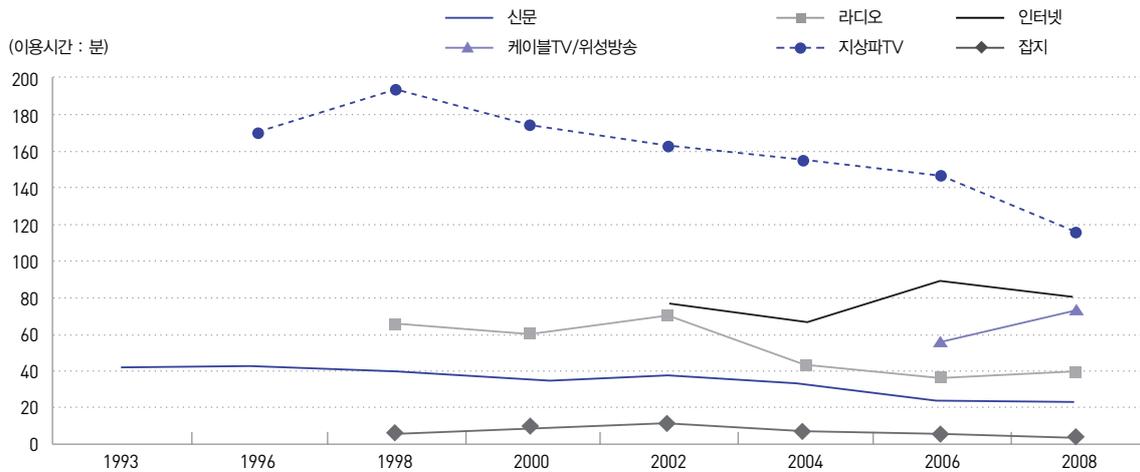
[그림 VI-19]를 보면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TV, 신문, 라디오, 잡지 등 이른바 구매체의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것에 반해 인터넷 이용시간은 상대적으로 증가세에 있다.

특히 [그림 VI-2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은 하루 평균 140분에 육박하고 있어 85분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40대 이상과 대조를 이룬다. 이처럼 인터넷의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매체들 중 가장 많은 시간 소비를 유발하는 까닭은 인터넷이 가지는 쌍방향성 및 다기능성에 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양적 차이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인터넷 활동에 있어서 세대 간 질적 차이를 낳고 있으며 때로는 갈등도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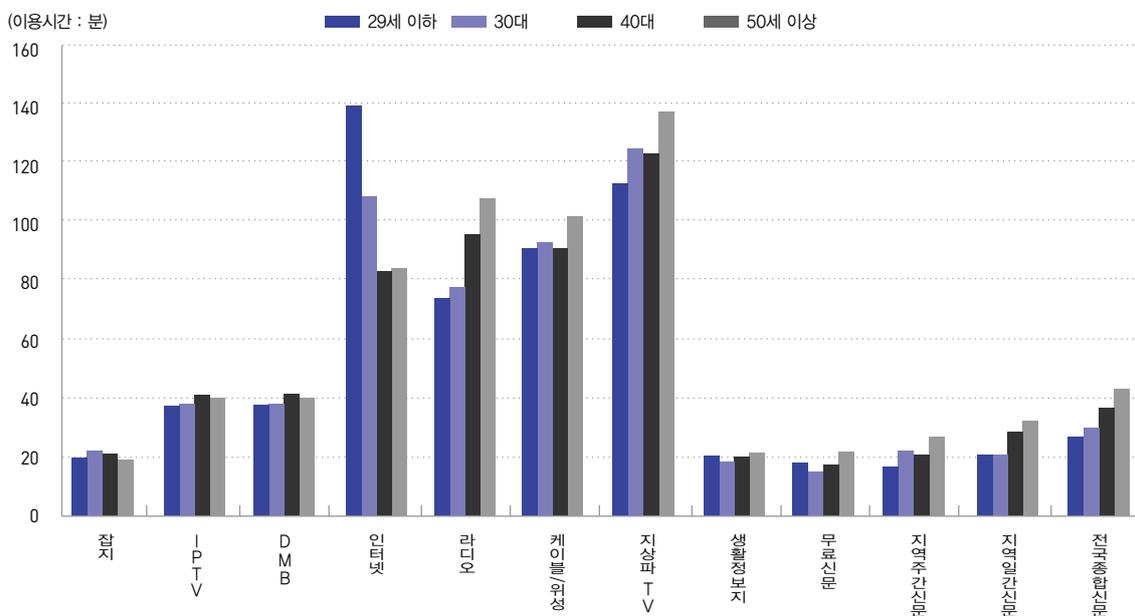
매체들 중에서는 특히 뉴스 소비에 있어서 인터넷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그림 VI-21]에서 보듯 1996년 조사 이래로 종이신문 구독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인터넷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08년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보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기사 이용자가 67.1%에 달하며 그

[그림 VI-19] 1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 1993-2008



출처: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08.

[그림 VI-20] 연령별 1일 평균 매체 이용시간: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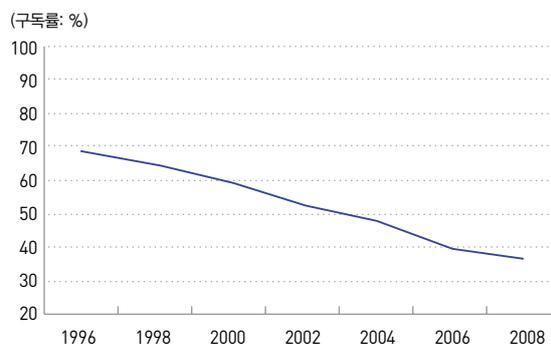


출처: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08.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문사 사이트가 아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뉴스를 구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종이신문을 통한 신문 구독이 줄었다고 해서 이를 곧 신문사의 영향력 약화로 해석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콘텐츠로서의 뉴스는 여전히 신문사나 통신사, 방송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신문기사에 노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예전에는 집에서 한두 개 내외의 신문을 구독하던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러 개의 신문 기사를 보게 됨으로써 뉴스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신문사는 속보성이나 쌍방향성 면에서 인터넷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사의 닷컴 및 기자 블로그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기사의 형식과 내용이 변화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VI-21] 신문 구독률: 1996-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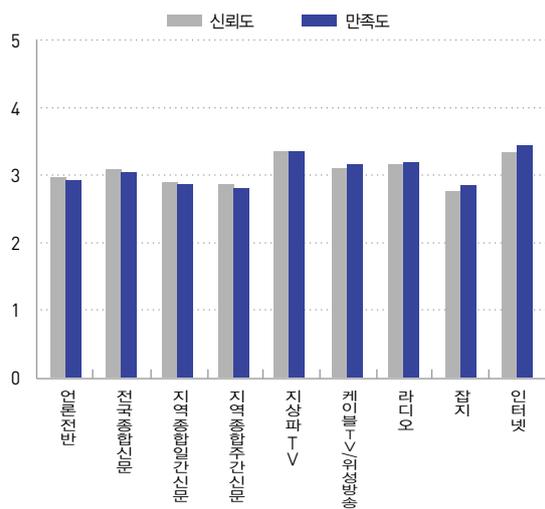
출처: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08.

다른 한편 네티즌들이 직접 생산하는 뉴스도 늘어나고 있다. 시민이 기자라는 선언과 함께 출범한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와 같은 인터넷신문사의 수와 영향력도 시민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밖에 포털들이 플랫폼을 만들어 불

로거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접 뉴스생산 자임을 표방하지는 않지만 신문기사에 준하는 정보를 유무선인터넷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최근에는 단문 블로그라고 할 수 있는 트위터 등을 통해서 특종이 만들어지거나 '최초의 뉴스'가 전파되는 경우도 생겼다.

한편 [그림 VI-22]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매체별 만족도는 인터넷(3.46점), 지상파TV(3.38점), 라디오(3.20점), 케이블TV/위성방송(3.18점), 전국종합신문(3.05점), 지역일간신문(2.89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지상파TV(3.39점), 인터넷(3.35점), 라디오(3.19점), 케이블TV/위성방송(3.14점), 전국종합신문(3.11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언론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 신뢰도는 2.97점을 각각 기록해 2006년(만족도 3.12점, 신뢰도 3.18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2] 매체에 대한 만족도¹⁾와 신뢰도²⁾: 2008



주: 1) '매우 불만족'을 1점으로 하고 '매우 만족'을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2) '전혀 신뢰하지 않음'을 1점으로 하고 '매우 신뢰'를 5점으로 하는 5점 척도의 평균점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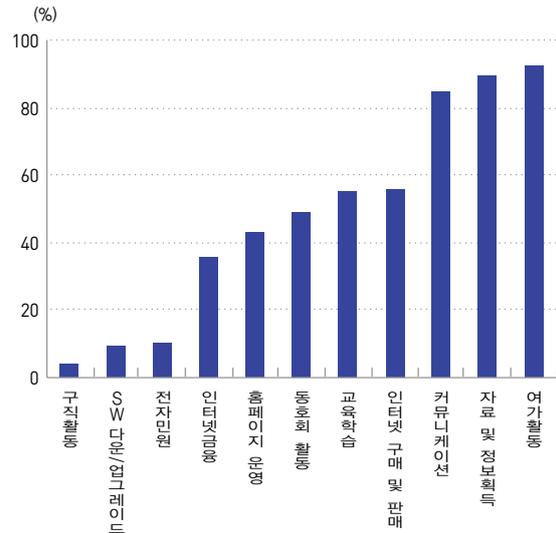
출처: 한국언론재단,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2008.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신문, TV, 잡지, 라디오, 인터넷 등 5개 매체가 동시에 보도했을 경우 어떤 매체의 보도내용을 가장 신뢰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TV라는 응답이 61.7%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0.0%), 신문(15.0%)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매체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신뢰하는 매체를 묻은 결과 KBS, MBC, 네이버(www.naver.com)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로 스며든 인터넷

[그림 VI-23]에서 보듯 인터넷은 기존의 미디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면서 다양한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인터넷은 여가생활, 특히 문화콘텐츠 이용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가장 많이 선택된 것은 음악 감상이나 게임, 전자책 등 여가활용이다.

[그림 VI-23] 이용목적별 인터넷 이용률: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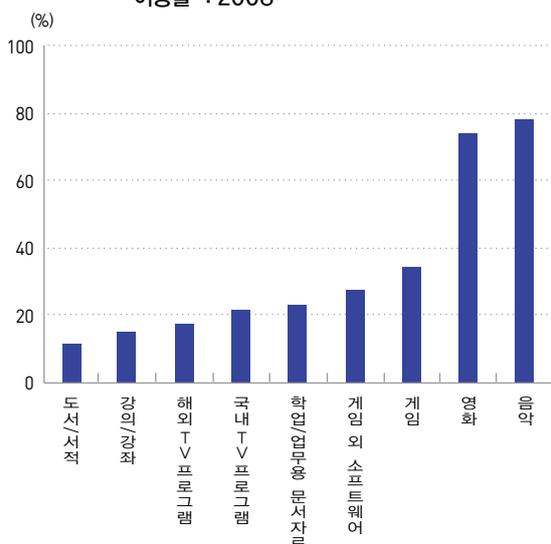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이는 인터넷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터넷을 단순히 검색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여가생활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영화감상 패턴을 조사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젊은 연령층은 인터넷 무료 파일공유 및 다운로드 사이트를 영화를 볼 때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매체로 꼽았다. 영화선택의 다양성 면이나 경제성 면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화보기가 상당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인터넷 문화콘텐츠 이용자들은 일반 이용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즐겨 이용하는 콘텐츠는 음악(78.7%)과 영화(74.3%)이다. 이들은 주로 파일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과 영화를 감상하고 배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I-24] 주로 이용하는 파일서비스 내용별 인터넷 이용자¹⁾: 2008



주: 1) 복수응답을 포함시킴.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하지만 온라인의 문화이용자들은 최근 당국의 저작권 위반 사례 집중단속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 저작권 위반에 대한 실정법 적용 조치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이 단속에서는 특히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불법적인 음악이나 비디오 클립을 게시하는 행위가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일공유 사이트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온라인 사회연결망의 확대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와 블로그로 대표되는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가 회원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면서 동류집단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그룹미디어라면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이지만 훨씬 더 개방적이며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주로 포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예로 통합검색과 커뮤니티, 쇼핑, 뉴스 서비스와의 중복 방문율을 보면, 네이버(www.naver.com) 통합 검색 방문자의 89.6%가 블로그를 중복 방문하고 있으며, 다음(www.daum.net)은 카페와의 중복 방문율이 92.5%, 네이트(www.nate.com)는 미니홈피가 91.2%로 매우 높은 수치임을 볼 수 있다.

2008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50.2%가 커뮤니티(인터넷 카페·클럽) 이용자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76.4%로 가장 높고 30대가 58.3%로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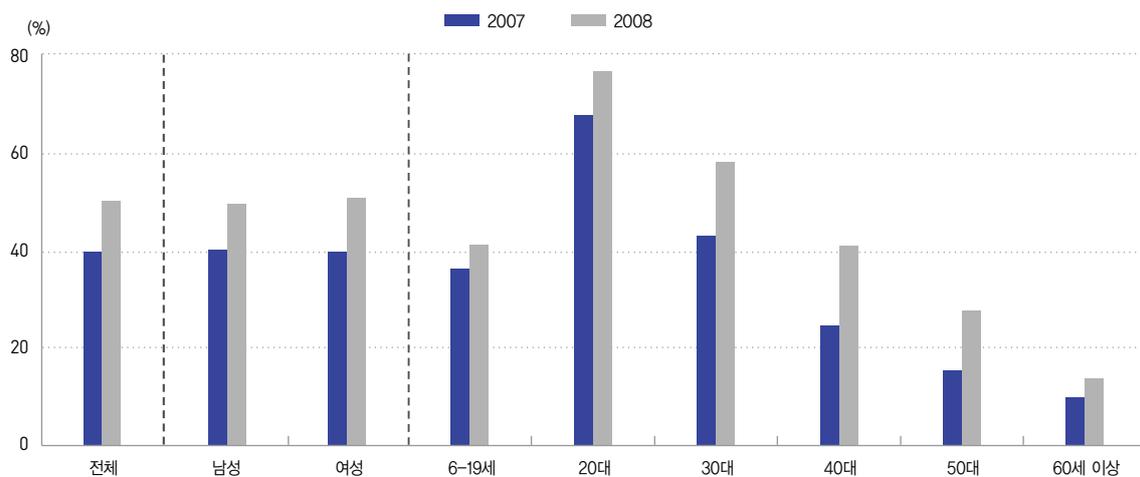
같은 조사에서 2008년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58.1%가 최근 1년 이내 타인 블로그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블로그 이용자'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타인 블로그 이용률은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으며, 연령별로는 20대의 이용률이 82.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19세 67.0%, 30대 60.2%, 40대 38.9% 등의 순이었다. 타인 블로그 이용 목적으로는 '친교·교제를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64.2%), '취미, 여가 등 개인적 관심분야 정보를 얻기 위해서'(40.3%),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글, 사진, 동영상 등을 보기 위해서'(38.7%) 등이 뒤를 이었다.

SNS 이용자의 71.4%는 SNS를 '타인과의 교류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SNS를 통한 기존 오프라인 인맥 관리 활동이 증가'(68.5%)하거나 'SNS를 통한 오프라인 신규 인맥 형성 및 관리 활동

이 증가'(60.9%)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익명성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세상에서도 한국의 SNS 이용자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맥을 중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했다. 실제로 12-49세 SNS 이용자의 98.6%가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인맥을 SNS를 통해 관리하며, 주로 친구·선후배(97.8%) 또는 가족·친지(83.4%)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SNS를 통한 신규 인맥 형성 경험자는 87.9%이며, 이 중 64.7%는 SNS에서 형성한 신규 인맥과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온라인에서 이방인과의 상호작용 중 상당수가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 특히 2008년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거 등장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 정치와는 관계없는 동호회들이 많았는데 이 역시 한국사회에 특수한, 정모나 번개 등 온라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그림 VI-25] 성 및 연령별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률: 2007,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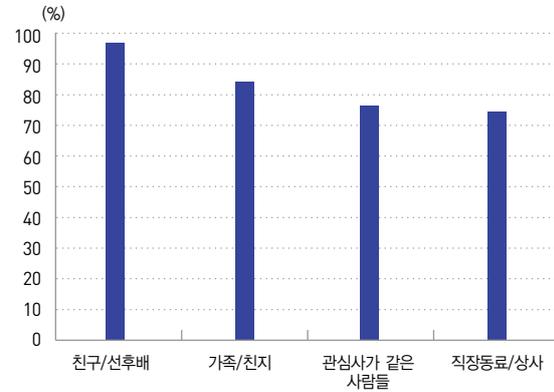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08.

오프라인 활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하지만 여기서도 모두가 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의 사회연결망에 관한 연구는 소통의 양뿐만 아니라 소통의 질, 나아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문제가 됨을 보여준다. 연령과 계층, 교육수준 등에 따라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인터넷 활용실태는 단순히 누가 인터넷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보다는 오프라인의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의 불평등한 분포가 온라인에서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하려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그림 VI-26] 온라인 사회연결망 종류별 오프라인 교제율¹⁾: 2009



주: 1) 복수응답을 포함시킴.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이용자의 SNS 이용 실태조사』, 2009.

이호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최진호 196

주거 빈곤 가구 실태 • 최진호 205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 김호정 211

VII. 주거와 교통

Housing & Transportation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2008년 현재 한국의 신주택보급률은 100.7%로서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처음으로 더 많았다.
- 2006년 한 해 동안 총 47만 호의 신규주택이 공급되었는데, 이 중 14만 4천 호는 공공부문에서 그리고 나머지 32만 6천 호는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었다.
- 한국의 일반가구 중 자가소유가구의 비율은 2004년에 62.9%인데 서구의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다.
- 1990년에 비해 2008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1.4배가 상승하였는데 아파트는 1.83배, 연립주택은 1.25배가 오른 반면 단독주택은 6.2% 하락하였다.
- 2008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용 승용차는 총 1,202만 6천 대로 1980년의 약 18만 대와 비교하면 67배가 증가하였고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72대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한국인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주거와 교통문제를 다룬다. 우선 지난 30여년간 주택이 얼마나 공급되어 그 결과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또 일반가구 중에서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인 자가소유율을 지역별로 또 시기별로 비교해 그 변화를 추적하고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비교해 한국의 주거복지 수준을 밝힌다. 또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주택가격은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기 위해서 서울, 광역시, 전국으로 나누어서 주택의 유형별로 주택가격지수를 분석한다.

교통부문에서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자가용 보유수준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 또 그로 말미암아 각 가구의 교통비 지출 패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자가용 승용차를 비롯한 각종 차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혼잡비

용은 지역별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주택의 수급

주택은 모든 국민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요건의 하나로서 개인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주택은 다른 일반 재화와는 달라서 고가성, 비이동성, 영구성 및 건설기간의 장기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수십 년간 서울 등 대도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내집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재산 격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져 가고 있으며, 또 내집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지역에 따라서 혹은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과 그 이외 지역 간의 주택의 가격차가 너무

심해 일부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심각한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 상황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표 VII-1>은 우선 한국의 주택 사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주택의 수급에 따른 주택보급률을 정리한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의 수와 주택의 수요자인 가구를 비교하여 주택재고의 부족 정도를 나타내 주는 지표로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이때 주택의 수는 거처의 단위가 아닌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도록 설계된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1채로 취급된다. 또 가구는 혈연가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가구에서 단독가구와 5인 이하의 비혈연가구는 제외된다.

이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주택

<표 VII-1> 주택보급률과 신주택보급률: 1970-2008

	주택보급률			신주택보급률		
	가구수 (1,000가구)	주택수 (1,000호)	보급률 ³⁾ (%)	가구수 ¹⁾ (1,000가구)	주택수 ²⁾ (1,000호)	보급률 ³⁾ (%)
1970	5,576	4,434	79.5	-	-	-
1975	6,367	4,816	75.6	-	-	-
1980	7,470	5,434	72.8	-	-	-
1985	8,751	6,271	71.7	-	-	-
1990	10,167	7,357	72.4	-	-	-
1995	11,133	9,570	86.0	-	-	-
2000	11,928	11,472	96.2	-	-	-
2005	12,491	13,223	105.9	15,887	15,623	98.3
2006	12,634	13,534	107.1	16,105	15,978	99.2
2007	12,760	13,793	108.1	16,364	16,295	99.6
2008	12,891	14,169	109.9	16,619	16,733	100.7

주: 1)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임.

2)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함.

3) 보급률=(주택수÷가구수)×100.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 년도.

보급률을 계산할 때 쓰여 지던 주택과 가구의 정의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그 동안의 주택과 가구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게 정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주택은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유형이 출현하고 있어 현재의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단독주택 중심의 주택 개념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구에 있어서도 최근에는 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다양한 가구의 주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가구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이 이와 같은 새로운 주택보급률의 도입 주장에 부응하여 2005년부터는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고, 가구수에 있어서도 1인 가구를 포함시킨 신주택보급률도 함께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쓰여 왔던 주택보급률의 정의에 따라 한국사회의 주택 수급상황 변화를 살펴보는 동시에 새롭게 계산된 신주택보급률도 소개하여 검토하려 한다. 2008년 현재 기준 정의에 따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109.9%로서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다. 1970년의 한국 전체 주택보급률은 79.5%였고 1985년에는 71.7%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1990년부터 상승하여 2000년에는 96.2%에 이르렀고 2002년에 처음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100.6%가 되었다. 그 이후 주택보급률은 해마다 상승해 2005년에는 105.9%, 2006년에는 107.1%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주택보급률 계산에는 요즈음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가 제외되어 있고, 또 지역별로도 주택보급률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와 같은 약점을 보완한 신주택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98.3%로 기존의 주택보급률 105.9%보다는 7.6%p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 신주택보급률도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06년에는 99.2%, 2007년에는 99.6%, 그리고 2008년에는 100.7%를 기록하였다.

이와 같은 주택보급률의 상승이 보여주고 있듯이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의 주택사정은 많이 나아졌는데, 이는 <표 V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신규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표 VII-2>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당해연도의 주택공급 실적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면 1980년에는 한 해 동안 약 21만 2천 호의 주택이 건설되었는데 공공과 민간 부문의 주택건설 실적이 거의 비슷하였고, 실질 GDP에 대한 주택투자액의 비율인 주택투자율은 1980년에 5.5%였다.

<표 VII-2> 연간 주택건설 실적: 1980-2008

	공공 (1,000호)	민간 (1,000호)	합계 (1,000호)	주택투자율 ¹⁾ (%)
1980	106	105	212	5.5
1985	132	95	227	4.6
1990	269	481	750	8.8
1995	228	391	619	7.4
2000	140	293	433	4.3
2001	128	402	530	4.7
2002	124	543	667	4.9
2003	120	465	585	5.2
2004	124	340	464	5.2
2005	141	323	464	5.1
2006	144	326	470	4.7
2007	157	399	556	-
2008	141	230	371	-

주: 1) GDP 대비 주택투자액 비율임.

출처: 건설교통부, 『건설교통통계연보』, 각 년도; 국토해양부.

이와 같은 주택건설 실적은 1987년까지는 연간 대체로 22만 호에서 28만 호 사이에 머물렀으나 1988년에 41만 호로 대폭 증가하였고 1990년에는 75만 호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에서 주택공급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1990년대 전반기로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년 동안에 총 326만 호의 주택이 신규로 건설되었는데 이는 연 평균 65만 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투자율도 평균 8%대에 이르러 역대 가장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이처럼 주택공급이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1988년 올림픽 이후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상승했고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린 것에 기인한다. 서울 주변에 분당, 일산, 평촌 등 5개의 신도시를 동시에 건설한 것도 이 시기였다. 한편 주택공급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부분의 역할은 1989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공공부분에서 민간보다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으나, 1989년 이후부터는 민간 부분이 공공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그러나 1990년대 전반기의 이와 같은 활발한 주택건설은 1990년대 후반기 이후 다소 주춤해 1990년대 후반기에는 연 평균 50만 호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2000년 이후에는 특히 2002년과 2003년에 주택공급이 늘어나 2002년에 66만 7천 호, 2003년에 58만

5천 호가 공급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다시 공급이 줄어들어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46만 호 정도가 신규로 건설되었다. 최근 2008년에는 37만 1천 호가 신규로 공급되었는데 이 중 공공부분에서 14만 1천 호가, 그리고 민간부분에서 23만 호가 건설되었고, 주택 투자율은 2006년 그 전 3년간의 5%대에서 4.7%로 다소 감소하였다.

자가소유율의 변화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집을 갖지 못하고 있다. 즉 일반가구 중에서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004년에 62.9%로 나타났는데 이는 1997년의 52.0%, 2001년의 58.9%와 비교하면 많이 상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 자가소유율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서 52.4%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민의 절반 가까이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서울 다음으로 자가소유율이 낮은 곳은 부산, 대전, 대구 등으로서 이들 세 도시는 자가소유율이 60% 내외에 그치고 있다. 거꾸로 전국에서 자가소유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73.9%를 보이고 있으며 그 다음은 인천으로 73.1%를 나타낸다. 울산과 인천을 제외하면 대체로 대도시 지역의 자가소유율이 도 지역

〈표 Ⅷ-3〉 광역시·도별 일반가구의 자가소유율¹⁾: 1997, 2001, 2004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7	52.0	44.8	47.6	43.4	55.2	48.1	49.4	-	43.1	67.4	60.0	73.3	66.0	74.2	60.0	55.7	51.4
2001	58.9	46.0	52.3	58.0	63.9	53.3	55.5	63.1	56.4	66.4	69.0	76.6	72.0	73.3	74.8	62.0	54.5
2004	62.9	52.4	58.6	60.6	73.1	62.9	60.1	66.7	62.2	66.7	69.7	72.6	70.3	70.5	73.9	67.3	65.2

주: 1) 일반가구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전국적으로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았던 1997년을 기준으로 최근 2004년까지 7년간의 자가소유율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 많은 편차를 나타낸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7년 동안에 자가소유율이 10.9%p 증가하였는데 대체로 서울과 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자가소유율의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에 자가소유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기도로 19.1%p 증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천과 대구로 각각 17.9%p와 17.2%p가 증가하였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과 경기도에서 자가소유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수도권에서의 주택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신도시의 건설로 주택공급이 대폭 늘어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자가소유율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도 지역에서는 거꾸로 자가소유율이 감소한 지역도 있다. 즉 강원과 충남, 전남에서는 1997년과 비교해 2004년의 자가소유율이 더 줄어들었다. 다만 도 지역 중에서도 경북과 경남,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도 더 높은 자가소유율의 증가를 보여 다른 도 지역과 대조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가소유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을까? <표 VII-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한국의 자가소유율은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중간 정도의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에서 제시된 주요 국가 중 자가소유율이 높은 국가는 헝가리와 스페인 등으로 이들 국가의 자가소유율은 80%를 상회한다. 이 밖에도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자가소유율이 70%를 넘어 비교적 자가소유율이 높다.

이에 비해서 미국과 영국은 한국보다 약간 높은 자

<표 VII-4>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자가소유율¹⁾: 2005

	자가소유율 (%)		자가소유율 (%)
헝가리	86.5	벨기에	66.6
스페인	83.3	핀란드	66.0
아일랜드	77.7	한국²⁾	62.9
슬로바키아	77.4	일본 ³⁾	60.9
그리스	73.2	스웨덴	60.6
포르투갈	72.9	프랑스	58.3
이탈리아	71.9	덴마크	58.2
체코	70.6	폴란드	54.4
룩셈부르크	69.4	네덜란드	54.3
미국	69.0	오스트리아	51.6
영국	68.5	독일	44.3

주: 1) 일반가구 중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

2) 2004년 자료임.

3) 2003년 자료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5; Eurostat, *EUROPE IN FIGURES – Eurostat yearbook 2008*(<http://ec.europa.eu/eurostat>), 2008; Statistics Bureau, *Japan, JAPAN STATISTICAL YEARBOOK 2009* (<http://www.stat.go.jp/english/data/nenkan>), 2009; U.S. Census Bureau, "Census Bureau Reports on Residential Vacancies and Homeownership", *U.S. Census Bureau News, CB09-11* (<http://www.census.gov/hhes/www/housing.html>), 2009.

가소유율을 보이고 일본의 자가소유율은 60.9%로 오히려 한국보다 낮다. 표에서 비교한 주요 국가들 중 자가소유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로서 각각 44.3%와 51.6%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마다 자가소유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일반인들의 주택소유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주택가격의 급등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만성적인 주택 재고의 부족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택가격이 급등했고, 이로 인해 주택 보유는 손쉬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누구를 막론하고 내 집을 소유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

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가격은 일반인들의 소득 수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져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동안 한국의 주택가격은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제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 VII-5>에 지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 그리고 전국의 주택가격지수를 주택의 형태별로 제시하였다. 이 표에서 각각의 지수는 2008년을 100.0으로 하여 계산한 것이며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일관성 있게 하락한 시기로서 1990년과 1995년 두 시점의 지수만 비교하였고, 마찬가지로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두 시점에서의 지수만 표시하였다.

우선 주택의 유형별로 주택가격지수의 변화를 보면 1990년에 비해 2008년 현재 아파트 가격은 1.83배가 증가해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하였고 그 다음은 연립

주택으로 가격이 1.25배 상승하였다. 반면에 단독 주택은 2008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0년의 가격지수는 106.2로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전국적으로 모든 주택을 종합해 보면 1990년에 비해 2008년에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평균적으로 1.4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표에서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의 변화를 보면 그 동안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상승만 한 것은 아니고 두 차례 하락하였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선 이 기간 동안의 주택가격지수의 변화를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경우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일관성 있게 주택가격이 하락하였다. 이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 추세는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관찰된다. 그러나 그 이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로 돌아서 우리

<표 VII-5> 대도시의 주택유형별 주택가격지수¹⁾: 1990-2008

	서울				6개 광역시 ²⁾				전국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아파트	단독	연립	전체
1990	41.2	74.1	76.4	56.0	70.7	124.7	94.8	87.1	54.6	106.2	79.9	71.0
1995	37.0	66.0	69.2	50.2	61.8	113.6	85.7	78.1	50.3	96.9	73.0	64.9
1996	38.6	65.6	69.7	50.9	62.7	112.9	85.6	78.4	52.1	96.7	73.4	65.9
1997	40.6	65.3	70.6	51.9	63.9	111.0	84.9	78.4	54.5	96.1	73.8	67.2
1998	34.6	57.8	60.1	45.1	55.9	97.8	76.6	69.1	47.1	85.4	65.1	58.9
1999	39.0	58.1	59.8	47.6	59.9	96.0	73.5	70.8	51.2	84.1	63.9	60.9
2000	40.6	59.1	61.1	49.0	60.5	93.7	72.7	70.4	51.9	82.9	64.4	61.2
2005	75.4	79.0	74.3	76.0	91.9	95.2	78.5	90.9	84.1	90.7	75.2	84.3
2006	93.6	88.0	84.9	90.3	95.6	97.7	84.3	94.5	95.7	95.3	85.6	94.0
2007	96.9	94.2	92.4	95.2	97.2	99.2	91.3	96.8	97.8	98.0	92.7	97.0
200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2008년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백분율 지수임.

2)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포함됨.

출처: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나라가 외환위기를 겪기 직전인 1997년까지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1998년에 다시 급격히 하락해 1990년 이래 가장 낮은 주택가격지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1999년부터는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 2003년까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2004년에 잠시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다시 2005년부터는 계속 상승해 2008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단독이나 연립주택은 1990년 이래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해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1998년과 2000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상승하다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2004년에 잠시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가격지수는 서울의 경우 아파트는 1990년에 41.2였으나 1998년에 34.6으로 가장 낮았고, 단독주택은 1990년에 74.1이었으나 1998년에 57.8로, 그리고 연립주택은 1990년에 76.4였으나 1999년에 59.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간 주택가격이 가장 급등했던 해는 2002년으로 나타난다. 즉 서울의 경우 아파트의 가격지수는 2001년에 48.5였으나 2002년에는 63.4로 급등해 지수상으로는 한 해 동안에 무려 31%나 가격이 폭등했다. 6개 광역시의 경우에도 주택지수가 2001년의 69.5에서 2002년에 81.7로 뛰어 18%가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아파트 가격이 한 해 동안에 23% 상승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06년에 다시 한 번 급등하여 24%의 가격 상승을 기록하였다.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과 일상생활의 변화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전국 곳곳을 이어주는 도로망의 확충 및 정비와 더불어 국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8년간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었다. <표 VII-6>에서 보면 1980년에는 등록된 자가용 총 대수가 17만 9천 대에 불과하여 1가구당 평균 0.02대의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8년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총 자가용 승용차는 1,000만 대를 넘어서 1,202만 6천 대에 달하였다. 이는 1980년의 17만 9천 대와 비교하면 67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2008년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0.72를 기록하였다. 2005년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반가구 중 자가용을 소유한 가구는 61.5%로 나타나고 있다.

<표 VII-6> 자가용 등록대수와 1가구당 자가용 대수: 198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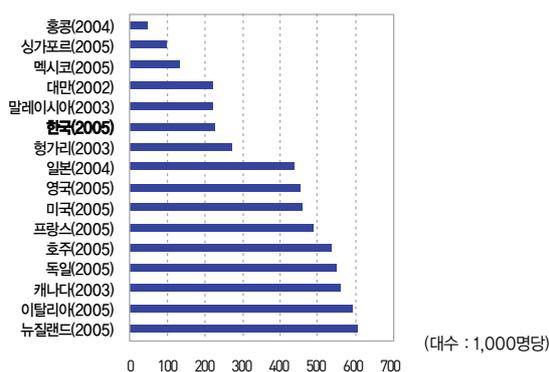
	자가용 승용차 대수 (1,000대)	1가구당 대수
1980	179	0.02
1985	449	0.05
1990	1,902	0.17
1995	5,778	0.45
2000	7,798	0.54
2005	10,759	0.67
2006	11,219	0.69
2007	11,674	0.71
2008	12,026	0.72

출처: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연보」, 각년도.

한국에서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가장 빠르게 진행된 시기는 1985-1990년으로 나타난다. 단순히 증가율을 놓고 본다면 이 기간 동안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은 연 평균 64.7%나 증가해 그 전 1980-1985년 기간의 30%나, 그 이후 1990-1995년 기간의 40.8%에 비해 엄청난 증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 추세는 1995년 이후에는 많이 완화되어 1995-2000년 동안에는 연 평균 7.0%로, 그리고 최근 2000-2008년에는 7.1%로 나타났다.

2005년 현재 한국은 인구 1,000명당 231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자. <그림 VII-1>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에서 승용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뉴질랜드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인구 1,000명당 607대의 승용차를 보유해 평균 1.6명이 승용차 1대를 보유하고 있다. 뉴질랜드 다음으로 승용차 보급률이 높은 나라는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호주의 순으로서 이들 국가의 승용차 보유는 인구 1,000명당 500대를 넘는다.

[그림 VII-1]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승용차 보유율



출처: 통계청, 『2008 국제통계연감』, 2009.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나라는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헝가리 등을 들 수 있다. 그림에서 승용차 보유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홍콩으로 인구 1,000명당 53대를 보이는데, 이는 싱가포르(101대)와 마찬가지로 도시국가로서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국제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의 승용차 보급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본바 대로 자가용 승용차의 획기적인 증가는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지출 중 교통비 지출의 양상도 많이 변화시켰다. 즉 <표 VII-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자가용 승용차의 보급이 미미한 1985년의 경우 우리나라 가구당 교통비 지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아서 전체 지출의 4.6%에 불과하였다. 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교통비 지출은 공공교통에 집중되어 있고 자가용에 대한 지출은 전체 교통비 지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0년부터는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 규모가 공공교통비를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가구의 교통비 지출 중 자가용에 대한 지출의

<표 VII-7>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1985-2008

	교통비		공공교통		자가용	
	금액(원)	지출 비중(%)	금액(원)	지출 비중(%)	금액(원)	지출 비중(%)
1985	14,553	4.6	13,131	4.1	1,422	0.4
1990	45,499	6.6	20,880	3.0	24,619	3.6
1995	116,245	9.2	36,987	2.9	79,257	6.3
2000	184,397	11.3	49,940	3.1	134,457	8.2
2005	228,460	10.9	58,200	2.8	170,260	8.1
2006	245,439	11.3	58,952	2.7	186,487	8.6
2007	255,112	11.2	61,045	2.7	194,068	8.6
2008	267,686	11.3	61,442	2.6	206,244	8.7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 년도.

〈표 VII-8〉 전국과 광역시별 도로교통 혼잡비용: 1995-2006

(10억 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1995	11,565	3,055	1,562	335	760	168	521	-
2000	19,448	4,714	2,661	779	1,305	711	699	280
2001	21,109	5,087	2,973	853	1,482	805	798	323
2002	22,135	5,310	3,048	925	1,602	877	874	348
2003	22,769	5,640	3,103	1,025	1,638	929	938	384
2004	23,116	5,724	3,384	1,086	1,654	800	948	389
2005	23,698	6,019	3,480	1,185	1,747	723	1,034	377
2006	24,621	6,736	3,290	1,201	1,970	841	974	429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각 년도.

비중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 1995년에는 공공교통비의 2.1배, 2000년에는 2.7배로 늘어났고 2008년에는 3.3배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다.

1985년 1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은 14,553원이었는데 2008년에는 267,686원으로 늘어났고, 전체 가구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85년의 4.6%에서 2008년에는 11.3%로 증가했다.

자가용 승용차의 대중화는 한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의 통근, 통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현재 12세 이상 된 인구 3,947만 명 중에서 매일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통근, 통학하고 있는 인구는 2,41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통근자는 1,793만 명, 그리고 통학 학생은 625만 명이다. 이는 12세 이상 인구의 61.3%에 해당한다.

이 통근, 통학자가 12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0년에는 50.3%였으나 2000년에는 63.1%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 다소 감소된 61.3%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매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승용차의 비율은 32.3%, 버스는 22.8%로

서 시간이 흐를수록 승용차 이용비율은 증가하고 거꾸로 버스 이용비율은 감소해 이제는 버스보다도 승용차가 통근, 통학자들의 주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승용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이 편리해진 면도 있지만 그 반면 우리나라 도로교통의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증가하고 있다. 〈표 VII-8〉은 대도시 지역과 전국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때 도로교통 혼잡비용이란 특별시, 광역시 및 지역 간 도로에서 도로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무려 약 25조 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은 약 6조 7,360억 원, 부산은 3조 3,290억 원 등으로 대도시의 인구에 비례하여 혼잡비용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도로교통 혼잡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해 전국적으로는 1995년에 비해 2006년에는 2.1배가 증가하였다. 또 지역별로도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혼잡비용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진호 (아주대학교)

주거빈곤 가구 실태

요 약

- 현재 우리나라는 시설, 침실, 면적, 그리고 구조·성능·환경 등 네 부분으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 2005년 현재 한국의 일반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약 2,060,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13%를 점한다.
- 이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미달 사유는 시설기준 미충족이 가장 많고 면적기준, 침실기준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그러나 기준미달 사유는 지역별로 달라 도시지역인 동부에서는 면적기준 미충족이 가장 많고 농촌인 읍면부에서는 시설기준 미충족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택은 사람들의 생활을 담는 그릇으로서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일부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를 이룩하려면 경제적인 복지 못지않게 주거의 복지도 일정 정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의 주거복지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가구의 실태를 분석하려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의 최저주거기준을 살펴보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규모를 파악한 후, 이들 기준미달가구의 사회, 경제적 및 주거특성을 분석한다.

최저주거기준

최저주거기준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유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04년에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설정, 공고한 주거기준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2000년이었으나 당시의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준이었다.

2004년에 법제화된 최저주거기준은 크게 시설기

준, 침실기준, 면적기준,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시설기준으로는 전용의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침실기준에서는 가구원수를 고려한 방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별도의 부부침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의 침실과 분리되어야 한다. 또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되어야 하며 노부모는 별도의 침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면적기준에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총 주거면적을 규정하는데 예컨대 1인 가구일 때에는 최소 주거 면적이 12m², 2인일 경우는 20m², 4인일 때는 37m²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는 우선 영구건물로서 내열, 내화, 방열, 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확보할 것,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설비를 구비할 것,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고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자

연재해의 위험이 현저하지 않을 것 등이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표 VII-9〉는 1995년, 2000년, 2005년 센서스 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규모를 보여준다. 최저주거기준을 판별하는 4가지 기준 중 구조·성능·환경기준에 대한 통계는 센서스 자료에서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머지 시설과 침실, 면적을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추정하였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각 년도의 최저주거기준이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시설기준에서 1995년 자료는 전용부엌, 전용화장실, 목욕탕 혹은 화장실 등의 샤워시설 유무를 기준으로 했고, 2000년에는 현대식 전용부엌 및 수세식 전용화장실을 기준으로 하는 등 시설기준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연도별로 직접적으로

〈표 VII-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와 비율: 1995, 2000, 2005

	1995 ¹⁾		2000 ²⁾		2005 ²⁾	
	가구수 (10,000가구)	가구비율 ³⁾ (%)	가구수 (10,000가구)	가구비율 ³⁾ (%)	가구수 (10,000가구)	가구비율 ³⁾ (%)
시설 기준	382.0	[85.7]	248.5	[74.3]	136.0	[65.9]
침실 기준	74.9	[16.8]	49.5	[14.8]	16.7	[8.1]
면적 기준	148.9	[33.4]	130.8	[39.1]	82.8	[40.2]
시설, 침실기준	51.3	[11.5]	26.1	[7.6]	3.1	[1.5]
시설, 면적기준	97.6	[21.9]	46.8	[14.0]	17.8	[8.6]
침실, 면적기준	48.6	[10.9]	39.1	[11.7]	10.8	[5.2]
시설, 침실, 면적기준	37.0	[8.3]	17.7	[5.3]	2.4	[1.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계	445.8	[34.4] ⁴⁾	334.4	[23.4] ⁴⁾	206.2	[13.0] ⁴⁾
일반가구	1,295.8		1,431.2		1,588.7	

주: 1) 통계청의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이용함.

2) 통계청의 2000년 및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3) 기준년도 총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에 대한 미달요건별 미달가구수의 비율임.

4) 기준년도 총 일반가구수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비율임.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이 수치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나 최저주거 수준 미달가구의 전체 규모나 미달 요건별 규모 등의 전반적인 추세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된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206만 2천 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13.0%에 달한다. 이를 그 이전과 비교해보면 비록 기준이 상이하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인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일반가구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34.4%에 달하였으나 2000년에는 23.4%로 줄어들었다. 미달요건별로 미달가구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미달가구 중에서 시설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달가구로 분류된 가구가 6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면적기준 미달로 40.2%를 점하고 있으며 침실기준 미달은 8.1%를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 1995년과 2000년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다만 그 비율의 변화폭은 기준별로 다

르다. 시설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1995년의 85.7%에서 2005년에는 65.9%로 감소하였고, 마찬가지로 침실기준 미달가구도 16.8%에서 8.1%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면적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은 33.4%에서 40.2%로 오히려 늘어나 최근에는 면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최저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및 가구특성별 차이를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 <표 VII-10>에 전국을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도 지역으로 구분해서 가구특성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통계를 제시하였다. 우선 일반가구를 보면 전국적으로 일반가구의 13.0%인 206만 2천 가구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인데, 이를 동부와 읍면부로 나누어 보면 동부에서는 미달가구의 비율이 10.3%인데 비해서 읍면부에서는 24.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읍면부에 열악한 주택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동부와 읍면부의

<표 VII-10> 지역 및 가구특성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수와 비율: 2005¹⁾

		일반 가구 ²⁾	1인 가구	편모 가구	편부 가구	소년소녀 가정가구	노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전국	전체	13.0	21.2	13.5	18.7	20.2	21.4	36.5
	동부	10.3	16.0	13.1	17.8	20.0	13.1	23.0
	읍면부	24.0	38.7	17.1	23.5	21.3	36.1	51.7
수도권	전체	9.0	12.6	11.1	14.4	19.8	9.9	15.9
	동부	8.8	12.0	11.2	14.4	19.8	8.8	13.1
	읍면부	11.4	20.9	10.4	14.8	16.7	17.5	32.3
광역시	전체	12.5	22.2	16.0	23.0	20.7	17.5	30.9
	동부	12.3	21.8	16.0	23.1	20.6	16.7	29.6
	읍면부	17.0	35.2	17.1	20.3	30.5	32.5	51.0
도지역	전체	19.1	30.8	15.1	21.9	20.4	32.8	48.3
	동부	11.6	18.9	13.5	19.2	19.8	19.0	32.3
	읍면부	27.5	41.9	19.3	26.5	22.2	39.2	53.6

주: 1)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2) 7인 이상 가구와 거주유형이 숙박업소객실,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가구가 포함됨.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차이는 수도권, 광역시, 도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도 지역에서 동부와 읍면부의 미달 가구 비율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동부에서는 전체 미달가구의 57.0%가 면적기준에 미달된데 비해서 읍면부에서는 92.1%가 시설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의 물리적 시설은 비교적 양호하나 가구구성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주거면적과 방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구가 많은 반면 농촌 지역에서는 물리적 시설이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가구의 특성별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을 비교하면 전국의 노인 1인 가구에서 미달가구의 비율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규모로는 약 29만 가구이다. 특히 읍면부에서는 이 비율이 51.7%이고 규모로는 약 19만 가구인데, 이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 1인 가구 중 절반이 넘는 가구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 밖에도 미달가구의 비율은 노인가구, 1인 가구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구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 규모는 전국적으로 각각 약 72만 가구, 67만 가구, 12만 가구에 이른다. 이들 가구의 미달요건을 보면 노인 1인 가구, 노인가구, 그리고 1인 가구 중 미달가구는 대부분이 시설기준 때문에, 그리고 소년소녀가장가구는 면적기준 때문에 미달된 가구가 많다. 따라서 향후 이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를 위해서는 가구특성별로 미달요건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특성

이제 2005년 현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몇 가지 주요한 특성을 보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전국적

으로는 52.9세이나 동부에서는 47.8세로 전국보다 낮고, 반대로 읍면부에서는 61.9세로 매우 높다. 연령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40대가 22.1%로 가장 많으나 60세 이상이 37.3%나 되어 고령가구의 비율이 높다. 참고로 2005년 센서스의 일반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의 비율이 22.4%임을 감안하면 노인가구의 주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농촌의 사정은 더욱 나빠 읍면부에서는 전체 미달 가구 중 60세 이상 가구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61.7%나 되어 특히 농촌 노인가구의 주택사정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고등학교 학력이 30.8%로 가장 많고 초등학교 학력 22.1%, 그리고 무학 17.2%의 순으로 나타났고, 대학 이상의 학력도 15.4%나 된다. 이를 2005년도 일반가구 가구주의 학력분포(무학 5.7%, 대학 이상 35.5%)와 비교해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가구주의 학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달가구 가구주의 저학력 경향은 특히 농촌에서 두드러져 무학이 32.1%, 초등학교가 33.2%로서 65.3%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본

〈표 VII-11〉 도시와 농촌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연령 분포: 2005²⁾

	30세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평균연령 (%)
전국	8.4	15.2	22.1	16.9	37.3	52.9
동부	11.9	20.3	27.0	19.6	23.3	47.8
읍면부	2.5	6.4	13.6	15.8	61.7	61.9

주: 1) 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2)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것처럼 농촌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상당수가 고령가구주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전국 평균은 129만 1천 원인데 동부는 146만 원, 읍면부는 98만 6천 원으로 드러났다. 소득계층별 분

〈표 VII-12〉 도시와 농촌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학력 분포: 2005²⁾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전국	17.2	22.1	14.4	30.8	15.4
동부	8.6	15.7	15.3	39.0	21.3
읍면부	32.1	33.2	12.8	16.6	5.4

주: 1) 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2)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표 VII-13〉 도시와 농촌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가구주 소득 분포: 2006²⁾

	저소득층 (1-4분위)	중소득층 (5-8분위)	고소득층 (9-10분위)	평균소득 (10,000원)
전국	69.7	24.7	5.6	129.1
동부	63.0	30.2	6.8	146.0
읍면부	81.9	14.7	3.4	98.6

주: 1) 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2) 국토연구원의 『2006 주거실태 및 수요조사』 자료를 이용함.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표 VII-14〉 도시와 농촌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면적: 2005²⁾

	29.7㎡ 미만	29.7-62.7㎡ 미만	62.7-95.7㎡ 미만	95.7-126.7㎡ 미만	126.7㎡ 이상	평균 주거면적 (㎡)	1인당 주거면적 (㎡)
전국	41.4	43.7	12.3	2.0	0.6	38.0	20.1
동부	55.4	37.8	5.5	1.0	0.3	30.6	14.3
읍면부	17.2	53.8	24.0	3.9	1.0	50.8	30.2

주: 1) 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포를 보면 저소득층이 69.7%, 중소득층 24.7%, 그리고 고소득층도 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저소득층의 비율이 동부는 63.0%인데 비해 읍면부에서는 81.9%로서 동부보다 월등히 높다. 따라서 특히 농촌지역의 상대적인 빈곤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상황

그러면 이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들은 어떠한 주택에서 살고 있는가? 먼저 주거면적을 보면 이들 가구의 평균 주거면적은 38.0㎡로서 동부는 전국 평균보다 작은 30.6㎡이고 읍면부는 전국평균보다 큰 50.8㎡를 나타낸다. 1인당 주거면적도 전국 평균은 20.1㎡인데 동부에 비해 읍, 면부가 2배 이상 넓다. 이들 미달가구의 주거면적 분포를 보면 29.7- 62.7㎡ 미만 가구의 비율이 가장 많아 43.7%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29.7㎡ 미만으로 41.4%를 나타내 전체적으로는 62.7㎡ 미만 가구의 비율이 85.1%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동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절반이 넘는 가구(55.4%)가 29.7㎡ 미만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읍면부에서는 53.8%의 가구가 29.7 - 62.7㎡ 미만의 주택에서 살고 있다.

〈표 VII-15〉 도시와 농촌¹⁾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시설: 2005²⁾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전용입식	전용 입식 아님	전용 수세식	전용 수세식 아님	전용 온수	전용 온수 아님
전국	82.6	17.4	44.1	55.9	65.8	34.2
동부	83.5	16.5	60.4	39.6	68.9	31.1
읍면부	81.0	19.0	16.0	84.0	60.3	39.7

주: 1) 동부와 읍면부 기준임.

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자료를 이용함.

출처: 국토연구원,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연구」, 2007.

더 나아가서 최저주거기준의 시설기준이 되는 부엌과 화장실, 목욕시설의 현황을 보면 이들 미달가구가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미달가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VII-15〉에서 보면 시설요건의 이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부족한 시설이 전용 수세식 화장실임을 알 수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미달가구 중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가구가 55.9%로 가장 많다. 그나마 동부에서는 39.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농촌지역에서는 84.0%로 매우 높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대부분은 이 전

용수세식 화장실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미달가구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화장실 요건에 비하면 전용입식 부엌이나 전용온수 목욕시설의 구비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높아 부엌 기준은 미달가구의 82.6%가 충족하고 있으며, 목욕 시설기준은 65.8%가 구비하고 있다.

또한 부엌과 목욕시설의 구비정도는 도시와 농촌 간에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전용 수세식 화장실의 설치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다.

최진호 (아주대학교)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요 약

- 고속화된 교통시설 공급은 국토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 통행거리를 기준으로 약 200km 이내에서는 고속도로 이용이 많고, 250km 이상 중·장거리 구간에서는 고속철도 이용이 많아 이 두 가지 주요 교통수단이 일정 부분 통행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통행의 광역화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장래 호남고속철도 건설로 전국의 생활권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은 국가의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요소이다. 그간 정부는 국토의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속화된 교통시설은 시간단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어 타 국가와 비교하여 경제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해주었다.

정부는 건국 이후 지난 60년 동안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교통서비스의 현대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교통서비스의 본격적인 현대화는 1970년대 고속도로 건설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의 도시철도 건설과 2000년대 고속철도 건설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의 발달은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교통비용을 낮추어 인간의 활동패턴에 변화를 주며, 주변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쳐 공간구조를 변화시킨다. 이 글에서는 통행시간을 단축시킨 교통수단인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중심으로 고속의 교통시설 공급으로 나타나는 인구분포의 변화, 통행수단분담의 변화, 접근도의 변화 등을 대도시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분포의 변화

교통수단의 결절점인 고속도로 IC와 고속철도역이 가까운 지역일수록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경제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된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국인구 변화를 보면 경기도가 연평균 증가율 3.6%로 가장 높고, 전라남도는 가장 낮은 -1.6%를 보여주고 있다. 9개 도 지역에서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7개 특별·광역시 중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의 인구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1990년대 후반부터 특별·광역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던 인구의 확산현상이 진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도시의 인구 증가는 다양한 도시문제로 발전하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간 교통의 연계체계 개선 등을 통해 주변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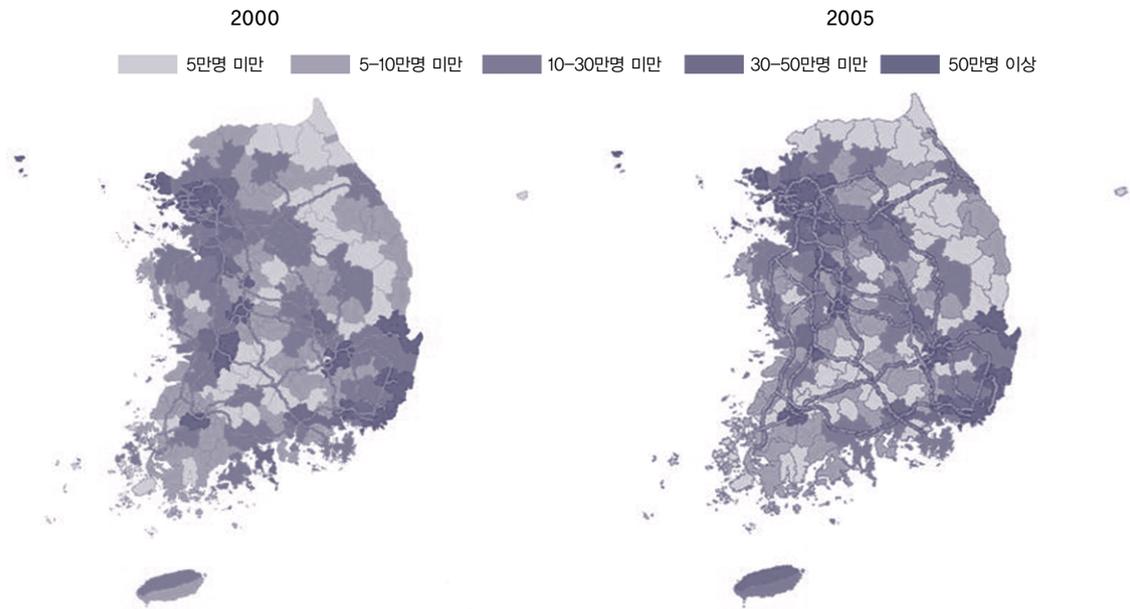
시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주요 도시간 교통수단분담률의 변화

지역 간 여객통행의 경우 새로운 교통수단 공급은 통행행태에 변화를 가져온다.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후에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공 등 지역 간 통행의 대표적인 수단을 기준으로 통행행태의 변화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표 VII-1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개통 이듬해인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고속도로 이용차량 가운데 소형차 이용은 서울-대전축을 제외하고 서울-대구와 서울-부산의 통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이용객수는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대전의 경우 증가율

[그림 VII-2] 시·군별 인구 변화: 2000, 2005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이 18.2%로 다른 구간보다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17).

한편, 고속철도의 경쟁수단인 항공의 경우 이용객수가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100만 명 이상 줄어들었으며, 2005년 대비 2007년 현재에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부산을 이동하는 통행의 일부가 고속철도로 지속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VII-18).

〈표 VII-16〉 소형차¹⁾ 고속도로 이용량²⁾: 2003-2007

(승차인수)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2003	7,540,665	2,486,848	1,083,611
2004	7,863,169	2,380,259	946,252
2005	7,899,510	2,748,370	863,094
2006	8,018,091	3,297,890	891,064
2007	7,719,981	3,661,867	913,217
증가율(%) ³⁾	-2.3	33.2	5.8

주: 1) 중 차량(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을 말함.

2) 승차인원은 155명을 적용함(건설교통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2007).

3) 2005년 대비 2007년의 증가 비율임.

출처: 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2008.

〈표 VII-17〉 고속철도(KTX) 이용객수: 2004-2007

	서울-대전	서울-대구	서울-부산
2004 ¹⁾	2,508,036	4,341,414	4,880,242
2005	3,760,524	6,591,414	7,232,554
2006	4,336,783	7,012,432	7,676,153
2007	4,445,202	6,671,929	7,545,130
증가율(%) ²⁾	18.2	1.2	4.3

주: 1) 2004년 4월에 고속철도가 개통됨.

2) 2005년 대비 2007년의 증가 비율임.

출처: 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2008.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행거리별 수단분담률을 보면 200km 이하인 단거리 구간에서는 승용차의 분담률이 높으나 250km 이상인 중·장거리 구간부터는 고속철도의 수단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그림 V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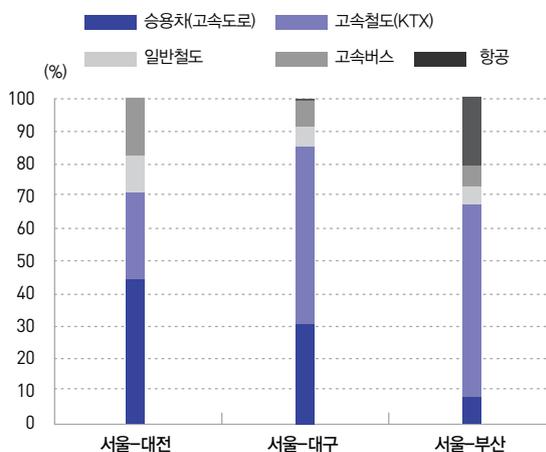
〈표 VII-18〉 서울-부산간 항공 이용객수: 2003-2007

	이용객수
2003	5,219,922
2004	3,815,356
2005	2,861,589
2006	2,686,322
2007	2,653,644
증가율(%) ¹⁾	-7.30

주: 1) 2005년 대비 2007년의 증가 비율임.

출처: 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2008.

〈그림 VII-3〉 경부축의 교통수단 분담률: 2007



출처: 국토연구원, 『전국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2008.

대도시권 통근통학 범위의 확대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소득수준 향상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도시권의 확대로 도시교통에서 비중이 큰 통근통학 통행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표 VII-19〉 권역별 통근통학 통행량: 2001, 2006

통행 방향	통행량(통행/일)		증감률 ¹⁾ (%)
	2001	2006	
수도권 → 서울	1,106,590	1,682,403	52.0
울산·경남 → 부산	47,301	61,084	29.1
경북 → 대구	24,997	31,339	25.4
충남 → 대전	12,469	15,460	24.0
전남 → 광주	17,213	17,962	4.4

주: 1) 권역별 기종점 자료 가운데 중심도시를 도착지로 하는 통근·통학 통행량을 2001년 대비 2006년의 변화량으로 산정한 값임.

출처: 국가교통DB센터(<http://www.ktdb.go.kr>).

별로 다양한 도시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도시권의 통근통학 비율은 시간 및 공간의 집중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대도시 권역별로 통근통학 변화 비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의 통근통학 변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의 대도시권에서는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 편중된 변화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 도시개발축을 따라 통근통학 비율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권의 경우 인근한 김해시, 진해시, 양산시의 비율은 상승하고 마산시, 창원시의 경우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마산·창원·진해시는 부분적으로 자족성을 갖춰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구권의 경우 경산시가 가장 높은 통근통학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고, 칠곡군과 고령군은 대구광역시의 출근 통행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대전권은 수도권과 유사하게 주변 지역과의 통근통학 변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 시·군 가운데 연기군과 옥천군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서 통근통학 비율이 증가하였고, 청

원군이 가장 높은 변화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인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타권역에 비해 대전권의 광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권의 경우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등의 통근통학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담양군의 변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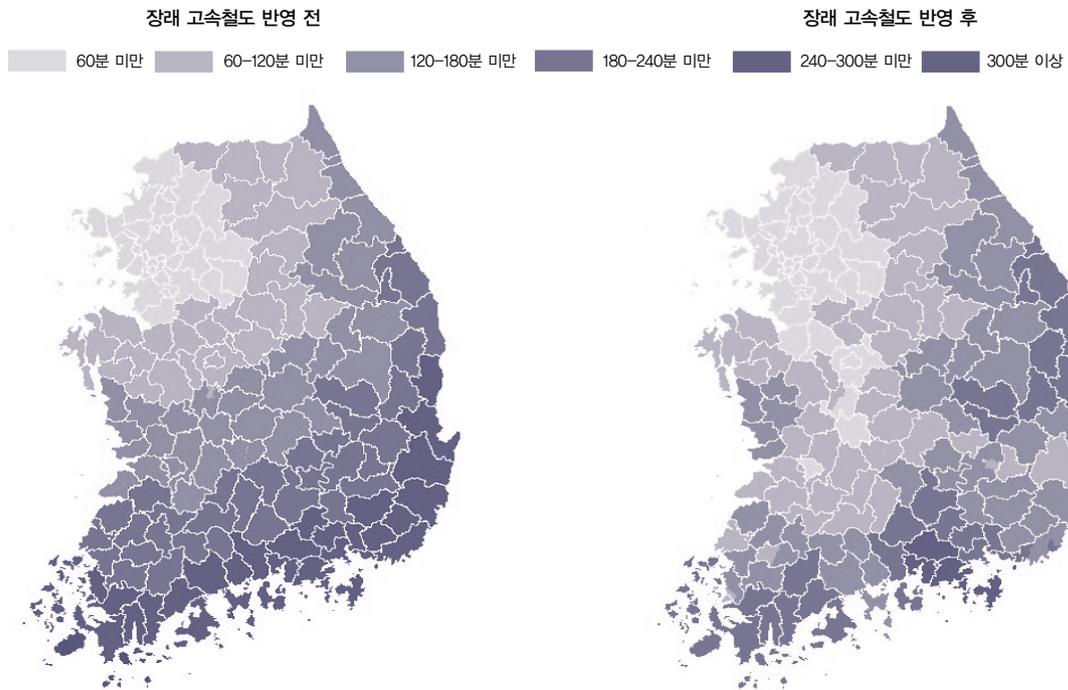
접근시간의 변화

앞으로 지속적인 고속도로 시설공급으로 전국 지역들에서 서울시로의 접근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철도 등 고속철도 간선망의 건설로 정차역을 포함한 고속철도 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시간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가 정차하는 대구와 경주지역, 그리고 호남고속철도가 정차하는 광주와 목포지역에서 서울시로의 접근시간이 기존 고속도로망에 비하여 약 60여 분 이상 감소하여 2시간 이내에 서울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속적인 도로 인프라의 확충과 고속철도 건설로 전국은 반일생활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간 심리적 거리 격차도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도로, 철도를 포함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경제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여 왔다.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 여가활동의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예측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개인의 생활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고 이러한 생활패턴의 변화는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림 VII-4] 장래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서울시까지 평균 접근시간 변화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김호정 (국토연구원)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조병희 218

자살의 급증과 원인 • 김명희 227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 조병희 233

VIII. 보건

Health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평균수명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건강의 질적 측면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크다.
- 암,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 음주율과 흡연율은 감소해 왔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며 비만율이 증가하고 있다.
- 의료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 분야에서는 국민의 건강수준과 건강상태,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동과 습관, 그리고 병에 걸렸을 때 의료서비스를 얼마나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다. 첫째로 '건강과 질병' 영역은 보건 분야의 전통적인 관심영역이었고 국민의 건강수준과 질병분포를 파악하여 국민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하게 된다. 평균수명, 주요 질환의 유병률, 사망원인별 사망률 등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둘째로 '건강의식과 건강행태' 영역은 최근에 건강행태 또는 건강습관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새롭게 관심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는 건강을 해치는 행동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며, 흡연율, 음주율, 운동실천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셋째로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영역에서는 질병치료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요소들을 다룬다. 질병 치료를 하는데 필요한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건강보험급여 등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어서 의사수, 병원수, 의료비지출규모 등이 주요 지표가 된다. 또한 의료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

건강과 질병

건강은 최근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개념이지만 여러 요소가 포함되는 포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 개념 규정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웰빙(well-being) 상태'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세 영역을 포괄하는 건강 지표는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중요한 점은 건강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이 노동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란 측면과 정신적, 심리적 안녕을 누리는 상태로 개념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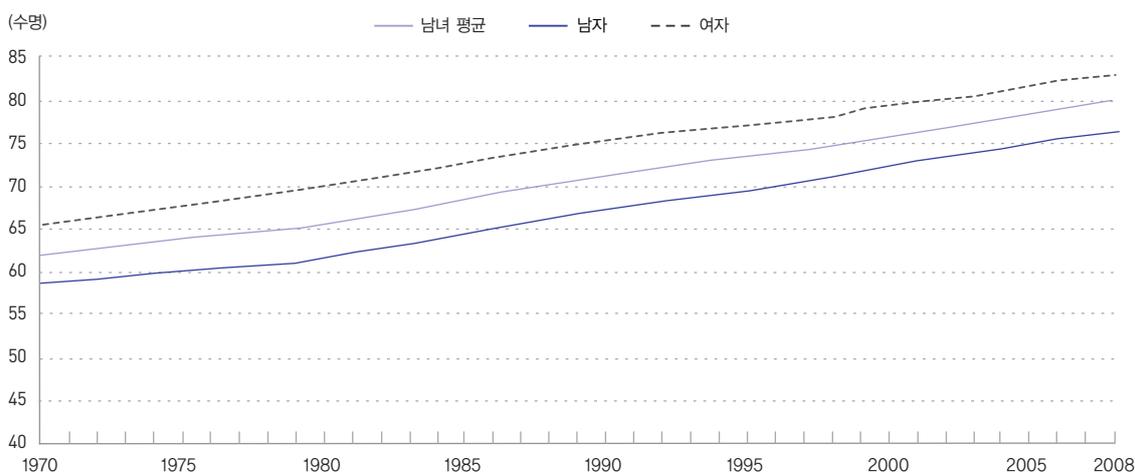
'역량'이란 측면에서 건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 지표는 평균수명 또는 '0세에서의 기대수명'을 들 수 있다. 평균수명의 길고 짧음은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평균수명은 1970년에 61.9세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8년에 70세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OECD 국가들의 평균(78.9세)보다 높은 79.6세가 되었으며 2008년에는 80세를 넘어서게 되었다. 즉 평균수명의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음을 알 수 있다.

평균수명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 1970년에 남자 58.7세, 여자 65.6세였는데 매년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남자 76.5세, 여자 83.3세로 증가하였다. 지난 38년간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항상 길었다. 그러나 그 격차는 축소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남녀 격차는 1985년에 8.4세이던 것이 2008년에는 6.8세로 감소하였다(그림 VIII-1).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긴 것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기에는 임신부의 영양 위생상태가 개선되고 임신출산에 따르는 위험을 의학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 점이 크게 작용하였

[그림 VIII-1] 기대수명: 1970-2008



출처: 통계청, 『생명표』, 각 년도.

다. 출생아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영아사망률은 1970년에 45나 되었지만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1981년에 17, 1991년에 10 수준이 되었고 2008년에는 3.4로 낮아졌다. 출생아 100,000명당 모성사망의 수를 나타내는 모성사망비도 1995년에 20이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3년에 15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OECD 평균인 9.0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이제 출산과 관련하여 산모나 아기가 죽는 일은 매우 희귀한 일이 되고 있다.

남녀의 사회적 역할에 따르는 위험이 다른 점도 남자와 여자의 건강구조 차이의 원인이 된다.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사망의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 산업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남녀 간 건강격차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평균수명은 단순히 기대수명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와병상태에서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구 중 유병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 건강상태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가 건강수명으로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005년에 0세의 기대여명은 78.6세였으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건강관련 삶의 질’을 보정(補正)한 기대여명은 68.6세였다. 즉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기대여명보다 10년이 짧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수명의 남녀 격차는 2.1세였다.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은 길지만 유병상태에 있는 기간이 더 길기 때문에 건강수명에서의 남녀 격차는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것이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질병 등으로 인한 활동 제한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평균수명의 질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는 ‘주관적 건강상태’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는 만큼 건강구조 또한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다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총체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 건강상태에 대한 더 정확한 측정일 수도 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3년에 42.9%, 2005년 44.6%, 2008년 51.5%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OECD 평균 68.3%보다 크게 낮다. 즉 신체적 건강(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 되었지만 개인은 그만큼 건강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건강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건강불안감은 삶의 불안정성이나 미래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질병상태의 총괄지표는 유병률인데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2주간 유병률’은 대략 20% 내외이고 남자(14.9%)보다는 여자(20.0%)의 유병률이 높게 나온다. 같은 기간 질병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던 남녀 평균 와병일수는 0.8일 정도이다(표 VIII-1).

〈표 VIII-1〉 성별 2주간 유병률*: 1999-2008

	1999	2003	2006	2008
전체	22.4	20.8	19.5	17.5
남자	19.1	17.1	16.5	14.9
여자	25.6	24.5	22.4	20.0

주: 1) 조사시점 이전 2주 동안 질병 상태에 있었던 사람의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다음은 주요 질환의 유병률을 살펴보자. 콜레라나 장티프스 같은 전염성 질환의 발생은 크게 감소하였지만 새로운 전염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결핵은 1991년에 52,735명이 새로 감염되었고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년 3만 명 이상 신규 감염되고 있다. 이러한 결핵 감염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쓰쓰가무시병, 볼거리, 수두, 말라리아, HIV/AIDS 등도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VIII-2).

〈표 VIII-2〉 전염병 발생건수: 2004-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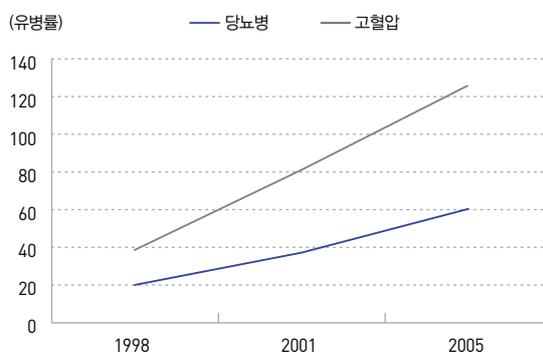
	2004	2005	2006	2007	2008
수두	-	1,934	11,027	20,284	22,849
결핵	31,503	35,269	35,361	34,710	34,157
쓰쓰가무시병	4,698	6,780	6,480	6,022	6,057
말라리아	864	1,369	2,051	2,227	1,052
볼거리	1,744	1,863	2,089	4,557	4,542
HIV/AIDS	610	680	750	744	797

출처: 질병관리본부, 『전염병 감시연보』, 각 년도.

만성질환 중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인구 1,000명당 환자수를 나타내는 유병률이 1998년 19.1, 2001년 36.4, 2005년 61.1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혈압의 경우도 인구 1,000명당 유병률이 1998년 38.1, 2001년 80.1, 2005년 129.4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그림 VIII-2).

암발생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전체 암의 경우 인구 100,000명당 새로 보고된 환자수 지표인 암발생률이 1999년 213.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 292.9가 되었다(그림 VII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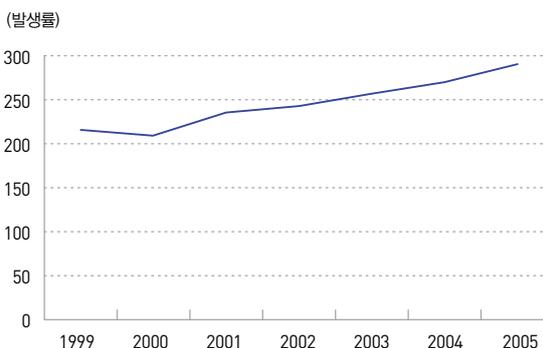
[그림 VIII-2] 당뇨병과 고혈압 유병률¹⁾: 1998, 2001, 2005



주: 1) 인구 1,000명당 환자수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2006.

[그림 VIII-3] 암 발생률¹⁾: 1999-2005



주: 1) 인구 100,000명당 발생자수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중앙임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연례보고서』, 각 년도.

유병과 함께 사망은 건강상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표 VIII-3〉은 사망원인별 인구 100,000명당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1995년에서 2008년까지 총사망률은 532에서 498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주요 사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 각각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이 110.5에서 139.5로 증가하였고, 당뇨병에 의한 사망이 17.3에서 20.7로 증가하였다.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도 36.9에서 43.4로 증가하였다. 반면 소화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39.2에서 21.8로 크게 감소하였고 뇌혈관 질환 사망도 79.8에서 56.5로 감소하였다. 외인으로 인한 사망에서 교통사고 사망은 38.7에서 14.7로 감소하였으나 자살은 10.8에서 26.0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회적 건강'의 주요 문제가 되고 있다.

〈표 VIII-3〉 사망원인별 사망률¹⁾: 1995-2008

	(100,000명당)			
	1995	2000	2005	2008
총사망률	532.1	517.9	501.0	498.2
암	110.5	121.4	133.8	139.5
뇌혈관질환	79.8	73.1	64.1	56.5
심장질환	36.9	38.2	39.2	43.4
간질환	29.5	22.8	17.2	14.5
당뇨병	17.3	22.6	24.2	20.7
소화기계질환	39.2	31.2	23.0	21.8
운수사고	38.7	25.3	16.3	14.7
자살	10.8	13.6	24.7	26.0

주: 1) 인구 100,000명당 사망자수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건강행태

만성질환이 건강의 주요 문제로 대두하면서 음주와 흡연 등 건강행태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보건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성인의 흡연율은 1995년에 38.4%이던 것이 점차 감소하여 2008년에 26.3%가 되었다. 여자 흡연율은 3.9%로 매우 낮으나 남자 흡연율은 50.8%로 미국이나 서구유럽 국가들의 성인 남자 흡연율이 약 20%인 점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흡연자들의 흡연량도 감소하고 있는데 '반갑 이하'의 비중이 1995년에 30.1%이던 것이 2008년에는 42.0%로 증가하였다.

〈표 VIII-4〉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 1995-2008

	(%)				
	1995	1999	2003	2006	2008
성인흡연율	38.4	35.1	29.2	26.3	26.3
남성흡연율	73.0	67.8	56.3	52.2	50.8
성인음주율	63.1	64.6	64.3	73.2	68.6
남성음주율	83.0	82.9	80.7	85.9	82.7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성인 음주율은 1995년 63.1%에서 2003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73.2%로 증가하였으나 2008년에 다시 68.6%로 감소하였다. 성별로 볼 때 흡연과는 달리 여자들도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다. 2008년에 남자는 82.7% 여자는 55.3%의 분포를 보였다. '거의 매일 음주자'의 경우 1995-2008년 사이에 8.4%에서 4.9%로 약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일정 수준 이하의 음주는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율 자체를 건강에 위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강에 위해가 될 정도의 과도한 음주가 문제가 되는데 200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문제음주자'는 36.2%였고 '알코올 의존자'는 21.3%였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상당수가 과도한 음주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와 흡연이 오래된 건강문제이나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은 새로운 건강문제가 되고 있다. 비만은 보통 키와 몸무게의 비인 '체질량지수' (BMI)로 측정하는데 BMI가 25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한다. 비만율은 1998년에 26.0%이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31.7%가 되었다. 남자 36.2%, 여자 26.3%로 남자의 비만율이 더 높다. 또한 비만율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20대 인구집단의 비만율이 22.0%

인테 비하여 50대 집단은 42.4%나 된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생리적으로 신체의 대사활동이 완만해지면서 비만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60대 이후에는 비만율이 다시 낮아진다.

〈표 VIII-5〉 비만율과 운동실천율: 1998-2007

	1998	2001	2005	2007
비만율	26.0	29.2	31.3	31.7
운동실천율	8.6	20.4	22.0	-
			(18.7) ¹⁾	(9.9) ¹⁾

주: 1) 2007년에 수정된 기준에 의해 계산된 수치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흡연, 음주, 영양섭취가 절제할수록 건강에 기여하는 행태라고 한다면 운동은 더 강화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태이다. 그런데 운동실천율은 1회 20분, 주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1998년 8.6%에서 2005년 22.0%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연령별로 보면 40대(25.2%)와 50대(25.7%) 인구집단이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이 높다.

2007년에는 이 지표의 기준이 변화되어 ‘숨이 가쁠 정도의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비율’로 설정되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중등도신체활동실천율’은 2005년에 18.7%, 2007년에 9.9%가 된다.

그런데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 나타난 주관적인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2003년 26.9%, 2006년 28.3%, 2008년 32.1%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운동은 아침식사하기(76.2%), 적정수면(78.9%)과 함께 국민의 주요 건강관리 수단이 되고 있다.

의료제도와 의료이용

의료제도의 기본요소는 병원과 의사 같은 의료인력 및 시설의 공급 측면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빈도 및 지출되는 의료비 등 수요측면으로 구성된다. 의료공급에서 의사 인력은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된다. 지난 20여 년간 의사수와 병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의료인력은 1985년에서 2008년 사이에 그 절대수가 약 3-4배 증가하였다. 면허등록 의사수는 1985년에 29,596명에서 2008년에는 95,08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의사 1인당 인구수도 1985년에 1,379명에서 2008년에는 511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치과의사나 한의사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동일기간에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는 7,507명에서 2,033명으로 감소되었고, 한의사 1인당 인구수는 10,770명에서 2,771명으로 감소하였다. 간호사의 경우는 690명에서 197명으로 감소하였다.

〈표 VIII-6〉 의료인력 1인당 인구수: 1985, 1995, 2008

	1985	1995	2008
의사수	1,379	789	511
치과의사수	7,507	3,296	2,033
한의사수	10,770	5,175	2,771
간호사수	690	374	19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의사 인력의 증가는 그 자체로 의료복지의 증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2007년에 프랑스와 독일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practicing physicians)는 각각 3.4명과 3.5명인데, 한국은 1.7명이었다. 한국의 의사수는 프랑스와 독일의 절반 수준인 것이다. 그런데 이 통계

치의 의미는 국민의 의료접근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고 의료이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접근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의 질적 측면의 낙후성을 의미한다. 즉 우리나라의 사들은 서구의 의사들보다 노동 강도가 높고 짧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의사와 환자 간에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암시한다. 의료인력 구성의 다른 측면은 의사 대 간호사의 비인데 독일 등 서구유럽 국가들은 대략 1:3 정도 된다. 반면 한국은 1:2 수준이다. 즉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간호서비스가 그만큼 적게 제공되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도 짧고 충분한 상담을 받기도 어려우며 간호서비스가 부족하여 간병인을 따로 두어야 하는 등의 불편이 뒤따르게 된다.

의료시설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의료기관수와 병상수가 있다.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상규모로 구분하는데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 '병원'이라 하고 30병상 이하일 경우 '의원'이라 한다. 종합병원은 1985년 183개소에서 2008년에 313개소로 증가하였고 병원은 317개소에서 1,064개소로 증가하였다. 의원은 8,069개소에서 26,581개소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의료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병원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종합병원은 연도별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병원은 1990년대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의원의 경우는 1990년대 이후 매년 약 1,000여 개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병원수의 증가와 마찬가지로 병상수도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병상수는

〈표 VIII-7〉 의료시설 수: 1985-2008

	1985	1990	1995	2000	2008
종합병원수	183	228	266	285	313
병원수	317	328	398	581	1,064
의원수	8,069	10,935	14,343	19,472	26,581
총병상수	99,950	134,176	196,232	287,040	478,645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1985년에 약 10만 개에서 2008년에 478,645개로 4.8배 증가하였다. 한국의 경우 병상수가 많은 편이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acute care beds)수가 프랑스 3.6개, 독일 5.7개인데 한국은 7.1개로 일본 8.2개의 다음 순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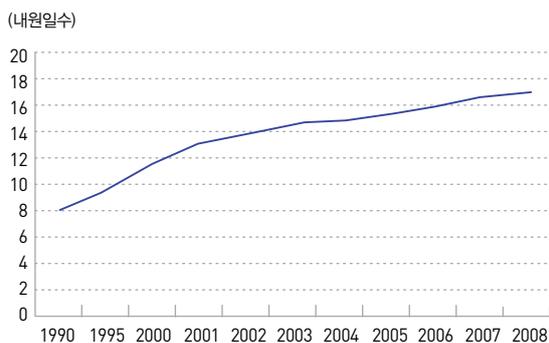
과거에는 병상수의 증가가 의료복지의 확대로 생각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의료는 각종 고급 의료기술이 집중되어 있고 입원진료일 경우에 의료기술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병상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는 병상수는 오히려 국가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은 아직 병상수의 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의 시장화 추세로 인하여 병상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상수의 증가는 주요 의료장비의 증가와도 관련성이 높다. 한국은 MRI 보유가 인구 100만 명당 16.0대, CT Scanner가 37.1대로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프랑스는 MRI 5.7대, CT 10.3대에 불과하다. 병상이 많고 주요 의료장비가 많아 의료이용이 편리한 점은 있지만 의료서비스가 지나치게 고급화되는 추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의료공급의 증가는 의료이용의 증가와 맞물려 있다. 국민의 의료이용 상태는 '연평균 1인당 내원일수'로

계산할 수 있는데 1990년에 7.9일이던 것이 2000년에 11.6일이 되었고,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16.6일이 되었다. 즉 국민 1인당 연 1.6일 입원하고 15.0일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OECD 국가에서 연간 인구당 의사 방문횟수가 약 6회 정도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많은 방문횟수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국민의 72.2%가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상생활에서 의료이용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그림 VIII-4] 1인당 연평균 내원일수: 2000-200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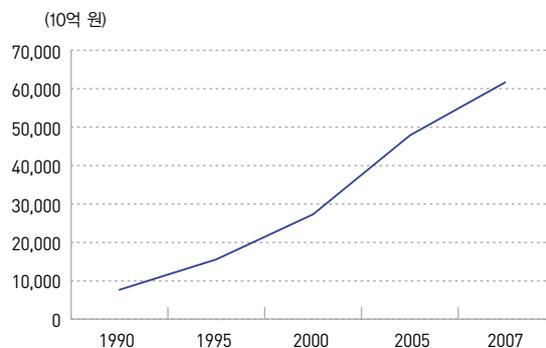
200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암과 만성질환 치료여부’에서 질환자의 88.5%가 정기적으로 치료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8.5%가 치료받고 싶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생활시간의 제약으로 인한 의료접근도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료보장의 원칙에 입각할 때 미치료자가 8.5%라는 수치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의료공급과 의료이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킨다. 국민의료비는 1990년에 8조

1,190억 원이었는데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 61조 3,450억 원에 달하였다.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1990년에 4.3%였는데 2005년에 6.1%에 달하였다. OECD 통계에 의하면 2007년에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6.8%가 되었다(그림 VIII-5).

인구성장이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료

[그림 VIII-5] 국민의료비: 1990-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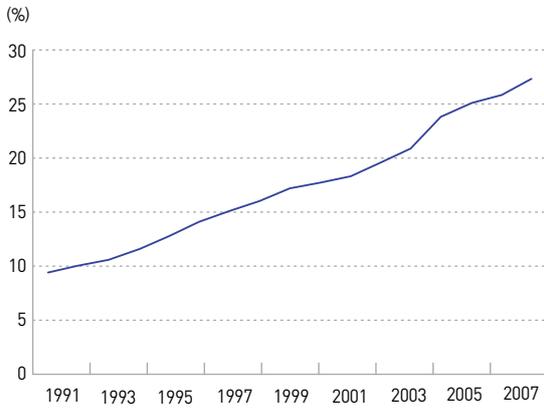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비의 증가는 의료신기술의 도입 및 의료이용의 증가가 주원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노령화와 함께 노인의료비의 증가가 두드러진 현상이다.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의 비중은 1991년에 9.0%에 불과하던 것이 10년 뒤인 2001년에 17.8%가 되었고 2007년에는 28.2%가 되어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비 증가와 함께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현상은 의료비 재원 염출 방식이다. 복지국가는 의료비 재원의 공공부담을 크게 하고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제도의 실시와 함께 의료비의 공공 부담 몫이 확대되어 왔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 1990년에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율은 36.5%였으나 계속 확대

[그림 VIII-6]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노인의료비 비중: 1991-200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년도.

되어 2007년에는 54.9%에 달하였다.

그러나 서구유럽 국가들의 공공의료비 비중이 대체로 약 85% 수준인 것과 비교하여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다. 공공의료비 비중이 낮다는 것은 병원을 이용할 때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몫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기관 이용 시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는 종합병원과 병의원에게 대해서 모두 증가하였다. 종합병원 만족도는 1999년에 24.5%만이 만족하였으나 2006년 45.2%, 2008년 54.1%로 증가하였다. 병의원 만족도는 각각 25.4%, 43.5%, 48.7%로 증가하였다. 즉 의료기

<표 VIII-8> 국민의료비 지출의 자원 비중: 1986-2007

	공공 의료비	민간 의료비
1986	28.0	72.0
1990	36.5	65.6
1994	33.7	66.3
1998	45.9	54.1
2002	50.6	49.4
2006	54.6	45.4
2007	54.9	45.1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9: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0 Countries(<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2009.

관 만족도는 향상되는 추세를 보인다.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유를 보면 1999년에는 ‘비용과다’ (45.0%)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장시간의 진료대기’ (39.9%)와 ‘치료미흡’ (36.4%)이 주된 이유였는데, 2008년에도 이 세 가지가 주요 불만 사항이었다. 의료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만족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비용이 과다하다는 불만은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의료비의 본인부담이 큰 구조적 조건 때문으로 생각된다. 의료이용의 ‘장벽’은 많이 낮아졌지만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질병관리본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 조사결과 심층분석 연구: 건강면접 및 보건의식 부문』.

조병희 (서울대학교)

자살의 급증과 원인

요 약

- 1980년 이래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한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유독 자살률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고, 특히 노인의 자살률 급증이 두드러졌다.
- 자살생각과 자살 사망에서 모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뚜렷이 관찰되었다.
- 자살에 이르게 되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동기와 건강문제, 가족 불화 등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개인의 사회심리적 동기를 넘어선 사회경제적 조건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자살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고립된 현상이라기보다 자살생각, 고의적인 자해, 완결된 자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일련의 자기 파괴 행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흔히 사망률로 표현되는 자살 통계는 자살 관련 문제 전체를 보았을 때 병산의 일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살은 대부분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보건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유례없는 급증을 보인 한국의 자살률은 보건학적으론 사회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2008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자살에 의한 사망 자수는 12,858명이었다. 이는 하루 평균 35명, 약 40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살은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를 차지했고, 지난 10년간 암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사망원인이다. 완결된 자살이 전체 자살 문제의 극히 일부분임을 생각한다면, 한국의 자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최근 20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자살자수가 급증한 것을 볼 때,

이는 상당히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OECD 국가들과의 비교

먼저 OECD 국가들과의 자살 통계를 비교해봄으로써 한국사회에서 자살 문제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용한 최근의 자살률을 비교해보면, 남자의 경우 헝가리를 제외하고 한국이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 비교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9).

한편, 전통적으로 자살률이 높다고 알려진 오스트리아, 핀란드, 헝가리, 일본의 자살률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을 제외하고 지난 20년간 남녀 모두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다시 자살률이 증가하여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자살률을 보이는 국가에 속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자살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로서는 최고의 자살 수준을 보이는 국가라 할 수 있는 상황이다(그림 VIII-7).

자살생각과 자살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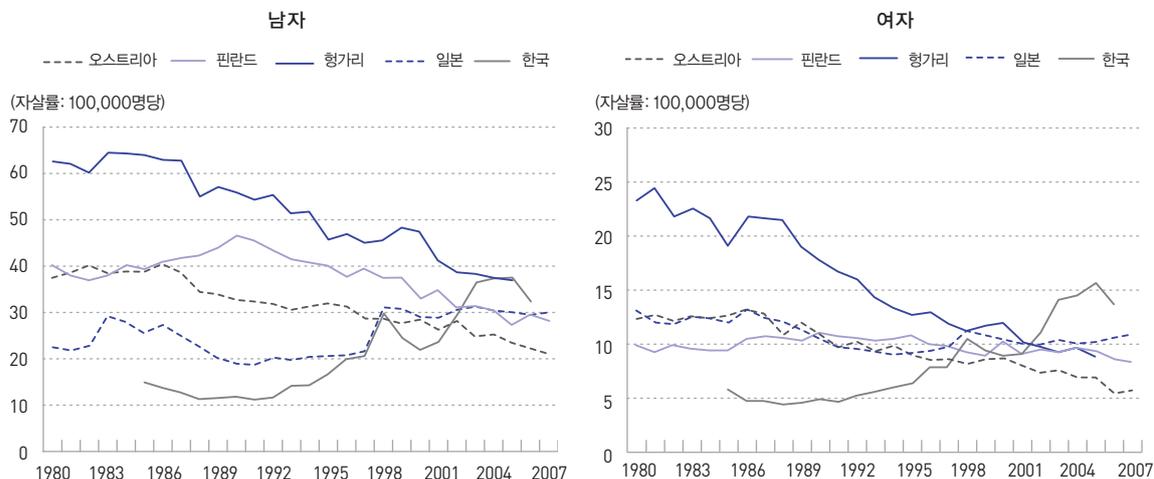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표 VIII-9〉 OECD 국가들의 최근 성별 자살률¹⁾

		(100,000명당)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그리스(2007)	4.1	0.9	미국(2005)	16.6	4.0
멕시코(2006)	7.6	1.3	룩셈부르크(2006)	16.6	13.2
이탈리아(2006)	7.9	2.2	아이슬란드(2007)	18.1	4.4
영국(2007)	9.2	2.5	뉴질랜드(2005)	18.8	6.0
스페인(2005)	10.0	2.9	체코(2007)	19.5	3.3
네덜란드(2007)	10.1	4.2	스위스(2006)	19.7	8.9
독일(2006)	14.5	4.3	슬로바키아(2005)	20.0	2.9
포르투갈(2003)	14.6	3.8	오스트리아(2007)	20.4	5.5
덴마크(2006)	15.0	5.3	프랑스(2006)	21.8	7.3
스웨덴(2006)	15.4	7.4	폴란드(2006)	23.7	3.7
호주(2004)	15.7	4.1	핀란드(2007)	25.7	8.0
캐나다(2004)	15.7	4.9	일본(2007)	28.6	10.6
노르웨이(2006)	16.0	5.6	한국(2006)	32.0	13.2
아일랜드(2007)	16.4	3.6	헝가리(2005)	36.3	8.4

주: 1)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OECD 표준인구를 사용한 연령표준화 값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9: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0 Countries*(<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2009.

[그림 VIII-7]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성별 자살률¹⁾: 1980-2007

주: 1) 국가별 연령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망 수준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OECD 표준인구를 사용한 연령표준화 값임.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9 :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0 Countries*(<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2009.

사람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남녀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연령군별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고연령군에서 자살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VIII-10).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공식 통계가 발표된 1985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에 남녀 모두에서 자살률의 급증이 관찰되었다. 이후 자살률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듯하다 2001년부터 다시 급증했고 2006년도에 정점에 이른

후 2007년도에 약간 감소했다가 2008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추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녀 간 자살률의 절대수 차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 비(比)는 2.4배 정도로 유지되어 왔다(그림 VIII-8).

한편, 연령군별로 자살률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살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이 두드러지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VIII-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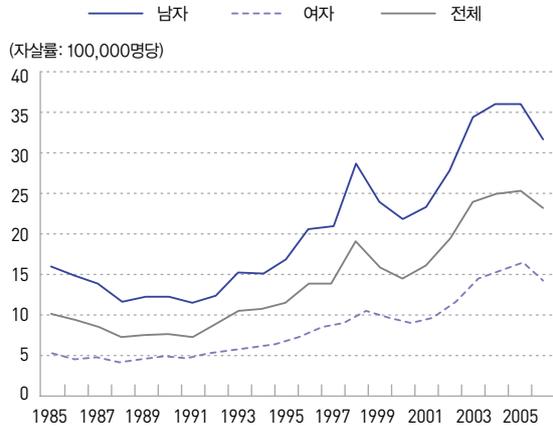
〈표 VIII-10〉 성 및 연령별 자살생각 비율¹⁾: 1995, 1998, 2001, 2005

	1995		1998		2001		2005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5-24세	28.6	44.7	12.1	17.6	15.8	28.3	8.8	19.1
25-44세	18.8	28.1	17.7	25.3	13.0	18.8	11.0	18.5
45-59세	14.2	17.1	16.8	25.5	11.7	18.5	13.6	20.6
60세 이상	-	-	23.6	36.8	17.7	28.7	22.5	33.1
전체	17.6	23.9	18.0	27.5	14.4	23.1	13.5	22.9

주: 1) 연도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5세 단위로 직접 표준화한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그림 VIII-8] 성별 자살률: 1985-2006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9: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0 Countries*(<http://www.oecd.org/health/healthdata>), 2009.

자살의 사회적 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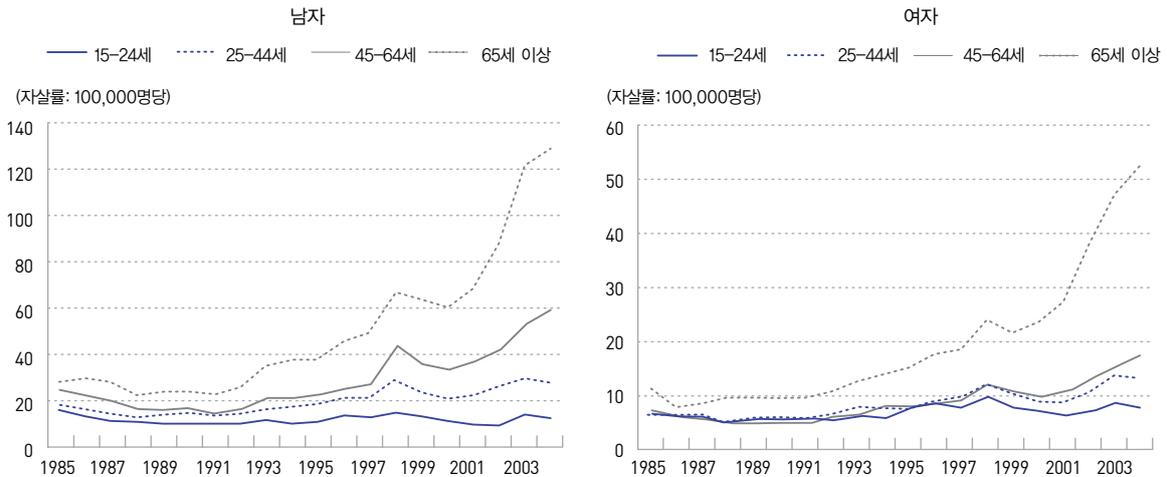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현상은, 자살 문제가 무작위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이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의 비율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감

소했지만, 사회계층 간의 차이는 확대되었다. 남녀 모두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졌고,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이들이 대도시나 중소도시 거주자들 만큼이나 죽고 싶다는 비율이 높았다(표 VIII-11).

뿐만 아니라, 자살 사망률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격차를 뚜렷하게 관찰하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2005년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자의 자살률은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들에 비해 남자의 경우 약 8배나 높고, 여자의 경우는 3배에 이른다. 또한 농산어촌 거주자들의 자살 사망률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VIII-12).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지역 간의 격차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08년도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의 자살률(20.7)이 가장 낮고 강원도의 자살률(33.0)이 가장 높아서 이들의 격차는 1.6배에 이른다(그림 VIII-10).

[그림 VIII-9] 성 및 연령별 자살률: 1985-2004



출처: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Mortality Database*(<http://www.who.int/healthinfo/mortables/en/index.html>), 2009.

〈표 VIII-11〉 성,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살생각 비율¹⁾: 1995, 1998, 2001, 2005

(%)

			1995	1998	2001	2005
남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30.7	27.5	17.1	15.2
		중졸	18.2	23.4	14.4	21.0
		고졸	15.2	19.6	15.1	15.7
		대졸 이상	14.5	13.3	9.7	9.1
	거주지역	대도시	18.5	18.0	12.7	17.3
		중소도시	14.2	17.7	13.6	9.7
		농산어촌	17.0	22.4	15.0	11.6
여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26.0	30.8	24.8	23.8
		중졸	23.4	27.7	23.0	29.3
		고졸	22.0	24.4	18.4	19.1
		대졸 이상	22.4	20.3	11.7	15.9
	거주지역	대도시	26.1	27.3	19.8	22.9
		중소도시	20.7	24.2	21.8	20.0
		농산어촌	23.5	30.0	19.6	20.1

주: 1) 비교집단과 시점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5세 단위로 직접 표준화한 비율임.

출처: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년도.

〈표 VIII-12〉 성, 교육수준 및 거주지역별 자살률¹⁾: 1995, 2000,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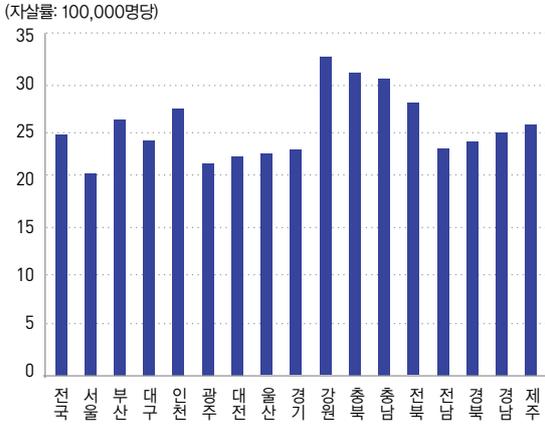
(100,000명당)

			1995	2001	2005
남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51.2	74.6	135.7
		중졸	26.8	45.3	84.6
		고졸	14.8	22.3	37.5
		대졸 이상	7.4	10.0	17.1
	거주지역	대도시	12.1	15.1	21.2
		중소도시	12.6	18.2	24.8
		농산어촌	24.3	34.0	44.3
여자	교육수준	초졸 이하	10.0	14.3	28.5
		중졸	5.6	9.5	20.9
		고졸	5.2	7.2	14.6
		대졸 이상	5.1	5.2	10.2
	거주지역	대도시	5.3	6.5	11.6
		중소도시	5.7	7.2	13.7
		농산어촌	7.9	13.6	18.0

주: 1) 비교집단과 시점별 연령구조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2005년 센서스 인구를 기준으로 5세 단위로 직접 표준화한 비율임.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그림 VIII-10] 시도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2008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2008.

자살의 원인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이들이 죽고 싶어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원인은 무엇일까? 죽은 자는 말이 없기에, 완결된 자살의 동기에 대해서는 추정만 가능할 뿐이다. 자살생각이나 실제 시도를 했던 이들의 답변이 일부 단서를 줄 수는 있지만, 자살생각과 시도가 반드시 완결된 자살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통계청의 2008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이유로 가장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고(36.2%), 그 다음으로 가정불화와 외로움 등이 차지했다. 한편 자살생각의 이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25세 미만에서는 성적·진학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빈번한 이

〈표 VIII-13〉 연령별 자살생각 이유: 2008

(%)

	15-24세	25-44세	45-64세	65세 이상	전체
경제적 어려움	12.4	39.4	50.8	29.3	36.2
이성문제	4.4	3.6	1.6	0.8	2.8
건강 문제	3.9	6.6	14.1	40.9	12.8
직장 문제	9.4	10.5	3.9	0.5	7.1
외로움	16.6	16.8	9.7	14.2	14.4
가정불화	10.3	18.8	17.0	10.4	15.6
성적/진학 문제	35.1	0.5	0.1	0.0	6.8
친구/동료 불화	5.3	0.9	0.2	0.0	1.4
기타	2.9	3.0	2.5	4.0	3.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유로 지목되었던 데 비해, 45-64세 장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건강 문제가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표 VIII-13).

지난 20년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급격한 자살률 증가, 뚜렷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양상은 자살 문제의 이해에서 사회적 병인(病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들이 죽음에 이르는 사연은 매우 다양하겠지만 그러한 개별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사회적 유형이 지속적으로 관찰된다는 것은 개인에 대한 조치 뿐 아니라 사회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향후, 자살 관련 통계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과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명희 (울지과대학교)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요 약

-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의 규모는 전체의 약 10%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작다.
- 민간의료는 급속히 확대되고 공공의료 규모는 거의 정체되어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 공공의료는 사회적 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고유의 공공성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민간의료와 근본적 차이는 없다.

“의료는 공익적이다”라는 명제는 우리에게 보편적인 관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의료의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아직 분명한 합의가 없다. 서구의 복지국가에서는 의료서비스를 ‘탈상품화’ 시켜서 국민의 필요(health needs)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되고, 의료비의 대부분이 공적으로 조달되며, 질환으로 의료를 이용할 때 빈부의 차이 없이 동일 증상에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때 복지국가의 이상에 근접하게 된다. 탈상품화는 의료서비스의 적용인구, 재원조달 방식 및 서비스 이용 등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흔히 간과하기 쉬운 점은 서구에서 의료서비스를 생산하는 병원의 대부분이 국공립이라는 점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의료체계는 의료서비스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능과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이용하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 학교와 함께 병원은 대부분 국공립의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공공병원 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국가보건체계’ (National Health Service)나 사회보험을 재원으로 삼는 ‘국가건강보험체계’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구축하고

있다. 즉 의료서비스의 생산과 이용 양 측면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서구 의료체계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에 전 국민에게 확대적용하면서 사회보험 방식을 사용하여 의료비 재원을 공적으로 조달하여 국민의 직접 지불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추구해 왔다. 의료복지의 확대로 국민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의료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된 점은 분명하다. 다만 의료비의 공적 조달 비중이 서구사회의 경우 약 85% 수준인데 비하여 한국은 아직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개인이 병원을 이용할 때 직접 지불해야 하는 몫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의료서비스 생산을 대부분 민간병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의료생산구조는 수십 년간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민간병원은 기본적으로 영리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사회보험에 의하여 규제하면서 의료의 질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예를 들어 수가가 낮은 분야의 시술이 기피되거나 과도한 검사처방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차적으로는 수가체계의 합리적 개편을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영리추구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탈상품화'의 전형으로서의 공공의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고 기능적 측면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하여 민간의료와 역할의 균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공공의료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의미한다.

2007년 현재 3,649개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234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차지하고 있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182개이다. 이 분포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공공의료기관에는 특수목적의 의료기관이 많은 점이다. 정신병원, 결핵병원, 나병원 같이 민간병원이 담당하기 어려운 특수 질환을 다루는 병원이나 보훈병원, 산재병원, 군병원, 경찰병원처럼 특수한 인구집단을 위한 병원이 많다. 이를 제외한 일반 종합병원은 59곳에 불과하다. 반면 민간 병원은 1,801개에 달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일반 병원은 민간병원임을 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분포의 또 다른 특징은 중앙, 지방정부 및 각 공공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설립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립대학병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의료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시·도립병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설립운영주체가 다르다. 그러다보니 전체적으로 일관된 네트워크 또는 지휘통제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것은 한정된 공공의료자원의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보건기관에서 작성하는 지역보건계획에 공공의료기관들이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 부여되지 못한다.

전체 보건의료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공공의료기관의 수는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지만 민간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도에 공공대 민간 전체의 비는 1:10 이었는데 2007년에는 1:14가 되었다.

의료기관마다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기관의 수보다는 병상의 규모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표 VIII-14〉 공공의료기관 현황: 2007

		기관수
국공립 일반병원	국공립 종합병원	4
	국립대학병원	14
	지방의료원	35
	적십자병원	6
	보훈병원	5
	산재병원	9
	경찰병원	1
	군병원	20
	소계	94
국공립 특수병원	암전문병원	2
	이동병원	1
	재활병원	2
	정신병원	18
	결핵병원	3
	한센병원	1
	노인요양병원	43
	치과병원	1
	보건의료원	17
	소계	88
	보건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1,288
보건진료소		1,913
소계		3,435
총계	3,617	

출처: 보건복지가족부, 『2008 주요업무참고자료』, 2008.

병상 중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4.9%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 9.3%가

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개인의원의 병상이 상당히 큰 규모를 차지하는데 2007년에 209,284개로 전체 병상의 34.5%나 된다. 서구에서는 개업 의사들의 클리닉에는 병상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인의원들에 병상은 있으나 병원 서비스(hospital services) 기능이 약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통상적 의미의 병원 병상만을 기준으로 할 때 공공부문의 비중은 2000년에 20.7%이던 것이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 14.1%가 되었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는 서구사회와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이다. 서구사회에서는 대부분의 병원이 공공병원이다.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공공병원의 비중이 각각 64.9%와 46.4%로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이 경우에도 여타 민간병원의 소유권이 비영리법인(not-for-profit hospital)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영리병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15-16% 정도에 불과하다. 서구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가 취약한 미국의 경우에도 공공병상이 33%에 달한다. 미국 역시 민간 비영리병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공공병원 비중은 37%에 달한다. 반면 OECD 자료를 기준으로 한국은 2000년에 8.1%에 불과하였다.

서구와 한국의 공공병원 병상 비중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포함되는 병상의 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서구의 경우에 병원의 기능에 있어서도 공공병원은 규모도 크고 시설장비도 좋으며 지역 의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영리민간병원은 환자의 편의수준을 높여서 차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이전 민간부문이 성장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민간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표 VIII-15〉 병원수와 병상수: 2000-2007

	공공보건 의료기관	민간 의료기관	공공병원	공공병상	공공병상 비중(%)	
					병원급 병상	전체 병상
2000	3,537	36,053	115	46,325	20.7	14.9
2001	3,534	39,436	117	49,316	19.5	13.2
2002	3,545	42,157	123	51,253	18.8	12.6
2003	3,567	44,264	126	52,186	18.2	11.9
2004	3,591	46,293	134	54,022	17.8	11.6
2005	3,613	48,593	139	53,819	16.5	10.2
2006	3,635	50,569	147	54,937	15.3	9.8
2007	3,649 ¹⁾	52,299	153	56,230	14.1	9.3

주: 1) 〈표 VIII-14〉는 정부가 집계한 것이고, 〈표 VIII-15〉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연구』, 2008.

〈표 VIII-16〉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공공병상 비중:
1990, 1995, 2000

	1990, 1995, 2000 (%)		
	1990	1995	2000
폴란드	-	99.9	99.2
캐나다	97.9	99.1	-
영국	96.8	95.7	-
이탈리아	76.5	76.0	-
멕시코	-	68.6	70.0
프랑스	64.8	64.6	64.9
독일	51.0	49.9	46.4
미국	18.4	33.7	-
일본	29.5	32.4	37.2
한국	14.6	10.2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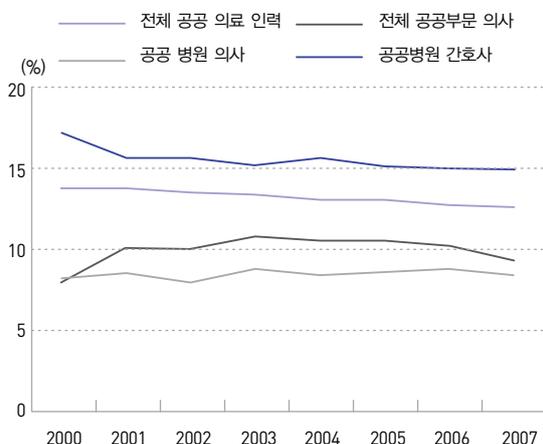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02: a Comparative Analysis of 30 Countries*(<http://www.oecd.org/els/health/data>), 2002.

병원의 규모, 시설 및 기능에서 민간병원들이 공공병원보다 우월한 양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의료 인력과 장비의 분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비중은 [그림 VIII-11]과 같다. 의사의 경우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임상의사와 보건행정직 등에 근무하는 의사들까지 합한 '전체 공공부문 의사'는 전체 의사의 약 10% 수준이다. 이 중 '공공병원 의사'는 공공병원 병상의 규모와 비슷하게 전체 의사의 8%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큰 변화 없이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0년에 전체 간호사의 17.2%가 공공병원에 근무하였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07년에는 14.8%가 되었다. 공공병원의 경우에도 병

[그림 VIII-11] 공공의료 인력의 비중¹⁾: 2000-2007

주: 1) 전체 인력 대비 공공부문 인력(의사, 간호사)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 2008.

상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의사수는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는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은 공공보건 의료 부문 전체에서도 나타나는데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의사수는 약 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전체 의료인력은 14.2%에서 12.2%로 감소하였다.

병상규모를 감안한 의료인력의 분포는 ‘100병상당 인력수’로 파악할 수 있다. 200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가장 의료수준이 높은 대학병원 급에 해당하는 공공

‘종합전문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수는 55.0명으로 민간병원의 37.8명보다 월등하게 많다.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공공병원보다 민간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수가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호사의 경우에는 종합전문병원 급에서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병원규모가 작아질수록 민간병원의 100병상당 간호사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대학병원 급에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더 많은 의사를 고용하여 교육과 연구 및 진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공공병원은 의사나 간호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그만큼 환자 진료 역량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립 병원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병원들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의사를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크다. 간호사의 수도 적고, 시설 장비의 수준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대학병원 등을 제외하면 일반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의료장비의 분포에서도 공공병원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것이 파악된다. 컴퓨터단층촬영기(CT)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처럼 비교적 보편화된 의료장비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각각 8%와 10% 수준의 설치

〈표 VIII-17〉 공공 및 민간 부문 일반병원의 100병상당 의사와 간호사 수: 2000

	의사		간호사	
	공공부문	민간부문	공공부문	민간부문
종합전문병원	55.0	37.8	59.0	60.2
300병상 이상 병원	14.0	19.1	38.9	48.5
160-299병상 병원	10.8	11.3	37.5	43.7
100-159병상 병원	11.0	11.2	38.9	44.1
100병상 미만 병원	1.9	2.3	29.7	36.7

출처: 보건산업진흥원, 『전국병원경영분석』, 2000.

율을 보인다. 이것은 공공병원의 병상규모의 비중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표 VIII-18〉 공공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설치율: 2000-2007 (%)

	CT	MRI	PET
2000	8.1	11.5	28.6
2001	7.8	11.8	20.0
2002	7.3	11.8	16.7
2003	7.5	11.3	17.9
2004	7.9	11.1	16.3
2005	8.0	10.5	15.6
2006	8.1	10.2	14.5
2007	8.8	10.2	19.8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 2008.

반면 비교적 최신의 기술인 양전자단층영상장치(PET)의 경우에는 공공병원에 19.8%가 설치되어 있다. 이 기기는 소수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CT나 MRI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공공병원의 비중이 큰 것이다. 즉 의료체계의 최상부에 있는 대학병원 수준에서는 공공병원이 민간병원에 버금가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시설과 장비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공공병원의 입원환자 비중은 약 9-10% 수준으로 공공병상의 비중보다 다소 낮다. 외래환자 비중은 3-4% 정도로 매우 적다. 이것은 민간부문에서는 외래환자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의원 비중이 크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외래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사

〈표 VIII-19〉 공공병원의 진료환자율¹⁾: 2000-2007 (%)

	외래환자	입원환자
2000	4.9	10.1
2001	4.1	9.3
2002	3.6	9.9
2003	3.6	10.0
2004	3.5	10.2
2005	3.4	10.2
2006	3.3	9.4
2007	3.3	9.4

주: 1) 전체 진료환자 중 공공병원 진료환자의 비율임.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공과 민간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공공성 평가 연구」, 2008.

실상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공공병원, 특히 국공립병원은 상대적으로 의료급여 수혜자나 정신질환자의 입원비율이 높으며, 노인과 만성질환자, 장기입원자가 많은 특성이 있다. 즉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 많이 이용한다. 공공병원은 치매 입원건수의 13.9%, 정신분열증 입원의 17.8%, 결핵 입원건수의 35.8%, 에이즈 입원건수의 43.5%를 감당하고 있다. 이들이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료비 수준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전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수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이나 민간병원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문제는 공단이 부담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지불하는 비급여 부분인데 민간병원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밝히기는 쉽지 않다.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변화 · 이재열 240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 박순진 249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 민수홍 255
친환경 소비성향 · 윤순진 262

IX. 사회안전

Social Security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자연재해 피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나,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피해가 불규칙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다.
- 화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에 따른 피해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여전히 국제적으로는 높은 피해율을 보인다.
-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강력범죄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다.
- 환경지속가능성이 선진국들에 비해 낮지만,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안전을 빼놓고 말하기 힘들다. 매슬로우(Maslow)가 주장한 바와 같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고도성장으로 절대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화로 자유로운 표현과 정치적 권리의 확대를 경험한 한국사회에서도 안전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1995년 고름우유 논쟁에서 시작해 중국산 납꽃게, 구제역, 조류독감, 쓰레기만두, 기생충알 김치 등 먹거리 안전에 관한 언론보도가 거의 연례행사처럼 이어졌고, 그때마다 여론은 들끓어 올랐다. 특히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광우병 논란은 위험이 커다란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안전한 사회는 위험하지 않은 사회다. 그래서 사회 안전에 대한 탐구는 위험에 대한 연구와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위험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위험을 낳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자연재난, 인위적 재난, 사회적 위험 및

생태적 위험으로 나누었다.

자연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을 자연재난이라고 칭하는데, 지진, 황사, 그리고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 등이 대표적이다.

인위적 내지 기술적 재난에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과 기술체계의 오작동이나 인간적인 오류 혹은 두 가지의 결합에 의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의미하는데, 화재가 가장 대표적이며, 그 중에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위험요인들이다.

사회적 위험은 집단 내 규범이나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체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빈곤과 범죄이다. 외환위기 이후 강력범죄가 크게 늘어났으며,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과 소득의 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생태적 위험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개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위험을 뜻한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자연은 환경오염 등에 의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 문명의 발전이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 것이다.

환경오염은 건강에 단기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해수면 온도를 올리고, 기상이 변을 가져와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과 경제활동 모두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녹색성장이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는 이유는 어느 나라도 환경문제의 해결 없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세계적인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녹색혁명은 정치체제의 유형을 불문하고 모든 나라를 승자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그만큼 환경은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라는 것이다.

생태적, 기술적, 사회적 수준에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첩경이다. 그런데 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기보다는 계층적으로 불평등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집단일수록 열악한 삶의 질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위험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자연재해

해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는다. 특히 최근 들어서 봄철에는 중국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실은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자연재해 중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은 태풍과 강풍, 그리고 폭우의 피해다. 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과거 장마철에 집중하였던 강수량이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또 집중적인 지역적 호우로 바뀌면서 우리나라의 기후가 아시아의 몬순형 기후에서 아열대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매년 한 번 이상 한반도를 지나가는 태풍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주된 자연현상이다. 2002년의 루사, 2003년의 매미, 2006년의 에위니아 등은 모두 재산피해액만 수 조 원씩을 남긴 초대형 태풍이었다.

그동안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2002년 태풍 루사의 영향이 가장 컸다. 모두 6조 원 이상의 재산피해와 270명의 사망자, 그리고 7만 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다행히도 그 후에는 재산피해액이나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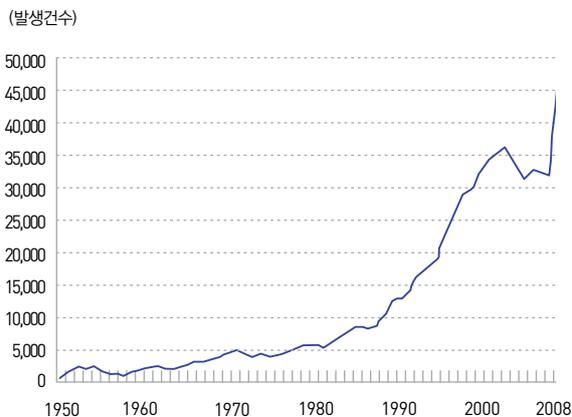
자와 이재민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2007년에는 2,518억 원의 재산피해에 17명의 사망자, 그리고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데 그쳤다.

〈표 IX-1〉 자연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액과 사망자 및 이재민 수: 1995-2007

연도	재산피해액 (억 원)	사망자수	이재민수
1995	6,012	158	30,408
1996	4,831	77	18,686
1997	1,909	38	6,296
1998	15,828	384	30,308
1999	12,197	89	26,656
2000	6,455	49	3,665
2001	12,562	82	4,165
2002	61,153	270	71,204
2003	44,082	148	63,133
2004	12,304	14	8,814
2005	10,498	52	9,914
2006	19,430	63	2,883
2007	2,518	17	675

출처: 소방방재청, 『재해연보』, 각 년도.

〔그림 IX-1〕 화재 발생건수: 1950-2008



위의 통계로부터 우리는 한국의 자연재해는 거의 전적으로 태풍과 호우에 의한 피해이며 일본이나 중국, 대만과는 달리 지진피해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아울러 동일한 태풍이 한반도를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북한에서의 인적, 재산상의 피해가 남한에 비해 거의 100배 정도 크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는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가 그 사회의 발전수준이나 전략에 의해 크게 증폭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기술적 재난

화재

화재는 가장 중요한 인위적 재난이며 큰 피해를 낳는 재난이다. 우리나라의 화재발생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 1만 건 이내에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1만 건을 넘기면서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는 연간 3만 건을 넘어섰고 등락은 있었지만 2008년에는 49,631건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화재가 급증한 이유는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와 생활환경 및 에너지 사용의 증가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요인은 빠르게 늘어난 반면, 화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방화, 가스, 담배, 유류, 불량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81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전기화재가 줄곧 1위였고, 담뱃불화재가 2위, 방화가 3위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방화가 담뱃불화재를 추월하였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007년도 화재통계연감』, 2008).

종류별로 보면 건축물화재가 가장 빈번하고, 그 다

음이 차량화재이며 그 외 선박이나 항공기 화재가 있다. 지난 10년간 화재는 대부분 건축물에서 발생하였으며, 건축물 중에서도 일반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이 공동주택, 음식점, 기타 순이었다. 건축물화재로 인한 피해는 1997년 이후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다가 2002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반면, 차량 화재는 일정 발생률을 유지하고 있다(『2007년도 화재 통계연감』, 2008).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발생현황을 보면, 197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산업 발달의 가속화에 따라 건축물 및 차량의 화재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사상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화재피해 및 사상자의 발생이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밀집시설의 증대와 복합구조화 등으로 인해 화재가 빈번해지고, 또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커지는 반면, 화재와 안전관리에 관한 체계와 관련기술은 아직 안정적으로 제자리를 잡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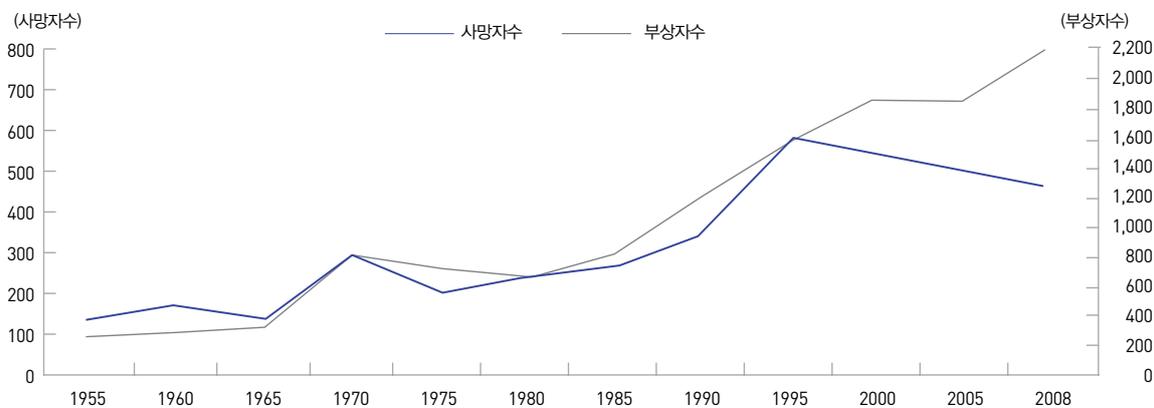
결과로 해석된다.

화재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2,420명(사망 515명, 부상 1,905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 1.41명, 부상 5.22명 꼴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산피해는 연평균 1,883억 5,400만 원으로 하루 평균 5억 1,600만 원의 재산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한국사회가 눈부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면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의 산업전반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의 아픔이 존재한다. 초고속 성장을 지탱해 온 힘 자체가 바로 대규모의 위험요인들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성장과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급속도로 활발하게 시행된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는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이에 비례하여 부상 또는 직업병 등을 얻은 재해자수도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재해 건수 및 재해자수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초기의 산업화 과정

[그림 IX-2] 화재로 인한 사상자수: 1955-2008



출처: 소방방재청, 『화재통계연감』, 각년도.

에서 발생하였던 작은 시행착오들이 사고로 발전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산업재해 건수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의 갖가지 작은 실수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어진 반면에, 한 번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자 수는 1964년 1,489명에서 시작하여 1984년을 피크로 157,800명까지 증가했다가, 조금씩 줄어들어 1998년에 51,514명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소폭 증가하여 2008년에는 95,806명에 이르고 있다.

근로자 대비 재해자의 비율을 따지는 재해율로 보면 1960년대 중반에는 6%에 가까웠으나 점차 줄어들어서 2007년에는 0.72%로 낮아졌다. 재해로 인한 부상자의 수는 1984년의 154,930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6년에는 39,746명으로 줄었으나, 사

망자의 수는 2,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중대사고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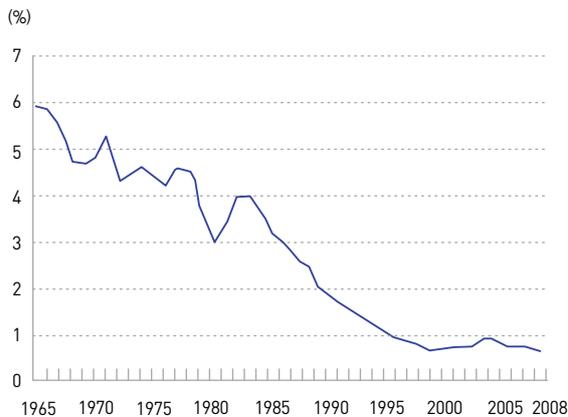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왔다. 1990년에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12,325명에 이르러 세계 1위 수준의 교통사고국이라는 오명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망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1년을 정점으로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8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870명으로 최악의 시점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어들었으며, 그 감소 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볼 때, 한국의 자동차 10,000대당 사망자수는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일본 등의 평균보다는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다.

범죄부하량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을 최근까지 갖고 있었다. 실제로 한국의 대도시에는 야간에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치안상태를 보이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특별한 원한관계 없이 무차별적 살인이나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신 역시 언제 어디서 뜻하지 않게 범죄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1983년부터 2008년까지의 주요 범죄발생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지난 1983년 이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285,846명에서 2008년 897,536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인구 100,000명당으로 따지면 716건에서 거의 2.6배에 가까운 1,847건으로 늘어난 것이

[그림 IX-3] 산업재해율¹⁾: 196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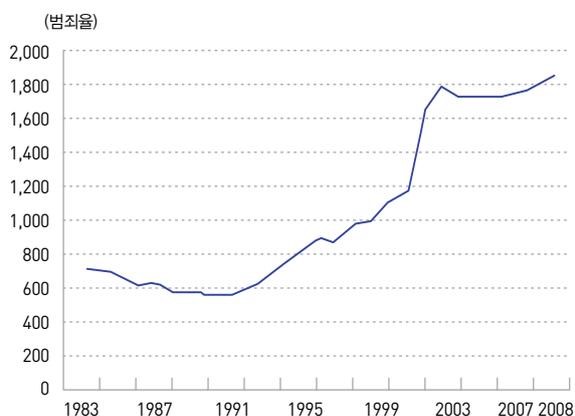
주: 1)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출처: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분석』, 각 년도.

다. 특이한 것은 절도사건의 경우 1994년을 저점으로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가, 2008년에는 223,264건 수준으로 늘어났고, 살인사건도 1983년의 518건에서 2008년에는 1,120건에 달해 동 기간에 두 배가 되었다. 강도와 강간사건도 각각 2배와 2.5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폭행과 상해사건도 꾸준히 증가하여 두 배 이상으로 증대되었다.

특히 IMF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범죄로 인한 위험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주요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997년 120,219건에서 2000년 228,394건으로 무려 100,000건 이상 늘어났다. 이 기간 중 5대 주요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율은 전체 범죄 발생건수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그림 IX-4] 형법범죄율¹⁾: 1983-2008



주: 1) 인구 100,000명당 범죄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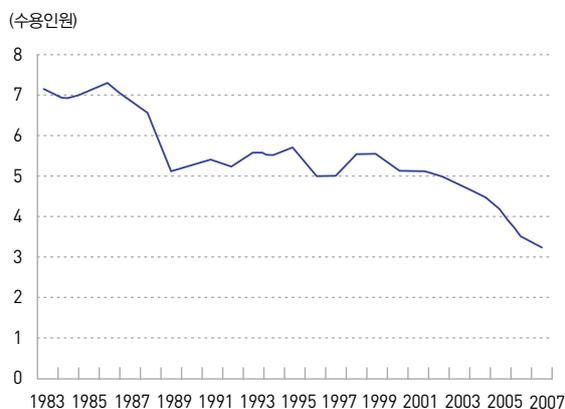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범죄방지 및 교도능력

1983년에 교도소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2,000명이었는데 그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8년에 68,000명 수준으로 정점에 달하였다가, 2007년에는

46,000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인구 100,000명당으로 따지면 132명 수준에서 96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수용능력이 늘어난 데는 그 동안 교도관의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 교도관 1인당 수용인원이 7명 수준에서 3.4명대로 떨어진 것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X-5] 교도관 대비 1일 평균 수용인원: 1983-2007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년도.

환경

인간이 소비하는 에너지, 식량, 주택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을 소모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것을 생태발자국지수(Ecological Footprint)라고 한다. 그런데 이 지수에 따르면 선진국은 이미 지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기준을 25% 가량 초과하고 있으며 후진국에서는 극심한 빈곤과 식량난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들이 뿌리째 뽑히고 있고,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한 사냥이 계속되고 있다. 제한된 생태자원의 급속한 훼손과 소멸은 우리 세대 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할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것의 의

미한다.

국가의 환경수준은 경제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60년간 압축경제 성장과정을 거쳤다. 1950년 한국전쟁과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는 도시대로, 농산어촌은 농산어촌대로 환경오염으로 인해 자연환경이 훼손되었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79달러 수준이었다. 환경오염 문제는 경제개발과 더불어 서서히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환경오염이 최고점에 달했고 이에 따라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환경보전정책이 세워졌고 환경예산도 증가되었다. 1990년대 이후 환경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환경의 유지수준을 수치로 말해주는 환경지속성지수(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는 136위로 매우 열악하다. 이에 국민소득 20,000달러 시대에 걸 맞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의 극복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60여 년간의 우리나라 환경의 변화와 현황을 환경압력-환경상태-환경관리체계에 대한 대표적인 개별지표를 선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압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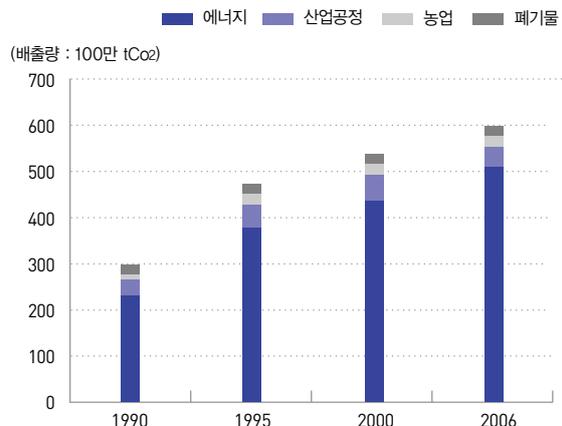
환경문제와 관련해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기후변화와 수질오염이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다양한 기체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이지만, 그 중 이산화탄소가 가장 대표적인 오염물

질이다.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에 잔류하는 기간이 길어 장기간에 걸쳐 기후변화를 진행시키기 때문이다.

2006년 현재 한국은 GDP로는 세계 12위이면서 에너지 소비는 10위, 석유소비는 7위, 전력소비는 10위이며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은 세계 9위인 상태이다. 에너지 관련 지표들이 절대적으로 높을 뿐 아니라 GDP 대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2006년에 한국에서 배출된 온실기체는 약 6억 톤이다(그림 IX-6). 이 중에서 84.3%인 5억 540만 톤이 에너지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에너지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에너지전환부문(35.5%)이다. 그 다음으로 산업부문(31.3%)과 수송부문(19.8%)이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소비하므로 여전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와 온실기체 배출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림 IX-6] 부문별 온실기체 배출량: 1990-2006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배출통계데이터베이스(<http://www.keei.re.kr>), 2009.

전환부문의 온실기체 배출량은 지난 16년 동안 4.7배나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온실기체 중 35.5%가 전환부문에서 배출된다. 하지만 전환부문에서 생산된 전력의 50% 가량이 산업부문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주요한 온실기체 배출원이라 할 수 있다. 전환부문 다음으로 온실기체 배출이 빠르게 증가한 부문은 수송부문이다.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이다. 오히려 한국의 이산화탄소 비중은 더 높아서 총 온실기체 배출량 중 88.8%에 이른다. 이는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양인데 에너지 소비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6년 한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86톤으

로 OECD 국가 평균인 10.93톤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1990년 5.35톤에 비해 84.3%가 증가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OECD 국가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같은 기간 평균 2.9% 증가하였다.

환경상태: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아황산가스는 연료 중 함유된 황성분에 의해 발생하는데, 1990년 이후 저황유 공급 및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등이 이루어지면서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오염도가 가장 심했던 서울시의 대기질은 아황산가스(SO₂)기준으로 1980년 0.094ppm에서 1998년 0.008ppm으로 대폭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

〈표 IX-2〉 대도시 대기오염도(아황산가스(SO₂)와 오존(O₃)): 1990-2008

	(ppm)									
	SO ₂					O ₃				
	1990	1995	2000	2003	2008	1990	1995	2000	2003	2008
서울	0.051	0.017	0.006	0.005	0.006	0.009	0.013	0.017	0.014	0.019
부산	0.039	0.023	0.010	0.006	0.006	0.017	0.016	0.022	0.023	0.026
대구	0.041	0.031	0.009	0.006	0.005	0.008	0.017	0.019	0.020	0.024
인천	0.044	0.023	0.008	0.007	0.007	0.008	0.013	0.019	0.019	0.023
광주	0.017	0.010	0.006	0.004	0.004	0.010	0.016	0.017	0.018	0.023
대전	0.029	0.017	0.007	0.004	0.004	0.009	0.015	0.020	0.018	0.023
울산	0.027	0.028	0.013	0.011	0.008	0.011	0.015	0.021	0.021	0.023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표 IX-3〉 4대강의 수질오염도: 1985-2008

		(BOD(mg/l))						
		1985	1990	1995	2001	2003	2005	2008
한강	팔당댐	1.4	1.0	1.3	1.3	1.3	1.1	1.3
	노량진	4.7	3.4	3.8	3.4	2.8	3.1	4.3
낙동강	고령	8.5	5.4	7.3	4.2	2.1	2.9	3.1
	물금	3.7	3.0	5.1	3.0	2.1	2.6	2.4
금강	대청댐	1.1	1.7	1.2	1.0	1.1	1.1	1.0
	공주	2.6	3.2	4.8	3.4	2.1	2.8	2.9
영산강	나주	5.2	6.7	7.0	6.2	4.8	5.3	4.9
	담양	-	-	1.5	0.8	1.0	1.5	1.5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각 년도.

하고 있다. 1990년 이전까지는 광주를 제외한 주요 도시지역의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연간 환경기준치(0.02ppm)를 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IX-2). 2000년 들어와서는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도시들이 WHO 권고기준(0.019ppm)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산화질소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포함되어 있는 탄화수소가 강한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오존농도는 증가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6개 대도시 모두 오존오염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5대 대도시 모두 서울보다 오존농도가 높다. 그러나 환경기준 이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4대강의 수질오염도는 1990년 이후 영산강을 제외하고 3급수 이내로 양호하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 확충, 4대강 특별대책 수립 및 특별법 제정 등 수질개선 노력이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한강 팔당유역과 금강 대청댐유역은 2급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강 팔당댐 지점의 수질오염도는 1985년 1.4mg/l에서 1990년 1mg/l, 2001년 1.3mg/l, 2008년 1.3mg/l로 양호한 편이다(표 IX-3). 영산강 하류지역인 나주는 1990년 6.7mg/l, 1995년 7.0mg/l로 4급수로 악화되었으며, 2003년 4.8mg/l, 2008년 4.9mg/l로 3급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경오염 방지노력

우리나라는 1989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를 달성하면서 국가적으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환경정책과 제도, 그리고 환경예산과 기술이 한 단계 발전한 바 있다.

정부의 총예산 가운데 환경예산은 1992년 1.37%에

〈표 IX-4〉 정부예산과 GDP 대비 환경예산 비율:

1992-2008 (%)		
	정부 총예산 대비 환경예산 비율	GDP 대비 환경예산 비율
1992	1.37	0.26
1995	2.05	0.51
1998	2.24	0.66
2000	2.32	0.57
2003	2.12	0.47
2008	1.87	0.39

출처: 환경부, 『환경백서』, 각 년도.

〈표 IX-5〉 환경보호지출액: 2002-2006

	환경보호 지출액 (10억 원)	1인당 환경보호 지출액 (1,000원)	GDP 대비 환경보호 지출액 비율(%)
2002	13,579.4	285	2.0
2003	14,741.4	308	2.0
2004	16,083.6	335	2.1
2005	17,630.6	366	2.2
2006	19,457.1	403	2.3

출처: 한국은행,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통계』, 각 년도.

서 1995년 2.05%, 2000년 2.32%로 증가하였다(표 IX-4). 그러나 2000년도 이후 감소하여 2006년 현재 1.87%를 차지하고 있다. GDP 대비 환경예산은 1992년 0.26%에서 1998년 0.66%로 정점을 나타내다가 2000년 0.57%, 2008년 0.39%로 감소하고 있다.

환경보호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2년 국민 1인당 환경보호지출은 285,000원이었으나 2003년 308,000원, 2006년 403,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표 IX-5). GDP 대비 지출비율도 2002년 2.0%에서 2006년 2.3%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불기 시작한 녹색성장 바람은 기존의 환경에 압력을 가하는 경제성장 대신 환경친화적이며 탄소발생을 줄여 지속성장이 가능한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어떻게 환경과 성장 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나갈지 주목된다.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요 약

-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평가한 사람이 “안전하다”고 평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 남자보다 여자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불안하다”는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현재 사회안전 상태가 10년 전에 비해 훨씬 “위험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보다 여자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에서 사회의 안전 상태 변화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범죄 발생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위험과 환경오염 등이 지목되었다. 남자는 경제적 위험을, 여자는 범죄 발생을 가장 주된 불안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촌은 자연재해를, 도시는 경제적 위험을 불안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높았다.

안전은 위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여러 영역에서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오늘날 세계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느 사회도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체계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상호의존성이 커질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상황, 즉 위험의 가능성은 증가하고 그 범위도 확대된다.

재난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을 확보하는 문제는 인류 역사에서 항상 중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더구나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저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관심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안전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하는 문제에서 핵심적인 영역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위는 객관적인 위험

수준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식한 주관적인 위험 수준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위험요인을 관리·회피하여 사고나 재난을 예방하거나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줄이려는 노력은 안전과 위험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에서는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사회안전의 객관적 실태와 관련되어 있으나 반드시 그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위험요인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역시 객관적 위험 수준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은 사람들의 주관에 개입되어 나타나므로 사람들의 가치나 규범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과 영역별 안전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를 살펴본다. 둘째, 우리 사회의 안전 상태가 10년 전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셋째, 일반인들은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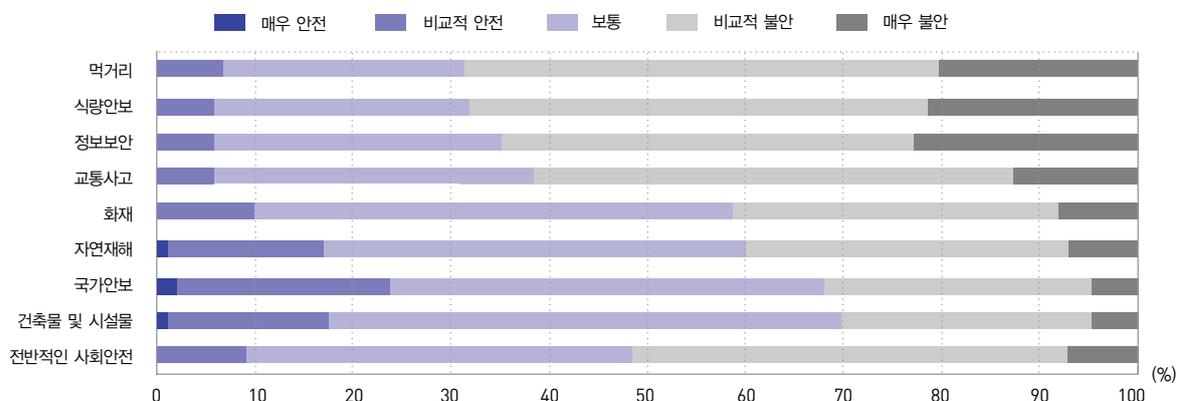
으로 무엇을 가장 주목하는지 살펴본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 수준에 대해 “안전하다”(매우 안전 + 비교적 안전)고 응답한 사람은 10%에도 미달한 반면 “불안하다”(매우 불안 + 비교적 불안)고 응답한 사람은 50%를 넘어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이 “불안하다”는 평가가 훨씬 더 우세하였다. 응답 범주별로 보면 “비교적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과 “보통이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40%로 가장 많고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그림 IX-7).

사회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조사에 포함된 8개 영역 모두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아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불안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영역은 먹거리이고, 다음으로 식량안보, 정보보안, 교통사고 등의 순서였다. “안전하다”는 평가가 가장 높은 영역은 국가안보이고 다음으로 건축물 및 시설물,

[그림 IX-7]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자연재해, 화재 등의 순서로 집계되었다.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한편으로는 종래에 중시되거나 일상적인 위협으로 간주되던 국가 안보,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염려가 줄어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과 웰빙이 중시되는 최근의 사회적 트렌드에 부응하여 먹거리와 식량안보가 부각되고 있고 동시에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 보안이 강조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전체적으로 “불안하다”는 평가가 과반수로 우세하지만 인구 집단에 따라 그 정도에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불안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30대와 40대 연령층에서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불안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불안하

〈표 IX-6〉 성, 연령, 지역별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

		안전하다	보통이다	불안하다
성별	남자	9.3	41.7	49.0
	여자	7.2	39.2	53.6
연령별	29세 이하	8.6	39.7	51.7
	30~39세	6.9	39.2	53.9
	40~49세	8.5	39.5	52.0
	50~59세	8.2	41.5	50.2
	60세 이상	8.9	43.0	48.1
지역별	동부	8.5	40.7	50.9
	읍면부	7.2	39.1	53.7
전체		8.2	40.4	51.4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표 IX-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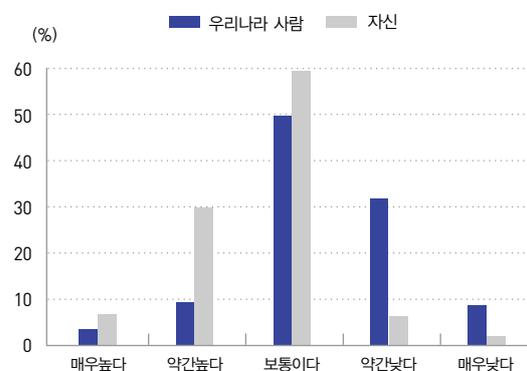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낮다”(매우 낮음 + 약간 낮음)는 평가가 “높다”(매우 높음 + 약간 높음)는 평가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과반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높다”는 평가가 “낮다”는 평가에 비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X-8).

이를 보면 타인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반면,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 타인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평가가 서로 상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의식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안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현재 사회가

[그림 IX-8] 우리나라 사람과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인식: 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훨씬 위험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년 전에 비해 현재 사회의 안전 상태가 “위험해졌다”(약간 위험 + 매우 위험)는 응답이 60% 이상인 반면, 현재 사회가 과거보다 “안전해졌다”(약간 안전 + 매우 안전)는 응답은 20%에 미달하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향후 사회의 안전 상태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향후 사회의 안전 상태가 “위험해질 것이다”(약간 위험 + 매우 위험)는 응답이 50%를 넘은 반면, 앞으로 사회가 “안전해질 것이다”(약간 안전 + 매우 안전)는 응답은 20%에 미치지 못하였다(그림 IX-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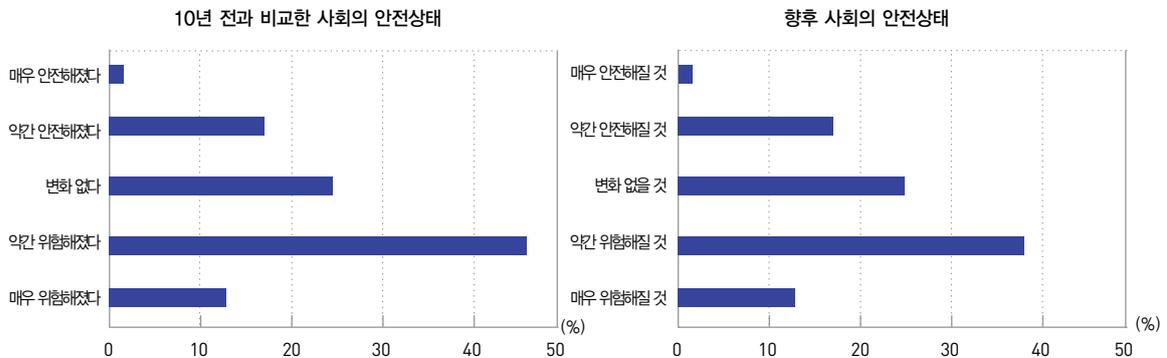
분석 결과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안전 상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위험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위험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은 위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한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과거로부터의 안전 상태 변화에 비해 미래의 안전 상태 변화에서 위험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다소 줄어들고 대신에 변화가 없거나 안전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약간 늘어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안전 상태에 대해 현재 상태에 비해 앞으로 더 위험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과반수로 우세하지만 그 정도는 인구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에 비해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30대와 29세 이하 연령층에서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은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연령층에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다소 낮았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위험해질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표 IX-7). 안전 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에서 드러난 이와 같은 집단별 차이는 <표 IX-6>에서 살펴본 사회안전 수준에 대한 집단별 차이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흥미롭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의 인식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주된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위험과 환경오염 등이 주요 불안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비해 화재, 교통사고, 건

[그림 IX-9] 사회안전 상태의 변화에 대한 평가: 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표 IX-7〉 성, 연령, 지역별 미래 안전상태 변화에 대한 평가: 2008 (%)

		위험해 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이다	안전해 질 것이다
성별	남자	51.7	27.2	21.2
	여자	56.4	26.3	17.3
연령별	29세 이하	57.5	25.3	17.2
	30-39세	58.6	24.8	16.7
	40-49세	54.6	26.1	19.3
	50-59세	50.4	27.3	22.3
	60세 이상	46.6	31.2	22.2
지역별	동부	53.9	26.6	19.6
	읍면부	55.1	27.4	17.5
전체		54.1	26.7	19.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물붕괴 등 인재, 빈부 격차로 인한 계층 갈등, 그리고 자원, 에너지 고갈 등을 주요 불안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표 IX-8).

이러한 결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압축적 성장을 이룩한 우리 사회에서 특히 1990년대 빈발하였던 대형 재난에 대한 불안이 최근 다소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범죄, 경제적 위험, 환경오염 등이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불안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보다 발전된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후진국 양상을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평가도 인구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경제적 위험을 가장 불안하게 평가하였으나 여자는 범죄 발생을 가장 불안하게 평가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20대 이하와 30대 연령층에서는 범죄 발생이 가장 주요한 불안요인으로 평가된 반면, 40대 연령층에서는 경제적 위험이, 50대 연령층에서는 환경오염이, 그리고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국

〈표 IX-8〉 성, 연령, 지역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요인 인식: 2008 (%)

		범죄 발생	경제적 위험 ¹⁾	환경 오염	국가 안보	자연 재해	신종 질병	도덕성 부족	인재 ²⁾	계층 갈등 ³⁾	자원 에너지 고갈	기타
성별	남자	14.4	16.8	13.6	11.8	8.9	7.7	9.9	6.9	6.1	3.8	0.3
	여자	22.1	14.1	13.4	9.3	9.6	9.4	7.3	6.9	5.0	2.5	0.3
연령별	29세 이하	21.9	12.9	10.4	10.5	7.6	12.9	8.9	5.9	4.7	3.9	0.5
	30-39세	22.7	17.0	12.3	8.3	7.8	7.4	9.5	6.7	5.3	2.8	0.2
	40-49세	16.5	18.0	15.5	8.9	9.2	7.3	9.0	6.4	6.1	3.0	0.2
	50-59세	13.8	16.1	17.7	10.7	10.9	6.7	7.6	7.0	6.4	3.0	0.1
	60세 이상	14.2	13.6	13.3	15.0	12.2	7.0	7.4	8.8	5.5	2.6	0.4
지역별	동부	18.5	15.8	13.5	10.4	8.3	8.8	8.9	6.9	5.6	3.0	0.2
	읍면부	17.5	14.0	13.4	11.1	13.6	7.5	6.9	6.8	5.0	3.7	0.5
전체		18.3	15.4	13.5	10.5	9.3	8.6	8.6	6.9	5.5	3.1	0.3

주: 1) 기업파산, 실업 등이 포함됨.

2) 화재, 교통사고, 건물붕괴 등이 포함됨.

3)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임.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2008.

가 안보가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평가되었다. 도시와 농촌 모두 범죄 발생이 가장 주된 불안요인이라고 한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나 농촌은 도시에 비해 자연재해를, 도시는 농촌에 비해 경제적 위험을 불안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높아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인구 집단별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생활양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로 접촉하거나 노출되는 위험요인이 상이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순진 (대구대학교)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요 약

- 지난 10년 사이에 청소년 비행과 범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현상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2-3년 사이에 청소년 범죄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을 보면, 12-13세의 소년이 2004년도 이후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범죄소년 가운데 14-15세 청소년 비율도 2005년 이후로 증가한데 반해 18-19세의 청소년 비율은 감소하여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가 관찰된다.
- 지난 10년 사이에 남자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자율은 감소한데 비해 여자 청소년 범죄자의 범죄자율은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 여자 청소년의 비율이 2.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를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말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곤 한다. 언론이나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젊은 세대는 반사회적이고, 난폭하며, 방탕한 것으로 그려진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제멋대로 사는 젊은 세대의 문제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문제의 시작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도 젊은 세대의 문제는 심각하고, 날이 갈수록 그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인지를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관한 공식통계를 사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네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실태는 얼마나 심각하고, 청소년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주로 청소년 범죄자수와 범죄율을 이용한다. 범죄자수는 절대빈도를 의미하고, 청소년 범죄율은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를 청소년 인구수로 나눈 후 100,000을 곱한 수치로 청소년 인구 100,000

명당 청소년 범죄 발생건수를 나타낸다. 과거 청소년 범죄자는 12-13세의 촉법소년(형법 및 관련 특별법을 위반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대상이 12세 이상 20세 미만이었지만 소년법이 2007년 12월 21일에 개정되고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연령 기준을 가지고 청소년 범죄를 비교하기 위해서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의 공식통계를 사용하였다. 다만 범죄의 공식통계인 『범죄분석』에는 청소년 범죄발생 건수는 제시되지 않고 청소년 범죄자 인원만이 제시되어 있어서 청소년 인구 100,000명당 청소년 범죄자수를 나타내는 범죄자율을 사용하겠다. 둘째, 청소년 범죄의 폭력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청소년 형법범죄를 구성하는 재산범죄와 폭력범죄(강력범죄 포함)의 비율

과 그 추세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겠다. 셋째,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되고 있는가에 답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자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고 그 추세를 살펴보겠다. 넷째, 여자 청소년 범죄의 증가 여부는 청소년 범죄자 중 여자 청소년 범죄자의 구성비와 그 추세를 통해서 살펴보겠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발생빈도와 심각성

전체 청소년 범죄자는 1998년에 148,558명에서 2007년에는 88,10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청소년 인구(12-19세 인구) 100,000명당 청소년 범죄자수인 범죄자율도 같은 기간 2,438명에서 1,665명으로 32% 정도 감소하였다. 지난 10년 동안의 전체 청소년 범죄자율은 2000년에 2,515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뒤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 전통적인 범죄를 포함하는 청소년 형법법의 최근 10년

〈표 IX-9〉 전체 청소년법과 청소년 형법법의 수와 범죄자율: 1998-2007

	전체 소년법		소년 형법법 ¹⁾	
	소년범수	범죄자율 ²⁾	소년 형법범수	범죄자율 ²⁾
1998	148,558	2,437.9	99,552	1,633.7
1999	143,155	2,416.2	93,261	1,574.1
2000	143,637	2,514.7	94,465	1,653.8
2001	130,983	2,394.6	82,746	1,512.7
2002	115,423	2,187.5	75,982	1,440.0
2003	96,085	1,857.9	67,135	1,298.1
2004	72,770	1,412.2	51,298	995.5
2005	67,478	1,299.0	50,652	975.1
2006	69,211	1,322.1	50,846	971.3
2007	88,104	1,664.6	60,426	1,141.7

주: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자를 형법법에 포함시킴.

2) 범죄자율=(소년범수÷만 12-19세 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표 IX-10〉 범죄유형별 청소년 형법범수와 범죄자율: 1998-2007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기타		합계
	소년범수	범죄자율 ¹⁾	소년범수	범죄자율 ¹⁾	소년범수	범죄자율 ¹⁾	소년범수	범죄자율 ¹⁾	
1998	42,795	702.3	51,040	837.6	4,355	71.5	1,362	22.4	99,552
1999	35,281	595.5	52,950	893.7	4,332	73.1	698	11.8	93,261
2000	35,196	616.2	54,662	957.0	3,762	65.9	845	14.8	94,465
2001	29,723	543.4	49,186	899.2	2,994	54.7	843	15.4	82,746
2002	34,151	647.2	37,872	717.8	2,323	44.0	1,636	31.0	75,982
2003	32,009	618.9	31,401	607.2	2,359	45.6	1,366	26.4	67,135
2004	26,429	512.9	21,788	422.8	1,708	33.1	1,373	26.6	51,298
2005	26,848	516.8	21,009	404.4	1,549	29.8	1,246	24.0	50,652
2006	29,506	563.6	18,104	345.8	1,857	35.5	1,379	26.3	50,846
2007	33,659	635.9	23,275	439.8	1,928	36.4	1,564	29.5	60,426

주: 1) 범죄자율=(소년범수÷만 12-19세 인구수)×100,0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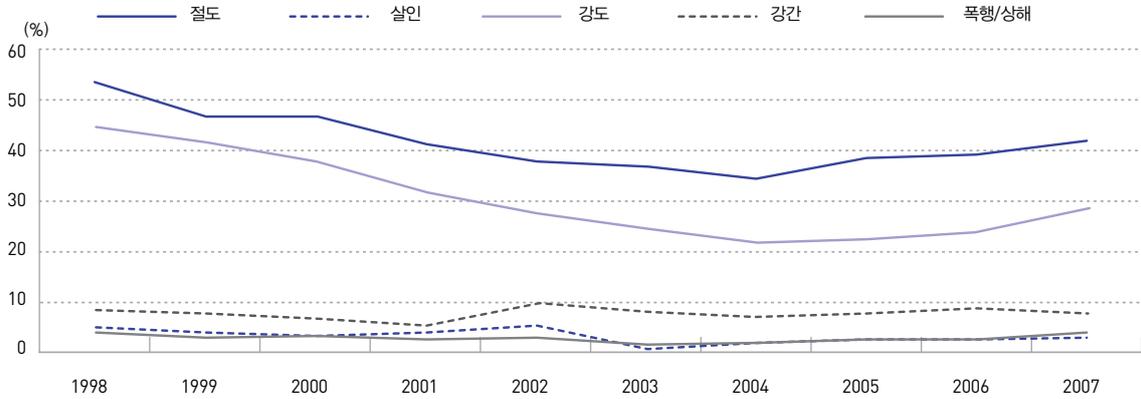
간 발생인원과 범죄자율에서도 전체 청소년 범죄자율과 비슷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형법범의 범죄자율이 10년 사이에 약 30% 감소하였으나 2007년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청소년 형법범을 그 유형에 따라서 재산범죄(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폭력범죄(폭행, 상해, 협박, 공갈 등), 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및 성폭력)와 기타(풍속, 위조, 과실 등)로 4분하여 유형별 발생인원과 범죄자율을 살펴보았다. 재산범죄, 폭력범죄, 강력범죄 모두에서 지난 10년 사이에 청소년 범죄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범죄자는 1998년에 42,795명에서 2007년에는 33,659명으로 약 21% 감소하였고, 동기간 폭력범죄자는 약 54% 감소하였으며, 강력범죄자는 약 56%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폭력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감소가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같은 기간 동안 기타 범죄자만 약 15%정도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사이에 재산범죄자, 폭력범죄

자, 강력범죄자 모두 감소하였지만 최근 들어 모두 증가하기 시작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산범죄자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폭력범죄자는 2007년에 전년도에 비해서 29% 정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강력범죄자는 2006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전체 청소년 범죄자와 청소년 형법범의 추세와 형법범을 구성하는 유형별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인과 청소년 범죄를 합친 전체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별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그림 IX-10]을 보면, 2007년도의 경우 전체 절도범죄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상당히 높게 나온다. 이것은 2007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절도사건 가운데 청소년이 저지른 절도사건이 40%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전체 강도 사건 가운데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로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강간(9%), 폭행·상해

[그림 IX-10] 전체 형법범 중 주요 범죄별 청소년 범죄자 비율¹⁾: 1998-2007



주: 1) 전체 형법범 중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2%), 살인(2%)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해 보면, 주요 범죄 중에서 절도와 강도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30-40%에 이르러 청소년들이 이들 범죄를 상대적으로 많이 저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된 5가지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면, 모든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절도는 1998년에 53%로 당시 절도의 과반 이상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던 것이 2007년에는 40%로 줄어들고, 강도는 같은 기간 45%에서 30%로 감소하고, 살인은 5%에서 2%로 줄어들고, 폭행·상해는 4%에서 2%로 감소했다. 강간은 1998년의 9.1%에서 2007년의 8.7%로 약간 감소했지만 9%를 전후하여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강간을 제외한 4가지 주요 범죄에서 청소년 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동안 모두 감소했지만 절도와 강도의 비율은 2005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고, 살인, 폭행·상해의 경우는 그 비율이 2004년 이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폭력화

지난 10년 동안 청소년 범죄는 폭력화되어 왔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위의 <표 IX-10>에서 청소년 범죄를 구성하는 재산범죄자의 비율과 폭력범죄자(강력범죄 포함)의 비율을 비교하여 답을 찾아보았다. 1998년의 경우를 보면, 폭력범죄자(강력범죄자 포함)가 청소년 형법범죄자의 56% 정도를 차지한데 비해 재산범죄자는 43%를 차지하여 폭력범죄자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로 폭력범죄자의 구성비는 증가하여 2001년에는 63%에 이르렀고, 2003년까지는 50%를 약간 넘었으나, 2004년부터 재산범죄자의 구성비가 52%로 더 높아졌고 그 추세가 이어져 2007년에는 56%에 이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소년 범죄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폭력범죄자(강력범죄자 포함)가 과반의 구성비를 보여 폭력화의 경향이 관찰되었지만 2004년 이후로는 재산범죄자의 구성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폭력화 경향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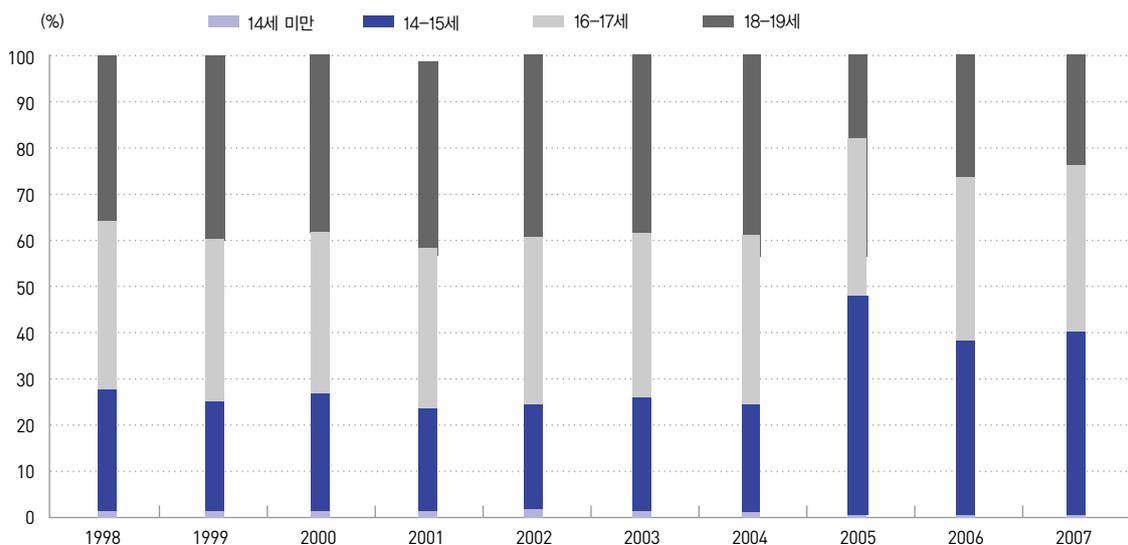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저연령화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먼저, 청소년 형법범죄자들의 연령별 구성비와 그 변화 추세를 살펴보았다. [그림 IX-11]은 소년 형법범죄자들을 4개의 연령 집단으로 나누어 그 구성비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14-15세의 구성비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연령대의 구성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14-15세의 구성비는 1998년에 26% 정도였다가 2007년에는 40% 정도로 높아졌다. 반면에 14세 미만의 연령대 구성비는 1998년에 1.1%를 나타내다가 2007년에는 0.3%로 낮아졌고, 18-19세 집단은 같은 기간 36%대에서 25%로 감소하였다. 16-17세 집단은 지난 10년간 34%를 전후한 구성비를 유지하였다. 각 연령대별로 구성비의 변화 추세를 보면, 2005년 이후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성비가 감소한 18-19세와 14세 미만의

연령집단뿐만 아니라 구성비가 증가한 14-15세 집단도 모두 2005년부터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요약해보면, 소년 형법범죄자들 가운데 2005년 이후로 18-19세의 구성비가 상당히 감소한데 비해 14-15세의 구성비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가 관찰된다.

청소년 범죄자 중 가장 어린 경우가 촉법소년(형법 및 관련 특별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경우)으로 소년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7년까지의 통계자료에서 만 12-13세가 여기에 해당된다. 위의 분석에서 14세 미만도 지난 10년 사이에 그 구성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법원 소년부에 보호사건으로 직접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검찰청 자료인 『범죄분석』보다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이 더 정확한 자료를 제시한다. 아

[그림 IX-11] 청소년 형법범죄의 연령별 구성비: 1998-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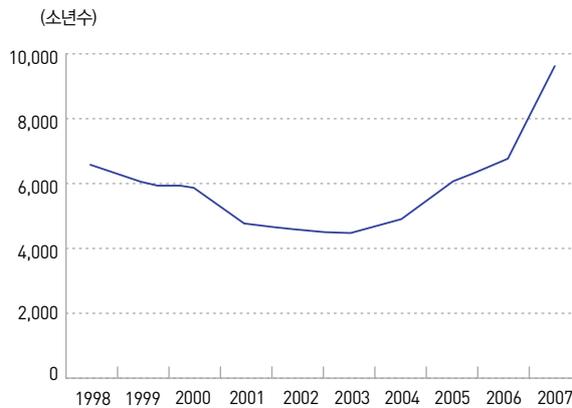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래에서는 『사법연감』 자료를 이용하여 촉법소년이 지난 10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인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IX-12]를 보면, 1998년도에 촉법소년의 인원이 6,552명에서 2007년에 9,636명으로 1.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지난 10년 사이의 추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인원이 감소하다가 2004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2004-2007년까지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의 저연령화 추세를 이유로 소년법이 개정되어 2008년부터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의 연령이 기존의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그림 IX-12] 촉법소년의 수: 1998-2007



출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년도.

여자 소년범 구성비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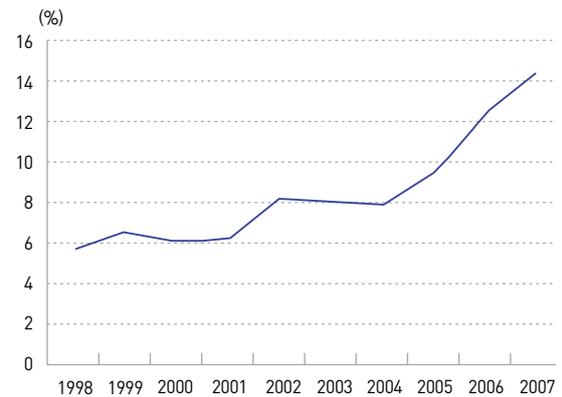
여자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가? 청소년 범죄자 중 여자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과 그 추세를 통해 여자 청소년 범죄 증가 여부를 살펴보았다. <표 IX-11>을 보면, 여자 청소년범의 인원이 1998년에 15,072명에서 2007년에는 13,930명으로 8% 정도 감소하였고,

같은 기간 남자 청소년범은 133,486명에서 74,174명으로 44% 정도 감소하여 여자 청소년범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남녀 간의 차이는 범죄자율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여자 청소년 범죄자율은 1998년의 247명에서 2007년의 263명으로 6% 증가한 것에 비해 남자 청소년 범죄자율은 같은 기간 2,191명에서 1,401명으로 36% 정도 감소하였다. 전체 청소년범 가운데 여자 청소년범의 비율을 나타내는 여자비율도 1998년의 10.1%에서 2007년의 15.8%로 1.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X-13]은 소년원에 수용된 비행 청소년 가운데 여자 청소년의 비율을 보여준다. 이 비율은 1998년 5.8%에서 2007년에 14.4%로 2.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을 통해서 여자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법무부는 기존의 전국 유일의 여자전용소년원인 안양소년원이 정원을 초과해 2009년 7월 1일에 전국 2번째 여자소년원인 청주소년원을 개청하였다.

[그림 IX-13] 소년원 수용인원의 여자비율: 1998-2007



주: 1) 여자비율=(여자 수용인원÷전체 수용인원)×100.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

〈표 IX-11〉 성별 청소년범의 수와 범죄자율 및 여자 청소년 범죄비율: 1998-2007

	남자		여자		여자비율(%) ³⁾
	소년범수	범죄자율 ¹⁾	소년범수	범죄자율 ²⁾	
1998	133,486	2,190.6	15,072	247.3	10.1
1999	124,612	2,103.3	18,543	313.0	13.0
2000	125,156	2,191.1	18,487	323.7	12.8
2001	110,535	2,020.7	20,448	373.8	18.4
2002	96,905	1,836.6	18,518	351.0	16.0
2003	80,476	1,556.1	15,609	301.8	16.2
2004	61,179	1,187.3	11,591	224.9	15.9
2005	57,799	1,112.7	9,679	186.3	14.3
2006	58,710	1,121.5	10,501	200.6	15.2
2007	74,174	1,401.4	13,930	263.2	15.8

주: 1) 범죄자율=(남자 소년범수÷만 12-19세 인구수)×100,000.

2) 범죄자율=(여자 소년범수÷만 12-19세 인구수)×100,000.

3) 여자비율=(여자 소년범수÷전체 소년범수)×100.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민수홍 (경기대학교)

친환경 소비성향

요 약

- 1차 에너지의 절반 이상(57.5%)을 소비하는 산업부문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의 주요 배출원이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수송부문과 가정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에 이들 부문에서의 소비행태 변화는 산업부문의 생산활동 변화 못지않게 온실기체 배출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 시민들은 기후변화와 여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실천하고 있지만 아직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기기를 비롯해서 친환경 상품 구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 에너지 소비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문제와 보건문제는 직접적으로 체감되기 어려워 이를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친환경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다.
- 그러나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시민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친환경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의 오염과 파괴는 생산은 물론 소비규모의 증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자연에서 채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 결과 발생하는 폐기물이 자연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난다. 재화의 생산을 늘림으로써 소비가 증가되어 환경오염과 파괴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역으로 소비의 증가가 생산을 자극하고 견인함으로써 생산을 증가시켜 환경문제가 심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면서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생활양식을 바꾸어 생산활동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원 절약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인 소비, 나아가 자

연의 부양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의 적정 규모에 대한 관심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친환경 소비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에너지 관련 소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갈수록 사회 안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가 화석연료의 소비라는 에너지 문제에서 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에너지 기기 소비 유형과 고효율 기기 구입 현황, 친환경제품 소비 의향을 살펴도록 한다.

에너지 관련 기기 소비 성향

에너지,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소비는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증가해 2007년 현재 세계 11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적인 산업

부문에 기인하지만 최근 들어 전환부문과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가정 부문 전력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도 에너지 소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화물과 여객수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을 뿐 아니라 연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대수와 운행거리가 늘어났으며 대형차 운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표 IX-12>에서 알 수 있듯이 등록 자동차 대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가용과 화물차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2008년 현재 통계적으로 자동차 1대를 2.9명이 보유하고 있으며 가구당 승용차 보유도 늘어나면서 10가구 중 7.2가구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2000년에 10가구 당 5.4대를 보유하던 데서 만 8년 만에 33.3%가 증가한 것이다.

해마다 판매되는 승용차의 배기량별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이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형차에 대한 선호가 조금씩 증가

<표 IX-12> 자동차 등록대수: 2000~2008

	등록대수(1,000대)					10가구당 자가용 보유대수
	승용차 (자가용)	버스	화물차	특수차	합계	
2000	8,084 (7,798)	1,427	2,511	37	12,059	5.4
2001	8,889 (8,588)	1,257	2,728	39	12,914	5.8
2002	9,737 (9,414)	1,275	2,894	42	13,949	6.2
2003	10,279 (9,942)	1,247	3,016	45	14,587	6.4
2004	10,621 (10,274)	1,204	3,062	47	14,934	6.5
2005	11,122 (10,759)	1,125	3,102	48	15,397	6.7
2006	11,607 (11,219)	1,106	3,133	49	15,895	6.9
2007	12,100 (11,674)	1,105	3,171	52	16,428	7.1
2008	12,484 (12,026)	1,097	3,160	53	16,794	7.2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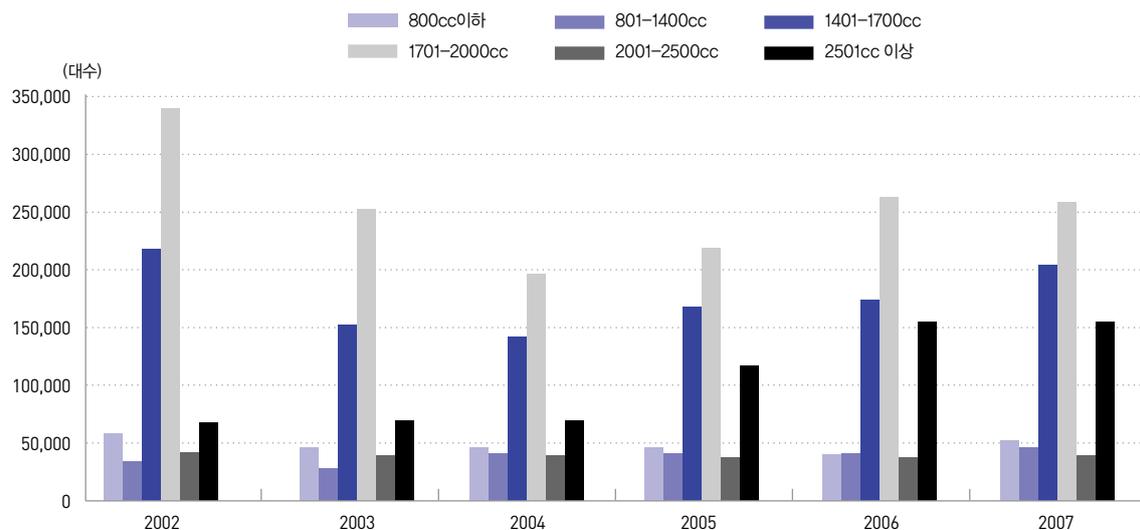
하면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승용차는 1000cc 미만을 경차로, 1000-1500cc 미만을 소형차로, 1500-2000cc 미만을 중형차로, 2000cc 이상을 대형차로 분류하고 있다. 2002년 대형차 판매가 14%였던 데서 2007년에는 24%로 증가하였다(그림 IX-14). 반면 800cc 이하 경차는 2002년에 7%였던 데서 2007년에도 7%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경차에서 대형차로 갈수록 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차량의 증가는 그만큼 에너지 소비 증가를 수반하며 이산화탄소와 함께 오염물질의 배출 증가 또한 수반하게 된다.

소비자의 대형 제품에 대한 선호는 가전제품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전력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적인 가전제품으로는 컬러 TV와 냉장고, 세탁기가 있다. <표 IX-13>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컬러 TV는 25인치 이상, 냉장고는 500ℓ 이상, 세탁기는 8.6kg 이상을 대형제품으로 분류하는데 대형제품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 2006년 현재 각 제품별 대형 비중이 각각 65.7%, 66.7%, 83.4%에 이른다. 특히 초대형 제품 구매가 갈수록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제품 선호는 가전제품의 효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부문의 전력소비 증가로 귀결되었다. 그 결과 <표 IX-13>에 제시된 것처럼 가정부문 전력소비와 1인당 전력소비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구원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가전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형 가전제품이 지위상징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력은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요금 단가가 높고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싸다. 하지만 가구소득 대비 전력요금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력소비 증가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유발됨에도 불구하고 대형제품에 대한 선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별 판매 추세와

[그림 IX-14] 승용차 배기량별 판매대수: 2002-2007



출처: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절약 통계 핸드북』, 2009.

〈표 IX-13〉 대형 가전기기의 비중과 최종 에너지 소비량¹⁾ 및 전력 소비량: 1995-2006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가정부문 소비량		1인당 소비량	
	25인치 이상	30인치 이상	500ℓ 이상	600ℓ 이상	8.6kg 이상	9.6kg 이상	에너지 (1,000TOE)	전력 (GWh)	에너지 (TOE)	전력 (MWh)
1995	26.7	1.4	14.7	3.0	13.2	5.9	29,339	55,827	0.653	1.238
1997	33.8	1.4	20.3	3.0	24.9	17.6	33,071	70,816	0.720	1.541
2000	50.4	5.1	42.0	22.1	46.2	40.6	32,370	91,753	0.689	1.952
2002	57.5	5.1	46.8	13.8	65.1	59.9	34,298	117,639	0.720	2.408
2004	58.1	6.5	49.7	14.5	74.0	70.5	34,807	132,005	0.724	2.745
2006	65.7	15.0	66.7	27.7	83.4	80.4	35,986	149,799	0.750	3.100

주: 1)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석유 1톤의 열량값인 에너지 단위 톤(TOE)으로 측정됨.

출처: 전력거래소, 『가전기기 보급률 및 가정용 전력 소비행태조사』, 2006.

현황을 살펴보면, 1등급 제품의 판매량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04년에는 20.5%였으나 2005년 28.1%, 2006년 27.9%, 2007년 29.6%, 2008년에는 31.4%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비중 증가가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 등급에 관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1등급 제품을 구매한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가전제품 중 대용량 제품들이 총 소비 전력량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1등급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환경보호 노력과 비용 부담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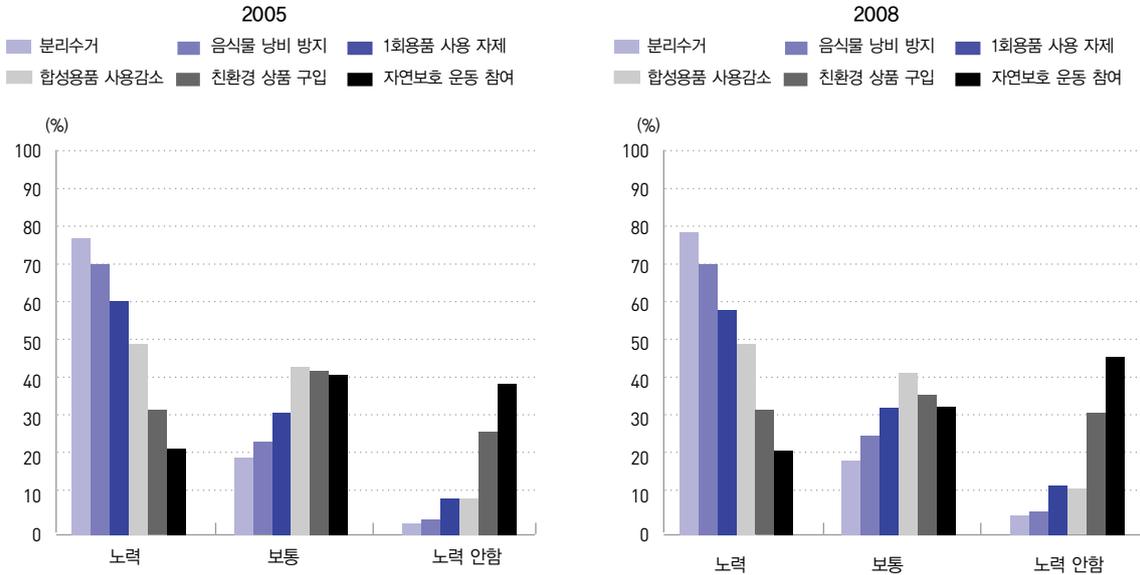
2008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평소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79.0%가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환경분야별로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심각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문제가 지구온난화·기후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응답자의 90.9%가, 전문가 집단은 응답자의 93.5%가 지구온난화·기후변화가 “심각하거나 아주 심각하다”고 답했다. 생활 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 독성화학물질, 자연환경·생

태계 파괴에 대해서도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렇다면 소비자인 일반시민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어떤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분리수거와 음식물 낭비 방지, 1회용품 사용자제 등의 행위에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이 “노력한다”고 답하였다(그림 IX-15). 이러한 응답 경향은 2005년과 2008년의 조사 모두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활동의 선택지에 에너지 관련 내용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에너지 사용과 환경오염 간의 상관관계가 조사자들에게도 아직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어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가운데 “친환경상품 구입을 위해 노력한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2005년(32.1%)에 비해 2008년(31.6%)에 미세하게 감소한 가운데 둘 다 30%가 약간 넘는 수준으로, 이는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 다음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생활 속에

[그림 IX-15] 환경오염방지 활동별 노력 정도: 2005, 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오염저감 활동을 나름대로 실천하려 노력하지만 친환경상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데까지 적극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의식이 낮아서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상품이 일반 상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걸까?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환경비용을 부담하는 데 찬성하는 시민들이 33.5%로 약 1/3에 달한다(그림 IX-16). 이러한 찬성 의사는 2005년 조사의 24.9%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또한 2005년의 경우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37.3%)이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0% 이상 많았지만 2008년에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30.1%)을 상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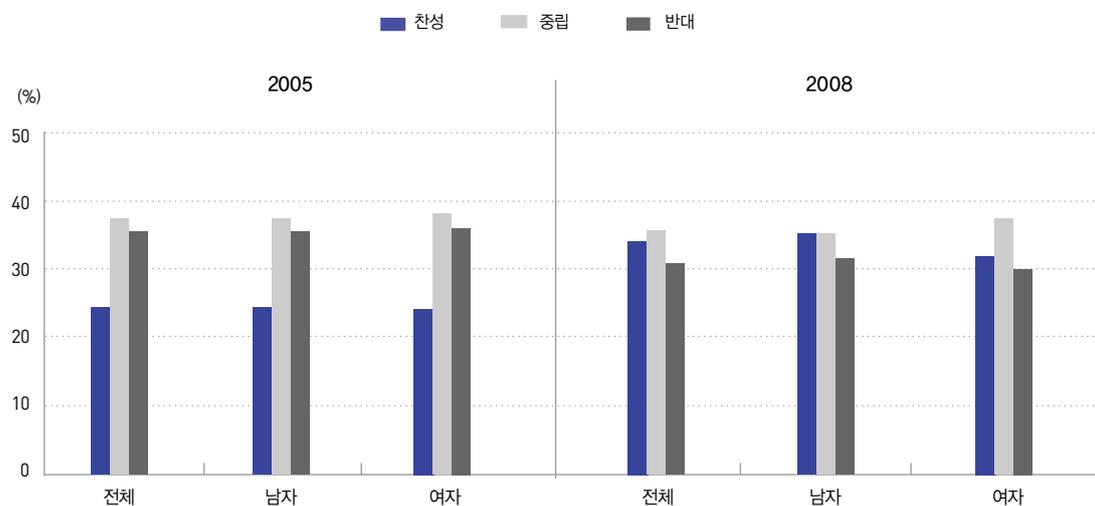
그만큼 환경비용 부담에 대해 찬성하는 시민들의 수가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좀 더 찬성 의견이 많은 편이었지만 반대한다는 응답

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적었다.

연령별로는 2005년에 비해 2008년에 환경비용 부담에 대한 지불의사가 모든 연령대에서 높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2005년의 경우에는 10대의 찬성 의견(30.6%)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40대와 50대의 찬성 의견(각각 35.8%, 35.1%)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다른 연령대들과는 달리 “보통이다”거나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보다 “찬성한다”는 입장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찬성한다”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약간 높기는 하지만 “보통이다”가 더 많아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비용의 부담에 대한 의향이 반드시 친환경소비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표적인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의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 친환경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X-16] 환경보호비용 부담에 대한 찬반 비율: 2005, 2008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다.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화는 생산활동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환경비용의 부담에 여전히 유보적(36.4%)이거나 찬성하지 않는 시민들(30.1%)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은 각종 요금과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하거나 세금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작업이 보다 광범위한 설득과 대

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비자의 생태적 양심에 기대어 자발적 선택에 맡겨두기보다 제품의 에너지 효율기준을 더욱 높이고 세제나 요금구조 개편을 통해 소비자가 기후친화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신호를 제시하는 제도적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이재열 270
정치와 사회 참여 · 장덕진 281
가치와 이념 갈등 · 강원택 286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 장지원 292

X.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요 약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대의민주주의 발전과 정치통합에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다.
- 민사사건과 국민들의 고충민원 접수가 증가하고, 변호사와 공증사무소가 늘어나는 현상은 개인들 간의 갈등이 늘어나면서 점차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투명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규칙과 법이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매우 낮다. 특히 주요 사회기관들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 사회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남녀 간이나 세대 간의 거리감은 서서히 해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간격이 크다.

사회통합은 사회의 해체나 갈등의 반대개념이다. 사회통합의 정도는 크게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통합은 선거과정 참여가 토대가 된다. 자신의 의견을 정치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하게 되며,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인물과 정당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통합을 약화시키는 갈등의 해결을 위해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 특히 이익 갈등이나 고충이 있을 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처리과정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 고충처리 신청 및 해결진수, 그리고 개업 변호사의 수나 법률구조 상담진수 등을 검토하여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의 응집성은 자원봉사, 기부, 헌혈 등의 이타적 행위와 일반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다. 이들에 대한 사회지표로 다양한 전국단위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넷째,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법치주의 영역이다. 이는 한 사회의 행위자들이 공통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국제투명성협회의 부패인식지수를 이용하여 우리의 부패 정도를 국제비교 할 수 있고, 또한 매년 측정된 공공기관 청렴도 자료를 활용하여 기관별 청렴도 추이를 볼 수 있으며, 그 외 불법폭력시위 등을 법치주의를 검증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불평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 간의 차별, 혹은 세대 간 차이의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해 남녀평등지수(UNDP), 젠더권능지수, 세대 간 인터넷 활용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참여 : 선거참여율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정치과정에 얼마나 반영시키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투표, 소환제도, 공청회 등의 발생 횟수와 국민의 참여 정도가 조사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료의 부족으로 가장 기본적인 투표율만을 살펴보았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지난 1992년의 대선에서 81.9%의 투표율을 보였는데, 1997년에는 80.7%,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는 70.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전인 1992년과 1996년에는 투표율이 각각 71.9%와 63.9%였는데, 외환위기 그 이후인 2000년과 2004년에는 각각 57.2%와 60.6%로서 저조해진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경우에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광역의원 선거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1990년대에는 60% 내외로 유지되던 투표율이 이후에는 50%대로 낮아졌다. 이러한 투표율의 하락은 지속적인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제도정치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참여율은 낮아지고 있어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불신이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갈등해소

국민고충처리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적이거나, 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한다. 고충민원의 접수건수는 [그림 X-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4년 3,53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에 17,841건으로 정점에 이른 후, 주춤하였다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8년에는 27,372건에 달했다. 이처럼 고충처리 접수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의식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접수된 민원 중 99%가 처리되었는데, 처리된 민원 중 35.6%에는 안내회신이, 18.4%에는 심의안내문이 발송되었고, 13.0%는 이송 또는 이첩이 되었고, 12.1%는 조정 합의되었으며, 9.8%는 공람종결 또는 취하결정 되었고, 4.5%는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5년간 접수된 민원 247,316건을 원인별로 따져 보면, 이유가 확인된 것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기관이나 투자기관의 거부 또는 소극적 처분이 29,207건으로 11.8%에 해당하며, 그 다음이 개인 간의 사적 관계 27,256

건(11.0%), 위법·부당한 처분 및 규제 21,053건(8.5%), 신청인의 불합리한 개인주장·요구 18,303건(7.4%), 각종 행정문의 및 건의 15,645건(6.3%) 등의 순이었다.

[그림 X-1] 국민고충민원 접수건수: 1994-2008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08년도 고충처리분야 운영상황보고서』, 2009.

발생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89,219건으로 전체의 36.1%,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이 84,230건으로 34.1%,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생한 것이 34,554건으로 14.0%를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로 보면 전체 89,219건 중 경찰청과 국토해양부가 각각 15,278건(17.1%)과 14,777건(16.6%)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세청 8,588건(9.6%), 검찰청 8,267건(9.3%), 노동부 6,542건(7.3%), 교육과학기술부 6,312건(7.1%)의 순이었다. 이는 규제업무와 관련된 부처에 민원사항이 집중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법률 구조와 상담

법률 구조와 상담의 수준은 개업변호사의 공증사무소가 얼마나 되는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개업변호사

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증사무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사실과 법률관계를 확인, 보관해주는 제도이다.

개업변호사는 1998년까지 약 5%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다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매년 9-12%씩 급증하고 있으며, 공증사무소도 1997년 216곳에서 매년 10-20곳 씩 증가하여 2008년에는 405곳에 이르고 있다(표 X-1).

개업변호사나 공증사무소 숫자의 증가는 국민들로

<표 X-1> 개업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수: 1997-2008

연도	개업변호사	공증사무소
1997	3,364	216
1998	3,521	230
1999	3,887	244
2000	4,228	267
2001	4,618	278
2002	5,073	298
2003	5,586	317
2004	6,300	333
2005	6,997	341
2006	7,603	354
2007	8,143	379
2008	8,895	405

출처: 법무부.

하여금 저렴하고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변호사와 공증사무소의 지나친 개입은 거래비용의 증가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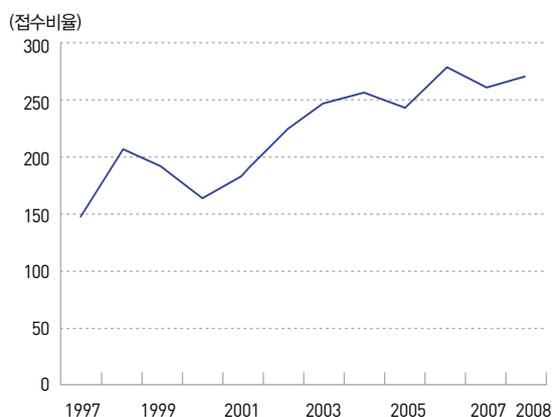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증가속도보다

소송사건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9년과 2008년 사이에 인구는 4.7% 증가하였으나, 소송사건 중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에 다루어지는 본안 소송사건은 44.5% 증가한 반면, 본안 외 사건은 등락을 거듭했지만 4.7%가량 줄었다. 그리고 등초본 발급건수를 제외한 비송사건의 경우에는 19.4%가 늘어났다.

총사건 접수건수는 1999년 인구 10,000명당 3,373건에서 2008년에는 3,677건으로 늘어났으며, 소송사건은 1,240건에서 1,243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비소송사건은 2,134건에서 2,43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본안사건에서 민사사건은 190건에서 271건으로 증가했고(그림 X-2), 가사사건은 10건에서 11건으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형사사건은 41건에서 56건으로 다소 늘어났다.

[그림 X-2] 민사사건¹⁾ 접수비율²⁾: 1997-2008



주: 1) 본안사건임.

2) 인구 10,000명당 접수건수임.

출처: 대법원, 『사법연감』, 2008.

여기서 민사사건만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개인들 간의 소송이 많은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비해 법률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는 과거에는 소송 이전에 조정이 되던 갈등들이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과정으로 더 많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송의 증가는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원을 모두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타적 활동과 사회적 신뢰

기부, 헌혈 및 자원봉사

2007년 겨울 발생한 태안 앞바다 허베이스트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지역민들이 실의에 빠져있을 때 연 인원 140여 만 명이 참여한 전 국민의 열성적인 방재 자원봉사활동은 전 세계에 큰 인상을 주었다. 피해지역의 공동체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정상을 찾게 된 것은 이런 감동적인 자원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3년 14.6%에서 2006년 14.3%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09년에는 19.3%로 크게 늘어나서 최근의 자원봉사 열풍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기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2006년 기준으로 할 때 복지시설 관련 자원봉사가 48.5%로 가장 활발했고, 그 다음이 환경보전과 범죄예방(26.7%), 국가 및 지역행사에서의 자원봉사(11.3%), 자녀교육 관련 봉사(10.6%), 재해지역돕기(6.8%) 등의 순이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2006년에 최초로 후원여부(기부항목)를 조사하였는데, 결과를 보면 전체 인구의 31.6%가 기부를 했다. 후원방법들의 복수응답에서 빈도는 사회복지단체(43.3%), 언론기관(28.8%), 종교단체(21.3%), 직장(15.3%),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11.9%) 순이었다. 후원방법별 후원횟수는 종교단체를 통한 경우가 5.1회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5

회), 직장(4.2회), 언론기관(3.5회), 사회복지단체(3회) 등의 순이어서, 조직적인 후원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기관을 이용한 기부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혈자는 1998년부터 2003년에 이르기까지 매년 25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증가를 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최근 들어 헌혈자수가 감소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헌혈부적격자가 늘고,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도 일부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과거에는 군부대나 학생 중심의 단체헌혈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단체헌혈 비중이 컸었다. 그 비중은 1995년의 70.6%에서 점차 줄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41.9%에 불과하게 되었으며, 개인헌혈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58.1%에 달했다(그림 X-3).

이처럼 집단 압력이 작용하는 단체헌혈의 비중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개인헌혈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참여의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헌혈률은 5.3%(2003년)로서 미국, 독일, 일본 등과는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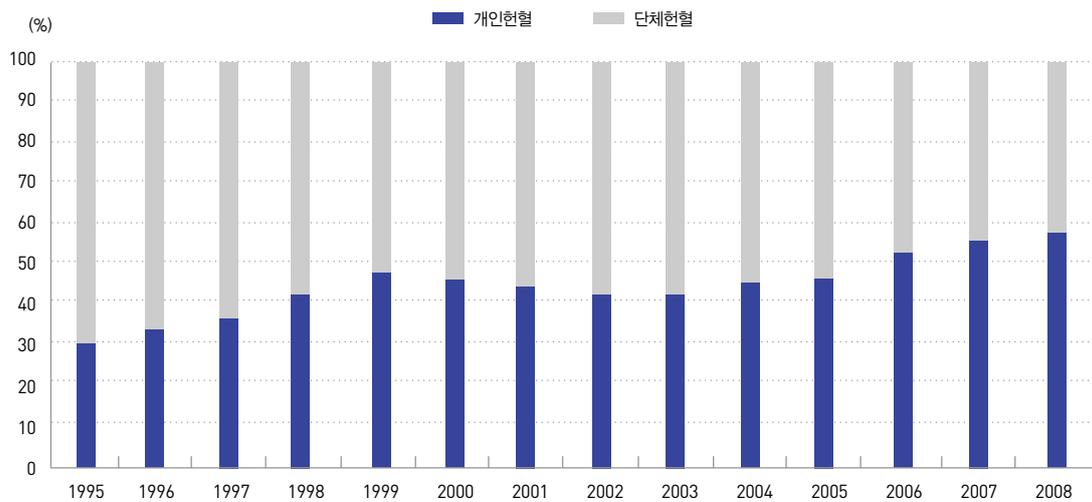
슷한 수준이고, 캐나다, 호주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대인신뢰와 제도신뢰

삶의 질이 높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는 사회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2005년의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에서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한국 사람의 비율은 28.2%인데, 이는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일반인에 대한 신뢰가 OECD에 속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인 미덕이라고 생각되었던 따뜻함과 결속력이라는 전통적인 도덕적 자원이 그동안의 고도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빠르게 고갈되었으나 체제나 시스템 수준에서 구현되어야 할 공정성과 정당성은 확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단은 한국보다 경제발전의 수준이 훨씬 낮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서 오히려 일반적 신뢰의

[그림 X-3] 헌혈자 중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의 비중: 1995-2008



출처: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각 년도.

〈표 X-2〉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일반신뢰¹⁾: 2005

(%)			
국가	신뢰도	국가	신뢰도
스웨덴 ²⁾	68.6	영국 ²⁾	30.5
핀란드	58.9	이탈리아	29.2
스위스 ³⁾	53.9	한국	28.2
중국 ³⁾	52.3	대만 ²⁾	24.2
베트남 ²⁾	52.1	스페인 ³⁾	20.0
호주	46.1	폴란드	19.0
인도네시아 ²⁾	42.5	프랑스 ²⁾	18.8
미국 ²⁾	39.3	멕시코	15.6
일본	39.1	터키 ³⁾	4.9
독일 ²⁾	36.8		

주: 1) 『World Values Survey 2005』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임.

2) 2006년 자료임.

3) 2007년 자료임.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2005 OFFICIAL DATA FILE v.20090901*(<http://www.worldvaluessurvey.org>), 2009.

수준이 높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서구 선진국에 비해 서도, 그리고 아시아의 후발 개발도상국에 비해서도 낮은 대인신뢰는 한국이 처한 심각한 사회적 자본의 실상을 잘 보여준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이용이 가능한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낮아졌는데, 특히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심각하게 하락하였다(그림 X-4). 정당신뢰도는 100점 만점에 1996년 5.3점에서 2007년 2.9점으로 떨어졌다.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지난 10년간 각각 11.4점에서 9.0점과 15.5점에서 10.1점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여타기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도는 28.8점에서 13.3점으로 급

격히 악화되었으며,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31.7점에서 16.5점으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신뢰점수도 31.6점에서 10.6점으로 낮아졌다. 대학에 대한 신뢰점수는 지난 10년간 42점에서 28점으로 떨어졌으며, 경찰에 대한 신뢰점수는 47.5점에서 24점으로, 그리고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점수도 48.8점에서 21.6점으로 낮아졌다. 군에 대한 신뢰만이 26.8에서 33.9점으로 높아졌다. 이렇듯 신뢰의 하락현상은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군대에 대한 신뢰도만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군이 더 이상 정치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제자리를 잡았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제도에 대한 신뢰문제와 관련해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기관일수록 국민들로부터 더 큰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영향력과 신뢰 간의 역상관 증상은 사회의 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특히 정부정책의 비밀관성이나 공직자의 부패 등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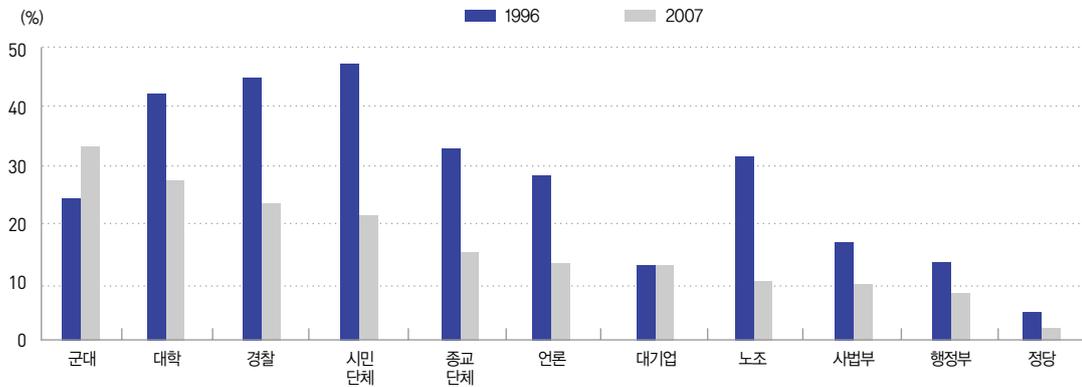
부패와 불법시위

부패지수와 공공기관 청렴도

낮은 신뢰와 투명성의 결여는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협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자료를 통해 볼 때, 정부부문의 부패 정도에 대한 국민인식은 외환위기 이후에 미약하나마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국가별

[그림 X-4] 기관별 신뢰도¹⁾: 1996, 2007



주: 1) 각 기관에 대해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임.

출처: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 한국사회과학자료원 데이터아카이브(www.kosssda.or.kr)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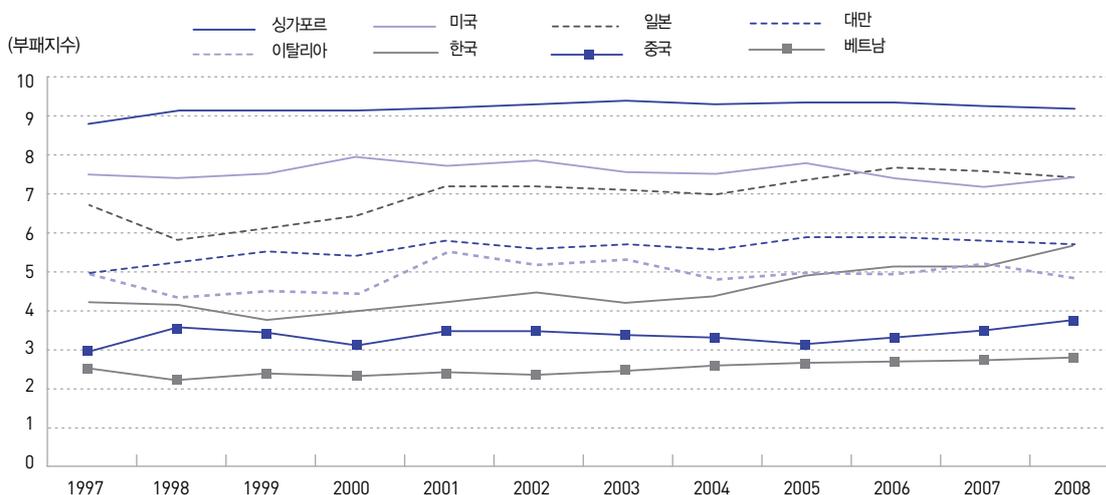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는데 이는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등 다양한 기관에서 실시한 공공부문의 부패 관련 설문조사 및 전문가 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CPI의 국가별 순위는 새로운 국가가 추가되거나 제거됨으로써 변화할 수 있는 상대적 순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만, 국가별 점수는 해당 국가의 부패인식정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해당 국가의 순위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8년도 우리나라 CPI점수는 발표 실시(1995) 이후 최고인 5.6점이지만 국가순위는 조사대상 180개국 중 40위에 머물고 있다(그림 X-5).

한 연구(차문중, 2007)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이 OECD 수준의 준법의식을 가졌다면 최소 1%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도 있다. 제도주의 경제학자들에 의하면 법치주의의 확립과 준법정신이 자리잡는 것은 경제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

장을 가능케 한다고 한다. 고신뢰 사회에서는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해지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987년에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절차적인 차원의 민주화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갈등이나 집합행동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다양한 집단들이 정해진 규칙이나 합의에 승복하지 않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그러나 투명한 규칙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 승복할 수 있는 권위가 존재한다면, 집단들 간의 대화나 타협이 훨씬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투명성은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그러므로 투명성과 신뢰는 '사회의 도덕적 용량'을 채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는 사회자본이 가진 기능 중 규범과 효과적인 사회적 제재의 원천이 되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집합행동의 논리에 따르자면,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는 공공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제재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림 X-5]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부패인식지수¹⁾: 1997-2008

주: 1)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 지수를 말하며, 완벽한 투명성의 상태를 10점으로 나타냄.

출처: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Corruption Perception Index* (http://www.transparency.org/policy_research/surveys_indices/cpi), 2009.

시민적 규범이 강력한 사회에서는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규칙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주인이 되어 대의제로 의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불법시위

불법폭력시위 및 경찰부상자수는 집회시위문화의 현주소를 가늠하고, 준법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향후 집회시위 관리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불법폭력시위는 집회참가자가 불법·폭력행위를 행사한 시위를 말하며,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한 해 발생한 전체 집회 대비 지수로서 낮을수록 평화적인 집회양상임을 나타낸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비하면 집회와 시위도 평화적인 기조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일부의 시위는 여전히 과격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 연평균 불법폭력시위는 1997년까지는 연간 500-800건 정도였는데, 1998년 이후에는 100건 내외로 줄었고, 2004년 이후로는 100건 이하로 줄어들었다(표 X-3).

이에 따라 경찰관 부상자수도 1990년대 초반 1,000명이 넘는 수치를 오르내리다가, 1998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경찰관이 부상당하고 있다.

사회 불평등

사회이동에 대한 인식

사회심리적 역능성은 개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표 X-3〉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와 부상 경찰관수:
1993-2008

	전체집회 발생건수	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부상 경찰관수
1993	6,390	267	1,080
1994	8,753	588	2,128
1995	6,857	809	1,203
1996	6,510	811	1,882
1997	6,179	664	1,016
1998	7,684	67	166
1999	11,750	129	484
2000	13,012	105	582
2001	13,083	215	673
2002	10,165	118	287
2003	11,837	134	749
2004	11,338	91	621
2005	11,036	77	893
2006	10,368	62	817
2007	11,904	64	202
2008	10,368	62	817

출처: 경찰청, 『경찰백서』, 각 년도.

수 있는 자신감과 역동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첫 번째로 주관적인 계층 귀속감과 계층이동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보기로 하겠다. 2006년 가구주의 소득, 직업, 교육, 재산 등을 고려한 주관적 계층귀속감은 ‘상층’ 1.5%, ‘중간층’ 53.4%, ‘하층’ 45.2%로 나타났는데, 2003년과 비교해 보면 ‘상층’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중간층’ 은 56.2%에서 53.4%로 감소하였고, ‘하층’ 은 42.4%에서 45.2%로 2.8%p 증가하였다(표 X-4).

본인과 자식세대의 계층이동가능성을 물어본 결과는 ‘희망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표 X-5). 첫째, 일생동안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면, 본인세대에 비해 자식

〈표 X-4〉 주관적 계층귀속감: 1999, 2003, 2006

	(%)		
	상층	중간층	하층
1999	1.1	54.9	44.0
2003	1.4	56.2	42.4
2006	1.5	53.4	45.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세대의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 이어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역능감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자식세대의 역능성에 대한 기대는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상층으로 갈수록 본인과 자식세대의 이동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하층으로 갈수록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계층에 따른 역능성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사회심리적 역능성의 위축현상은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변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6년 15세 이상 인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안정성(32.6%), 수입(31.7%), 적성·흥미(12.0%)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입의 경우 2002년 21.5%보다

〈표 X-5〉 주관적 계층별 본인과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 2006

	본인의 계층이동가능성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높다	낮다	모르겠다	높다	낮다	모르겠다
상층	58.0	30.1	11.9	60.0	22.7	17.3
중층	34.6	43.7	21.6	46.0	28.0	26.0
하층	18.2	50.8	31.1	32.0	30.3	37.7
전체	27.5	46.7	25.7	39.9	29.0	31.2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2006.

10.2%p, 그리고 1998년 18.2%보다는 12.5%p나 증가하였다. 직업의 적성이나 보람, 안정성과 발전성 등의 내재적 가치보다는 수입위주의 직업선택 경향이 변진다는 것은 경쟁의 격화로 인한 체감 취업난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남녀불평등

사회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척도 중 하나는 남녀 간의 불평등이다. UNDP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인간개발지수(HDI)는 2009년 기준으로 0.937로서 세계 26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녀 간 HDI의 격차를 측정하는 젠더관련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는 98.8%로서 세계 98위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가 108.8%로서 46위이며,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률의 차이는 85.7%로서 148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남녀 간

격차는 조금씩 해소되는 경향이 있다. 2009년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4%이고 고위관료 및 경영자의 비율은 9%에 머물고 있으며, 전문직이나 기술직에서 여성의 비중은 40%에 그치고 있다. 또한 여성의 평균 소득은 남성의 52%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성의원비율,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전문직종사자 비율 등으로 측정되는 젠더권능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0.554로 109개국 중 61위에 해당하는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보화의 세대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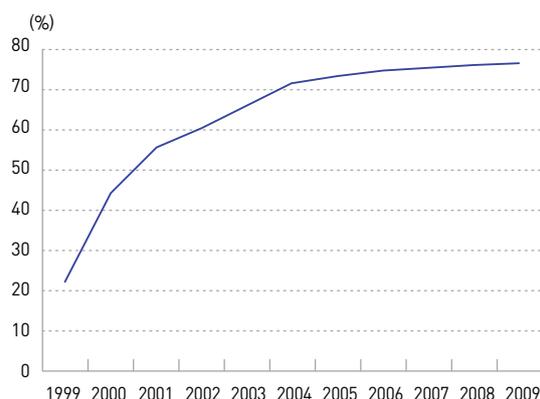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세계 7위 수준이다. 2008년 기준으로 1위인 노르웨이의 경우 88.9%이며, 스웨덴(88%), 네덜란드(86.3%), 덴마크(84.8%), 핀란드(82.5%), 영국(79.6%)에 이어 한국은 77.8%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대한 이용률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지난 1999년에 22.4%에 불과했던 것이, 2001년에는 56.6%, 그리고 2009년에는 77.6%에 이르게 되었다(그림 X-6).

〈표 X-6〉 UNDP 남녀평등지수와 젠더권능지수:
1999-2008

	남녀평등지수		젠더권능지수	
	순위	지수	순위	지수
1999	30위	0.845	78위	0.336
2000	30위	0.847	63위	0.323
2001	29위	0.868	61위	0.358
2002	29위	0.875	61위	0.378
2003	30위	0.873	63위	0.363
2004	29위	0.882	68위	0.377
2005	27위	0.896	59위	0.479
2006	25위	0.905	53위	0.502
2007	26위	0.910	64위	0.510
2008	25위	0.917	68위	0.540
2009	26위	0.937	61위	0.554

출처 :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http://hdr.undp.org/en/statistics>), 2009.

[그림 X-6] 인터넷 이용률¹⁾: 1999-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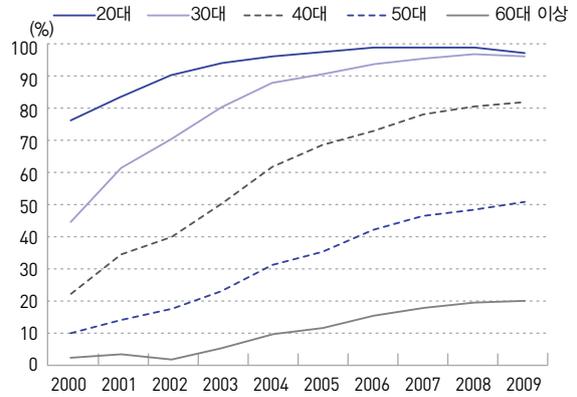


주: 1) 만 6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각 년도.

다만 문제는 증가의 속도에서 연령집단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10대 청소년과 20대의 경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접속률을 보여주고 30대는 90% 수준에 도달해 있는 반면, 40대 이후 노년층으로 갈수록 인터넷 접속성은 매우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그림 X-7) 급속하게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능력발휘에 있어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지고 있음을 반영해준다.

[그림 X-7] 연령별 인터넷 접근율*: 2000-2009



주: 1) 해당 연령 인구 중 최근 1개월 이내 인터넷을 이용한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임.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각년도.

참고문헌

- 차문중. 2007. “법 질서의 준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최근 우리의 경험을 중심으로.” 『KDI정책포럼』 173:1-12.

이재열 (서울대학교)

정치와 사회참여

요 약

- 한국에서 선거참여는 지속적·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이 낮을수록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낮다.
-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연구집단에 대한 참여율은 높으나, 사적 영역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참여를 어떻게 공적 영역으로 넓힐 것인지가 관건이다.
- 사회운동 참여율도 매우 낮아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가 급격하게 분출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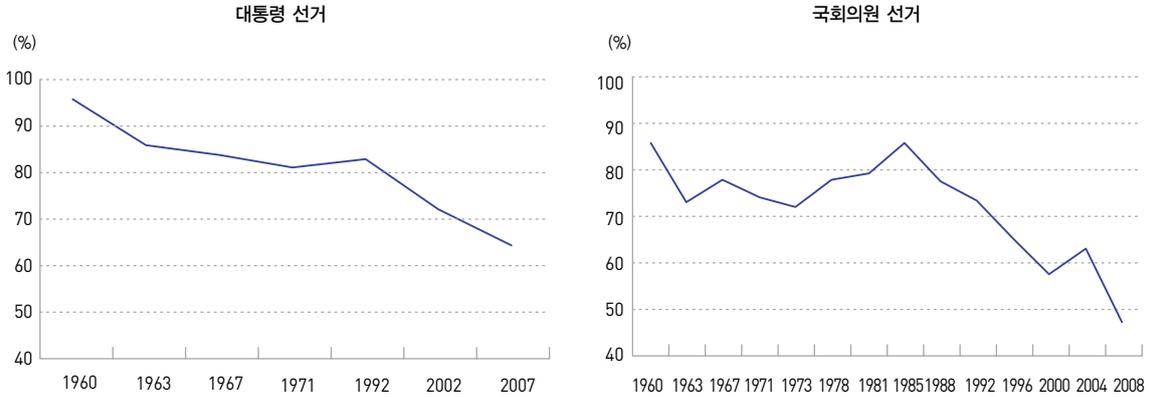
선거 참여

선거 참여는 유권자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초석이 된다.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은 선거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표성 문제를 야기하며, 그 사회의 민주주의 전체의 위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때 97%에 이르렀던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2007년 대선인 경우 63%까지 하락하여 역대 최저 투표율을 보였고, 직전 선거인 2002년 대선과 비교하더라도 7.8%p 하락한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도 1985년에는 84.6%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2008년 총선의 경우 46.1%라는 충격적인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것 역시 역대 최저일 뿐 아니라 직전 총선인 2004년 총선 투표율 60.6%에 비해 무려 14.5%p나 하락한 것이다.

전체적인 투표율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떤 사람들이 투표에서 빠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그림 X-8]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196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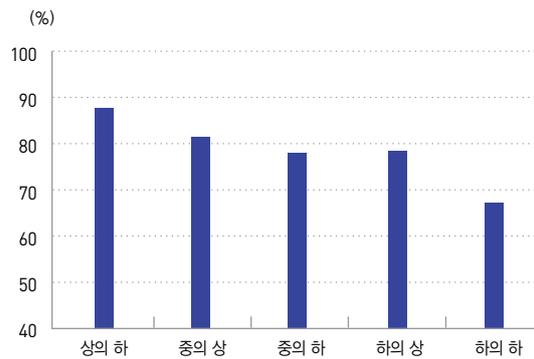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총람」, 각 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년도.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는 집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2004년 총선을 예로 들어 주관적 계층의식별 투표율을 보면 [그림 X-9]와 같다. 스스로를 '상의 상'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사례수가 5명에 불과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스스로를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에서 중간 정도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층에 비해 5-10%p 정도 투표율이 낮고, 스스로를 하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층에 비해 10-20%p 정도 낮은 투표율을 보여준다. 즉 한국 사회에서 투표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나아가 하층계급으로 갈수록 더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상층은 정치적으로 과다대표 되고 하층은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정치무관심 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령별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X-10]에 나타나 있다. 40대 이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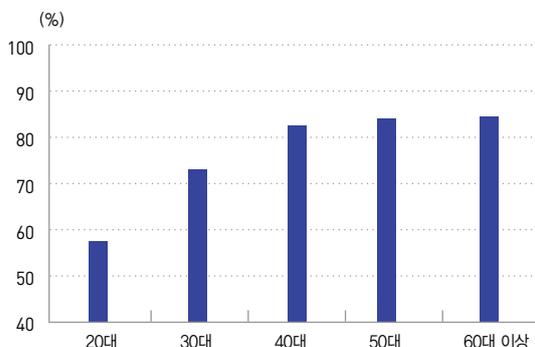
[그림 X-9] 주관적 계층별 총선 투표율: 2004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대체로 80%가 넘는 투표율을 보이지만, 30대로 가면 투표율이 10%p 가까이 급격히 하락하고, 20대로 가면 40대에 비해 무려 23.3%p나 하락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를 고양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시간이 갈수록 투표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X-10] 연령별 총선 투표율: 2004



출처: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한국종합사회조사』 원자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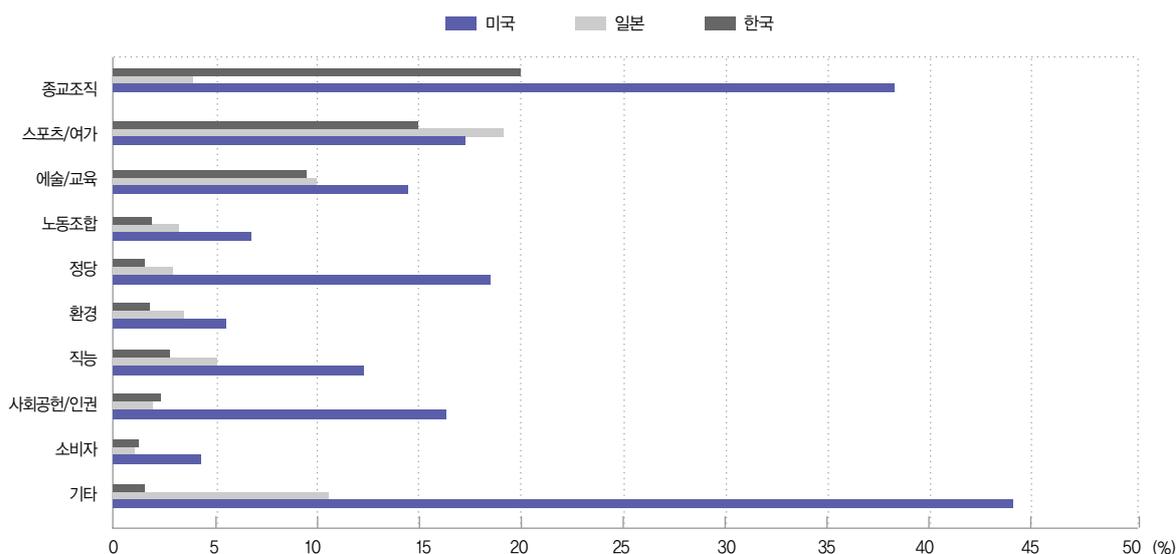
사회 참여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풀뿌리 조직에 대한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의견을 나누고 여가를 함께 하는 조직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평화롭고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이것은 더 큰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X-11]은 각 조직별로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한국, 미국, 일본에 대해 비교한 결과이다. 모든 종류의 조직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에 비해 참여율이 낮고, 특히 노동조합, 정당, 환경단체, 직능단체, 사회공헌/인권단체, 소비자 단체 참여율은 거의 0에 가까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일본과 비교하더라도 종교조직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은 수준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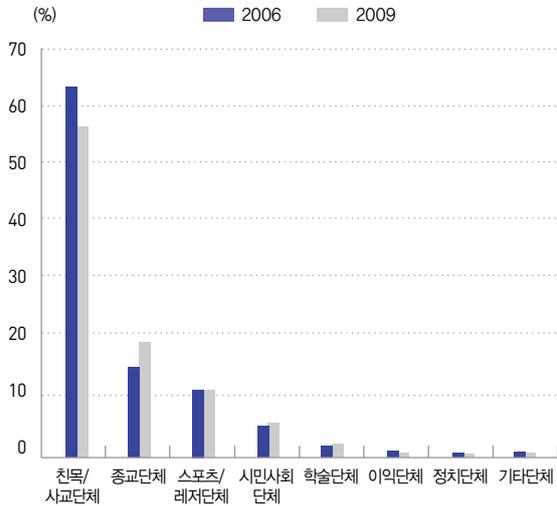
그러나 한국인들이 아무런 사회조직에도 참여하지 않은 채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그림 X-12]는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사회단체 참여율이다.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등에 대한 참여율은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동창회, 향우회, 친목단체 등과 같은 연고 집단 참여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즉 한국인의 사

[그림 X-11] 사회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한국·미국·일본 비교): 2005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2005 OFFICIAL DATA FILE v.20090901(<http://www.worldvaluessurvey.org>), 2009.

[그림 X-12] 사회단체 참여율¹⁾: 2006, 2009



주: 1) 지난 1년 동안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사회단체를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 중 1순위로 응답된 사회단체의 참여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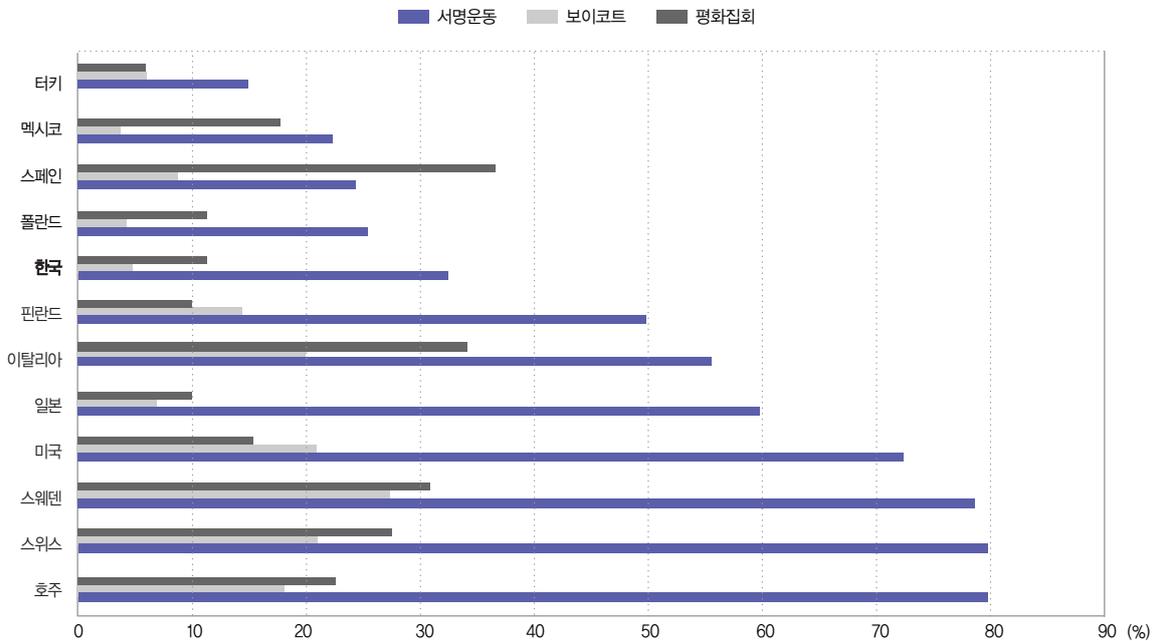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사회조사』 원자료, 각 년도.

회조직 참여는 공적 모임에 대한 참여보다는 자신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끼리의 사적 모임에 참여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고립되지 않게 해주는 순기능도 가지는 반면, 공적 이슈의 영역이 아닌 사적 이슈의 영역에만 머물게 만들고 갈등이 있을 때 공적인 절차보다는 사적인 연줄에 의존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역기능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국인들의 사회조직 참여 성향을 어떻게 하면 사적 영역에서 벗어나 공적 영역에까지 넓히도록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사회운동 참여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 경험은 그 사회에서 갈등이

[그림 X-13]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사회운동 참여 경험: 2005



출처: World Values Survey Association, WORLD VALUES SURVEY 2005 OFFICIAL DATA FILE v.20090901(<http://www.worldvaluessurvey.org>), 2009.

표출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은 강성노조가 존재하고 물리력을 동반한 집회나 시위가 많은 나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통계를 통해 나타나는 사실은 이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림 X-11]에서 보여주듯이, 노조 참여율은 미국에 비해 매우 낮고 일본보다도 낮은 편이다. [그림 X-13]은 일상적인 사회운동 참여 경험도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임을 보여준다. 미국,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은 물론이고 우리와 같은 동북아시아 문화권인 일본도 한국보다 2배 내지 3배 수준의 서명운동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이콧 경험도 한

국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낮은 노조 조직률과 사회운동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극한적 대립 양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이 자료들에서 나타나듯이 일상적인 갈등 조정의 기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갈등이 존재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로 나타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사회통합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이나 스위스 등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상적인 사회운동 참여 경험 또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장덕진 (서울대학교)

가치와 이념 갈등

요 약

-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속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계급적 속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고소득, 고학력, 화이트칼라 계층에서 진보적인 성향이 보다 강하게 확인된다.
-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은 상당히 중첩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 주민 간의 이념적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이념적 차이는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태도에서도 대체로 일관된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상반된 입장이 확인된 것은 한미 동맹이나 재벌 규제 등 과거 발전국가 시절의 유산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다른 정책 영역에서는 정책 방향을 둘러싼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념은 정치적 가치나 세계관을 반영하며 정치적 행동이나 태도를 결정하는데 기반이 된다. 그런 만큼 지역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지역주의와는 달리 이념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특정한 방향으로 구현된다. 과거 한국 정치가 정책에 기초한 경쟁이 될 수 없었던 것은 정당 간 이념적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념 요인의 부상은 정당 간 경쟁이 정책적 차별성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념의 차이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 차이를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게 하는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 주목한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이념 성향의 변화 추이에 대한 것이다. 이념적 차이가 존재한다면 어떤 분포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차별성의 속성을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서구 민주주의의 경우와 비교해 볼 것이다. 세 번째,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지역과 이념 균열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는 이념적 차이가 구체적인 쟁점 정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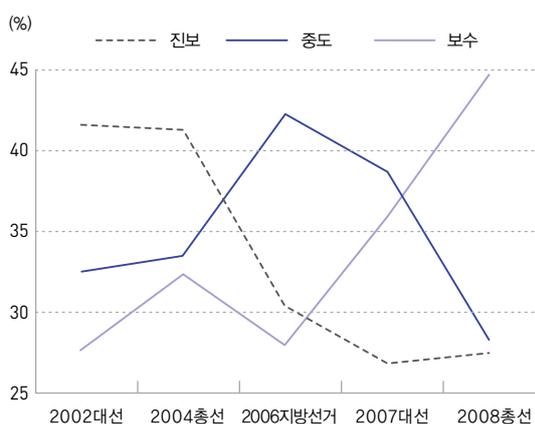
이념 성향의 변화 추이

이념 갈등은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념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균열의 축이 되지 못했다. 민주화 이전에는 권위주의 통치와 분단의 영향으로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이념의 폭이 매우 협소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지역주의 갈등이 부상하면서 이념 갈등은 상대적으로 커다란 중요성을 갖지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잠재되어 있던 이념 갈등이 본격적으로 부상한 것은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볼 수 있다. [그림 X-14]는 2002년부터 2008년 사이에 실시된 선거 때 응답자들이 주관적으로 자신의 이념 위치를 평가한 조사를 토대로 한 이념 성향 변화의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X-14]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의 중요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 사이에 집합적인 이념의 변화 폭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는 진보 이념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었으며 보수 이념의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2007년 대통령 선거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비율이 역전되면서 보수 이념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놓이게 되었고 진보 이념은 열세가 되었다. 2006년을 고비로 사회 전반의 이념적 분위기

가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념 위치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자기위치(self-placement) 측정은 개인의 가치 정향과 동시에 정파적 선호도를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의 변화는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승리로부터 2007년 이명박 후보의 당선, 2008년 한나라당의 승리라는 정치적 변화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림 X-14] 주관적 이념 성향¹⁾: 2002-2008



주: 1) '매우 진보적', '진보적', '중도', '보수적', '매우 보수적'으로 구성된 5점 척도의 응답률을 진보, 중도, 보수로 재분류한 것임.

출처: 한국선거학회, 「선거후조사」 원자료, 각 년도.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이념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는 하지만 뚜렷이 서로 대비되는 형태로 자리 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중도 이념 성향이다. 2006년 지방선거 때 42.6%에 달했던 중도 이념 성향의 비율은 그 이후 크게 감소해 왔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28.2%로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중도 성향의 감소는 보수 이념의 비율이 증대된 까닭이지만 사회적으로 본다면 보수와 진

보 이념 간의 완충 지대라고 할 수 있는 중간층이 줄어들 만큼 최근 들어 이념적 갈등과 대립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념

이념 갈등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념 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균열의 축은 계급이다. 진보 혹은 좌파가 노동계급을 대표하며 보수 혹은 우파가 자본계급을 대표한다. 따라서 이념 차이는 직업군, 소득, 사회계층에 따라 구분되며, 블루칼라, 저소득층이 진보 이념을 지지한다. 이러한 구분은 선거 때 정당이나 후보 지지에서도 대체로 확인되는 특성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에서와는 다른 속성이 나타난다. <표 X-7>에는 연령, 직업군, 소득, 학력별로 주관적인 이념 성향이 구분되어 있다. 연령 요인을 보면 젊을수록 진보적이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직업군에서는 화이트칼라가 가장 진보적이며 농업 종사자가 가장 보수적

이었다. 블루칼라 역시 대체로 보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저소득층이 보수적이며 고액소득층에서 오히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진보적 경향이 강화되었다. 학력 요인을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보다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념 성향이 연령, 직업, 소득, 교육수준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표 X-7>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이념의 특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패턴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직업군에서 블루칼라 노동자보다 화이트칼라 노동자가 더 진보적이라든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더 보수적이라든지 하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성향의 경향과는 매우 상반된 현상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갈등이 서구와 같이 계급 정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네 개의 구분 가운데 집단 간 편차가 제일 큰 것은 연령이었다. 20대와 60대 이상 두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네 개 요인 가운데 가장 컸다. 2002년 이후 부상한 이념 갈등이 세대적 요인과

<표 X-7> 연령, 직업, 소득 및 학력별 이념 성향(진보-보수 평균점수)¹⁾: 2008

연령별		직업별		소득별		학력별	
20대	4.52	화이트칼라	4.85	하	6.20	중졸 이하	6.23
30대	4.95	블루칼라	5.93	중하	5.52	고졸	5.92
40대	5.89	농업	6.40	중상	5.62	대재 이상	4.72
50대	6.27	자영업	6.06	상	5.36		
60대 이상	6.53						

주: 1) '가장 진보'는 0점, '중도'는 5점, '가장 보수'는 10점으로 측정된 평균점수임.
출처: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후조사』, 2008.

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수준별 이념 성향의 차이는 그동안의 연구에서도 매우 일관된 특성을 보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좌파, 우파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표 X-7>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계급을 중심으로 한 형태와는 상이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계급 정치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 중요한 한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과 정책적 선호의 차이

이념 성향은 정치적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그 차이가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성향별로 어떤 입장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커다란 논쟁이 되었고 이념적 입장의 차이가 컸던 재벌 규제, 복지 예산 축소, 대북 지원 축소, 한미 동맹 강화, 국가 발전을 위해 개인 권리침해가 가능하다는 주장 등 다섯 가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각 이념별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X-8>에서 볼 수 있듯이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서 보수와 진보 간 매우 일관되고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보수와 진보 간 정책 방향의 차이가 확인된 것은 재벌 규제 문제와 한미 동맹 강화였다. 재벌 규제에 대해서 보수 이념 성향은 이를 철폐하기를 바라는 반면 진보 이념 성향은 그에 대한 반대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서도 보수 성향이에 찬성하는 반면 진보 성향 쪽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두 가지는 과거에 정치적으로 냉전, 경제적으로 발전국가를 상징하는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 이슈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세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대체로 동일한 시각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복지 예산 축소는 반대하며, 대북 지원 축소는 찬성하며, 개인의 권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일한 찬성 또는 반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 성향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 강도에서 대체로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즉 보수 성향은 복지 예산 축소에 반대는 하더라도 그 강도가 진보 성향보다 약하며, 반대로 진보 성향은 대북 지원 축소에 찬성하지만 그 강도는 보수 성향이나 중도 성향에 비해 약했다.

<표 X-8>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성이 확인된다. 우선 우리나라의 이념 갈등의 특성은 물질적 가치의 배분이나 자유, 인권의 가치가 우선시되었던 서구 사회에서의 이념 갈등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이하다는 점이다. 한미 동맹 강화나 재벌 규제 문제 등 과거 시대에 뿌리를 둔 쟁점을 둘러싸고 이념적 차별성이 두드러지는 반면, 복지 예산 축소 여부, 개인보다 국가 우선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념 성향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일부 쟁점에서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표 X-8>의 결과는 자신의 이념적 위치를 평가하는 주관적 인식과 정책의 지향점이라는 실질적 이슈 간에 매우 뚜렷하고 일관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념 집단 간 구체적인

〈표 X-8〉 이념 성향별¹⁾ 각종 정책에 대한 찬반 평균점수²⁾: 2008

	보수	중도	진보
재벌규제 철폐	4.78	5.33	6.58
복지예산 축소	6.20	6.20	7.38
대복지원 축소	3.10	3.65	4.60
한미동맹 강화	4.13	4.88	5.25
개인보다 국가 우선	7.35	7.45	8.30

주: 1) '매우 보수적' 이거나 '보수적' 이라고 응답한 경우 보수로, '중도' 라고 응답한 경우 중도로, '매우 진보적' 이거나 '진보적' 라고 응답한 경우 진보로 이념 성향을 분류함.

2) '전적으로 찬성' 은 0점, '보통' 은 5점, '전적으로 반대' 는 10점으로 측정된 평균점수임.

출처: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후조사』,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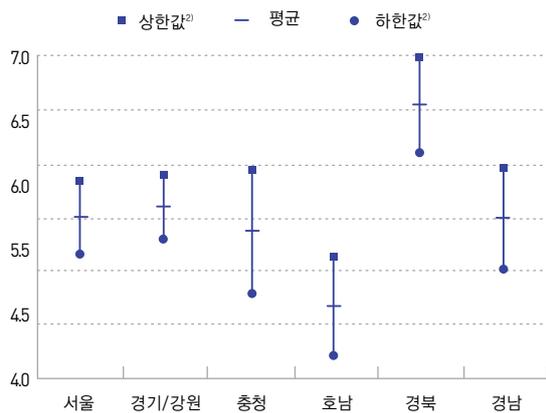
인 다섯 가지 쟁점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분명한 시각의 차이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치 현상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준거틀로서 이념은 이제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역주의의 균열이었다. 영남과 호남 지역 간의 경쟁과 대결은 분열적이고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여전히 선거 때마다 그 위력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역주의와 이념 갈등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역별 주관적 이념 성향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X-15]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별로 이념 성향의 차이가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약한 보수 성향인 5.5의 평균에 밀집되어 있지만, 대구·경북 지역의 상대적으로 강한 보수성과 호남 지방의 상대적으로 강한 진보성이 두드러진다. 즉 지역 갈등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경북과 호남 주민 간의 이념 성향의 차이도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이 중첩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이념 갈등과 지역주의의 균열이 중첩되어 나타나게 된 것은 이념 갈등의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대북 정책에 대한 지역 간 상이한 태도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햇볕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논란이 해당 지역의 선호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연계되면서 지역주의 균열과 이념적 갈등이

[그림 X-15] 지역별 주관적 이념 성향(진보-보수 평균점수)¹⁾: 2008



주: 1) '가장 진보' 는 0점, '중도' 는 5점, '가장 보수' 는 10점으로 측정된 평균점수임.

2) 이념 성향 평균점수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임.

출처: 한국선거학회, 『국회의원선거후조사』, 2008.

결합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념 평균이나 분산에서 대체로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차이는 실질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균열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념 균열의 부상은 정치적 공방이 공허한 논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둘러싼 가치나 시각의 차이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 균열과 이념 갈등이 결합되는 우려스러운 현상도 나타나는 것처럼, 상이한 가치관의 충돌이 갈등의 심화가 아니라 다원주의적 공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타협과 포용의 정치문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택 (송실대학교)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요 약

- 부패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국제관계의 거래 질서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한국의 공직부패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ISSP 조사에 의한 국제비교에서도 한국의 부패만연 정도는 공무원(33개국 중 18위), 행정기관(38개국 중 15위), 정치인(33개국 중 8위)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패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사회병리적 현상이다. 특히, 공직부패란 국가 또는 공사에서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이나 특혜로 공권력을 악용하거나 공직의 청렴성이 파손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직부패는 공직자가 공권력을 남용하거나 또는 공직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확장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한국사회 공직부패의 실태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비리, 공직기관들의 부패지수, 행정분야별 부패에 대해 주요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ISSP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국가들의 공무원의 뇌물수취경험을 비롯하여 행정기관과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사회의 공직부패 실태

공무원의 비리

역대 정부는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눈에 띄는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직부패는 주로 공직자들의 재량권과 연고온정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공직부패로는 공직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권리나 이익을 합리적인 것으로 변경시켜 주거나 묵인해 주는 경우, 인허가 관련 업무처리 시 행정의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챙기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연고·온정주의 문화는 부패친화적인 사회구조와 결합하여 부패발생의 토양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발생한 공무원 범죄자의 유형에는 직무유기가 53%(3,596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증수회 32%(2,167명), 공금유용 및 횡령 7%(454명), 직권남용 4%(248명), 공문서 위조 및 변조 4%(258명), 비밀누설 1%(100명)로 나타났다.

증수회의 경우 2000년에 610명으로 가장 많았다가 2004년부터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도에는 2007년에 비해 76% 정도 감소되는 추세를

〈표 X-9〉 범죄 종류별 공무원 범죄자수¹⁾: 2000-2008

	직권 남용	직무 유 기	공금유용 및 횡령	증수회	공문서 위변조	비밀 누설
2000	108	867	117	610	52	1
2001	76	677	75	351	37	20
2002	18	624	64	432	61	22
2003	26	544	71	262	34	7
2004	1	273	29	223	24	27
2005	3	176	26	112	17	9
2006	4	157	46	78	11	11
2007	6	159	21	80	17	3
2008	6	119	5	19	5	0
합계	248	3,596	454	2,167	258	100

주: 1) 복무규정위반, 품위손상, 감독불충분 등 부패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범죄유형은 제외함.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 통계연감」,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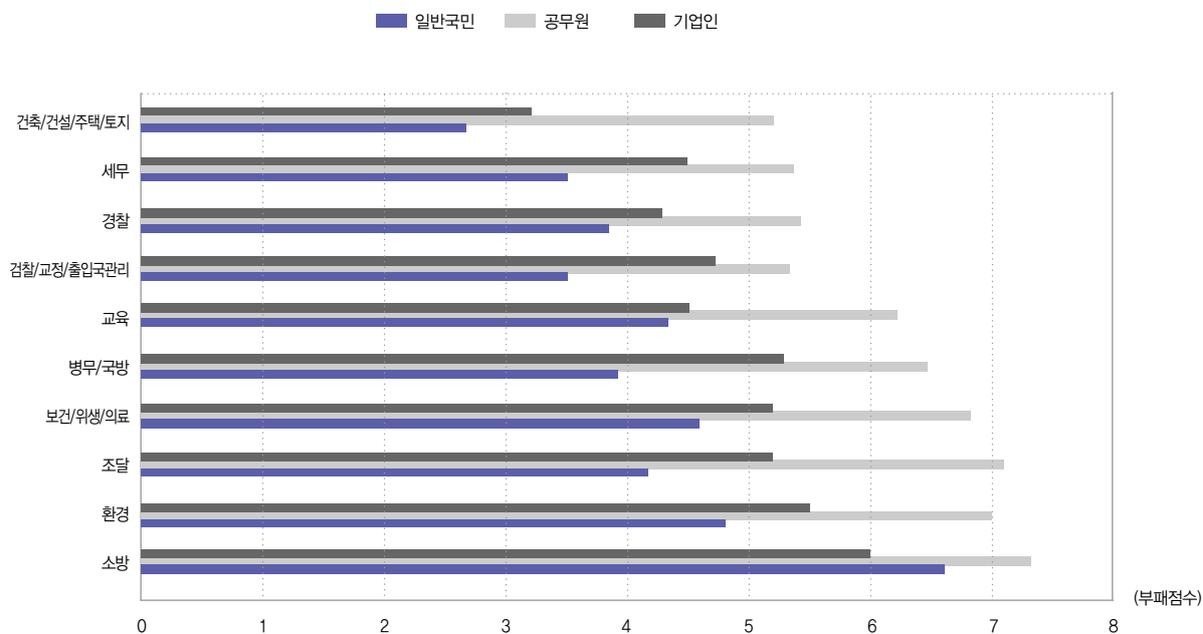
보이고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집권초기에는 뇌물수수 등으로 인한 행정상 징계나 검찰의 기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기관들의 부패지수 비교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인을 대상으로 부패발생 소지가 높은 업무에 대한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등을 조사하여 부패지수를 산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부패지수는 낮을수록 부패가 많고 높을수록 부패가 적은 것으로 산정되었는데,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5.95점)의 부패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국토해양부(6.44점), 문화재청(6.81점), 해양경찰청(7.08점), 경찰청(7.14점) 등의 부패지수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통계청(9.77점), 소방방재청(9.74점), 법제처(9.69점), 기상청(9.66점), 산림청(9.61점) 등은 부패지수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X-16). 일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경찰청, 문화재청 등 단속규제 업무를 많이 갖고 있는 기관들에서 부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발생원인 조사에서도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행정규제가 가장 많이 지목되었다.

행정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국민, 공무원, 기업인을 대상으로 정부 행정기능을 10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부패수준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들은 건축·건설·주택·토지분야(2.48점)가 가장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검찰·교정·출입국관리 등 법무분야(3.49점), 세무분야(3.51점), 경찰분야(3.86점) 등의 순으로 부패

[그림 X-17] 국민, 공무원, 기업인의 행정분야별 부패수준¹⁾ 평가 평균점수: 2007

주: 1) 10점 만점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백서』, 2007.

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뇌물을 준 기업에 대한 벌금형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공직부패의 국제비교

수뢰 경험의 국제비교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가운데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및 대가를 요구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8.6%로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3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 및 대가를 요구 받은 경험은 베네수엘라(88.3%)에서 가장 빈번했으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32.0%), 라트비아(23.2%), 남아프리카공화국(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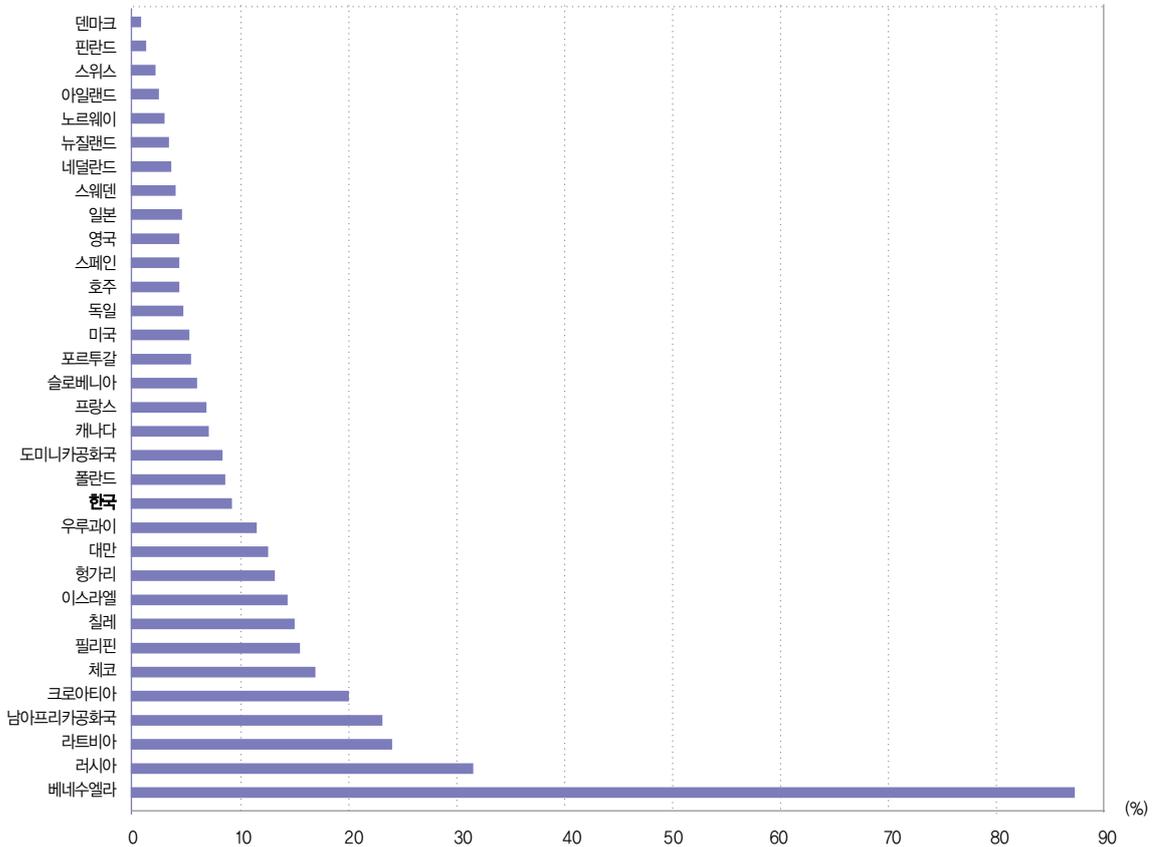
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1.2%)는 뇌물 및 대가를 요구받은 경험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핀란드(1.4%), 스위스(1.8%), 아일랜드(2.1%)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공무원 부패의 국제비교

ISSP의 2006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의 75%가 공무원들의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18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이다.

공무원들의 부패만연 정도에 대한 국제비교에서는 러시아(97.8%)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크로아티아(91.7%), 폴란드(90.5%), 이스라엘(8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15.4%)는 공무원들

[그림 X-18]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¹⁾의 공무원으로부터 뇌물 및 대가를 요구받은 경험 비율: 2006



주: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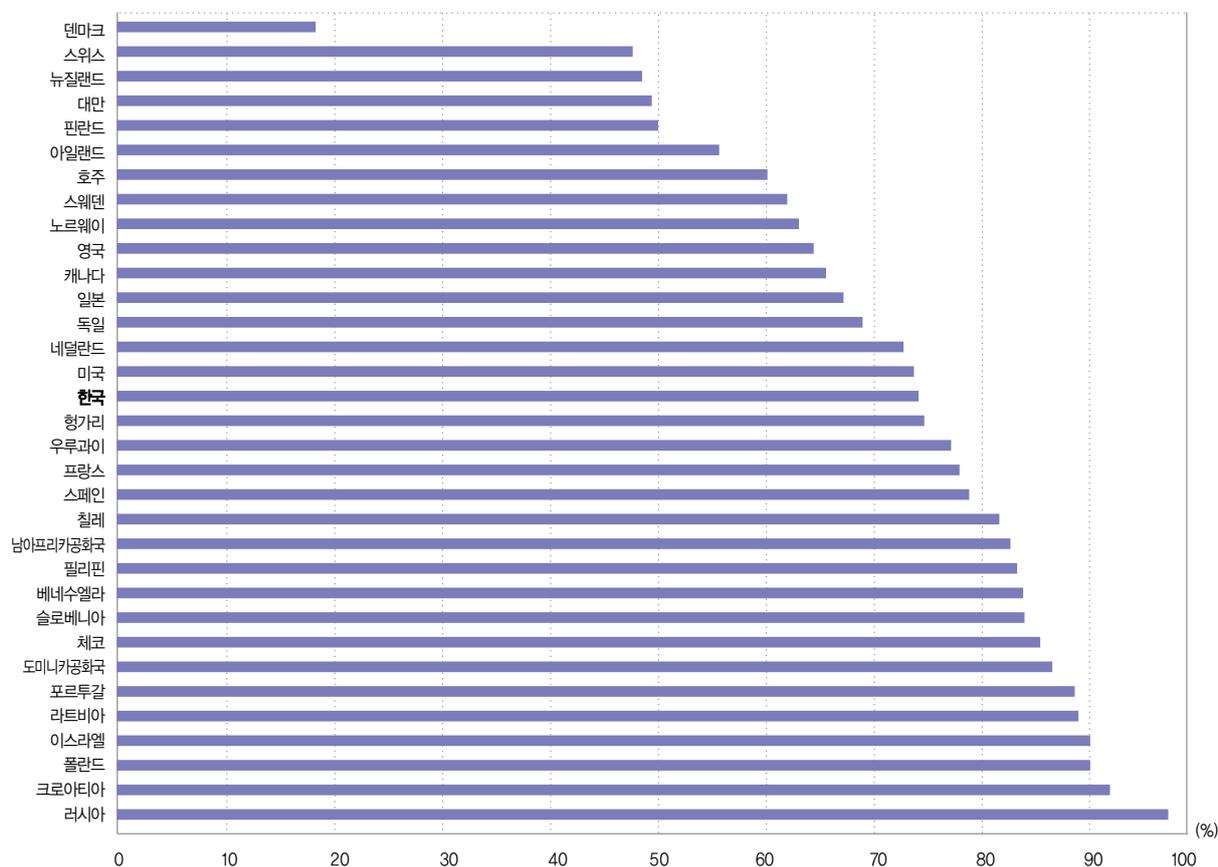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6 : Role of Government IV Data File v1.0, 2008.

의 부패가 만연한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스위스(46.2%), 뉴질랜드(47.8%), 대만(48.7%)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국에서 부패발생의 원인은 논자들에 따라 다소 다르게 파악되고 있으나 대체로 개인 및 가치문화적인 요소, 정치 및 행정의 구조적인 요소, 관료제를 둘러싼 체제적인 요소 등의 복합작용으로 이해되고 있다. 개인 및 가치문화적인 요소에는 관준민비적인 전통의식, 생계형의 작은 부패에 대한 관용의식, 전통적·비생산

적인 가치유산, 잘못된 의리의식, 정에 기초한 가족주의 또는 연고주의 등이 있다. 정치 및 행정의 구조적인 요소에는 권위주의적 정부구조를 비롯하여 정치구조에 따른 정경유착, 투명한 행정절차 규정의 미비, 과도한 정부개입 또는 규제, 비현실적인 공무원의 보수수준 등이 지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료조직을 둘러싼 체제적 요소에서는 정치적 정당성 결여의 유산, 경제성장의 부작용, 사회의 미분화된 역할 관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공직부패는 연고·온정주

[그림 X-19]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의 공무원 부패만연 인식 비율: 2006



주: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6 : Role of Government IV Data File v1.0, 2008.

의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분야(68.4%)와 인허가 과정(13.5%)에서 연고주의와 온정주의가 특히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정부 정책집행 과정을 보여주는 투명한 정보공개제도가 부패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사기밀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질병정보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정보를 예외 없이 공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인허가 문제도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완전히

공개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핀란드의 '정보공개법', 스웨덴의 의회 '옴부즈만 제도', 핀란드의 '사정감독원'이라는 독립적인 반부패기구의 운영과 높은 교육수준, 철저한 고발정신 등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 부패의 국제비교

ISSP의 2004년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이 인식한 행정기관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79.6%로 전체 38개 조사대

상국 중에서 15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기관들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는 브라질(9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폴란드(95.2%), 불가리아(94.1%), 러시아(92.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26.9%)는 행정기관들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핀란드(31.5%), 키프로스(32.4), 뉴질랜드(34.7%)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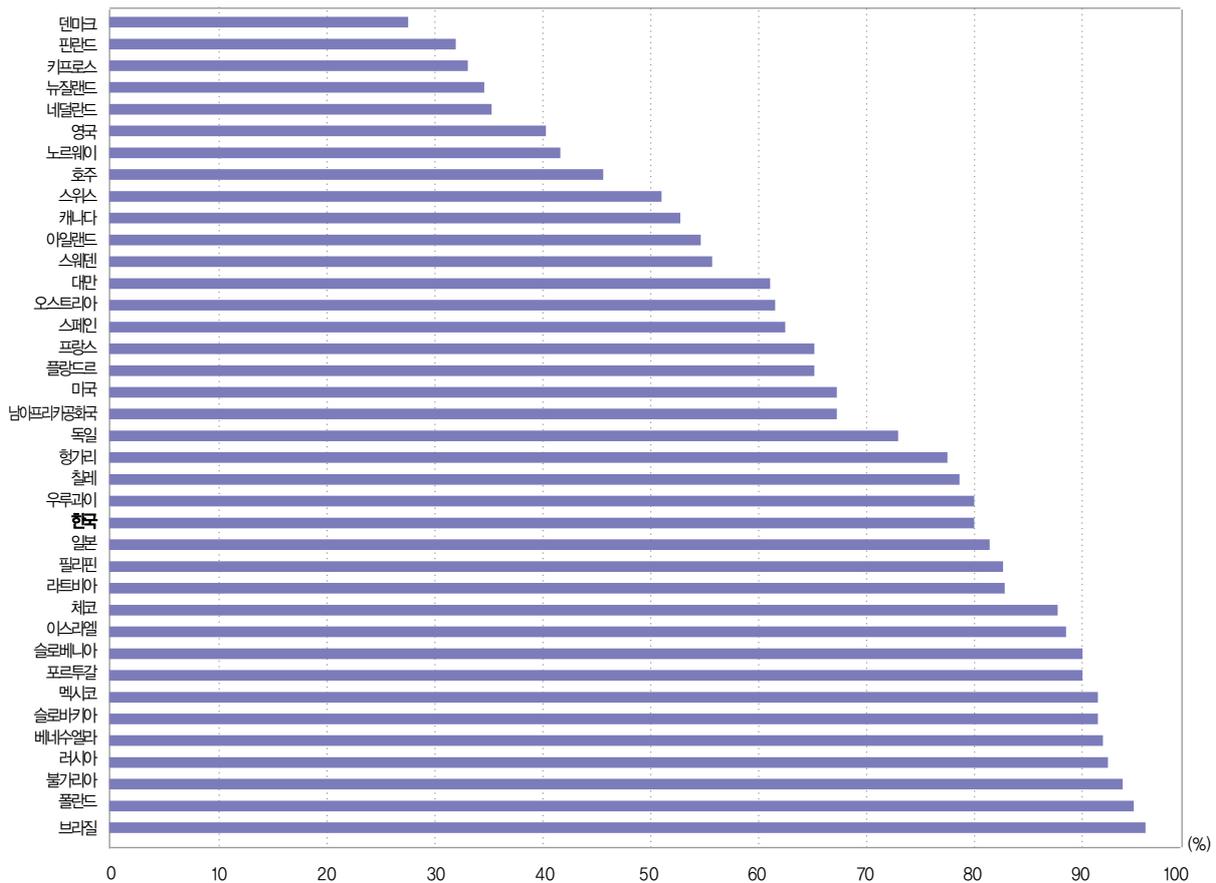
한국행정연구원의 2008년도 『행정계층별 부패인식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앙행정기관 본청이 부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중

양행정기관의 일선지방관청,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의 순으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무원들 가운데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부패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는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 계장 이하의 일반직원, 과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국장급 공무원 등의 순으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 부패의 국제비교

ISSP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인식한 정

[그림 X-20]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¹⁾의 행정기관 부패만연 인식 비율: 2004



주: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4 : Citizenship Data File v1.2,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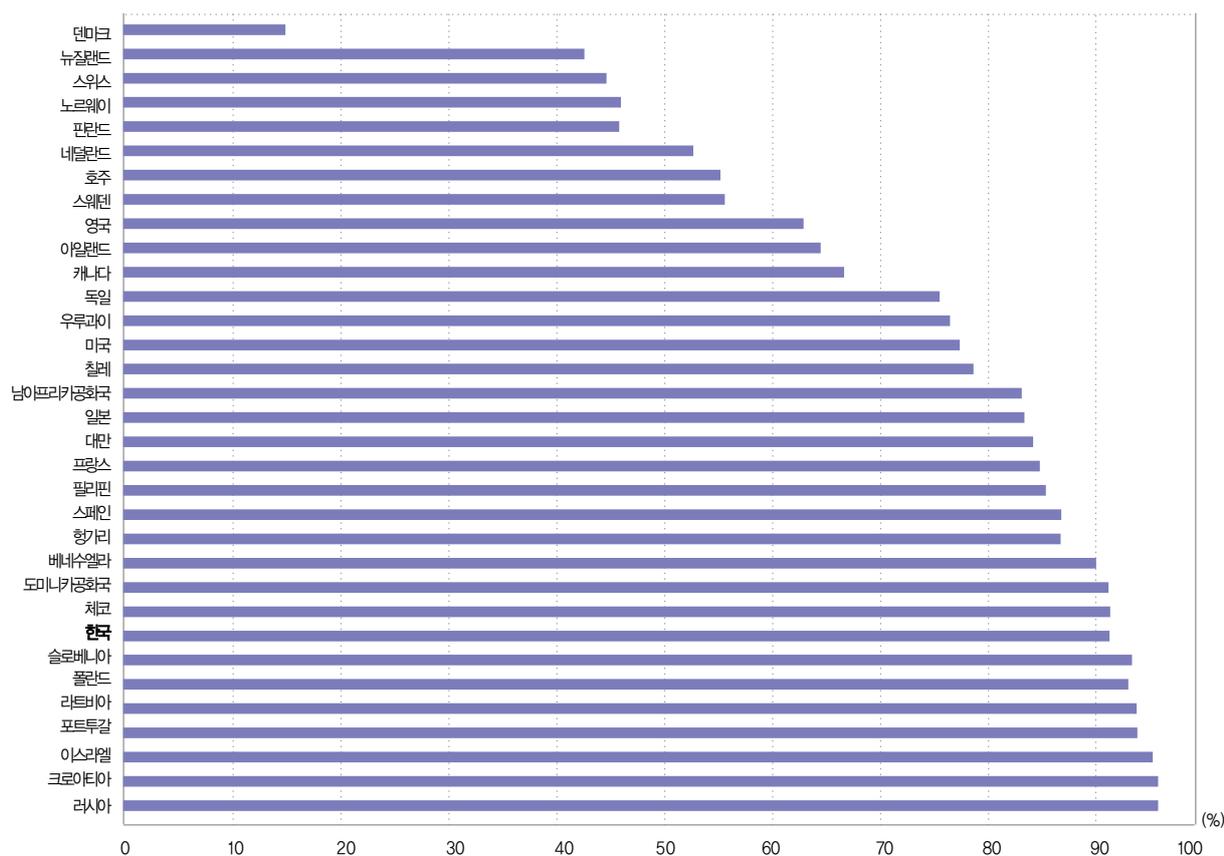
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90.7%로 전체 33개 조사대상국 중에서 8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들의 부패만연 정도는 러시아(96.7%)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크로아티아(95.9%), 포르투갈(94.2%), 이스라엘(9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덴마크(13.2%)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패만연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에는 뉴질랜드(41.3%), 스위스(44.7%), 노르웨이(45.3%) 순으로 부패만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의 부정부패는 자원의 왜곡분배로 인한 비효율성과 경쟁력 약화 등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행정기능을 약화시키고 법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부패원인에는 고비용 정치(과다한 선거비용, 공천비 사용 등)와 정·관·경 유착, 정당의 사당화, 불합리한 선거제도, 국민의 소극적 정치참여 등에서 발생되고 있다.

정치부패는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그림 X-21] 한국과 ISSP 회원국가들¹⁾의 정치인 부패만연 인식 비율: 2006



주: 1)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에 참여하는 국가임.

출처: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2006 : Role of Government IV Data File v1.0, 2008.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막기 위해서는 현금거래의 철저한 규제와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정부패는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그 사회의 문화, 역사, 정치, 경제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개개인의 성격, 윤리관 및 생활태도, 담당업무의 특성, 소속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성격과 분위기, 재량의 범위, 업무감독 체제와 정도 등 부패의 원인도 다양한 편이다.

성공적인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부패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 행정처리절차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행정규제완화를 통한 행정재량행위의 축소 등이 요구된다. 그리고 연고의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청탁관행개선, 계층적·권위적·엘리트문화개선, 답례·접대문화 개선 및 온정주의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치적 책임성 확립,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민간부문 경쟁 확립, 공공부문의 개혁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의기준의 국제화 등을 통하여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차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함으로써 부패의 세계화 문제에 따른 국제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장지원 (한국행정연구원)

용어해설



용어해설

1. 인 구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

노인부양비 : 부양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피부양 노인연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임.

사망력 : 인간 생명에 대한 보험 통계 분석 등에 이용 되는 연령별(특수) 사망률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임.

성 및 연령별 기대수명 : 어떤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년수를 말하고 출생시의 기대수명을 평균수명이라고 함.

성 및 연령별 사망률 : 성 및 연령별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임.

성비 :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로 표시되며 출생아의 성비는 출생성비라고 함.

시·도별 인구구성비 :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인구)에 대한 행정구역상 각 시·도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분비임. 수도권 인구비율은 총인구에 대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백분비임.

실버산업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임.

연령표준화 사망률 : 인구구조가 다른 집단 간 사망 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연령구조가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한 사망률임.

$$\text{표준화 사망률} = \frac{\sum (\text{연령별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인구})}{\text{표준인구}} \times 100,000$$

연앙추계인구 :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구

동태율(출생, 사망, 이민율 등)을 반영하여 매년 7월 1일 현재로 추계한 인구임. 추계방법에는 수학적 방법과 조성법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조성법을 이용하였음.

이상자녀수 : 15-44세 유배우 부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로서 전국표본조사를 통해서 파악됨.

인구성장률 : 인구성장률은 출생,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율과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의 합으로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증가율임.

$$\text{연평균 인구성장률} = \sqrt{\frac{\text{비교년도}}{\text{특정년도}}} - 1 \times 100$$

조사망률 :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 총사망자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임.

$$\text{조사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사망자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출생률 :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의 총 출생아수를 당해년도의 총인구(7월 1일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임.

$$\text{조출생률} = \frac{\text{특정 1년간의 출생아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중위연령 및 국민평균연령 :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할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연령이고, 국민평균연령은 총인구의 산술평균 연령임.

총인구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 총조사(11월 1일 0시 현재시점)에서 파악된 대한민국 영토에 거주하는 총인구(외국인 포함)를 말함.

출산력 : 출산력이란 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출산력이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변하나 가임능력은 일반적으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구의 생물학적 가임능력, 즉 잠재적 출산수준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 그리고 출생은 인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여자의 한정된 연령층(15-49세)에서만 발생하나, 사망은 인구의 감소요인으로서 전 연령층에서 발생함. 출산력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연령별출산율, 합계출산율, 재생산율, 모아비, 기혼부인당 평균 출생아수 등이 있음.

합계출산율 : 여자 1인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산출함.

$$\text{합계출산율(TFR)} = \frac{\sum_{t=15}^{49} (\text{ASFR})_t}{1,000}$$

II. 가족과 가구

1세대 가구 : 가구주와 동일세대에 속하는 친족만이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② 형제자매, ③ 부부 + 기타 친척)

1인 가구 : 1인으로 구성된 가구

2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2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② 한부

모 + 자녀, ③ 부부 + 양친, ④ 부부 + 한부모, ⑤ 부부 + 자녀 + 부부의 형제자매 등)

3세대 가구 : 가구주와 그 직계 또는 방계의 친족이 3세대에 걸쳐 같이 사는 가구(① 부부 + 자녀 + 양친(또는 한부모), ② 양친(또는 한부모) + 부부 + 자녀 등)

가구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하며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됨.

가구원수 및 평균 가구원수 :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 가구원수는 일반가구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text{평균 가구원수} = \frac{\text{일반가구 총가구원수}}{\text{총일반가구수}} \times 100$$

가구주 : 호주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을 말하며, 비혈연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중 한사람(대표자)이 가구주가 됨. 성별 가구주 비율은 아래와 같이 산출함.

$$\text{여재(남자)가구주비율} = \frac{\text{여재(남자)가구주가구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가족의 형태 :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직계가족 및 기타 가족으로 구분함.

기러기가족 :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서 따로따로 생활하는 가족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임.

분거가족 :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구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가족

비혈연가구 : 비혈연 관계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로서 보통 한집안에서 기거하며 자취하는 가구, 즉 다방·음식점 기타의 업소 등에서 주인과는 별도로 기거하는 종업원가구 등이 여기에 속함.

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산전후 기간 동안 주어지는 90일의 휴가로 산후에 45일 이상배치되어야 함.

세대수별 가구 형태 : 혈연가구의 가족 세대수를 기준으로 1세대 가구, 2세대 가구, 3세대 가구, 4세대 가구로 구분함.

자아존중감 :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존중해주는 자신에 대한 태도로서 자신의 성취와 타인에 의한 대우 및 자신의 신체적 특성과 같은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개인적인 가치감

조손가족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족

조이혼율 :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text{조이혼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이혼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조혼인율 :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text{조혼인율(\%)} = \frac{\text{특정 1년간의 총혼인건수}}{\text{연앙인구}} \times 1,000$$

핵가족 : 부부만의 가족, 부부와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족,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

혈연가구 :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구

III. 교육

구매력지수 : 소비자 물가지수의 역수이며,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임.

공교육비 : 공교육비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회계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국·공·사립 각 학교급의 교비(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등)와 육성회비를 포함하는 교육경비를 말함.

사교육 참여율 : 전체 학생 가운데 해당 기간 내에 사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수월성 : 수월성(excellency)은 학업성취의 우수성이나 탁월함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육의 형평성(equity)과 대비되는 개념

유아교육 : 종전에는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1-2년간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일컬어 유아교육이라고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의 확장으로 영아교육 및 유아유아(乳幼兒)교육을 통틀어 유아교육이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음.

유치원 취학률 : 4-5세 인구수(추계연앙인구)에 대한 유치원 취원자의 비율임. 유치원은 국·공·사립 유치원을 모두 포함함.

$$\text{유치원 취원율} = \frac{\text{유치원 아동수}}{4\sim 5\text{세인구}} \times 100$$

자립형 사립고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학교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함. 초·중등교육법 제 61조, 동법 시행령 제 105조에 의함. 시·도교육감의 추천 후, 심사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정·통보를 받은 학교임.

전공취업 : 자신의 전공 분야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text{취학률} = \frac{\text{취학자수}}{\text{취학적령인구수}} \times 100$$

진학률 : 졸업자 중 상급학교 진학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text{진학률} = \frac{\text{상급학교 진학자수}}{\text{졸업자수}} \times 100$$

취학률 : 취학적령인구(추계연앙인구)대비 취학자의 비율임. 취학적령은 초등학교 만 6-11세, 중학교 만 12-14세, 고등학교 만 15-17세로 하였음.

특수목적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근거한 정규학교로서 공업/농업/수산/해양/과학/외국어/예술/체육/국제계열에 해당하는 학교 중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임.

하향취업 : 본인의 교육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함.

학급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는 학교급별 학생수를 학급수로 나눈 수치로 학생수는 재적(在籍) 학생수(휴학자 포함) 기준임.

$$\text{학급당 학생수} = \frac{\text{총학생수}}{\text{총학급수}}$$

IV. 노동

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주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실업자를 포함한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 이상 인구}} \times 100$$

고용률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구직단념자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기간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정해졌거나 계속근무시간이 1년 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

노조조직률 :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수를 노조에 가입한 전체 조합원수로 나눈 것으로 산업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유효한 수치임.

니트족(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졸업말로 보통 15-34세 사이의 취업인구 가운데 미혼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서 가사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며 무업자(無業者)라고도 함.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주당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은 주된 활동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됨.

비전형근로자 : 파견, 용역, 가내, 호출 또는 독립도급 근로자

비정규직 :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파견, 용역, 개인도급, 재택근로, 자영노동자 등이 비정규 노동자에 포함됨.

상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

생산가능인구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로 파악하지만 본 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 75세 이하를 생산가능인구로 정의함.

실업급여 :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조기재취직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로 구분됨.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실업자 :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임용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자영자 :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취업자 : 조사대상 주간에 소득, 이익, 봉급, 임금 등의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와준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에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를 포함하는 경제활동인구

평균근속년수 : 개별 근로자가 조사당시 취업하고 있는 직장에서 근무해온 기간(년수)의 평균값임.

V. 소득과 소비

경상소득 :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사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 국가 영역내에서 가구, 기업, 정부 등의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의 결과로 창출된 부가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해서 합계한 것.

근로소득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특정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서 봉급, 상여금과 제수당을 포함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액을 말함.

내구재 : 예상 사용수명이 1년 이상인 재화

농가소득 : 농가 정의에 부합되는 가구의 소득으로 농업소득, 농외소득(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합산한 소득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 도시근로자 가구 및 가구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보수(근로소득), 자영으로부터의 가계전입소득 및 사업이윤과 부업소득(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적 수입(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이전소득, 비경상소득(퇴직금 일시불, 복권당첨금, 상속금) 등 실질적인 현금 및 현물 소득의 합산한 소득임.

배우자 소득 기여도 : 가구 근로소득에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임.

부업소득 : 주된 직업이 없는 가구원이 생활비 보조를 위해 일을 하여 얻은 소득임.

비경상소득 :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등 비경상적 소득

사업소득 :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자영자나 고용주의 지위에서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총수입에서 재료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중 가계에 들어온 금액임.

소득 불평등도 : 각 년도의 1분위 소득 대비 5분위 소득 배율임.

소득집중도(지니계수) :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로 나타나며, 0인 경우는 완전균등분배이고 1인 경우는 완전불균등분배임.

소비지출 항목 : 소비지출은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소비지출은 조세부담금, 공적연금납부금, 사회보험납부금, 주거용건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분됨.

이전소득 : 농가가 비경제 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서 공적보조금(연금 등)과 사적보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

재산소득 : 가구소유의 자산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예·적금이자, 주식배당, 부동산임대료 등이 해당됨.

VI. 문화와 여가

독서인구 비율 : 조사대상 인구 중 1년간 1권이상 책(주간지, 월간지 등 잡지류 포함, 교과서 및 참고서 제외)을 읽은 사람의 비율임.

멀티플렉스 : 복합상영관이라고도 하며 한 건물 안에

10개 이상의 상영관과 부대시설로 대형주차장·식당·카페·쇼핑타운, 각종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는 건물을 말함.

문화예술관람률 :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회를 1년에 1번 이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

문화예술시설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시설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기타문화시설로 구분됨.

문화자본 : 문화자본이라는 용어는 상징적 표현으로 화폐나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하여 결정된 교환가치라는 주장에 근거하여 성립된 개념임. 즉, 그 사회의 지배계급에 의해 가장 높이 평가되는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자본의 분배와 전수방법 역시 많이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

미니홈피 : 싸이월드라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운영하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개인별로 스스로를 알리는 작은 공간을 의미함.

블로그 : 웹(web) 로그(log)의 줄임말로, 1997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함. 새로 올리는 글이 맨 위로 올라가는 일지(日誌)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런 이름이 붙게 됨.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일기·칼럼·기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출

판·개인방송·커뮤니티까지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 일종의 1인 미디어임.

사회연결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 온라인 인맥 구축 서비스로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참가자가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여 친구관계를 넓힐 것을 목적으로 개설된 커뮤니티형 웹사이트임.

사회자본 :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로 정의하며,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 인적 자본과 달리 인간관계 내에 존재함.

스포츠 관람률 : 각종 스포츠를 1년에 1군데 이상 관람한 사람의 비율

와이브로(Wireless Broadband Internet, WiBro) : 이동하면서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 휴대 인터넷

인터넷 접속률 : 일정 기간 내에 인터넷에 접속한 사람의 비율

평균 독서량 : 1년 동안 책을 읽었던 사람의 총 독서량을 전체 조사대상 인구로 나누어 산출함.

휴대용 컴퓨터(UMPC: Ultra Mobile PC) : 노트북 컴퓨터보다 가볍고 작게 만들어 휴대하고 다니면서 PC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임.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 기능, 인터넷, 게임, 내비게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컨버전스 단말기로 기존의 개인 정보 단말기(PDA)나 휴대용 멀티미디어 단말기(PMP) 시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음.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 이동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새로운 방송서비스로 휴대폰이나 PDA에서 다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음.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임.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케이블 방송과는 다른 점임.

PDA(Personal Digital Assistance) : 개인 정보를 관리하거나, 컴퓨터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의 일종으로 손으로 정보를 직접 써서 입력 받을 수 있고, 무선인터넷도 가능함.

VII. 주거와 교통

가구당 월평균 교통비 지출비율 : 도시가구 소비지출 중 교통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공교통 지출과 개인교통 지출이 포함됨.

고속철도(KTX: Korea Train Express) : 시속 200Km 이상의 고속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2004년에 개통됨.

공공교통비 : 버스, 택시, 기차, 항공 및 기타 공공교통 운송료, 보관료 등을 포함함.

교통수단별 여객수송 분담률 : 총 수송인원수(또는 수송거리)에 대한 교통수단별 이용인원수(또는 수송거리)의 비율임.

다가구주택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 전체 층수가 3층 이하이고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 이하인 주택임. 통계조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춰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음.

단독주택 :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일반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다가구 단독주택을 모두 포함함.

도로교통 혼잡비용 : 특별·광역시 및 지역 간 도로에서 도로교통 혼잡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금전적 단위로 환산한 값임.

목욕시설 : 목욕시설을 갖추고 따뜻한 물이 공급되면 온수시설, 그렇지 않으면 비온수시설로 함.

부엌시설 :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취사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을 말하며, 입식부엌은 조리(취사)시설, 싱크대 등 현대식(입식)시설을 갖춘 부엌이 해당되며, 재래식은 싱크대 없이 재래식 아궁이 등을 갖추고 있는 부엌이 해당됨.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함.

연간 주택건설실적 : 공공 및 민간 부문 주택건설을 모두 포함함. 공공주택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주택업체 등에서 건설한 주택으로 국민임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의 방법으로 공급됨.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을 말함.

자가소유율 : 조사대상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임.

1인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를 추계인구로 나눈 수치임.

$$1인당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 = \frac{\text{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text{추계인구}}$$

1가구당 자가용 승용차 보유대수 : 자가용 승용차 등록대수를 추계가구로 나눈 수치임.

$$1가구당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 = \frac{\text{자가용승용차 등록대수}}{\text{추계인구}}$$

주택가격지수 : 어느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시기에 따른 주택가격의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수치임.

주택보급률 : 일반가구수(총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주택수의 비율임.

$$\text{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text{일반가구수}} \times 100$$

* 가구수는 주택공급 대상가구(일반가구 중 단독, 비혈연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를 말하며, 주택수는 빈집을 포함한 수임.

* **신주택보급률** : 기존 주택보급률의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거처를 반영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로 대체하여 산출한 비율임.

$$\text{신주택보급률} = \frac{\text{주택수(다가구 구분거처 반영)}}{\text{일반가구(1인가구 포함)}} \times 100$$

주택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영업용(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등의 유형이 있음.

주택투자율 :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주거용건물 건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text{주택투자율} = \frac{\text{주택 투자}}{\text{실질 GDP}} \times 100$$

최저주거기준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유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으로 시설기준, 침실 기준, 면적기준, 그리고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통근인구 :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직장 에 근무하러 다니는 인구를 말함.

통학인구 :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훈련원 등에 다니는 인구를 말함.

화장실시설 : 수세식은 정화조를 갖추고 수도시설에 의하여 배설물을 씻어 내리는 시설이 있는 경우가 해당되며, 수세식 이외의 화장실시설을 재래식이라고 함.

VIII. 보건

건강수명 : 평균수명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결핵 :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에 의해 전염되는 감염성 질환

공공병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국립대학병원·국립의료원·시도립 병원 등이 해당됨.

공공의료비 : 공공의료비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를 말함.

국민의료비 : 보건의료 서비스 및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된 총액

말라리아 : 모기를 매개로 한 기생충성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학질이라고도 함.

모성사망비 : 출생아 100,000명당 모의 사망자 수

볼거리 : 유행성이하선염의 다른 말로 Paramyxoviridae과에 속하는 바이러스(Mumps virus)에 의한, 주로 소아의 급성 전염병으로 이하선(귀밑샘; 구강 안에 있는 세 개의 침샘 가운데 가장 큰 침샘)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임. 현재 제2군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망원인별 사망률 : 인구 100,000명당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등 질환별로 사망한 사람의 수를 말함.

삶의 질 : 개인의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 또는 행복감을 뜻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임.

수두 :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수포성 발진이 몸통을 중심으로 생기는 질환

쓰쓰가무시병 : Rickettsia tsutsugamushi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람의 열병으로 잠복기는 2주간, 매개

체는 Trombicula속의 진드기. 일차피부 병소와 더불어 급격한 발열로 시작하여 5일경에 발진이 출현함.

염출 : 필요한 비용을 걷거나 모으는 것을 말함.

영아사망률 : 연간 태어난 출생아 1,000명 당 만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 수

외병일수 : 유병자가 조사대상 기간(2주일) 중 질병으로 반나절 이상 누워 있었던 일수 말하며, 결근, 결석, 입원일을 포함함.

운동실천율 : 1회 20분 이상, 주 3일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을 한 사람의 비율

웰빙(Well-being) : 현대의 바쁜 일상과 인스턴트 식품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최우선으로 삼는 라이프 스타일을 뜻하는 신조어임. 즉, 의식주 해결차원을 넘어 정신적 평안, 건강, 삶에 대한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특성을 갖는 삶의 방식임.

유병률 : 표본조사에 의해서 산출되는 지표로써 파악 질환의 발생 시기를 불문하고 일정 기간(2주간) 중에 전체 조사대상자 중에서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질환의 기준은 아래와 같음.

$$\text{유병률} = \frac{\text{기간내(2주간) 유병자수}}{\text{0세 이상 인구}} \times 100$$

- 어린이: 잘 놀지 못하고 병원이나 약물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
- 학생과 직장인: 공부나 직장근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주부 등: 평소에 하던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
- 장기질환자 및 기타 심신장애자
- 유병률에 대한 조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각되지 않는 질병은 조사하기 힘들고 계절적 질병(예 : 감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음을 유의하여 이용하여야 함.

유병일수 : 조사대상 기간(2주일)중 병으로 정상시의 활동에 부분적 내지 전반적인 지장이 있었던 일수로 이 지표는 개인의 건강문제를 기능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의 입장에서 본 것으로 비교적 종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음주인구비율 : 조사대상 인구 중에서 음주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의료인력 현황 :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로 구분하여 1인당 인구(연앙추계인구)수로 산출함.

• 실제 활동중인 의료인력수가 아니라 면허 등록자수를 기준으로 지표를 작성하고 있음.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 카우프지수 또는 체적지수라고도 하며, 비교적 정확하게 체지방의 정도를 반영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비만 지표임. 체중(kg) ÷ 키²(m²)으로 계산함.

평균수명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수명'을 말함.

흡연인구비율 : 조사대상 인구 중 흡연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CT 스캐너(Computerized Tomography Scanner) : 컴퓨터를 이용한 단층촬영법의 하나로 인체의 횡단상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여 내장 등 인체 심부의 질환을 치료하는데 유효함.

GDP 대비 국민의료비 : 경상금액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국민의료비 비율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 에이즈(AIDS)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서 수혈이나 성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됨. HIV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말하며, 결국에는 에이즈(AIDS)로 진행하게 됨.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 자기공명 영상 촬영장치로 신체 장기의 구조들을 영상으로 재구성하는 진단 장비임. MRI는 인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자기적 성질을 측정해 컴퓨터로 재구성, 영상화함.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술이라고 하며, 인체의 생화학적 변화를 영상화할 수 있는 핵의학 분야의 새로운 영상기술임.

IX. 사회안전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수급은 1차 에너지와 최종 에너지로 구분되는데 1차 에너지란 오랜 세월동안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에너지로 전환과정을 거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하고, 최종에너지는 최종 소비부문의 에너지 이용설비에 알맞은 형태로 생산된 에너지를 말함.

과불화탄소 : 냉매, 소화기 및 폭발방지물, 분무액, 솔벤트용제, 발포제 등으로 쓰이는 가스임. 오존층을 파괴하는 염화불화탄소(CFC)를 대체하여 쓰이고 있으나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현상을 유발하는 온실가스의 하나로 알려져 있음.

교통사고 :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도로에서 차와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말함. 단, 1984년부터는 통계는 인적피해 사고만을 의미하여 물적피해사고는 포

함하지 않음. 인적피해 사고중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1999년 이전까지는 72시간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음. 따라서 교통사고 통계에서 사망과 보건부문에서 나오는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선행사인에 의한 사망)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녹색성장 :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압력 감소와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용량 유지는 물론, 경제와 사회의 성장도 꾸준히 이루어 간다는 개념임.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UN아시아태평양 환경과 개발장관 회의'에서는 '환경의 지속가능성 제고', '환경성과증진',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역할 강화'의 세 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 물질 또는 액체물질로 아황산가스(SO₂), 일산화탄소(CO), 이산화질소(NO₂), 먼지(TSP),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의 배출량을 말함.

메탄 : 상온에서는 무색의 기체로서 가연성, 공기와 폭발성 혼합가스를 만듦.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서 연료용으로 쓰임.

몬순형 기후 : 겨울에는 대륙에서 대양으로, 여름에는 대양에서 대륙을 향하여 약 반년의 주기로 변화하여 부는 계절풍에 의한 기후로 인도, 동남 아시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남. 여름에는 고온다습한 열대해양기단의 내습에 의하여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으며, 겨울철에는 저온건조한 대륙기단의 내습으로 날씨가 춥고 맑은 날이 많음.

산업재해 :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 인적, 물적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해서 부상·질병이환 또는 사망하거나 시설이 파괴되는 것을 말함. 이러한 산업재해는 기업의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근로자 자신의 불안정한 작업동작에 기인해서 일어나기도 함.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을 해치는 근로재해와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주는 공중재해 그리고 산업시설만의 파손 등으로 분류됨.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 물 속의 미생물이 산소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유기물을 분해, 안정시키는데 요구되는 산소량으로 물의 유기오염의 지표 중 한 가지임.

생태 발자국 지수(Ecological Footprint) : 인간이 지구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자원의 생산과 폐기에 드는 비용을 토지로 환산한 지수임. 인간이 자연에 남긴 영향을 발자국으로 표현함.

수소불화탄소 : 오존층 파괴물질인 프레온가스, 즉 CFC(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되었으며 대기권내에서의 수명이 짧고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성층권에서의 오존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대체물로 여겨지고 있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 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해 지정한 특별대책지역임.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수질

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됨.

아산화질소 : 무색, 약간의 감미로운 냄새가 나는 불연성 가스로 공기보다 무겁고 물에 용해됨. 극히 안정되어 있고 안전한 마취약으로 작용은 신속하게 나타나며 마취유도와 각성도 빠르나, 마취작용은 비교적 약함.

아황산가스(SO₂) : 대기오염의 주된 물질로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 0.02ppm 이하, 24시간 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5ppm이하임.

온실기체 : 지구의 대기 속에 존재하며, 땅에서 복사되는 에너지를 일부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임.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이 있음.

육불화황 : 플루오린과 황의 화합물로, 황 원자를 중심으로 플루오린 원자가 정팔면체 구조를 취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나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이며, 1960년대부터 절연제 등으로 넓게 사용되고 있음.

자연재해 사망지수 : 산사태, 건물붕괴, 급류, 선박침몰, 기타 등의 발생원인에 따른 사망자와 실종자수의 합계임.

주요 도시의 오존(O₃)오염도 : 오존은「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 제2조②」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대상 오염물질로 지정된 물질로 환경기준은 연간 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 평균치 0.1ppm이하 이고 1시간 평균농도 0.12ppm 이상시는 주의보, 0.3ppm 이상시는 경보, 0.5ppm 이상시는 중대경보를 발함.

촉법소년 :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가운데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하

며,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됨.

친환경 소비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

피해액 : 전답 등의 침수와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도로, 하천, 수도, 항만, 학교, 철도, 수리, 사망, 조립, 통신, 전력 등), 축대, 가축, 동산 등의 물적 피해 액수(경상가격 기준)

화재와 자연재해 피해 : 자연재해는 호우, 폭풍, 태풍, 해일, 폭설(우박)에 의한 재해를 말함.

환경보호지출 : 환경보호지출 및 수입(EPE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s)통계는 환경보호활동을 위해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주체가 부담한 지출액과 환경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수입액을 경제주체별 및 환경영역별로 추계한 통계임.

환경지속성지수 : 환경지속성지수(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 ESI)는 세계경제포럼(WWF)에서 2001년부터 발표하는 환경지수로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파괴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임.

TOE(Tonnage of Oil Equivalent) : 각종 에너지의 열량을 석유 1톤당 열량값인 107Kcal로 환산한 지표임.

X. 사회통합

고충민원 : 행정기관 등의 위법적이거나, 부당 또는

소극적인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공람종결 :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진정,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진정, 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인 내용의 진정,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의 진정, 특정사건과 관련 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진정 또는 민사·행정소송에 관한 진정인 경우 더 이상 조사를 진행시키지 않고 현 상황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처분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

민사사건 :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

법률구조 :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여주는 제도임. 법률구조대상자는 농·어민, 월평균 수입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이하의 공무원 및 위관급 장교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 기타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임.

본안 : 민사소송법에서 중심이 되는 사항을 부수적이거나 파생적인 사항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

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매년 1회씩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CPI로 약칭하기도 함. 세계은행(IBRD) 등 7개 독립기구가 실시한 국가별 공직자의 부패 정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종합 분석해 평가한 것임.

사회이동 : 사회이동은 사회적 지위 또는 계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대간(세대와 세대사이) 이동과 세대내(당대) 이동으로 구분됨.

이첩 : 받은 통첩을 다음 곳으로 다시 알리는 것을 의미함.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 국제연합개발계획이 매년 문자해독률과 평균수명, 1인당 실질국민소득 등을 토대로 각 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말함. 인간의 행복이나 발전 정도는 소득수준과 비례하지 않고, 소득을 얼마나 현명하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지수임.

자원봉사 참여율 : 15세 이상 인구 중 자원봉사 참여

자수가 차지하는 비율

젠더관련지수(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GDI) : 국가별로 교육수준,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에 있어서의 남녀평등 정도를 측정하여 발표하는 지수임. 남녀 각각의 교육수준, 기대여명, 소득에 있어서 남녀의 역할 비율 등을 근거로 남녀 간에 성취수준이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줌.

젠더권능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 여성국회의원수, 행정관리직과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그리고 남녀 소득차를 기준으로 여성의 정치·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보여주는 지수임.

주관적 계층 : 사회조사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응답자의 계층 소속 의식으로 ① 상의상 ② 상의하 ③ 중의상 ④ 중의하 ⑤ 하의상 ⑥ 하의하 등 6분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증수회: 뇌물을 주고 받음을 아울러 이르는 말

2008년 보고서의 부문별 세부 주제

부문	세부주제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출산력의 급격한 하락 국제이주인구의 증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가구 구성의 변화와 노인가구의 급증 초혼연령과 미혼율의 상승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최근 학교교육 성취도의 변화 교육수준의 비약적 상승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고용의 안정성과 비정규직 중·고령자 노동시장과 근로생애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소득분배와 빈곤율의 추이 교육비 지출수준과 구성의 실태와 변화 추이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문화예술 향유실태 관광산업의 성장과 입출국 여행객수의 증가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대도시권 통근·통학의 광역화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과다한 의료비 부담 나아지지 않는 주관적 건강상태
복지	복지 부문의 주요 변화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빈곤문제
환경	환경 부문의 주요 변화 대기오염 수준의 변화 온실가스와 지구 온난화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자연재난, 어떻게 변했나 증가하는 '흉악범죄'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투표참여의 감소와 세대 간 격차 가치관과 일상생활에서의 세대격차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연구기관과 연구진

연구발주기관 : 통계청 통계개발원

통계청 담당자 : 서철환 (통계개발원장)

이재원 (통계개발원 사회통계실장)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연구용역기관 : 에스콰이어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구협력기관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공동 연구자 :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이사장)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재열 (서울대학교 교수)

조병희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 양종민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윤옥진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연구소)

